제19회 전국대학생 통일논문현상공모 입선작

대학생통일논문집

2000

통 일 교 육 원

발 간 사

새로운 천년시대를 맞이한 우리 민족 앞에 통일문제는 '21세기의 과제'로 넘겨야 하는 안타까움과 아울러 새 천년에는 통일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분단사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개인의 통일역량을 하나하나 모아 나갈 때,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은 더욱 앞당겨 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대학의 젊은 지성인들이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82년부터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사업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19번째를 맞이한 금년에는 전국 42개 대학에서 62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 결과, 8편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응모작은 대체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통일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한 시사성 있는 주제의 논문들이 많았으며, 응모자의 경우에도 공학, 축산학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각기 자신의 전공영역에서 통일 후 우리 민족이 헤쳐 나가야 할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논문집이 대학사회내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0년 11월

통일교육원장 최 병 보 최병보

심 사 평

류 길 재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이번에 예심을 통과하여 올라온 15편의 논문들은 한 두 편을 제외하면 대단히 공들인 작품들이었다. 특히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많은 전문적인 논의와 자료를 습득하고 수집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훌륭한 학생들의 글을 읽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15편의 논문들이 갖는 특징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의 시대상을 반영하듯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글들이 무려 여섯 편이나 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학생들이 매우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다. 다소 아쉬운 점은 학생들이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IT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관심을 모았지만, 북한이 이 분야에 주력하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발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은 이 분야의 발전을 당국의 주도하에 소수의 엘리트를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고, 대중화에는 큰 관심이 없다. 물론 앞으로 이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겠지만 당국의 통제가 작용할 것이다. 말하자면 학생들의 논의는 다분히 우리의 정보·통신 현황과 시각에서 주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논문들이 정책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논문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학생들이 분단 문제라든

가, 남북한의 비교라든가, 사상적인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정책적 접근보다는 학술적인 접근을 취했다면 이번 논문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대학생들의 논문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시각과 접근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기성학자들이나 사계의 전문가들이 쓰는 방식과 시각을 거의 똑같이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의 문제점과 현황을 기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론적인 논의를 동원하며,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마치 학생들이 정부가 고민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똑같은 시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학생들만의 필치와 시각이 가미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서운함이 있다. 대학생은 장차 국가의 장래를 떠안고 가야 할 동량들이다. 이들이 어떤 시각과 인식을 갖느냐는 곧 우리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과 문제의식을 이번 논문심사를 통해 읽을 수 있었다. 다만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식을 견지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지적한 것이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매우 잘 쓰여진 논문들을 접하게 되어 북한을 공부하는 평자로서는 모처럼 반가움을 가질 수 있었다.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행사가 우리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민족의 문제와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사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심 사 평

박 웅 희
전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

먼저 최우수작, 우수작 그리고 가작으로 입상한 분들에게 격려와 함께 찬사를 보낸다.

「2000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에 응모된 논문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제3차 심사에 올라온 논문은 모두 16편이었다. 우선 전체 논문을 보고 느낀 것은 우리 사회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젊은 대학생들이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식 또한 매우 건전하고 진지하다는 점이다.

심사는 ① 논리성(논리 전개의 일관성과 체계성) ② 창의성(내용의 독창성) ③ 유용성(현실적 활용 가능성과 기대효과) ④ 자료 인용(최근 자료의 인용과 인용자료의 신뢰도)의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논문들은 서로간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논문심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한두 가지만 지적하면, 첫째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보다 다듬어진 개념적 바탕 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끝마무리의 중요성을 들고 싶다. 최종상위권 논문, 특히 최우수작 · 우수작 · 가작 간의 점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끝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갈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끝마무리의 중요성은 지난날 우리 나라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년도 통일논문공모에서는 이 같은 아쉬운 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되어, 보다 질 높은 논문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심 사 평

전 현 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통일문제는 국제정치의 중심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문제가 한민족의 문제이면서도 지구적인 문제라는 증거이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한민족이 아닌 누구도 한반도 통일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부단히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의 실제 담당자가 될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관심은 그 어떤 사람들의 그것보다도 커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서 금번 「전국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사업에 60여편이 넘는 응모작이 있었다는 것은 통일의 전도에 매우 밝은 빛을 비춰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결선에 올라온 16편의 논문은 과연 대학생들의 작품일까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수했고 그만큼 심사도 힘들었다. 특히 인터넷 시대를 반영하듯 통일문제 접근에 인터넷을 활용하자는 신세대적인 발상은 기성세대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는 것이었다. 물론 이외에도 기발한 발상과 현장접근적인 방법론을 동원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우수논문들이 많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논문작성법이나 논거(evidence)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논문, 실현가능성이 낮은 논문, 지나치게 기성학자를 모방한 논문 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금번 응시자들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당선작에 들

지 못한 작품들도 조금만 보완한다면 석사학위논문 이상의 우수성을 지닌 것도 있었다.

맑고 싱싱한 가을날 저녁까지 논문심사를 하면서도 가슴뿌듯했던 것은 평소 강의시간에 요즘 젊은이들은 도대체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질책한 나로서 이처럼 우수한 젊은이들이 통일문제에 정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모든 응시자들에게 상을 주지 못한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심사평에 갈음하고자 한다.

목 차

최우수작

◉ 남북한 운송체계구축방향 3
- 철도, 도로, 항만을 중심으로 -

우수작

◉ 북한의 인터넷 구축과 남북한 사이버 공동체 건설 51

◉ 통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안으로써,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의 구상 101

가 작

◉ 물리적 공간/사이버 공간의 공진화 매개로서 놀이성(性)을 통한 사회문화 통합방안 143

◉ 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연구 203
- 무선이동통신 서비스의 시장전망을 중심으로 -

◉ 사이버 통일교육의 추진 방향 및 활성화 대책 243
- 중핵교육과정의 구상과 Simulation 학습을 중심으로 -

◉ 탈북주민의 난민지위획득에 관한 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하여 285
- 양면게임을 통한 전략적 접근 -

◉ WBI을 활용한 초등학생 통일교육 추진 방안 333
- 초등아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

※ 부록 : 역대 수상작 목록('82-'99) 391

남북한 운송체계구축방향

- 철도, 도로, 항만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이 대 혁

4학년 김 석 제

〈목 차〉

【요약문】

Ⅰ. 서 론

Ⅱ. 남북한 운송체계의 비교분석

Ⅲ. 정상회담후 운송망 복원의 문제점

Ⅳ. 남북한 운송체계 구축 방향

Ⅴ. 결 론

【 요 약 문 】

Ⅰ. 서 론

1. 문제제기

남북한 경제협력에 앞서서 지역간·산업간 연계를 통해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고 생산된 재화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케 하는 남북간의 운송망구축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의 남북 교역은 육상운송로의 부재로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류비가 너무 과다한 실정이다. 북한의 육상수송망이 남한과 연결된다면 물류비의 절감과 남북연계를 통한 가공 무역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을 연결하는 육상수송망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교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교역의 간선교통망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중계 수송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육상수송망 뿐만 아니라 육상수송망과 연계한 해상수송망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장단기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남북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와 기존의 연구성과를 통해 현황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상회담이후 남북운송망 복원상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남북운송망 복원상에 우선순위의 선정을 통해 어떠한 사업이 단기적으로 필요한가를 살펴보았고, 단·장기로 나누어 각 운송수단간에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주변국과의 고려사항과 과거 통일국가(독일 등)의 선례등의 거시적인 요소보다는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철도, 도로, 항만 중심의 운송체계 구축 및 노선의 방향과 확장문제, 시설기반의 확충 등에

한정하였다. 특히 남북한 운송체계의 비교·분석에서는 북한 운송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운송체계 구축 방안의 단기적 방향은 그 기간을 5~10년 정도로, 장기적 방향은 10년 이상으로 잡았다.

Ⅱ. 남북한 운송체계의 비교분석

남한의 수송수단은 도로가 중심인 반면에 북한은 철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도로와 해운은 철도와 연계수송이라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체계가 미비한 북한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한의 운송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다.

1. 철 도

북한은 화물 운송에 있어서 철도 부문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기타 운송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주철종도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화물 수송이 여객 수송보다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를 이용한 화물의 장거리·대량 수송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1998년 현재 5,214㎞로서 남북 비중이 1.3배로 철도 총연장에 있어서는 남북이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전철화 구간은 4,132㎞로 철도 총연장의 79.2%를 차지하여 남한의 9.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철도노선은 현재 10여개의 기간노선과 90여개의 지선이 건설되어 있으며, 이중 주요한 국내선은 11개선이다. 국외선의 경우에는 본래 6개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는 4개 선만 운행중에 있다. 북한의 철도 화물 평균 수송 거리는 197㎞로 남한의 24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거리 수송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는 철도가 도로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철도 고유의 특징인 대량화, 장거리화, 중량화 등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철도 운영의 효율성 측

측면에서도 철도에 대한 절대적인 투자부족 및 관리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한 침목, 노반, 신호체계 등 철도 기반 시설이 열악한 형편이다.

2. 도 로

북한의 도로교통망은 가솔린 보급난, 사회적 폐쇄성, 지형적 제약, 자동차산업의 낙후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1998년 현재 남한의 도로 총연장은 86,990㎞이고, 고속도로는 1,990㎞인데 반해 북한은 각각 23,307㎞, 682㎞로 남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폭 2.4m이하의 4급 도로가 전체의 79%로 도로 사정이 극히 열악한 상태이다. 이러한 북한 도로망의 특징은 남한과는 달리 철도 수송의 보조 수단으로 단거리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도로는 단거리화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도로가 지역간 교통 수단으로 건설되었다기보다는 지역내 연결 교통 수단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도로망은 낭림산맥의 영향에 의해 동서 연결도로의 건설이 곤란함에 따라 낭림산맥을 경계로 서해안의 평지와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발달하였고, 북부 내륙 산지에는 도로 밀도가 희박하여 동서간 단절이 심한 편이다. 서해안에는 도로들이 평양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뻗어 서부의 주요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다.

3. 항 만

북한에 있어 해운·항만의 위상은 철도가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육상 운송 부문에 비해 떨어지며, 중요성 측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 북한의 해안은 동서로 분리되어 있음에 따라 항만시설도 각 해안별로 운영되고 있다. 대외 해상 운송은 수송 조건이 좋고 구소련 및 일본과의 운항이 편리한 동해안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동·서해안으로 양분되어 있는 북한의 항만은 그 기능에 따라 8개소

의 무역항, 5개소의 원양수산기지항 및 30여개 소의 소규모 어항 등으로 구분된다. 항만은 동·서해안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및 양호한 항만 설립 조건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동해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북한은 대부분의 무역항이 항만하역장비 및 시설 노후화, 전용부두시설 부족, 항만의 관리·운영 부실, 항만배후수송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항만 시설의 이용도가 50% 이하 수준에 머물러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

북한의 항만이 이같이 후진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휴전선과 산악에 의한 동서분단, 주요 교역 대상국의 국경 철도연결 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Ⅲ. 정상회담 이후 운송망복원의 문제점

북한의 운송체계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의 낙후, 동서의 단절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수송능력상의 문제이다. 북한에서 철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0%를 담당하는 중심교통망이어서 현재의 철도시설로는 수송능력에 한계가 있다.

둘째, 재원조달의 문제이다. 경의선 복원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복선화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무려 3조원 이상의 비용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을 위해 자체 조달, 차관, 민간투자, 외자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한 애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시간상의 비용 문제이다. 현재 단절된 철도의 복원과 복선화, 항만의 재정비, 도로망의 보완 등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부담은

기업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업의 북한 진출을 막는 한 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정치적 안정성의 문제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거의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치적·군사적 안정성은 간과할 수 없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북한의 경제발전과 나아가 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이며, 체계적인 정책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 향후 정책방향에 관해 장·단기로 구분하여 운송망구축에 관한 종합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남북한 운송체계 구축 방향

1. 우선대상의 선정

도로, 철도 등의 SOC사업은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야 할 사업이다. 현재 남북간의 해상수송은 37~42%에 불과한 소석율과, 북한 항구내의 긴 체선기간, 북한의 높은 항비, 낮은 컨테이너 회수율, 직접통신 불가에 따른 신속성저하 및 통신비 과다, 북한항로의 특수성에 따른 많은 인력투입 등에 기인하여 매우 높은 운송비가 소요되고 있다.

남한의 IMF위기 이후 정부의 막대한 대북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순수하게 비용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우선 북한의 운송망구축을 위한 비용을 고려할 경우 최소한 8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분야의 투자비용을 계산한다면 운송망중에서는 항만에 대한 투자비용이 도로나 철도보다 적게 들어가므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해운을 중심으로 주요 공단과 연계되는 배후교통망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를 통한 대륙운송망체계와 도로를 통한 남북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단기적 방향

단기적인 방향은 기본적으로 북한지역의 산업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항만을 중심으로 교통망을 재정비함으로써 남북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우선투자지역을 중심으로 배후교통망의 확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신규기금을 통해 조성, 북한에 제공, 기업의 SOC투자에 의한 불확실요인을 제거하고 북한이 주도하게 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가. 철 도

남북간의 철도는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의 3개 단절노선이 있다. 이중 경의선(파주-개성) 미연결 구간 복원이 확정되었고, 향후 경원선과 금강산선에 대한 복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의선 복원은 단기적으로 물류비절감의 효과보다는 인적교류의 확대와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 전망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평양에서 개성까지 연결된 평부선의 경우, 100㎞의 주행이 가능한 지역이며, 평의선 구간 34㎞는 복선화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남포와 연계된 물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원선의 복원은 그 자체에 있어서는 시급하지는 않으나 북한의 자체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단기에 꼭 이루어져야할 사업이다. 즉, 경원선을 이용한 남북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북한의 외화획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나. 도 로

도로 부문에서는 남북간 단절된 13 개 노선의 복원 사업이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서부 교통축의 도로를 연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연결이 필요한 국도 1·3·7호선의 단절구간은 총 44.2㎞로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연결구간 사업을 완료하여 남북연결의 주요한 축으로 기능을 수행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공업지구 등 우선개발지역에 대해 항만·철도와 연계한 배후도로망을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지역의 배후수송망은 북한에 진출할 우리 기업의 수익성 향상 및 수송비 절감과 함께 북한지역의 인프라 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다. 항 만

단기적 항만정책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시간적 비용의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제3국을 통한 연계 방안에서 탈피하여, 남북 직항로를 개설해야 하며, 제3국 선박이 아닌 자국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간의 교역이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게 되는 원인은 북한의 항만시설 노후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으므로 가장 물동량이 많은 남포항의 하역시설 현대화를 통한 단기적 물류비 절감과 북한의 8개 무역항에 대한 하역능력의 정비와 노후화된 항만기반시설의 대폭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3. 장기적 방향

장기적으로 남북 운송망구축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한반도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 도로, 항만의 개별적인 체계화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적인 운송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재원마련은 남한의 단독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재원확보를 하지 못하므로 북한의 소득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 철 도

철도의 경우, 동부는 평라선이 평양-순천구간, 신성천-함흥 구간에 대한 개량 및 복선화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군사분계선 지역까지 놓여 있는 금강산청년선과 동해북부선의 연결을 통한 금강산 관광특구의 조성과 설악산·러시아·일본·동남아시아와 연계된 관광상품의 개발 등 남북의 공동외화 획득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남한은 경의선과 경원선의 복선전철화가 요구되는데, 이들 노선의 주변은 수도권 전철로써 사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회 노선의 개발이 요구된다. 북한내 철도시설의 개보수와 복선화를 통한 범아시아 철도망의 형성은 수십조원의 막대한 투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장기적으로는 범아시아 철도망과의 연계가 바람직할 것이다.

나. 도 로

도로에서는, 북한의 경제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내 간선도로망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역시 남북한간의 주요 연결축을 고려해야 한다. 전술한 3개 국도의 복원만으로는 본격적인 남북교류시 장거리·고속교통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장거리 고속화노선의 구축이 필요하다. 남한은 그 동안 국가간선도로망을 구상하면서 남북방향의 7개 노선을 북한에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남북운송망 구축을 통한 북한의 경제활동증가, 주민들의 소득수준의 증가, 도로교통망의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도시 중심의 지역간 도로 및 지역내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포장율 제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다. 항 만

한반도는 태평양 연안 지역과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Strategic Gateway)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요충지

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hub port)으로 청진항을 개발하고, 북한지역의 동남아 거점으로 남포항을 개발하여 5대 핵심항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부산항, 청진항, 광양항을 일본·미주를 겨냥한 대외교역 핵심항만으로 육성하고, 남포항과 목포항을 동남아·유럽을 겨냥한 핵심항만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낙후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 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도부문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단절 철도망을 연결함으로써 인적교류를 증대시키고, 물동량 운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시스템상의 협의와 한계노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륙철도망과 연계한 철도망을 구축하여 동북아 거점으로서 성장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로부문은 우선적으로 3개 노선에 대한 단절구간을 복구하고 나아가 남북 7개축의 연결과 간선도로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해운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항만 시설의 확충과 배후 수송망을 정비하고, 직항로 개설과 남북 자국의 선박이용을 통해 물류비를 축소시키며, 장기적으로는 5대 핵심항만을 국제물류거점으로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운송망연결을 위한 재원은 단기적으로 신규기금을 통한 자금공급과 국제협력을 통해 확보를 해야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 관광특구의 개발과 같은 소득창출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1. 문제제기

남북한은 그 동안 분단 반세기의 역사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회피한 채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왔다. 그 결과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적 격차가 매우 커졌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금, 대북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 경제협력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장관급회의를 통하여 많은 사항을 협의·추진하여 남북경제협력이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간 경제협력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특히 지역간·산업간 연계를 통해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고 생산된 재화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케 하는 남북간의 운송망구축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의 남북 교역은 육상운송로의 부재로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물류비가 너무 과다한 실정이다. 또한 남북한이 국토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 육상을 통한 연결교통망을 갖지 못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러시아 내륙 지방과의 교역에는 해상을 통한 우회 노선을 이용하고 있어 과다한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물류비의 비중은 섬유류 위탁가공의 경우 생산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컬러 TV는 총매출에서 1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화물운송료의 경우 20ft를 기준으로 인천~남포간의 운송료가 900~1,000달러로서 인천~천진, 인천~홍콩의 2~3배에 달하는 액수이다.[1] 그러나 남북간 육상운송로가 열릴 경우 대북 위탁가공 사업의 물류비는 현행의 1/3~1/5 수

---

1) 김연철,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0.6., p.6.

준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북한의 육상수송망이 남한과 연결된다면 원료 공급지인 북한과 제품 생산지인 남한을 연결시키는 것이며, 임금이 저렴한 북한 지역에서의 가공무역이 활성화될 것이다.[3)] 따라서 북한측은 노동 집약적 산업 위주로, 남한측은 자본 집약적 산업 위주로 한반도의 산업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결국 남한의 자본·기술력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풍부한 천연 자원을 결합시키는 위탁 생산의 경우, 육상교통망을 통한 값싼 수송비 확보는 남북 경협 활성화의 최우선 선결 과제의 하나이다.[4)] 또한 북한은 남북한을 연결하는 육상수송망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교(Landbridge)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 교역의 간선교통망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중계 수송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육상수송망뿐만 아니라 육상수송망과 연계한 해상수송망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장단기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남북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와 기존의 연구성과를 통해 현황분석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상회담이후 남북운송망 복원상의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남북운송망 복원상에 우선 순위의 선정을 통해 어떠한 사업이 단기적으로 필요한가를 살펴보았고, 단·장기로 나누어 각 운송수단간에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주변국과의 고려사항과 과거 통일국가(독일 등)의 선례

---

2) 양문수·김석진, "정상회담 이후 기업의 대북사업 전략", LG연구원, 2000.7.
3) 안병민, "남북한 육로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통일경제」, 1999.7., p.2.
4) 양운철, "남북한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6.

등의 거시적인 요소보다는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철도, 도로, 항만 중심의 운송체계 구축과 노선의 방향과 확장문제, 시설기반의 확충 등에 한정하였다. 특히 남북한 운송체계의 비교·분석에서는 북한 운송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운송체계 구축 방안의 단기적 방향은 그 기간을 5~10년 정도로, 장기적 방향은 10년 이상으로 잡았다.

Ⅱ. 남북한 운송체계의 비교분석

남한의 수송수단은 도로가 중심인 반면에 북한은 철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도로와 해운은 철도와 연계 수송이라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화물 수송의 경우 철도가 전체 화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와 해운은 각각 7%와 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객 수송에 있어서는 철도가 62%, 도로는 37%, 해운이 1%를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한의 운송체계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였다.

1. 철 도

북한은 화물 운송에 있어서 철도 부문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기타 운송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주철종도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화물 수송이 여객 수송보다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철도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철도를 이용하여 화물의 장거리·대량 수송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5]. 한

5) 이원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현황-철도", 현대경제연구원(http://www.hri.co.kr) 북한정보뱅크, 1999.

편, 북한의 지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의 전철화, 철도 레일의 중량화 및 철도 장비의 생산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철도의 수송 능력 제고를 위한 철도의 중량화·전기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철도 전철화 노력은 전기기관차가 산악지대 운행에 효율적이며 동력의 자급화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6)]

여객 수송보다는 공업용 원자재, 광산물, 농수산물 수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철도망은 약 100여 개의 철도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노선의 50% 이상은 평균구간 길이가 30 ㎞ 정도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1998년 현재 5,214㎞로서 남북 비중이 1.3배로 남북간 큰 차이가 없으며, 전철화 구간은 4,132㎞로 철도 총연장의 79.2%를 차지하여 남한의 9.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철도관련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남한은 기관차 586대, 화차 1,854대, 객차 13,395대를 보유한 반면, 북한은 각각 1,130대, 19,123대, 967대를 보유하고 있다.[7)]

〈표 1〉 남북한 철도 시설·장비 현황 비교 (단위 : ㎞, %, 대)

구 분		1998	1997	1996	1995	1994
철도총연장[1)]	남한	6,683	6,580	6,559	6,554	6,559
	북한	5,214	5,214	5,112	5,112	5,112
	남/북	1.3	1.3	1.3	1.3	1.3
전철총연장	남한	661.3	661.3	576.6	559.2	557.4
	북한	4,132	4,132	4,030	4,030	3,850
전철화율	남한	9.9	10.1	8.8	8.5	8.5
	북한	79.2	79.2	78.8	78.8	75.3

6) 이희연 외 2,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국토공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11.30, p413.

7) 박완신, 「북한의 경제와 경영」, 서울프레스, 1998.10., p115.
통일부,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구 분		1998	1997	1996	1995	1994
기 관 차	남한	586	586	583	580	582
	북한	1,130	1,140	1,153	1,162	1,171
객 차	남한	1,854	1,928	1,900	1,856	1,868
	북한	967	1,010	1,045	1,048	1,040
화 차	남한	13,395	13,952	14,048	14,330	15,191
	북한	19,123	20,024	21,271	21,130	20,088

자료 : 통일부, 철도청

주 :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전철 및 협궤철도가 포함됨

북한의 철도노선은 현재 10여 개의 기간노선과 90여 개의 지선이 건설되어 있으며, 이중 주요한 국내선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선이다. 국외선의 경우에는 본래 6개선이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는 4개선만 운행중에 있다.[8] 중국·러시아간 국제 철도를 이용한 북한의 화물 취급 가능량은 약 1,100만 톤으로 북한·러시아간 화물 처리 능력이 380만 톤(북한 도착 화물 120만 톤, 북한 출발 화물 260만 톤)이며, 북한·중국간 화물 처리 능력은 720만 톤(북한 도착 화물 300만 톤, 북한 출발 화물 420만 톤)으로 추산된다. 북한·러시아간의 철도를 이용한 화물 수송은 북한과 구소련과의 우호협력협정이 만료되어 1997년 3월부터 수송이 거의 중지된 상태이며, 단지 러시아에 취업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를 수송하기 위한 부정기편만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9]

8) 김영봉,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8.9., p87.

9) 안병민,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의미와 파급효과",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2., pp.6~7.

〈표 2〉 북한의 주요 철도노선망

구분		경로	연장	비고
국내선	평 의 선	평양-신의주	225	1964년 전철화
	평 라 선	간리-나진	781	북한 최장 노선
	함 북 선	반죽/회령-나진	327	
	강 원 선	고원-평강	145	남한 경원선과 연결
	금강산청년선	안변-구읍	102	동해북부선 대체 기능
	만 포 선	순천-만포국경	303	중국 국경과 연결
	평 북 선	정주청년-청수	121	
	평 부 선	평양-개성	187	남한 경의선과 연결
	평 덕 선	덕천-구장청년	192	
	백두산청년선	길주청년-혜산청년	142	1990년 개통(전철)
	청년이천선	평산-세포청년	141	1972년 개통
국외선	對 중 국	청진-남양-도문-연길		
		평양-신의주-단동-북경	1,347	
	對 러시아	평양-두만강역-핫산-모스코바	10,214	
		평양-신의주-단동-바이칼-시베리아-모스코바	8,666	

자료 : 안병민,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의 의미와 파급효과", 「통일경제」, 1999.2.,p.5. 재인용.

북한의 철도 화물 평균 수송 거리는 197㎞로 남한의 24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거리 수송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도로가 수송 수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철도가 도로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어 철도 고유의 특징인 대량화, 장거리화, 중량화

등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철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철도에 대한 절대적인 투자 부족 및 관리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한 침목, 노반, 신호체계 등 철도 기반 시설이 열악한 형편이다. 기관차의 경우는 전동기의 반이상이 고장 및 노후화로 견인능력이 절반이하로 떨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전철화된 철도가 오히려 수송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도 로

북한의 도로는 고속도로와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일반도로[10)]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고속도로와 1등급~3등급 간선도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4등급~6등급 지방도로는 지방에서 관리한다.[11)]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현재 남한의 도로 총연장은 86,990㎞이고, 고속도로는 1,990㎞인데 반해 북한은 각각 23,307㎞, 682㎞로 남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북한의 도로포장율은 10% 미만으로 남한의 77.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12)] 폭 2.4m이하의 4급도로가 전체의 79%로 도로 사정이 극히 열악한 상태이다.[13)]

---

10) 북한의 도로구조

구분	연 결 구 간	차선	노견폭	일일통과차량
1등급	평양과 각 도시간의 연결 도로	2	3.5m이상	3,500대 이상
2등급	각 도시간의 연결 도로	2	3.5m	1,500~3,500대
3등급	도시와 군, 군과 군간의 연결 도로	2	3m	500~1,500대
4등급	군과 리간의 연결 도로	2	2.75m	100~500대
5등급	군과 리간의 연결 도로	2	2.5m	100~200대
6등급	리와 마을내의 도로	1	2.4m이하	100 대 미만

자료 : 북한경제포럼, 「북한경제론」, 법문사, 1996.4. p194., 재인용.

11) 박송동,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현황-도로", 현대경제사회연구원(http://www.hri.co.kr), 1999.

12) 김홍일, "남북교류협력시대의 북한 SOC 구축방안", 2000.5., p.4.

13) 황재성,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동아일보, 2000.6.11.

〈표 3〉 도로 총연장 및 고속도로 현황 비교 (단위: ㎞)

구 분		1998	1997	1996	1995	1994
도 로 총 연 장	남한	86,990	84,968	82,342	74,237	73,883
	북한	23,407	23,377	23,369	23,339	23,219
	남/북	3.7	3.6	3.5	3.2	3.2
고속도로길이	남한	1,996	1,889	1,886	1,825	1,650
	북한	682	682	682	644	524
	남/북	2.9	2.8	2.8	2.8	3.1

자료 : 통일부

북한의 도로는 90% 이상이 자갈이나 진압된 토양을 사용한 비포장 도로로서 노면 상태가 불량하고 노폭이 협소할 뿐 아니라 도로의 경사와 굴곡이 매우 심하여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14] 고속도로의 경우 재질이 콘크리트이고 낙후된 기술로 건설되어 시속 50㎞ 이상의 주행이 곤란하다. 또한 대부분 2차선으로 전시에 활주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안전시설이 없고, 노면의 굴곡도 심하다. 간선도로도 장기간 관리 부족으로 더욱 열악한 상태이다. 즉, 평양의 수도 건설에 역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지방 도시간의 도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지방 도시와 평양간의 도로 사정은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고속도로는 서해안 축을 연결하는 평양~순안, 평양~남포, 평양~개성 노선이 있고, 동서를 연결하는 평양~원산 노선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원산~고성간의 노선 등 7개가 있다.[15] 이외에 북한에는 34개의 국도와 440개의 지방 도로가 있다. 주요 간선 도로로는 개성~평양~신의주간의 서부간선도로, 고성~원산~청진~나진간의 동부해안간선도로, 평양~원산간의 동서횡단도로, 신의주~무산간의 북부동서횡단도로 등이 있다. 이러한 북한 도로망의 특징은 우선, 철도 수송의 보조

14) 동용승·서양원, 「남북경협」, 삼성경제연구소, 1995.3., p.176.
15) 매일경제신문, 2000.6.25.

수단으로 단거리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도로는 단거리화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도로가 지역간(inter-region) 교통 수단으로 건설되었다기보다는 지역내 (intra-region) 연결 교통 수단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16) 둘째, 낭림산맥의 영향에 의해 동서 연결도로의 건설이 곤란함에 따라 낭림산맥을 경계로 서해안의 평지와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발달하였고, 북부 내륙 산지에는 도로 밀도가 희박하여 동서간 단절이 심하다.17)

북한의 도로망이 이렇게 열악한 것은 가솔린 보급난, 사회적 폐쇄성, 지형적 제약, 자동차산업의 낙후 등의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18)

3. 항 만

북한에 있어 해운·항만의 위상은 철도가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육상 운송 부문에 비해 떨어지며, 중요성 측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다.19) 북한의 해안은 동서로 분리되어 있음에 따라 항만시설도 각 해안별로 운영되고 있다. 대외 해상 운송은 수송 조건이 좋고 구소련 및 일본과의 운항이 편리한 동해안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20)

동·서해안으로 양분되어 있는 북한의 항만은 그 기능에 따라 남포, 송림, 해주, 나진, 원산, 흥남, 청진, 선봉 등 8개소의 무역항, 김책, 청진, 신포, 양화, 원산 등 5개소의 원양수산기지항 및 신의주 등 30여개소의 소규모 어항 등으로 구분된다.21) 항만은 동·서해안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및 양호한

---

16) 북한경제포럼, 「북한경제론」, 법문사, 1996.4., p.194.

17) 박기원, "북한 금강산지역 관광자원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1.6., pp10~12.

18) 최주환, 「북한경제론」, 대왕사, 1992.3., p170.

19) 홍순직,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현황-항만", 현대경제연구원, 1999.

20) 김학소·유종만·이상우,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항만개발 정책", 해양수산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pp.2~3.

21) 김진현·홍승용, 「해양 21세기」, 나남출판사, 1998.10., p.352.

항만 설립 조건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동해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주요 무역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진항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컨테이너설비를 갖춘 항으로[22] 주로 대 중국 중개무역 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며, 청진항으로부터 약 80㎞ 북부에 위치한 나진항은 자연적 조건에 의한 천혜의 항만으로 북한 최대의 정유항인 선봉항과 함께 두만강지역 개발사업계획의 중심항만으로 개발될 전망이다.[23] 원산항은 북한 동해안의 최남단 무역항으로, 연간하역능력이 170만톤에 불과해 아직까지는 상항(商港)의 기능보다는 군사항의 성격이 강해 화물의 입출항은 매우 미약하지만, 금강산, 명사십리와 송도원 등이 인접해 있어 관광항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한편 남포항은 서해안 제일의 무역항으로서 북한최대 공업지구인 평양과 고속도로에 의하여 연결된다. 또한 해주항, 홍남항은 각각 시멘트와 원유 전문항으로서 설비는 아직 미약하다(〈표4〉 참조).[24]

〈표 4〉 북한 무역항의 시설현황

항명	하역능력 (만톤)	접안능력 (만톤)	수심 (m)	부두길이 (m)	주요취급화물	비 고
청진	800	2	9-10	2,138	잡화, 곡물, 광석, 철재	중국의 대일 중계무역에 이용
홍남	450	3	6.7-7.9	1,850	비료, 크링커	
나진	300	1	10	2,515	석탄, 비료, 잡화	소련, 대동남아 수출창고
원산	170	1	6.1-7.9	2,520	시멘트, 수산물	군항으로 이용
남포	800	2.5	10	1,890	석탄, 잡화, 시멘트	평양과 도로, 철도 연결
해주	240	1	9.8-10.1	1,350	시멘트	
송림	160	2	9.8-10.1	700	철광석, 석탄	송림제철소 전용부두
선봉	200	2.5	23	455	석유, 화학	석유도입항으로 개발

자료: 김진현·홍승용, 「해양 21세기」, 나남출판사, 1998.10., p.376., 재인용.

22) 황재성,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동아일보, 2000.6.11.

23) 북한경제포럼, 「북한경제론」, 법문사, 1996.4., pp.201~207.

24) 진형인·조찬혁, "통일에 대비한 해운항만정책 구상", 해운산업연구원, 1994.12., pp.25~39.

한편, 남한의 항만시설은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현재 전체 하역 능력이 41,652만톤으로 북한의 3,501만톤에 비해 11.9배나 높으며, 선박보유톤수는 각각 524만GT와 72만GT로 비중이 7.9배이다. 북한은 대부분의 무역항이 하역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신형 컨테이너선을 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최대 선박 접안 능력도 1만~2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항만하역장비 및 시설이 노후화, 전용부두시설 부족, 항만의 관리·운영 부실과 항만배후수송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항만시설의 이용도가 50% 이하 수준에 머물러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25] 북한의 항만이 이같이 후진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휴전선과 산악에 의한 동서분단, 주요 교역 대상국의 국경 철도연결 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26]

〈표 5〉 북한의 항만하역능력 및 선박보유톤수 (단위 : 만톤, 만G/T)

구 분		1998	1997	1996	1995	1994
항만하역능력	남한	41,625	35,735	29,526	28,520	27,620
	북한	3,501	3,501	3,501	3,501	3,501
	남/북	11.9	10.2	8.4	8.1	7.9
선박보유톤수	남한	524	676	699	633	650
	북한	72	95	92	90	89
	남/북	7.3	7.1	7.6	7.0	7.3

출처: 해양수산부, 통일부

북한 항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대내 항로는 비교적 단거리화 되어 있으며, 군소 항만을 왕래하도록 되어 있다.[27] 이는 북한의 선박이

---

25) 김진기, "북한의 산업구조와 북한지역 투자촉진대책", 「한반도 통일론」, 1997.11., pp.431-432

26) 주형인·조찬혁, "통일에 대비한 해운정책 구상", 해운산업 연구원, 1994.12., pp.15~21.

노후화된 점과 함께, 장거리 대량 운송의 이점을 발휘해야만 육상 운송에 비해 경쟁력이 생기는 해상 운송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철도의 보조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28) 대외 항로는 빈약한 상태이며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운행 중인 대외 항로는 70년대 이전에 개설된 항로이며, 국별로도 교역국 가운데 해상 수송이 불가피한 일본과의 항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2년 「남북 교류·협력 부속 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남북간의 직항로를 개설한 이후 남북간의 교역은 해상운송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서해안의 노선은 인천~남포간이며, 동해안은 화물 종류에 따라 부산, 포항, 온산 등지와 북한의 청진, 흥남, 원산간을 운항하고 있다.29) 그러나 남북한간에는 직항로 개설에도 불구하고 남한 국적선의 북한 영해 진입·정박 금지로 인한 제3국 선박의 이용 등에 의한 높은 물류비로 많은 장애를 겪고 있다.30)

Ⅲ. 정상회담후 운송망복원의 문제점

북한의 운송체계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의 낙후, 동서의 단절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

---

27) 김진현·홍승용, 「해양 21세기」, 나남출판사, 1998.10., p376.
진형인·조찬혁, "통일에 대비한 해운항만정책 구상", 해운산업연구원, 1994.12., pp.13~21.

28) 김길수, "남북해운 협력을 위한 연안해운의 기능강화", 「해양한국」, 한국해상문제연구소, 1994.6.

29) 전일수, "북한 해운 항만 현황과 과제", 「계간 북한연구」, 통권 제16호, 1994., pp.60~81.

30) 강종희, "남북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해운협력방안", 「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0.6., pp.23~30.

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수송능력상의 문제이다. 남북 장관급회의에서 합의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경의선 연결의 경우 남북이 복원키로 한 단절구간은 남한측 문산~장단간 12㎞와 북한측 장단~봉동간의 8㎞ 등 총 20㎞로서 구간이 짧고 공사에 별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다. 경의선이 연결되면, 평양~남포 구간과 사리원~해주 구간에도 철도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서울에서 개성, 평양, 남포, 해주, 나아가서 신의주까지 철도 운송이 가능하게 된다.[31] 그러나 북한에서 철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60%를 담당하는 중심교통망이어서 현재의 철도시설로는 수송능력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최근에도 평양~사리원 구간의 경우는 수송량이 수송능력의 한계에 도달해 있는 실정이며, 경의선이 연결된다 하여도 이의 효율적 운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둘째, 재원조달의 문제이다. 경의선 복원의 경우 정부는 약 500억원을 추정하고 있으나, 경의선을 통해 남북교역을 위한 물자를 수송하기에는 북한의 철도관련 설비가 노후되어 대대적 보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의선을 복선화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무려 3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32] 또한 경원선 복원의 경우 단절구간은 남한측 신탄리~월정리(16.2㎞)와 북한측의 월정리~평강(14.8㎞)을 합해 모두 31㎞이며, 복원 비용은 남한측 신탄리~월정 구간에 866억원이, 북한측 월정~평강 구간에 1,732억원 등, 총 2,5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러한 자금에 대해 자체 조달, ADB 등 국제금융기구 차관,

---

31) 안병민,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의 의미와 파급 효과",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2., pp.11~12.

32) 안병민, "육로수송의 필요성과 문제점",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7., pp.3~5.

민간투자나 남한정부의 지급보증하에 외자유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안들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애로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민자유치 방안으로 흔히 거론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33]과 BOT[34],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방식 등은 현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35] 우선 아직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경제의 주요토대인 SOC를 남한 기업에 일임하여 건설·운영케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가능하다 해도 현재 북한경제 여건으로 볼 때 SOC 사업에서 충분한 운영수익을 거두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같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곳에서 시행되는 SOC 사업에 대해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만을 믿고 자금을 빌려줄 만한 금융기관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선진국 기업들의 투자유치의 경우 북한의 국가 리스크가 높고 투자자금의 회수 방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진국 기업들이 이에 투자하려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36]

셋째, 시간상의 비용 문제이다. 현재 단절된 철도의 복원과 복선화, 항만의 재정비, 도로망의 보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7] 이러한 시간적 부담은

---

33)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만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미래 현금흐름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 즉 리스크가 매우 작은 프로젝트에 대해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34) BOT란 민간기업인 사업주가 SOC를 건설할(build) 뿐만 아니라 건설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운영하여(operate) 투자수익을 회수한 다음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정부에 넘겨주는(transfer) 방식을 가리킨다. 민간기업들이 SOC 투자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의해 조달할 경우 해당 SOC는 BOT 방식으로 운영하여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자금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35) 김석진, "SOC 대북투자 어떻게 해야 하나", 「LG주간경제」, 2000.6.7., pp.16~18.
서광석,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21세기 한국철도망 구축방안",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0.5., pp.38~39.

36) 양문수·김석진, "정상회담 이후 기업의 대북사업 전략", LG경제연구원, 2000.7., pp.13~15.

37) 강응경, "시나리오별 남북경협 전망", 매일경제, 2000.7.6.

기업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업의 북한 진출을 막는 한 요인으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정치적 안정성의 문제이다. '과연 얼마동안 지금의 정책들을 추진할 것인가?', '군사적 위협은 앞으로 없을 것인가?' 등 정치적 불안정성의 문제가 남게 된다. 물론, 게임이론을 적용할 경우[38]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거의 힘들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치 · 군사적 안정성은 간과될 수 없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북한의 경제발전과 나아가 통일한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 향후 남북한 운송체계 구축에 관해 장 · 단기로 구분하여 종합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남북한 운송체계 구축 방향

1. 우선대상의 선정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북 당국간 공식연락 채널을 상설화와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사항들이 합의되었다.[39] 이를 계기로 하여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함께 자원 · 에너지 분야 경협과 국내 제조업의 북한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남북경협의 형태가 위탁가공과 단순교역에서 직접투자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40]

---

38)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한울아카데미, 1995.3. 참고.
39)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결과 해설자료", 2000. 6. 15
통일부,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결과 해설자료", 2000.7.31.
40) 김석진, "정상회담 이후 '북한특수'의 5대 조건", 「LG주간경제」, 2000.4.19., p.19.

도로, 철도 등의 SOC사업은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야 할 사업이다. 현재 남북간의 해상수송은 37~42%에 불과한 소석율[41]과, 북한 항구내의 긴 체선기간, 북한의 높은 항비, 낮은 컨테이너 회수율, 직접통신 불가에 따른 신속성저하 및 통신비 과다, 북한항로의 특수성에 따른 많은 인력투입 등에 기인하여 매우 높은 운송비가 소요되고 있다.[42]

〈표 6〉 노선별 화물의 개략적 총수송 비용

노선	수단		수송 비용	시간 비용	총수송 비용	비고
	주 수단	보조 수단				
서울~평양	해운	철도	3,560	69,864	73,424	서울~인천 남포~평양
		도로	7,350	68,323	75,673	
	철도		5,556	23,311	28,877	경의선
	도로		16,962	18,567	35,529	자유로
서울~나진	해운	철도	12,760	244,591	257,351	서울~인천 보조 수단
		도로	26,724	238,916	265,640	
	철도		19,118	80,067	99,185	경원선
	도로		58,515	64,053	122,568	경원축

자료: 김경석, "남북한 및 동북아 지역의 육로 직수송 방안", 통일부, 1998.
주 : 1) 수송 비용 원단위 - 화물: 철도 24.2원/ ㎞·톤, 도로 74.07원/㎞·톤, 해운 7.48원/㎞(승용차, 버스 평균) 적용.
2) 수송 시간 산정을 위한 속도는 도로 100 ㎞/h, 철도 80 ㎞/h, 해운 30 ㎞/h 적용.
3) 여객의 평균 시간 가치는 8,816.8원/시간, 화물의 평균 시간 가치 8,108원/시간·톤
4) 상하역 비용 및 항만에서의 지체 시간 비용 제외.

41) 실제로 수송에 이용된 체적의 비율로 선박의 실제 사용률을 의미한다. 물동량이 많은 미국·유럽항로의 소석률은 100%, 중국항로도 80%에 달한다

42) 강창호, "남북교역의 물류현황", 「북한뉴스레터」, KOTRA, 2000.2.

한편, 물류비 절감 효과 측면에서 교통수단의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표6〉에서 운임과 시간 비용을 감안한 총수송 비용을 수단별로 비교하면, 운임은 해운-철도-도로의 순서로 많아지나, 시간 비용은 반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송 비용과 시간 비용을 감안한 총비용은 해운에 비해 도로와 철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육상 교통을 이용한 수송이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순조로운 대북투자에 필수적인 물류비용의 인하를 위해서는 육로수송이 가장 유리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IMF위기후 정부의 막대한 대북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순수하게 비용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북한의 운송망구축을 위한 비용은 최소한 8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경의선 연결과 관련된 철도 복구와 남포, 신의주 등 주요 산업단지의 배후교통망 건설 등을 위해 7조 7,000억원 소요될 것이다.[43]

〈표 7〉 북한 주요 산업단지의 SOC투자 비용 추정

분야	비용(조원)	내 역
도로	2.2	-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연계를 위한 고속도로, 국도 등의 확・포장
철도	4.9	- 평의선(평양-신의주, 224.5㎞)과 평부선(평양-개성) 복선화 - 개성-문산 구간 확충
항만	0.6	- 남포, 신의주, 나진, 원산항 등의 항만시설 기능 제고
계	7.7	

자료 : 김연철,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0.6., p.13., 재구성.
주 : 남포, 신의주, 나진・선봉 등 주요 산업단지의 배후교통망 조성에 한정

43) 김연철,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0.6., p.13.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분야의 투자 비용을 계산한다면 운송망중에서는 항만에 대한 투자 비용이 도로나 철도보다 적게 들어가므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육상 운송체제가 연계운송체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에너지난과 낙후된 시설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항만,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44) 남북한의 철도선 연결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 북한 철도가 주로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아직도 기차의 동력원으로 유류 활용도가 높아 운영체제의 통합을 위해 사전 준비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시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45) 이와 함께 남북교류를 위한 수송 수단간 우선 순위 결정에서는 수송 거리·무게처럼 일반적 기준보다는 북한 주민 접촉 및 북한 지역 내 진·출입 통제 측면이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해운을 중심으로 주요공단과 연계되는 배후교통망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를 통한 대륙운송망체계와 도로를 통한 남북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단기적 방향

단기적인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북한지역의 산업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쪽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즉, 항만을 중심으로한 교통망을 재정비함으로써 남북협력을 활성화시키고,

---

44) 북한경제포럼, 「남북한경제통합론」, 오름출판사, 1999.10., pp.202~203.

45) 철도시설의 상이점을 살펴보면, 북한의 일부 구간은 광궤(1,522㎜)와 협궤(1,435㎜ 이하)가 섞여 있으며, 신호·통신시스템의 차이로 차상신호장치 등의 보완장치 설치가 요구된다. 전력방식은 북한은 DC3kv이고 남한은 AC25kv여서 연결구간처리를 위하여 기관차에 이중모드의 설치가 필요하다. : 김연규, "남북한 철도망연결 추진방안", 월간교통, 2000.6., p.17.

동시에 우선투자지역을 중심으로 배후교통망의 확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원마련은 기존의 방안처럼 남한이 주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지역의 경우 북한이 주가 되어 재원을 마련하는 상호호혜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규기금46)을 조성하여 북한에 제공해 기업의 SOC투자에 의한 불확실요인을 제거하고 북한이 주도하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는 지구상 최후의 분단 국가 소멸이라는 상징성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두만강 개발이나 KEDO처럼 국제적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47)

1) 철 도

남북간의 철도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단절된 노선이 있다. 이중 경의선(파주-개성) 미연결 구간 복원이 확정되었고, 향후 경원선과 금강산선에 대한 복원이 추진될 전망이다.48) 현재 경의선과 경원선의 미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와 용지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금강산선의 미연결 구간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다. 미연결 구간에 대한 복원 사업은 비무장지대 내의 군 시설물과 위험물 처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

경의선 복원은 단기적으로 물류비절감의 효과보다는 인적교류의 확대와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 전망 등의 부수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평양에서 개성까지 연결된 평부선의 경우, 100㎞의 주행이 가능한

46) 신규기금의 조성은 북한지역의 교통망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탁금형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즉, 기탁금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북한이 일정기간, 일정정도의 세제적 혜택을 부여하거나,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47) 서동만, "남북정상회담과 국제협력",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7.
북한연구소, 「월간 북한」, 2000.5., pp.66~67.

48) 연합뉴스, 「동북아 21」, 2000.5, p.20.

지역이며, 평의선 구간 34㎞는 복선화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으로 남포와 연계된 물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선의 경우에는 지형적 제약에 의해 재원과 시간적 비용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표 8〉 남북한 철도망의 미연결 구간 현황

노선	미연결 구간(㎞)	추진 현황
경의선 (서울-신의주)	남측: 문산-장단(12.0) 북측: 장단-봉동(8.0)	·남북 합의 추진중 - 실시 설계(1985년) - 임진강 교량 하부보강(1986년) - 용지 매수(1997년)
경원선 (서울-원산)	남측: 신탄리-군사분계선(16.2) 북측: 군산분계선-평강(14.8)	·남북 합의시 시공 가능 - 실시 설계(1991년) - 용지 매입(1997년)
금강산선 (서울-금강산)	남측: 철원-군사분계선(24.5) 북측: 군사분계선-기(50.8)	·기본 및 실시 설계중(19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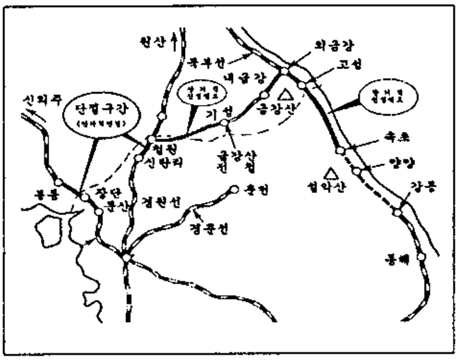
자료 : 동용승, "정상회담이후의 남북경협", 「극동문제」, 극동문제연구소, 2000.8., p.35.

경원선의 복원은 물류비용 측면에서는 시급하지는 않으나 북한의 자체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단기에 꼭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즉, 경원선을 이용한 남북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북한의 외화획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금강산 유람선 관광사업 부문이 1999년 매출액만 942억원이고, 생산유발효과 6,53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246억원, 고용유발 효과 26,060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49] 가져왔다는 점과 북한의 육로관광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원선의 복원을 통한 금강산 관광특구의 개발은 매우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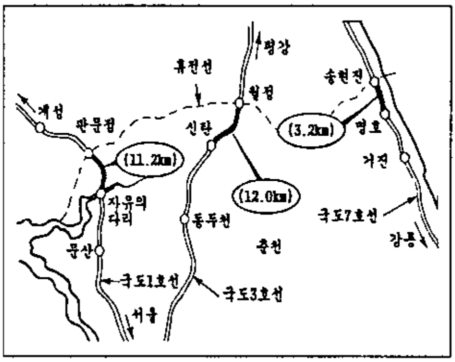
---

49) 윤상률,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과 전망", 북한뉴스레터, KOTRA, 2000.3.

〈그림 1〉 단기 철도 복원방안



〈그림 2〉 단기 도로 복원 방안



자료 : 1) 박기원, "북한 금강산지역 관광자원에 관한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1991.6., pp.74~81.
2) 양문수 · 김석진, 「정상회담 이후 기업의 대북사업 전략」, LG경제연구원, 2000.7., pp.18~20.

2) 도 로

도로 부문에서는 남북간 단절된 13개 노선의 복원 사업이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서부 교통축의 도로를 연결해야 할 것이다(〈표9〉 참조). 우선 연결이 필요한 3개 국도의 단절구간은 총 44.2㎞이며, 노선별로는 국도 1호선이 11.2㎞, 국도 3호선에 20㎞, 국도 7호선이 3.2㎞의 단절구간이 있어, 이들 구간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50)

국도 1 · 3 · 7호선은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연결구간 사업을 완료하여 남북연결의 주요한 축으로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1 · 3호선은 평양 · 남포, 나진 · 청진 등과 연계되는 물류비용 감소와 인적교류증대를 위해 활용하고, 7호선은 설악산-금강산을 잇는 관광자원개발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그림 2〉 참조). 그러나 1 · 3 · 7호선의 노선 주변은 시가화가 심각하여 대

50) 김경석,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통합도로망 구축 방안",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0.6., p.7~9.

량·고속 수송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도 승격, 노선 연장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9〉 남북한 주요 단절도로 현황

축명	행정구역		연결노선		
	남한	북한	국도	지방도	기타노선
서부축	파주, 연천	개성, 장풍	1호선	322호선	2개 노선
중부축	철원	평강, 김화, 철원	3,5,43호선	-	2개 노선
동부축	고성, 양구	고성, 금강, 창도	7,31호선	-	2개 노선
총계			6개	1개	6개

자료: 김경석,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통합도로망 구축방안",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0.6., p.7. 재인용.

주: 기타도로는 비법정도로 및 군도

또한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공업지구 등 우선개발지역에 대해 항만·철도와 연계한 배후도로망을 확충해야 한다.51) 이러한 투자지역의 배후수송망은 북한에 진출할 우리 기업의 수익성 향상 및 수송비 절감과 함께 북한지역의 인프라 개선이라는 일석이조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개발이 추진중인 나진·선봉지역과 금강산 지역, 그리고 현재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신의주공단이나 해주공단 등의 배후수송로를 미리 확보하고, 간선도로망을 함께 확충 연결함으로써 남북한 도로망의 통합을 미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노선으로는 나진·선봉배후도로로 나진-도문 고속화도로, 신의주배후도로로서 신의주-단동 및 신의주-안주간 고속도로, 그리고 해주-개성간의 고속화도로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향후 남북 통합도로망의 간선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51) 김경석, "육로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7., p.9.

3) 항 만

단기적으로는 철도나 도로보다는 항만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단기적 항만정책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물류비용의 절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제3국을 통한 연계 방안에서 탈피하여, 북한과 해운·항만에 의한 직수송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52) 즉, 남북 교역의 직접 수송 창구로써 청진, 나진·선봉항, 평양주변 남포항의 시설 확충과 이들 항구와의 정기 직항로 개설에 주력해야 한다.53) 이와 함께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간의 선박운행과 물동량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므로 3국 선박이 아닌 자국선박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54)

〈표 10〉 남북 선박운행 및 물동량동향

구	분	1994년 7-12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A)	1999년 (B)	증가율 (B/A)
선박운행	남한→북한	27	99	101	113	260	731	181.2%
	북한→남한	70	208	221	244	342	983	187.4%
	계	97	307	322	357	602	1,714	184.7%
물동량	남한→북한	6,758	281,220	147,888	361,282	396,111	780,593	97.1%
	북한→남한	131,136	345,778	187,610	249,759	162,220	203,019	25.2%
	계	137,894	626,998	335,498	611,041	558,331	983,612	76.2%

자료 : 통일부

52) 진형인·조찬혁, "통일에 대비한 해운항만정책 구상", 해운산업연구원, 1994.12., pp.69~71.
북한연구소, 「월간 북한」, 2000.5., p.62.

53) 그동안 운송비용의 과다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위탁가공 대상품목이 많다는 점과 초기 합영투자 시에도 반제품의 대북반출과 완제품의 남한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므로 직항로 개설은 매우 중요하다. : 유승경, "남북경협 어떻게 풀어야 하나", 「LG주간경제」, 1998.3.18., pp.12~13.

54) 동용승·서양원, 「남북경협」, 삼성경제연구소, 1995.3., pp.169~171.

시설측면에 있어서 북한의 항만시설 노후화가 고물류비의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가장 물동량이 많은 남포항의 화물 하역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면 단기간에 물류비를 낮출 수 있다.[55] 또한 북한의 8개 무역항에 대한 하역능력의 정비와 노후화된 항만기반시설의 대폭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3. 장기적 방향

장기적으로 남북 운송망구축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한반도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 도로, 항만의 개별적인 체계화 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적인 수송망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 차원에서 재원마련은 남한의 단독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곤란하므로 남북연계관광상품의 개발이나 경제협력 증대 등 북한자체의 소득창출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철 도

남북한 철도의 연결은 효과적인 남북의 물자교류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국 동북부,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과 대륙으로 연결하는 수송로를 확보한다는 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한 철도 수송능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남북한의 주요 노선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와 복선화가 필요할 것이다.[56]

북한의 평라선은 평양-순천구간, 신성천-함흥 구간이 거의 용량에 도달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 구간의 개량 및 복선화가 요구된다. 또한

55) 동용승, "남북경협 전망과 확대방안",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7.
박창호, "남북한 교역증진을 위한 새로운 항만물류체계 구상", 「해양한국」, 2000.6., pp.39~40.

56) 김진현・홍승용, 「해양 21세기」, 나남출판사, 1998.10., p.385.

철원에서 기성까지 75㎞에 달하는 금강산선을 관광선으로 복구하고, 금강산청년선과 동해북부선 연결을 통한 금강산 관광특구의 조성과 설악산·러시아·일본·동남아시아와 연계된 관광상품의 개발 등 남북의 공동외화 획득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57)

〈표 11〉 남북한 철도의 장기 추진방안

연결구간	북한	남한
경원선-강원선	·강원선 : 평강-사리원 구간 개량 ·평부선 : 평양-사리원 구간 개량 ·평의선 : 영양-신의주 구간 개량 ·평라선 : 평양-순천, 신성천-함흥 구간 개량 및 복선화	·경원선 : 동두천-서울 구간 조기 복선 전철화
금강산청년선-동해북부선-금강산 연결	·금강산청년선 : 온정리-군사분계선 신설 ·평의선, 평부선 전구간 복선 전철화 ·평라선 : 원산-나진 구간 복선 전철화 ·기선-군사분계선 연결	·수도권지역 경부선 구간의 우회노선 신설 ·동해북부선: 강릉-군사분계선 신설 ·철원-군사분계선 신설

자료 : 김연규, "남북한 철도망 연결 추진방안", 월간교통, 1999.6., 재인용

남한은 경의선이 우선 연결될 경우에 현재는 선로용량의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조기 복선전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원선 또한 복선전철화가 요구되는데 이 구간은 주변지역개발 여건으로 볼 때 수도권 전철로써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이남의 경부선 구간도 용량이 초과되어 운행되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서측으로 수인선 등을 이용한 우회 노선의 개발이 요구된다(〈표11〉 참조).

57) 안병민, "남북한 관광 협력을 위한 교통부문의 정책과제",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0.6., pp.28~29.
안병민,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을 위한 남북한 교통망 연결방안", 「강원광장」, 강원개발연구원, 2000.4., pp.89~93.
장원석외,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한울아카데미, 1995.3., pp.178-182.

남북한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TSR과 TCR과의 연계를 통한 범아시아철도망[58]의 구축이 필요하다. 범아시아 철도망이 형성되게 될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 중동아시아로 운송되는 많은 교통량이 철도를 이용하여 운송될 수 있으며,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리, 시간, 비용면에서 모두 해상운송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지니게 된다.[59]

〈표 12〉 우리나라-중앙아시아간 철도 화물운송 및 철도.해운 복합화물운송 비교

구분	TKR이용 육상노선				해상운송 노선			
	서울-두만강-블라디보스톡-(TSR)-알마타		서울-신의주-(TCR)-베이징-(TSR)-알마타		서울-해운-블라디보스톡-(TCR)-알마타		서울-해운-양쯔강-(TCR)-(TSR)-알마타	
거리(km)	8,598		6,163		9,109		6,287	
시간(day)	26.5	31.5	24.5	28.5	28	33	21	28
비용(US$)	1,369	1,519	1,369	1,519	1,524	1,724	1,524	1,824

자료 : 이건영 · 손의영, "동북아시아의 통합운송체계 전략방안",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1999.10., p.18., 재인용.

TSR과 연계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노선으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가지 노선이 있다. 우선 청진에서 TMR을 통한 B노선과

58) 범아시아 철도망 사업이란 우리나라의 경부선, 호남선에서 출발하여 경의선을 통과, 몽고횡단철도 (TMGR)와 만주횡단철도 (TMR)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로 연결되는 노선 또는 경원선, 평라선, 함북선을 통과, 곧바로 TSR로 이어지는 노선을 통해 남한~유럽 및 남한~중국간 화물 운송을 철도를 통해 하자는 구상이다.

59) 이건영 · 손의영, "동북아시아의 통합운송체계 전략방안",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1999.10., p.18.
임종관, "TSR 컨테이너 운송서비스 활성화 방안",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0.5., p.21.

나진에서 TSR로 연결되는 A노선이 있을 것이다. TCR로 이어지는 노선은 그림의 C노선으로 이 노선의 경우 몽고횡단철도를 통한 유럽철도망과의 연결이 가능한 노선이다. 그러나 TCR과 TSR이 유럽까지의 수송경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수송시간과 비용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중국·러시아·몽고 등과 긴밀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60]

2) 도 로

도로에서는, 동북아와 연계되는 국제도로망의 구축과 함께 북한의 경제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내 간선도로망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정된 재원 때문에 남북한간의 주요 연결축을 중심으로한 개발이 적합할 것이다.[61] 전술한 3개 국도의 복원만으로는 본격적인 남북교류시 장거리고속교통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장거리 고속화노선의 구축이 필요하다.

남한은 그 동안 국가간선도로망을 구상하면서 남북방향의 7개 노선을 북한에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62] 그러나 남북 1축, 2축, 3축은 서울지역을 통과 혹은 우회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경기 이북지역에서 북한 도로망과 연결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또한 남한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계속 고속도로 수준으로 연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북한측에서는 지형이나 도시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기능이 고규격국도 수준으로 바뀌는 노선들이 있다.

---

60) 진형인·홍승용, 「해양 21세기」, 나남출판사, 1998.10., pp.367~368.
전일수, "동북아 운송시스템의 발전방향", 「월간교통」, 2000.5., pp.10~12.

61) 전일수·안병민·이재훈, "통일대비 남북한 종합교통망 구축계획", 교통개발연구원, 1998.11., pp.9~10.

62) 남한에서는 7개의 노선의 도로건설이 접경지역까지 계획되어 있다. 제1축은 강화도-해주, 제2축은 경부고속도로-개성, 제3축은 중부고속도로-연천-장풍, 제4축은 중부내륙고속도로-철원-평강(철원), 제5축은 중앙고속도로-화천-김화, 제6축은 태백산줄기로 영월-금강 그리고 제7축은 동해고속도로로서 간성-고성 축이다.

예를 들면, 남북 4축, 남북 5축의 일부 구간 (자강도, 양강도 지역)과 남북 6축이 지형과 수요 문제로 고속도로보다는 고규격국도 수준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의 남북 1축인 서해안선은 북한의 해주-남포-신의주를 거쳐 고속도로로서 중국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남한의 남북 2축인 경부고속도로는 북한의 개성에서 연결되고, 고속도로로 평양까지 연장되어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남한의 남북 3축(중부고속도로)과 남북 4축(중부내륙고속도로)은 도로간격 등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하나의 축으로 통합되어 북철원-강동-희천-강계-만포까지 고속도로로 연결될 수 있다.

남한의 남북 5축인 중앙고속도로는 북한에서 고규격 국도 수준으로 연결될 수 있다. 남한의 남북 6축은 백두대간을 따라 계획된 노선이기 때문에 고속화도로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고규격 국도급 도로로서 북한측에서의 연결이 필요하다.

남한의 남북 7축은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고속도로로서 연결이 필요하며, 향후 러시아와 연결되는 주요 노선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설악산-금강산-백두산으로 연결되는 7축은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7축을 주변으로 한 주요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충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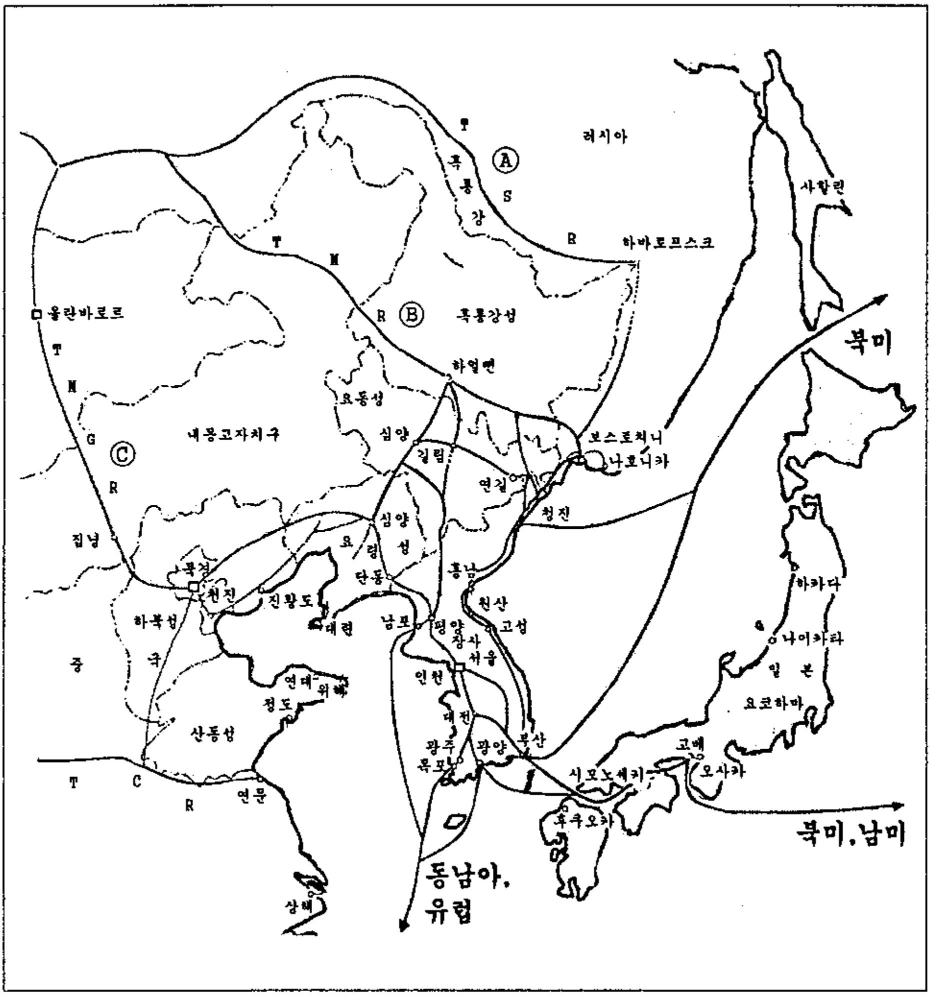
또한 남북운송망 구축을 통한 북한의 경제활동증가, 주민들의 소득수준의 증가, 도로교통망의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도시 중심의 지역간 도로 및 지역내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포장율제고가 수반되야 할 것이다.[64]

---

63) 김안제 · 양지청, 『국토경영』, 청양출판사, 1998.1., pp.168~169.

64) 김홍일, "통일대비 한반도 SOC개발방향」, 2000.5., pp.12~13.

〈그림 3〉 장기 동북아 통합 운송로



자료 : 1) 박양호 외 5, 「21세기 국토비전과 전략」, 국토개발연구원, 1998.12., pp.94~101.
2) 진형인 · 조찬혁, "통일에 대비한 해운항만정책 구상", 1994.12., pp.100~101.
3) 김진현 · 홍승용, 「해양 21세기」, 나남출판사, 1998.10., p.373.
4) 이진영, "남북한간의 해상운송망과 화물운송체계 구축방안", 1994.2.,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pp.67~74.
5) 박창호, "남북한 교역 증진을 위한 새로운 항만물류체계 구상", 「해양한국」, 2000.6., pp.41~42., 참고 재작성.

3) 항 만

동북아에서의 해상운송체계와 내륙체계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항만들이 종합적인 화물유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태평양 연안 지역과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관문(Strategic Gateway)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요충지이며,[65] 동북아 지역의 주요 성장 거점지 사이의 접근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특성도 보유하고 있다. 동북아 성장거점인 5대 도시간 이동거리를 합산하면 서울 3,600km, 동경6,000km, 북경 5,400km, 상해 5,200km, 블라디보스톡 4,700km 등으로 유럽이나 북미 지역을 연결하는 데 한반도가 가장 유리하다.[66]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hub port)으로 청진항, 남포항, 목포항을 개발하여 5대 핵심항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후 기존의 부산항과 광양항의 양항체계로는 동북아와 동남아의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화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산항, 청진항, 광양항을 일본·미주를 겨냥한 대외교역 핵심항만으로 육성하고, 남포항과 목포항을 동남아·유럽을 겨냥한 핵심항만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67] 특히, 청진항은 지리적·경제학적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최적의 여건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배후의 방대한 산업규모와 산업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연계성, 북한의 개방정책 집행지로서의 향후 서방자본 유치 가능성,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개통시 시베리아와 만주 등지에서 오는 물류 처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68] 목포항과 남포항의 경우에는 범아시아 철도망과

---

65) 이상만, 「통일경제」, 형설출판사, 1995., pp.241-262.

66) 박양호 외 5, "21세기의 국토비전과 전략",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연 98-21, 1998.12. pp.77-84.

67) 박창호, "남북한 교역증진을 위한 새로운 항만물류체계구상", 「해양한국」, 2000.6., pp.41~43.

연계하여 러시아의 동남아시아 물동량을 청진항과 분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3〉 참조).

이러한 핵심항만은 그 배후부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금융·정보 등 부대 서비스와 함께 환적화물등을 유치하여 단순하역 기능 외에 생산·분배·가공·유통 기능을 수행케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물류기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69]

V. 결　　론

남북한간의 교통운송망 복원은 여러 교통 수단을 포괄하는 복합수송체계구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데, 그 추진 방향은 점진적이며 상황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교통 시설 확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 회생과 남한의 실익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교통망 복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낙후된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 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도부문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단절 철도망을 연결함으로써 인적교류를 증대시키고, 물동량 운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시스템상의 협의와 한계노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륙철도망과 연계한 철도망을 구축하여 동북아 거점으로서 성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로부문은 우선적으로 3개 노선에 대한 단절구간을 복구하고 나아가 남북 7개축의 연결과 간선도로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

68) 홍성환, "남북한 물류 루트 연결에 대한 새로운 제안", 「월간조선」, 별책부록, 1999.11.

69) 김진현·홍승용, 「해양 21세기」, 나남출판사, 1998.10., pp.364~374.

다. 셋째, 남북 해운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항만 시설의 확충과 배후 수송망을 정비하고, 직항로 개설과 남북 자국의 선박 이용을 통해 물류비를 축소시키며, 장기적으로는 5대 핵심항만을 국제물류거점으로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운송망연결을 위한 재원은 단기적으론 신규기금을 통한 자금공급과 국제협력등을 통해 확보돼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의 관광특구의 개발과 같은 소득창출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정상회담의 역사적 사건이후 한반도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장관급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요즘 이제는 기존의 대북정책과 가치관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남북간에 무너지지 않았던 대립의 벽이 너무 컸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의선 복원과 앞으로의 남북간의 철도와 도로·항만의 연결은 실질적인 벽을 허물고 남북한 통일을 위한 평화와 희망의 다리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창호, "남북교역의 물류현황", 「북한뉴스레터」, KOTRA, 2000.2.

김경석, "남북한 및 동북아 지역의 육로 직수송 방안", 통일부, 1998.

———, "육로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7.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통합도로망 구축 방안",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0.6.

김길수, "남북해운 협력을 위한 연안해운의 기능강화", 「해양한국」, 한국해상문제연구소, 1994.6.

김연규, "남북한 철도망 연결 추진방안",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0.6.

김연철,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삼성경제연구소, 2000.6.

김영봉,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8.9.

김영윤,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8.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한울아카데미, 1995.3.

김진기, "북한의 산업구조와 북한지역 투자촉진대책", 「한반도 통일론」, 1997.11.

김진현 · 홍승용, 「해양 21세기」, 나남출판사, 1998.10.

김학소 · 유종만 · 이상우,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항만개발 정책", 해양수산연구원, 1998.

김홍일, "남북교류협력시대의 북한 SOC 구축방안", 2000.5.

강종희, "남북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해운협력방안", 「해양한국」,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0.6.

남궁영,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동용승,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연구」, 1998.상반기.

———, "남북경협 전망과 확대방안",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7.

동용승·서양원, 「남북경협」, 삼성경제연구소, 1995.3.

박기원, "북한 금강산지역 관광자원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1.6.

박완신, 「북한의 경제와 경영」, 서울프레스, 1998.10.

박양호 외 5, "21세기의 국토비전과 전략",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연 98-21, 1998.12.

박송동,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현황-도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9.

박창호, "남북한 교역증진을 위한 새로운 항만물류체계 구상", 「해양한국」, 2000.6.

서광석,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21세기 한국철도망 구축방안",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0.5.

서동만, "남북정상회담과 국제협력",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7.

안병민, "남북한 관광 협력을 위한 교통부문의 정책과제",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0.6.

———,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을 위한 남북한 교통망 연결방안", 「강원광장」, 강원개발연구원, 2000.4.

———, "남북한 육로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7.

———, "육로수송의 필요성과 문제점",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7.

———,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의 의미와 파급효과",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9.2.

양문수 · 김석진, "정상회담 이후 기업의 대북사업 전략", LG연구원, 2000.7.

양운철, "남북한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6.

윤상률, "북한의 관광산업 현황과 전망", 「북한뉴스레터」, KOTRA, 2000.3.

윤창운, "남북관광상품 개발현황과 과제",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1998.9.

이건영 · 손의영, "동북아시아의 통합운송체계 전략방안",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1999.10.

이상만, 「통일경제」, 형설출판사, 1995.

이원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현황-철도", 현대사회경제사회연구원, 1999.

이희연외 2,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국토공간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반도 통일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11.30.

임종관, "TSR 컨테이너 운송서비스 활성화 방안",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0.5.

장원석외, 「통일경제와 북한농업」, 한울아카데미, 1995.3.

정동진, "철도정책의 회고와 향후 전망", 「월간 교통」, 1999.12.

전일수 · 안병민 · 이재훈, "통일대비 남북한 종합교통망 구축계획", 교통개발연구원, 1998.11.

전일수, "동북아 운송시스템의 발전방향", 「월간교통」, 2000.5.

———, "남북한 해운, 항만연계 및 개발방안", 「통일대비 남북한 교통 및 관광 심포지움」, 교통개발연구원, 1998.11.

———, "북한 해운 항만 현황과 과제", 「계간 북한연구 - 제16호」, 1994.

정필수, "통일대비 해운협력과 항만개발", 「해양 21세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0.

———, "해운정책의 회고와 향후 전망",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1999.12.

진형인 · 조찬혁, "통일에 대비한 해운항만정책 구상", 해운산업연구원, 1994.12.

최주환, 「북한경제론」, 대왕사, 1992.3

홍성환, "남북한 물류 루트 연결에 대한 새로운 제안", 「월간조선」, 1999.11

홍순직, "북한의 사회간접자본현황-항만", 현대경제연구원, 1999.

북한경제포럼, 「북한경제론」, 법문사, 1996.4.

—————, 「남북한경제통합론」, 오름출판사, 1999.10.

통일부,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http://www.nso.go.kr.

———, "남북정상회담 결과 해설자료", 2000. 6. 15

———,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결과 해설자료", 2000.7.31.

북한연구소, 「월간북한」, 2000.5

연합뉴스, 「동북아 21」, 2000.5

동아일보 · 매일경제신문 각 일자

LG주간경제 각 호

북한의 인터넷 구축과 남북한 사이버 공동체 건설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3학년 김 기 영

4학년 전 호 민

〈목 차〉

【요약문】

Ⅰ. 서 론

Ⅱ. 북한 인터넷 동향과 그 실태

Ⅲ.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Ⅳ. 사이버 공동체를 꿈꾸는 남북교류

Ⅴ. 결 론

【 요 약 문 】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즉, 지식과 정보가 낙후된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시대이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정보와 인터넷이다. 이 흐름에서 만큼은 한반도도 예외일 수 없다. 남한은 이미 인터넷 사용자가 천만 명을 넘어섰고, 북한 역시 최소한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개방의 폭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남북이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이는 남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일이라는 민족적 열망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변화와 도전의 냉혹한 시대에 남북한이 힘을 모아 그 방안까지 마련하게 된다면, 현실세계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가상공간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민족 대화합의 새로운 장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터넷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을 보면 인터넷 정책과 개방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북한당국에서 인식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로 인터넷을 사용해 각국의 정보를 수집한다. 평양에서 확보한 각종 인터넷 주소 리스트(URL)를 들고 나와 해외에서 주요 웹사이트를 모두 검색, 필요한 정보를 프린트해 다시 평양으로 갖고 들어가 각종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운용하는 사이트는 20여개라는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혹은 해외 교포를 이용하여 일본이나 중국,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고 이념적 사이트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이트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은 적게는 3천대에서 보통은 1만대, 그리고 많게는 10만대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이 천 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본다면, 북한의 컴퓨터 보

급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북한의 컴퓨터 수준을 살펴보면, 자본과 시설이 부족한 하드웨어 분야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창조력과 두뇌가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의 네트워크 구성 체계는 1970년대 이후 수동식 교환기의 자동화, 통신 선로의 개량화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낮은 기술단계와 군사적인 목적 혹은 체제유지를 위한 통신망네트워크 구성에 치중한 결과, 1990년대 초반까지도 낙후된 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서 남한은 북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인 인터넷 통신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이에 남한의 지원 입장이 뚜렷해야 한다.

첫째, 남한의 지원은 북한의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위한 중요한 조건인 민족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과제를 인터넷을 통해 서로가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이후에도 이루어진 후 인터넷 통신 통합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을 통해 단계적으로 북한에 인터넷 통신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1단계는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첫째, 북한의 관리들이 남한의 인터넷 현황을 시찰, 견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 인터넷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 북한의 인터넷망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통신장비의 지원과 함께 '컴퓨터·도메인 보내기 운동' 등으로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2단계는 인터넷 통신 협력기반구축 및 체계 수립 단계로써 첫째, 북한에 정보통신, 인터넷 기업등과 남북한의 합영·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둘째, 북한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인터넷 통신 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할 수 있으며, 셋째, 북한에 대한 점진적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의 기술 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3단계는 1·2단계를 발판으로 남북한 인터넷 통신 통합단계이다. 남북한 통신광케이블의 매설이나 위성을 통한 남북한의 통신 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남북한의 국가도메인 kr, kp까지의 통합으로 남북한간의 인터넷 통신 통합을 일구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에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문제점을 짚어 보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첫째, 남한 주민들처럼 북한의 주민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인터넷을 통한 접촉에 있어서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COCOM을 대체한 바세나르 협약에 의해 정보통신분야가 대북수출규제에 묶여있는 문제까지도 짚어보아야 한다.

이런 남북한의 인터넷 통신 통합과 함께 사이버 공동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남북한간의 문제를 새롭게 모색하여야할 것이다.

첫째, 이산가족 문제를 가상공간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남북이 상호 협력하여 이산가족 관련 자료와 정보를 통합,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구축해 나감과 함께 이산가족의 생사도 확인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가상공간으로 실현시키고, 단계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삶의 한 부분으로 연결하는 단계이다.

둘째, 사이버 공동체를 통한 인터넷 경제 교류협력이다. 이는 무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남한의 중소기업과 북한의 공장기업소의 공동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투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파트너쉽 투자논의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고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의 경우 남북한간의 동종 업종업체간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상품/서비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생산의 경우는 남북한 생산분야에 있어서의 정보화 격차 문제를 해소하여, 남한의 중소기업과 북한의 공장기업소간 생산력의 접목을 통해 이익을 제고할 수 있고, 고용의 경우 남북한 유휴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며 유휴노동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 상거래의 경우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소외되기 쉬운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간에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래 활동을 촉진시킨다.

셋째, 사이버 문화를 선도하는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터넷 교류는 남북 상호간의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고, 문화의 심리적 보편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교류는 사회 문화적 요소의 갈등을 해결할 통로의 역할과 함께, 사회문화의 가치관 정립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교류는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수단이다.

넷째, 인터넷과 호흡하는 한민족공동체까지도 건설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는 민족구성원들이 특정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정형의 네트워크 공간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의 지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특성은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모든 한민족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한민족공동체의 운영방안은 일차적으로는 민족성의 요소를 규정하는 언어와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차적으로는 민족성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공동체가 개방성도 겸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한민족공동체는 남북한과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전체 민족 구성원 내부의 결속을 통한 정체성 확립 및 교류 협력 증진과 대외적 개방과 협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방안이 실현된다면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인터넷 인프라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남북이 효율적인 통합을 이뤄내는 첩경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각 부분간 연구범위가 방대해서 심층적 분석이 어려웠고, 최신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Ⅰ. 서 론

1. 문제제기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즉, 지식과 정보가 낙후된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시대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지난 6월 남북정상은 온 국민의 염원과 관심 속에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바로 이제는 대립과 반목의 세월을 뛰어넘어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로의 요청이 조금씩 그 망울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들 역시 만만치 않다. 남북이 화해의 시대를 진정으로 공유하기 위해선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현 시점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정보와 인터넷이다. 이 흐름에서만큼은 한반도도 예외일 수 없다. 남한은 이미 인터넷 사용자가 천만명을 넘어섰고, 북한 역시 최소한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개방의 폭을 서두르고 있다. 실례로 북한의 대학에서도 컴퓨터관련 학과가 점차로 신설되고 있으며, 김정일도 하루 두 시간 이상 웹서핑을 즐기는 등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이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지도층'[1](digital oriented leadership)이라는 계층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남북이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인터넷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남북교류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남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남한의 앞선 인터넷 수준이 역량이 부족한 북

---

1)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현재의 통신패러다임에 대한 평균이상의 기술적 이해와 사활적 이해관계의 인식을 가지고 이를 국가경제운영에 반영하거나 반영하는 의도를 가진 지도층을 말한다.

한의 인터넷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변화와 도전의 냉혹한 시대에 남북한이 힘을 모아 그 방안까지 마련하게 된다면, 현실세계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가상공간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민족 대화합의 새로운 장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북한 인터넷 동향을 통해 북한의 인터넷 구축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해 보고, 이후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과 효과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주제의 연구범위는 북한이 체감하는 인터넷의 인식도를 통해, 북한의 인터넷 활용과 관련 사이트를 알아보고, 인터넷 구축을 위한 시스템 실태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북한이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이 어떻게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연구해 본다. 또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북한의 인터넷 구축 사업이 실현된 후, 남북한이 인터넷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여러 긍정적 효과와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본 주제의 연구방법은 최근의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접속을 통한 검색방법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최대한 최근 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였다. 최근의 문헌자료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실성이 실천적 특성과 얼마나 잘 부합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통찰함으로써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였다.

Ⅱ. 북한 인터넷 동향과 그 실태

1. 북한과 인터넷의 만남 : 의지와 인식

그 동안 북한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터넷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을 보면 인터넷 정책과 개방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언급한 인민경제의 컴퓨터화가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한다는[2] IT교시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5월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주문[3]을 한 것으로 보아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서는 컴퓨터와 관련된 상식[4]을 연재해 북한의 컴퓨터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여성에게 결혼대상 1순위는 컴퓨터 관련 대학생과 컴퓨터 직종의 고급 전문엔지니어 등이라고 전해지기도 한다.[5] 이 같은 현상은 북한지역에 컴퓨터 신드롬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터넷 관련 정책을 우대하는 풍조를 생성시켰다. 이는 인터넷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북한당국에서 인식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터넷 도입 역사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과학원 로동당 중앙위 청사,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조선콤퓨터센타 등을 중심으로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해 이를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해 왔다.

이처럼 북한이 인터넷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인터넷 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까닭은 첫째, 세계정세의 정보를 인터

2) 중앙일보, 2000. 6. 19.
3) 한겨레신문, 2000. 6. 5.
4) 로동신문, 2000. 6. 24.
5) 중앙일보, 2000. 6. 19.

넷을 통해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실례로 미 국방부가 수년간 미군의 인터넷을 조회한 국가들을 역추적한 결과 북한이 가장 많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6) 둘째, 세계의 발전 흐름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 분야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북한 과학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아도 위의 판단을 잘 뒷받침해준다.

> "인터네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놀라운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인터네트의 리용자는 매해 200%이상의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증가하면 5년후에는 10억명에 달할 것이다. (중략) 둘째로, 규모에서 망보다 훨씬 넓은 것이다. 인터네트를 리용하자면 우선 인터네트에 접속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선택하여야 한다. 접속통신규약에는 〈UUCP〉와 〈IP〉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리용하는 봉사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중략) 셋째로,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인터네트의 가장 큰 우점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열린망이라는 것이다."(중략)7)

또한 최근에 〈민주조선〉을 통해서 인터넷의 개념을 소개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히 기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북한이 인터넷에 얼마나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 "인터넷이란 한마디로 세계의 콤퓨터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한 망으로 많은 봉사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고자면 자기가 사용하는 콤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뎀을 이용해 전화선으로 접속할 수도 있다."8)

---

6) 임을출, "북한의 인터넷 산업", 『통일경제』 통권 제65호, 2000. 5, p.78.

7) 리명희, "과학연구와 국제정보통신망 - 인터네트", 『과학의 세계』, 중앙과학기술통보사, 1996. 2.

2. 북한의 인터넷 활용과 관련 사이트

1) 북한의 인터넷 활용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에 비해 양방향성, 동시성/비동시성, 일대일/일대다/다대다, 시청각성 등의 특징은 물론 정보에 대한 접근의 측면에서 일회적이기보다는 영속적인 장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세계적 흐름인 인터넷을 북한은 주민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는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북한 내부에서 인터넷 활용은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및 일부 군 정보기관 등 특수기관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인터넷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서방세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 현재 인터넷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주소를 총괄하는 IANA(Internet Address Numbers Authority 미국소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국가이다.[9] 그러나 북한도 한국의 〔kr〕국가 도메인처럼 〔kp〕 라는 도메인을 보유하고는 있다.[10] 실제로 북한은 인터넷을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자유사조 침해의 루트로 간주, 일반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규제하고 국방관련 정보수집자,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 대남 심리전 및 대외무역 종사자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주로 인터넷을 사용해 각국의 정보를 수집한다. 평양에서 확보한 각종 인터넷 주소 리스트(URL)를 들고 나와 해외에서 주요 웹사이트를 모두 검색, 필요한 정보를 프린트해 다시 평양으로 갖고 들어가

---

8) 민주조선, 2000. 1. 21.

9) 세계국가 242개 (괌처럼 지역적 독립성을 가진 곳도 포함).

10) 이것은 북한이 직접 IANA에 등록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기구인 아시아태평양인터넷정보센타(APNIC)에서 한 것.

각종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대외 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은 중국에 출장을 나와 가까운 사업 파트너의 사무실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현재 외무성이나 대외무역기관 등의 기관에서 인터넷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특정 정부 부서나 일반인의 인터넷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앞으로 인터넷 도입의 폭을 확대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본격적인 인터넷 개방을 위한 내부체제 정비의 착수이다. 북한은 낙후된 통신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화 자동화, 디지털화를 추진했으며, 이미 평양, 사리원 등 주요 도시간 통신 선로를 광섬유 케이블로 교체했다.11) 이는 곧 북한이 자체 인터넷망의 구축을 통해 인터넷 활용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이유로 풀이된다.

이런 노력으로 북한의 인터넷 활용능력은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 활용과 e-메일 왕래까지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인민대학습당의 경우 일반 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각, 중앙기관, 공장기업소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망이 연결되어 있다.

2) 북한 관련 사이트 현황 :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현재 북한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는 크게 자주성과 주체사상 등 이념적인 사이트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이트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극히 미흡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해외 사이트에 가입회비를 연간 220만원을 내고, E-mail도 보낼 수 있다는 보도는 북한이 얼마나 인터

11) 북한의 광케이블 공사는 지난 1990년 중반 UNDP의 협력 아래 평양시와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넷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운용하는 사이트는 20여개라는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혹은 해외 교포를 이용하여 비중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인포뱅크'12)가 가장 널리 알려진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북한의 각종 경제협력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거의 정확하고 자세히 소개가 되어있고, 원자재 및 자료에 대한 정보도 꾸준히 소개되어 있다. 게다가 북한의 음악, 음식, 인물, 의학, 뉴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그 양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1999년 10월 10일 개설된 북한공식사이트로 홍콩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한글로 되어있다.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에서 운영하면서 다른 여타의 북한사이트 보다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자바(java)를 이용하여 구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색기능도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되어 있다. 애로신고센터, 특별상담실을 운영하지만 종종 속도가 떨어지고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는 문제도 있다.

둘째, '조선신보'13) 사이트는 조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기관지로 북한과 조총련의 소식을 알리고 조선신보의 기사를 중점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영문판, 일문판, 국문판으로 개설되어 있다. 다른 북한의 여타 사이트들보다 초기화면의 인상이 좀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성 자체가 하나하나 모두 클릭을 하여야만 그 사이트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그날 기사는 비교적 충실하게 되어 있는 반면 이전 기사는 삭제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어 검색기능도 영문판에만 개설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이트로의 이동, 즉 링크가 잘 되어있어 이동이 간편하다.

셋째, '조선중앙통신'14) 사이트는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내용이 주를

---

12) www.dprkorea.com (검색일자 : 2000. 7. 26.)

13) www.korea-np.co.jp/korea (검색일자 : 2000. 7. 26.)

14) www.kcna.co.jp (검색일자 : 2000. 7. 27.)

이루고, 당일자 로동신문, 김정일의 저작 및 논문 등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특히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주요공식문건과 김정일의 노작 및 최근의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보도자료, 1998년 9월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까지 수록되어 있다. 1997년 1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서버는 일본에 연결되어 있고 영문과 한글판으로 되어있다. 이 사이트는 조선인포뱅크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전까지 북한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였으며 단어 검색기능은 없지만 지난 뉴스나 날짜에 따른 검색을 할 수 있다. 자료의 양이나 그 중요도가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넷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15] 사이트는 1996년 3월 20일 처음 개설되었다. 사카이(sakai@dpr-korea.com)이라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금강산국제그룹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 관광지 소개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그리고 북한주민의 생활상이 소개되어 있고 Real video를 통해 북한의 군사나 생활양식 등을 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고 영어, 일본어판이 제공된다. 이 사이트는 예전에 만들어진 사이트라 구성에 있어서 좀 구식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Real Video나 Real Audio를 통해 동영상 및 북한음악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사진을 많이 저장해 둔 특징이 있다. 특히 Q/A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묻고 답하는 공간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사이트도 검색기능은 없다.

다섯째, '구국전선'[16] 사이트는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민민전)[17]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중앙위의 최근소식, 구국전선의 국문판, 김일성의 노작, 주요 담화문이 날짜별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사이트는

---

15) www.dprkorea.com (검색일자 : 2000. 7. 29.)

16) www.alles.or.jp/~kuguk/ (검색일자 : 2000. 7. 31.)

17) 북한이 남한내에 존재하는 지하조직이라고 선전하는 단체.

국내 운동권 및 재야단체에 수시로 전자우편(E-mail)을 보내면서 홈페이지 홍보에 주력하기도 했었다.[18] 일본측 서버를 이용하는데 우리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사의 서비스처럼 일본의 그것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화려한 구성보다는 문건 편집에 주력하는 인상을 느꼈다. 구국전선은 국문 외에도 영문으로도 볼 수 있는 데 영어로 직접 글을 올리는 형식이다. 검색이나 Q/A 자체도 없지만 검색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고려여행'[19] 사이트는 북한의 관광에 대해 소개하고 주선하며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주체사상과 정치구조까지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여행에 있어서 여러 페이지를 할당하고 있는데 페이지만큼 내용도 굉장히 자세하고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고려여행사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ONTACT]라는 페이지를 열면 Nicholasbonner@cs.com과 northkorea@hotmail.com으로 문의를 보낼 수 있는데 전자의 E-mail주소는 이 사이트의 디자이너로 생각되고 후자의 것이 북한의 사이트 책임자에게 보내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이트는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졌을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잘 되어있지만 검색기능은 없다.

그 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자주성'[20]과 주체사상연구소에서(IIJI)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주체사상'[21], 미국에 거주하는 Y.S.K. 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김소프트'[22] 등 20여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3]

---

18) 월간조선, 1997년 11월호, pp.155~156.

19) www.koryogroup.com (검색일자 : 2000. 8. 1.)

20) www.01.co.za/Freedom/default.html 이 사이트는 접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폐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21) www.cnet-ta.ne.jp/juche/defaulte.htm

22) 정확한 인터넷 주소는 알 수 없음.

23) 북한사이트의 자세한 현황은 남성욱, "국내외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 2000년도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0. 7. 1. ; 김연각, "북한관련

실질적으로 정확한 인터넷주소나 탁월한 검색사이트를 알고만 있다면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접속과 둘러보는 형태의 검색은 허용하지만 E-mail을 보낸다던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형태는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사이트들 외에도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옹호하는 사이트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이트들 모두가 북한 당국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없어도 북한의 사이트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북한의 사이트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사이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사이트를 통하여 북한이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고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지 주의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3. 북한의 인터넷 구축을 위한 시스템 실태

1) 북한의 컴퓨터 보급현황과 시스템 수준

인터넷은 컴퓨터 보급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내에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개인용 컴퓨터(PC) 보급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 제1고등중학교, 각 대학 전자공학부, 조선컴퓨터센터, 평양프로그램센터 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24] 북한에는 1995년 현재 군사 부문을 제외한 당 조직 및 기업부문에서 워크스테이션(중형컴퓨터) 30여대와 마이크로컴퓨터(데스크탑) 3000여 대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며, 최근의 자료에 따르

인터넷 사이트 현황과 평가 : 북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인터넷과 북한」 남북정상회담 개최기념 심포지엄, 하나로통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 2000. 6. 23. 를 참조할 것.

24) 연합뉴스, 1999. 8. 31.

면 북한의 컴퓨터 보급대수는 10만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5)]

북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은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특수성과 자료의 한계로 사실상 정확한 통계를 뽑아내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한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핀 여러 자료를 분석해보면 북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은 적게는 3천대에서 보통은 1만대, 그리고 많게는 10만대 가량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남한이 천 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본다면, 북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이 매우 열악한 까닭은 첫째, 북한의 경제난과 둘째, 냉전시대에 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26)](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Communist Area)의 규제로 인해 컴퓨터의 수입·도입이 어려웠고, 셋째,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위해서라고 풀이된다.

북한의 인터넷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선 북한의 컴퓨터 능력을 측정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전반적인 컴퓨터 개발 수준은 남한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사일 발사 분야 등 일부 군사 부문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컴퓨터 수준이 남한보다 나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27)] 그러나 문제는 컴퓨터 보급의 저조와 기술인력의 질적 저하에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자본과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야 하는 하드웨어 분야의 측면을 소홀히 한 것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북한의 하드웨어 분야 수준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김책공과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컴퓨터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자체적인 전자계산기 개발을 시도해 왔으나, 인적자원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반산업의 취약으로 별다른 성공을 거

---

25) 서울경제, 2000. 7. 11.

26) 냉전 해체로 COCOM 체재는 해체되고 1995년 12월 재래식무기 및 군사 기술통제 장치인 바세나르 협정이 합의되었으며, 이젠 그 명목을 바세나르 협정이 대신하고 있다.

27) 임을출, "북한의 인터넷 산업", 『통일경제』 통권 제65호, 2000. 5. p.81.

두지 못하였다. 1980년대초 일본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8비트 개인용 컴퓨터 「봉화 4-1」를 조립, 생산하기 시작해 지금 현재는 구식의 32비트 컴퓨터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북한은 하드웨어 분야와 달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자본과 시설이 부족한 하드웨어를 발전시키기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두뇌와 창조력만 있으면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의 메카는 199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설립된 조선콤퓨터센터(KCC)이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조선콤퓨터쎈터를 방문한 남측관계자들은 북한의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로 알려진 문자·지문인식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한다. 북한은 또 1990년부터 매년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개최, 북한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북한의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남한과의 인터넷 교류 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리라 예상된다.

인터넷과 관련한 북한의 대표적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29)]

첫째, '기계번역체계'이다. 번역하려는 외국어 원문을 광학식 문자읽기 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조선어로 번역해 내는 가치 있는 번역체계로 선진 과학기술 문헌보급에 기술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둘째, '국내 컴퓨터망에서의 발명 및 특허자료 검색체계'이다.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국부 컴퓨터망을 통일적으로 연결하는 범컴퓨터망을 처음으로 실현하고 국제컴퓨터를 통한 체계 연결에서 제기되는 문제

---

28) 중앙일보, 2000. 5. 2.

29) 최신림, "북한의 산업기술: 정보통신산업", 『산업연구원 KIET정책자료』 제83호, 1999. 1, pp.46-47.

들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셋째, '국제 장거리 자동검색체계'이다. 과학기술 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통신수단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국제과학기술기구와 다른 나라 과학기술 정보기관의 자료들을 원격 호출하여 검색할 수 있는 국제 장거리 자동검색체계이다.

2) 북한의 네트워크 구성 체계 : 인터넷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인가?

북한의 통신체계는 '운수와 함께 인민경제의 특수한 부문을 이룬다'고 규정하면서 유일적 지배체제,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부여된다. 북한은 통신산업을 기획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의 일종으로 여기고 중앙집권적경제체제와 사회의 폐쇄적인 기조를 유지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북한의 통신은 내각 산하의 체신성에서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체신성은 각 도에 체신처를 두고 있으며, 각 도 단위의 체신처에 각각 1개씩의 전신전화국과 우체국이 있다. 또한 각 시·군에는 체신소, 각 리와 로동자군에는 체신분소가 편성되어 있다. 군 단위의 체신소는 군내의 전신전화, 우편, 유선 방송의 증폭, 중계 등의 업무와 각 리 단위의 체신분소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현재 북한의 기본 통신시설은 1970년대 이후 수동식 교환기의 자동화, 통신 선로의 개량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낮은 기술단계와 군사적인 목적 혹은 체제유지를 위한 통신망네트워크 구성에 치중한 결과 1990년대 초반까지는 낙후된 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전화교환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지방의 도-시·군-리로 연결되는 중앙집중식(한 건물의 옆방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교환대를 거쳐야 하는 기능)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평양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교환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1994년 9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통신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화 가입자수는 108만9000회선, 가입전화시설수는 130만7000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의 한국은 1668만6000회선에 2022만3000대였다. 인구 100명당 전화 보급률은 북한이 5.2대 한국은 37.9대이다. 특히 국제전화 회선수는 더욱 열악하여 북한이 120회선, 한국이 1만2051회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북한의 네트워크체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1〉 통신시설 현황 (1994. 9)

구 분	단 위	북한(A)	남한(B)	비교(A/B)
가입전화시설수	천회선	1,307	20,223	0.06
전화가입자수	천회선	1,089	16,685	0.06
100인당 보급률	대	5.2	37.9	0.14
공중전화시설수	회선	2,720	285,133	0.01
100인당 공중전화보급률	대	0.13	6.5	0.02
국제전화회선수	회선	120	12,051	0.01
TLX 가입자수	회선	1,862	13,500	0.14
교환기 디지털화율	%	4.6	58.5	0.08
종사원수	명	15,000	59,907	0.25

자료 : TTA, 『세계의 정보통신 지표』,(1995. 12), DPRK, Telecommunications Sector Appraisal(ITU Consultant, 1994. 9), 재구성.

네트워크에 있어서 국제전화와 광통신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의 기본 통신시설은 대단히 열악하지만 끊임없이 현대화 방침과 기술 도입에 계속적인 관심을 보였고 광통신의 확대라는 세계적인 최근 통신조류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기

색을 엿볼 수 있다.

1988년 북한은 통신시설의 현대화 방침으로 UNDP의 지원과 ITU 주관 하에, 평양~함흥간 시범 광케이블 매설, 광전 및 PCM(Pulse Code Modulation : 펄스부호변조) 유지 보수를 위한 인력 훈련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립하며 광통신의 구축에 박차를 가했으며, 1992년 4월 UNDP의 지원으로 평양광섬유케이블 공장을 완공하였다. 이로써 통신망의 광섬유 케이블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1995년 1월 27일에 300km에 이르는 평양~함흥간 광섬유 케이블 설치 공사가 완공되었다.30) 1998년에는 평양과 50여개 시·군을 광케이블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이중 평양~신의주, 평양~남포등 36개 시·군을 현재 연결한 것으로 전해진다.31) 또한 중국통신업계는 1999년 11월 북한이 중국통신으로부터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백본망(Backbone network)을 북경에서 평양까지 연결하였다고 밝혔다.32) 최근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판문점에 기존의 동축케이블을 대체한 전화 300회선, TV(45Mbps급) 1회선, 문서 영상 등 데이터통신 5회선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망이 구축되었다고 한다.33)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광통신 기술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통신 기술, 반도체 기술 등의 미흡으로 인해 실질적인 광통신 실현 및 확대 운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성시스템은 1984년 중공의 지원으로 평양에 기상 정지위성 수신소 건설을 착공하여 1985년에 준공하였다. 이 수신소는 기상위성과 통신위성 시설을 동시에 갖는 일종의 복합시스템으로 이는 북한의 통신 및 기상분야에까지 획기적인 역할을 가능케 하였다.34)

30) 최신림, 앞의 글, p.33.
31) 한국전산원, 『2000국가정보화백서』, 2000, p.382.
32) 뉴스메이커, 2000. 2. 24.
33) 한국일보, 2000. 8. 12.
34) 그 한 예로 그 동안 북한은 기구를 이용하여 30km 상공의 고층 기상 관측을 하고

1986년 평양시 사동구역에 정지기상위성수신과 국제전화를 위한 국제위성통신국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국가보위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국제전화는 물론 FAX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통신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로동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교신을 관장하는 곳은 로동당 4·13연락소이다. 해외에서 북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도 통제를 받기는 마찬가지다.[35] 그러나 최근 국제전화가 몇몇 자동화되면서 일본에서 평양주민과 직접 통화한 내용도 보도된 바 있다.

북한이 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인터넷 통신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국제전화와 광통신의 열악한 기반은 북한으로 하여금 인터넷 구축이 현재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은 PC보급률이 저조하고 네트워크 저반시설(광통신, FAX모뎀 기술)의 낙후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관(ISP)이 없어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국제전화를 돌려(다이얼 업 방식)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고급호텔 전화선 모뎀 접속속도가 600bps 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난으로 전력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네트워크 현실은 다른 서방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1. 남한의 북한 지원에 대한 입장

독일통일 당시 동독의 통신설비는 서독의 1/4 수준이었는데 통신분야 현대화에만 30조원이 소요되었다.[36] 현재 남북한의 통신시설은 북한이

이를 토대로 기상 자료를 작성하였다.

35) 외국에서 직통전화를 해도 일단 국제위성통신국에서 받은 후 '누구를 찾느냐?' '무슨 일이냐?'는 등의 질문을 한 뒤 다시 걸라고 요청하는데 이때 통신국이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4·13연락소에 통화여부를 묻고 결정한다.

남한의 1/10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독일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통일 이후의 통신 및 정보화 구축과 통합에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통신의 현대화와 통합 없이는 정보화나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의 교류 협력도 기대할 수 없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각각 제시한 통일 비전과 맥락을 같이해서도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정보통신 남북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벤처업계도 '통일벤처협의회'를 구성하고 북한통신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중이다. 현재 하나로통신이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와 초고속 인터넷 ADSL 부품 임가공 및 북한산 소프트웨어 인터넷 독점판권 계약[37])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 통신분야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정보통신관련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들과 정부, 그리고 민간시민단체의 3자가 협의하는 '한반도 인터넷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다채널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에 정부만이 주도했던 창구의 단일화에서 지금은 그나마 창구가 다채널적으로 변모하였지만, 그 실효성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정부 주도하에 대북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형태로는 대북 지원의 원활함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자 협의체를 통하여 단일한 창구를 이용한 다채널적인 형태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한이 북한에 단계적인 인터넷 통신을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명백한 원칙과 입장이 있어야할 것이다.

첫째, 남한의 지원이 북한의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복리 증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전자전

---

36) 노승준, 박종봉,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과 정책', 「인터넷과 북한」 남북정상회담 개최기념 심포지엄, 하나로통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 2000. 6. 23, p.14.

37) 한국일보, 2000. 8. 12.

기 통신에 있어 일반 국민보다는 행정이나 군사조직에 우선 순위를 두기 때문에 남한이 지원하는 물량이나 기술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남북한에 제도적인 방법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위한 중요한 조건인 민족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과제를 인터넷을 통해 서로가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반드시 남북한의 동질성을 찾기보다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다원적인 남북의 모습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분단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깊은 골을 좁히고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려는 의지를 밑바탕으로 사회문화 전반부에 상호 밀접한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이후에도 진행될 인터넷 통신 통합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독일이 통일되고 짧은 기간동안 정보통신을 통합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 남한은 지금부터 한걸음 한걸음 이루어 나가는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위한 남북한의 통신 격차 해소, 체계적인 정보망 구축, 남북의 통신-정보-인터넷 통합이라는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북한 인터넷 통신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1) 1단계 - 남북한의 인터넷 구축 필요성 강조

북한의 인터넷 현황이 현재 열악한 상황이므로 어느 정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북한에 인터넷 구축 필요성의 동기 부여와 인터넷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함으로써 남북한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단순지원으로

인터넷교류에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관리들이 남한의 인터넷 현황을 시찰, 견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 인터넷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상회담의 화해 분위기를 유지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 인터넷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남한의 인터넷 기술이나 현황을 시찰, 견학함으로써 지원동기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내용을 북한에 이해시켜야 할 것이고 국제기구인 APT(Asia Pacific Telecommunity : 아·태 통신협의체), ITU를 통한 북한의 인터넷장비 지원을 강조하는 노력도 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인터넷망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통신장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의 국제행사가 열릴 경우 남한측이 통신이나 정보화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뢰성을 구축하고, 남한에서 버려지는 컴퓨터나 통신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북한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한국인터넷협회에서 작게나마 북한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한에서 버려지는 컴퓨터가 연간 40만대 이상으로, 그것도 486·586기종이 주류를 차지하는 실정이며, 기업체에서도 펜티엄급 미만의 기종은 폐기에 따른 세금 문제 때문에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

이 방안은 '한반도 인터넷 협의체'(가칭)를 통하여 민간단체가 폐컴퓨터를 수집하고 기업이 컴퓨터의 수리와 Upgrade를 지원하고 정부는 이런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식의 형태를 통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면 남한

---

38) 김지연, '폐 컴퓨터의 재활용 현황', 『폐기물 52』, 1997. 5~7월호 : 김용수, '정보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컴퓨터 재활용과 재사용', 『정보화로 가는길 2』, 1997. 6, pp.49~50.

에는 재활용 효과를 가져오고, 북한에는 인터넷 통신을 지원 받게되는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기업과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에 통신시설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인터넷 통신망 구축의 선점 효과와 관계개선이라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측이 소유하고 있는 북한을 대표하는 도메인의 소유권을 이양하는 소위 '도메인 보내기 운동' 등도 추진해서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2) 2단계 - 통신협력기반구축 및 체계 수립

통신협력 기반구축단계는 1단계의 단순지원을 통하여 북한이 인터넷의 필요성을 인식, 통신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려는 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의 1차적인 단순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며 북한에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과 기술이전에 있어서 어떠한 방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다.

첫째, 북한에 정보통신 인터넷 기업에 대한 남북한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해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을 정비하면서 합영, 합작 부문에 있어 대대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이 부문에 투자를 증진하였다. 실제로 정보통신부문 기업 중 북한에 진출해 있는 남한의 기업은 다른 외국기업보다 미흡하다. 현재 한국통신이 지난 4월 이후 북한체신성과 만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이고, 삼성전자가 조선콤퓨터쎈터와 함께 소프트웨어 공동협력 개발센터를 세워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IMRI가 삼천리총회사와 모니터PCB기판 조립을 하는 임가공 형태가 추진 중이다.[39] 북한은 경제협력 부문에서 합영보다는 합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컴퓨터 및 정보통신분야 기업들이 합작의 형태로

39)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교역 투자 가이드』, 21세기북스, 2000. 7. p.449.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전에 진출했던 남한의 기업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합영이든 합작의 형태든 북한의 기업관계자와 초기에 사업적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였다고 손꼽았다. 이런 문제는 '한반도 인터넷 협의체'(가칭)를 이용하여 정부, 혹은 북한의 기업과 관계가 있는 민간단체들이 남북한의 기업들을 주선하고 더불어서 상호의 신용까지 보증해 주는 형태로 해결될 수 있다. 정부·민간단체가 기업선정에 있어서 특혜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적인 컨소시엄이나 입찰을 통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자, 정보, 통신은 삼천리총회사에서 총괄하는데 이런 중개 및 신용이 보증된다면 지금처럼의 임가공 형태에서 발전하여 공동 연구에서부터 프로젝트 개발, 북한의 컴퓨터 보급화 및 통신망의 현대화와 구축에 대한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점진적인 합작 회사와 함께 사안에 따른 합영의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인터넷 통신 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및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 독일의 경우처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최혜국 대우를 통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 개발 은행(ADB) 등의 저리 자본을 끌어들여 APT, ITU, UNDP 등의 국제기구를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외국의 정보통신 기업들과 함께 북한에 진출하는 방법, 그리고 남한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남한의 부담감을 줄일 수는 있지만 남한의 지원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부담감이 있는 반면 남한의 지원 기조와 함께 맞물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남북한의 물품교역이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된다면 세 번째 방안이 오히려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혜국 대우, 외국기업유

치, 민족내부거래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에 남한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점진적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인터넷 통신 장비의 지원을 받는 동안 그것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도 점차적으로 전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삼성전자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하드웨어 부문의 시설 확충을 위해 해주시에 컴퓨터센터를 건설중이고 이와 함께 2000년 10월까지 각 도에 12개의 지역 컴퓨터 센터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40] 기술교육은 남한만의 자금 및 기술인력에 대한 부담들을 줄이는 차원과 함께 남북한이 상호 기술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직접 북한에 기술자들이 들어가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일본이나 중국의 제3국에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 통신 기술이전이라는 차원에서 화상모니터를 이용한 사이버교육까지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3) 3단계 - 남북한 인터넷 통신 통합

마지막 단계는 남북한 인터넷 통신 통합의 단계이다. 1, 2단계의 인터넷 통신 구축을 통하여 인터넷 정보통신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인터넷 통신에 통합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그것은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신뢰성과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1, 2단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남북한의 인터넷 통신 통합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 통신광케이블의 매설을 들 수 있다. 통신광케이블의 매설은 육지와 바다의 해저 광케이블로 나뉠 수 있는데 남북한간에는 육

40)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498호, 2000. 7. 29~8. 4, pp.25~26.

로를 이용한 통신케이블 매설이 유리하다. 지난 7월 31일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경의선 복구를 남북한간에 합의하였다. 경의선 복구는 남북한의 화해의 의미도 있겠지만 앞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철도를 통하여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시사한다.41) 경의선 복구와 함께 비용 절감면에서도 그렇고 발빠른 남북한의 통신 통합을 위해서는 경의선 철도의 복구와 함께 광케이블을 매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연계철도의 단계별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원산 경원선의 복구시에도 광케이블 매설에 대한 논의로써 육로를 이용한 남북한 통신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성을 통한 남북한의 통신 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이 태국의 타이콤3호 위성으로 1999년 10월10일부터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얼마전의 광명성1호를 쏘아 올린 것으로 보아서 북한의 위성통신기술은 통신시스템 및 위성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시점에서 경제난으로 어려운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남한이 무궁화위성의 공동사용이라는 조건을 북한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위성공동사용을 하면서 통신 통합을 이룩하고, 상호간에 위성통신기술의 진보도 도모할 수 있다. 더군다나 위성을 통하면 북한도 급작스런 개방을 위성통신국을 통해 어느 정도 더디게 할 수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예상외로 쉽게 협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 남북한의 국가도메인 kr, kp의 통합이다. 남한은 현재 kr이라는 국가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고 북한은 현재 kp라는 도메인을 획득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 kp라는 국가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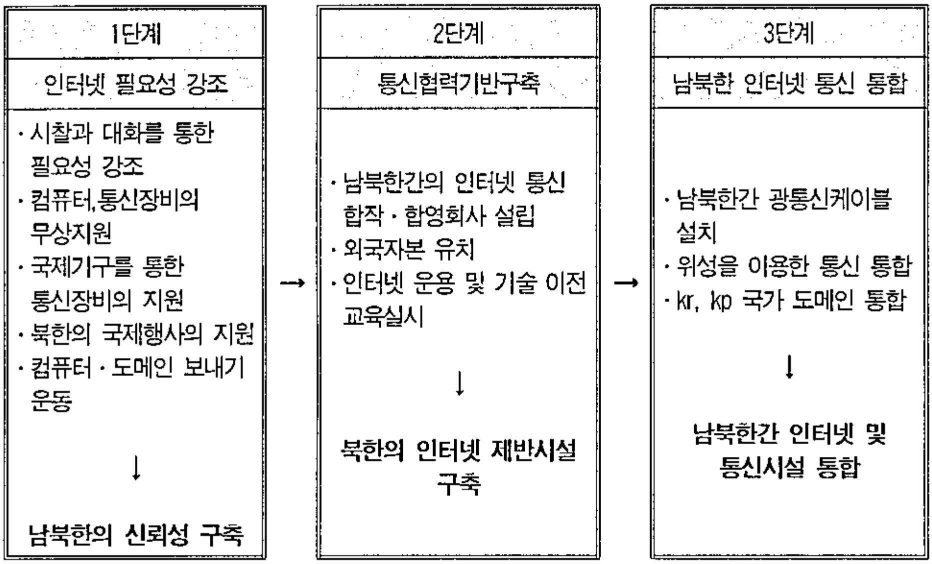
---

41) 경의선의 복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지만 북한 철도의 98%가 단선이어서 예상되는 물동량을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노후된 철도를 복구하고 복선화하는데 4~6조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없다. 실질적으로 kp라는 도메인을 사용하려면 북한의 도메인을 관리하는 협회와 함께 데이터 베이스를 저장해야 하는 대형용량의 중형 컴퓨터 이상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을 단순하게 지원하기보다는 남북한이 이것을 kr로 공동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새로운 공동 국가 도메인을 획득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하지만 kr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남한으로의 종속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공동 국가 도메인을 구상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바가 더 나을 듯하다.42) 이를 위해선 선행적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도메인을 관리하는 협회나 기구의 통합 형태도 구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단계별 인터넷 통신 구축방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북한의 인터넷 통신 3단계 구축방안



42) 지금의 시점에서 공동 국가 도메인을 무엇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다. 공동 국가 도메인은 남북한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협의하여 한민족, 통일이라는 이미지가 여실히 반영된 형태의, 남북한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국가 도메인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3.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에 따른 문제점

인터넷 통신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는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풀어야할 것들이 많다. 여기서는 위와 같은 단계별 통합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거나 단계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첫째, 남한 주민들처럼 북한의 주민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지금처럼 폐쇄적인 성향을 벗고 세계 경제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주민들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할 것인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그렇지만 컴퓨터의 보급률이 늘어나고 인터넷 통신시설이 현대화되면 북한의 이런 제한도 한계에 다다르고 차차 자연스럽게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둘째,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여야 한다. 즉,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을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고, 진출 기업에 있어서 독점이나 혜택의 의혹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은 우선 '한반도 인터넷 협의체'(가칭)를 통하여 정부, 기업, 민간단체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이 없이, 3자의 입장이 모두 대변된 형태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금소요는 통일기금 조성이나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북한의 최혜국 대우 문제, 남북한간의 민족내부거래의 문제 등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셋째, 남북한 인터넷을 통한 접촉에 있어서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지금의 실정과 국가보안법의 3조 통신에 관한 법률은

일률적으로 통신을 통한 회합을 금지하고 있고 인터넷 자체가 통신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사이트에 대한 접촉에서 특별한 조항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접속 및 사이트를 둘러보는 것은 허용하지만 북한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이나 E-mail 전송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접촉은 중앙기관의 제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호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남북한의 인터넷 통신 통합과정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법적 규제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COCOM을 대체한 바세나르 협약에 의해 정보통신분야가 대북 수출규제에 묶여있다는 것이다. 바세나르 협약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북한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전략물자수출에 제한을 두었고 실제로 북한에 486이상급의 컴퓨터는 지원자체에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43] 지난 6월19일 미국이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하였지만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등의 기술 집약적 상품들과 군사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상품들은 여전히 수출이 아예 금지돼 있다.[44] 그리고 여전히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부여 문제나 이중용도[45] 품목에 대한 규제도 미 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KEDO의 중유 납품이나 통일부에서 발표된 2000년 1~5월중 남북교역실적 자료를 검토해 보면 중형, 대형컴퓨터가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6] 과연 이런 물품의 용도판정이 모두 민수용으로 쓰여질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협정에 따른 투

43) 이런 물품은 전략적으로나 군수용 목적의 체제유지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는 386급이 지금은 486급 이상이 제재되는 실정이다.

44) 중앙일보, 2000. 7. 6.

45) 군수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민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

46) 금년 들어 1~5월까지 중·대형컴퓨터는 북한에 총 685,594Kg, 191천달러가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KOTRA』, 통권 제69호, 2000. 8.

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에도 불구하고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런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의 제도적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지만 한 순간에 개선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국제적 환경의 추이나 남북한간 쌍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바라보는 남북한 인터넷 통신 구축에 있어서도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를 펼쳐 북한이 인터넷을 통하여 개혁, 개방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는 이해관계를 모색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형성된 화해의 무드 속에서 우리정부의 재량권의 영역 확대가 기대되는 바이다.

Ⅳ. 사이버 공동체를 꿈꾸는 남북교류

1. 가상공간으로의 만남 : 이산가족

분단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산가족들은 이미 고령화되고 있고,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1세대 실향민은 거의 남지 않게 될 것이며, 역설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는 점차 소멸될 것이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는 그 해결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요, 남북한간에 가장 빨리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이런 민족적 염원에 의하여 지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추진 합의가 이루어 졌고, 8월 15일 드디어 남북 이산가족 각 100명이 분단 반세기만에 서울과 평양에서 헤어진 가족 친척들을 상봉하는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 3박4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문은 서울

과 평양을 눈물로 적시며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다. 병든 노모와 자식의 앰뷸런스 상봉, 상봉장소에 오지 못한 가족과의 휴대폰 상봉 등이 말해주듯 상봉 시간과 장소, 인원이 제한됨으로써 '50년 이산의 한'을 달래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1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고, 이번 행사로 남한에서만 20-30억원을 썼다고 하니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47] 또한 다시 헤어진 데 따른 후유증도 커다란 문제이다.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낸 채,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남북 인터넷 교류는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인터넷 교류는 현실공간에서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들을 가상공간에서 만나게 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공간에서의 이산가족 상봉도 일시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 시점을 거쳐야 한다.

1단계는 인터넷을 통해 남북이 상호 협력하여 이산가족 관련 자료와 정보를 통합,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이다. 현재 남한은 이북5도위원회 청사내에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48] 설치 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의 민간단체(NGO)들의 참여 없이는 이산가족들의 정보화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이산가족정보협의체"(가칭)를 구성, 남북한의 정보 공유와 창구를 단일화하여 민간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폭까지 참여를 확대시켜 이산가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와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등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남한 이산가족들은

---

47) 한국일보, 2000. 8. 19.

48) 이는 이북5도위원회가 이북도민 관리 등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통일부내의 공간부족 등 여러 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본적이 북한이면, 협의체에 자동가입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이산가족들도 협의체와 각 지역 행정기관간에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본적이 남한이면, 협의체에 자동가입 되어 효율적인 정보 구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머지 이산가족들의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협의체의 예산과 인원을 확충하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이는 이산가족들에게 "한반도 이산가족정보협의체"(가칭)에 가입하면, 이산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심어주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2단계는 인터넷을 통해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의 생사확인 작업에 대한 실수가 나타났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이산가족 당사자와 남북한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인터넷 교류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1단계가 잘 정착이 되어 정보의 공유가 실현되면 정부, 민간단체,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의 부담감도 줄어 들 것이다.

3단계는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가상공간으로 실현시키는 단계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상설화 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의 여러 제도적 문제를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이유로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고, 비용의 문제들도 역시 만만치 않다. 하지만 가상공간에서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매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이산가족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들은 인터넷 교류를 통해 상대방의 안부를 전화통화 혹은 서신교환이 아닌 e-메일이나 인터넷폰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면회소도 여러 절차가 복잡한 현

실면회소와 별도로 비용과 제약이 거의 없는 화상채팅을 이용한 가상면회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일단 가상면회소는 현재 광케이블이 매설된 서울과 평양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활성화시켜 전국으로 확충하고 더 나아가 각 가정까지 보급시켜 안방에서도 이산가족의 지속적 만남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이는 이산가족 문제의 비용과 시간 그리고 장소에 관한 고민을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이념적 문제도 초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4단계는 인터넷이 이산가족 문제를 삶의 한 부분으로 연결하는 단계이다. 이산가족들이 원할 경우 인터넷 교류를 통해 e-뱅킹 서비스로 상대방에게 송금도 해줄 수 있으며, 이산가족 기업의 고향투자를 알선하는 등 인터넷이 이산가족들의 삶에 직접적인 일부로 다가오게 되어 이산가족의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다.

2. 인터넷 경제 교류협력

현재 남북경협은 남한의 일방적 지원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은 일방적 수혜자의 위치로 전락해 가고 있으며, 대북 사업에 있어서 남한의 대기업들은 시장확대를 서두르는 반면 남한의 중소기업들은 구경만 하는 처지이다. 현재 남북경협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가급적 대규모 자본투자를 앞세워 대북 사업에 적극 진출하려는 상태이며, 북한 관련 정보와 북한사업 노하우를 독점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북한지역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대기업이 투자한 북한지역에서의 경제력 격차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성장이다. 둘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전략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중구조가 형성된다. 셋째, 대기업 집중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결과적으

로 남북경협 활성화에 근본적인 장애로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교류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대기업 중심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첫째, 무역의 경우이다. 인터넷으로 북한측의 상품이나 혹은 북한의 임가공 능력들의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면, 즉시 인터넷을 통한 남한의 중소기업과 북한의 공장기업소간의 남북한 무역회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실무적으로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까지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49)]

둘째, 투자의 경우이다. 인터넷을 통한 남한의 중소기업과 북한의 공장기업소간 파트너쉽 투자논의가 공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면 쓸데없는 경비들을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하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형성에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신속성에 있어서도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리라 예상된다.

셋째, 시장의 경우이다. 인터넷을 통해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의 동종 업종·업체간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생산, 제조, 판매망 공동 구축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들만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인터넷 교류는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간의 상품/서비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50)]

넷째, 생산의 경우이다. 인터넷을 통해 남북한 생산분야에 있어서의 정보화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간의 생산과 관련한 교육, 정보, 경험 등의 리소스를 공유하여, 남한의 중소

---

49) 권오홍, '인터넷과 남북경협: 오프라인 대비 장단점과 경영전략', 『인터넷과 북한』 남북정상회담 개최기념 심포지엄, 하나로통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 2000. 6. 23, p.9.

50) 유세형, '인터넷 벤처사업을 통한 남북경협의 모델', 『인터넷과 북한』 남북정상회담 개최기념 심포지엄, 하나로통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 2000. 6. 23, pp.1~6.

기업과 북한의 공장기업소간 생산력의 접목을 통해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고용의 경우이다. 인터넷을 통해 남북한 유휴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며, 유휴노동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효과도 있다. 이는 지역간의 균형적 성장을 유도하여, 고용인구가 특정지역으로 대량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 상거래의 경우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소외되기 쉬운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간에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래 활동을 촉진시킨다. 이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닌 지식, 정보 기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경제, 사회의 변혁을 주도하게 된다. 결국, 궁극적으로 남한의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의 전자 상거래가 전국으로 확산·연계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3. 사이버 문화를 선도하는 인터넷

통일은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진정한 결합을 이루어 냈을 때 완전한 통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제도적 이념과 장치뿐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한 사회문화의 공동체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남과 북이 정치 경제적 문제를 선결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요소를 소홀히 한다면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문화 갈등의 양상이 증폭되어 지역감정의 대두와 함께 상호불신과 반목이 지속될 것이다.

남과 북은 나름의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사회 문화적 요소를 형성해 왔다. 현재 분단 50년의 세월 속에서 남과 북이 겪는 사회·문화적 요소의 이질화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젠 민족의 동질성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 앞서 남북한의 이질적

사회·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현재 유럽에서도 각 나라의 고유한 이질적 문화를 서로 수용한 채, 각각의 다극공존형 사회·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배척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할 때만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이질적 사회·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로써 그 기능을 담당한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회·문화적 요소는 남북을 통해 점진적인 대비와 다각도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남북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존중하며, 구심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인터넷 교류이다. 인터넷이 남북의 이질화된 사회·문화적 요소를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51)

첫째, 인터넷 교류는 남북 상호간의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다. 인터넷 교류의 개방성은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남북한 주민들의 수와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둘째, 인터넷 교류는 문화의 심리적 보편화를 이룰 수 있다. 남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교류를 통해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구성하므로, 대등한 입장에서 문화의 심리적 보편화를 이룰 수 있다.

셋째, 인터넷 교류는 사회·문화적 요소의 갈등을 해결할 통로이다. 수평적 관계에서 출발한 인터넷 교류는 남북한 주민들을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구성원으로 변화시켜, 사회 문화적 갈등을 해결할 주체로서 자리잡게 한다.

넷째, 인터넷 교류는 사회·문화의 가치관 정립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인터넷 교류는 남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힘을 부여하여 새로운 사회·문화적 요소를 형성해 가는 여론의 장을 제공하

51) 강상현, "대안매체로서의 사이버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방송학보』, 2000, pp.7~40.

여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교류는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수단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측면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럼 인터넷 교류가 기여하는 남북 사회·문화분야의 구체적 사항 등을 알아보자.

첫째, 학술분야이다. 남북 공동 사이버 세미나 개최나 사이버 통일대학을 설립하여 남북 학술분야의 자유로운 토론과 왕성한 교류가 예상된다. 특히, 사이버통일대학은 각각의 남북한 대학에서도 학점을 인정하여 주는 학점교차 인정제도가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언론·출판분야이다. 남북 공동 인터넷 TV 방송국 설립이나 남북 공동 인터넷 신문을 간행하여 남북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e-book의 남북 공동 출간은 남북한 출판의 활자를 통일해 볼 수 있는 등 새로운 전자출판 문화를 선도할 것이다.

셋째, 영화·예술분야이다. 인터넷 교류를 통해 남북 인터넷 영화제를 개최하거나 온라인 상에서의 사이버 전람회, 음악회를 공유하는 것이다.

넷째, 스포츠·연예분야이다. 스포츠교류에서 이를테면 가상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온라인상에서 남북단일팀의 전력을 측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예·오락 분야도 남북 연예인들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인터넷 드라마나 인터넷 가요제를 개최해 교감을 교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섯째, 우리의 일상생활이다. 인터넷은 남북 주민에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여, 서로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며, 남북한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남북한 유명 관광지를 인터넷으로 구경할 수도 있고, 결혼 적령기

에 있는 남북한 젊은 청년들에게 인터넷 미팅 등을 주선하여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진풍경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과 호흡하는 한민족공동체

민족 공동체란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공간을 구성요소로 하여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원들끼리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의 유대와 귀속감을 발전시킬 때' 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52) 이 들 가운데 공간의 요소는 정보의 발달에 따라 그 범주나 의의가 크게 변하여 왔다. 지금은 공간의 요소가 인터넷 통신의 활성화에 따라 현실공간에서만이 아닌 가상공간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통해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논의가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한민족공동체는 민족구성원들이 특정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정형의 네트워크 공간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의 지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특성은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상호작용과 공동의 민족의식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 가상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이점은 한민족공동체의 외연이 거의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3) 이는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모든 한민족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한민족공동체의 운영방안이다. 한민족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민족성의 요소를 규정하는 언어와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

---

52) 성경율 · 이재열, "민족통합의 네트워크 접근", 『민족통합과 민족통일』,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1999, p.131.

53) 민주평통, 2000. 7. 15.

이다. 일차적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사를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안에서 이 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교육시키고, 이들은 사이트상에서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재외동포들을 다시 재교육시킨다. 이를 확대하여, 역사와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동포 밀집지역에 파견하거나 동포 자녀들을 우리 나라로 초청하기도 하고, 인공위성과 인터넷 방송을 활용하여 한국어와 한국사를 가르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차적으로는 민족성을 바탕으로한 한민족공동체가 개방성도 겸하고 있어야 한다. 과도하게 민족성을 규정할 때는 배타성과 편협성에 빠지기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민족공동체안에 한민족 구성원끼리 긴밀히 협조하되, 외부세계에 대해서도 고도의 개방성과 친화력을 갖는 프로그램들을 견지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 재외동포들이 집중되어 살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열강에 대한 상황과 현실을 한민족공동체에서 취급하여,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잘 살 수 있는 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비자, 유학, 망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위해 "사이버한민족민원실"(가칭)을 개설하여, 일대일 즉석채팅을 통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한민족공동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들은 남북한과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전체 민족 구성원 내부의 결속을 통한 정체성 확립 및 교류·협력 증진과 대외적 개방과 협력에 증대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족에 대해 남한과 북한, 재외동포 등 한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남북한은 국가간의 상호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민족공동체가 세계 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체의 한민족 구성원들에게 번영과 화합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2〉 남북한 교류협력 종합 포탈 사이트 (예시)

V. 결　　론

미래에, 사회 변화는 변화 그 자체보다도 엄청나게 빨라진 변화의 속도를 중심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시대이다. 오늘날은 경쟁의 본질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를 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것은 곧 기존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도전받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의 사회현상에 대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민감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게 되었으며,

지구는 바야흐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 동안 우리의 통일논의는 정형화된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남북의 분단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는 바로 이점을 주목하고 싶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남북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형성해 나간다는 점이다.

남한은 여러 기관을 통해 인터넷 인프라를 비교적 능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폐쇄 사회와 자료부족의 한계성으로 정확한 인터넷 인프라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북한이 인터넷 통신시설에 있어서 남한에 비해 확고히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해외의 서버를 통해 북한을 홍보하는 등의 자구책으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컴퓨터 관련 인력은 소수이고 그 능력과 실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본의 축적과 오랜 기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인터넷 통신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북한 인터넷 인프라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아마도 북한 인터넷 인프라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는 단기적인 방안에서부터 전문적인 방안까지 다각도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남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올바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시설에 있어서 남북한간에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의 문제는 한반도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비용 부담에 있어서 전문적으로는 외국의 자본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단계적으로 북한의 인터넷 통신시설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짧게는 정부도 기업도 이익의 요소를 기대할

수 없겠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경제적 선점 효과를 생각한다면 그리 비관적이진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인터넷을 개방한다면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인터넷을 통한 파급효과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 양과 속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파급효과는 반세기 넘게 단절되어온 민족과 문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 간의 긴장이 조성되는 물리적 현실공간에 제한 받지 않고 가상공간을 통해 상호교류 및 접촉이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에 있어서 파생될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기조를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설득하고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분야에 있어서 아직은 미온적인 감이 없지 않지만 그 중요도를 고려해 볼 때 좀더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모두에게 지금 현재는 여러 법·제도적 제한들에 의해 그 인터넷 교류 접근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남북정상의 만남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이런 화해 무드와 지속적인 남북한의 접촉은 점차적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가며 그 속에서 법적 제도적 장벽도 하나 둘 허물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너무 많은 부분을 다루려 하다 보니 주제범위가 광범위해져, 각 부분간 심층적 분석이 어려웠다. 또한 북한 인터넷 관련 최신자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방안이 실현된다면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인터넷 인프라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남북이 효율적인 통합을 이뤄내는 첩경을 제시할 것이다. 현 시대적 흐름의 지식과 정보가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긴박한 시대에 한반도 통일에서의 북한지역의 신속한 인터넷 구축과 남북한의 실질적 교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민주조선, 2000. 1. 21.

로동신문, 2000. 6. 24.

리명희, "과학연구와 국제정보통신망 - 인터네트", 『과학의 세계』,중앙과학기술통보사, 1996. 2.

강상현, "대안매체로서의 사이버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방송학보』, 2000.

공영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현황 및 과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8호 통권 제231호, 1995. 5. 1.

김상택, "남북한간 효율적 통신 통합을 위한 분석", 『통일경제』 통권 47호, 1998. 11.

김상택 · 공영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협력", 『정보화 저널』, 1997. 12.

김용수, "정보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컴퓨터 재활용과 재사용", 『정보화로 가는길2』,1997. 6.

김지연, "폐 컴퓨터의 재활용 현황", 『폐기물』 통권 제52호, 1997. 5~7월호.

김현호, "북한은 과연 정보화 시대로 소프트 랜딩할 수 있을 것인가?", 『월간조선』, 2000. 5.

남성욱, "국내외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 2000년도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0. 7.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KOTRA』, 통권 제65호, 2000. 7.

, "북한뉴스레터", 『KOTRA』, 통권 제69호, 2000. 8.

박찬모, "북한의 정보과학 및 전자공학", 『과학과 기술』 통권 296호, 1994. 1.

,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수준과 남북 협력 방안", 『통일경제』, 통권 제55호, 현대경제연구소, 1999. 7월호, pp.64~78.

, "북한의 정보화 동향분석", 한국전산원, 1997. 6.

, "북한의 정보화 현황", 『과학과 기술』 통권 356호, 1999. 1.

, "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남북 교류 방안", 『도산학술논총5』, 1996. 5.

, "통일을 대비한 국가정보화정책", 『정보화저널4』, 1997. 12월호,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94.

성경륭・이재열, "민족통합의 네트워크접근", 『민족통합과 민족통일』,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1999.

송승섭, "북한관련 인터넷 정보검색", 『북한』 통권 제297호, 북한연구소, 1996. 9.

임을출, "북한의 인터넷산업", 『통일경제』, 통권 제65호, 현대경제연구소, 2000. 5월호, pp.78~85.

전홍택・이영선,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통합 전략』, 한국개발연구원, 1997.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 보고서』, 1996~1999.

, 『정보통신 백서』, 1996~1998.

, 『정보통신 통계 연보』, 1999.

제성호, "남북 우편・통신교류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방향", 『법조』 509호, 1999. 2.

최신림, "북한의 산업기술 : 정보통신산업" 『산업연구원 KIET정책자료』 제83호, 산업연구원, 1999. 1.

통신개발연구원, 『남북한 통신』, 연구통신학술연구지원국, 1992.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497호, 2000. 7. 22~28.

, 『주간 북한동향』, 제498호, 2000. 7. 29~8. 4.

, 『98통일백서』, 1999.

, 『남북경제협력사업 실무안내』, 1999.

, 『남북교역 실무안내』, 1998.

,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신진연구자논문집)』, 통일부 정보분석실 분석총괄과, 1998.

통일연구소, 『북한정책자료』, 2000. 3.

_____, 『북한정책자료』, 2000. 6.

통일연구원,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 제31회 국내학술회의('99. 9. 21)발표 논문집, 1999. 10.

하나로통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 "인터넷과 북한", 남북정상회담 개최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2000. 6. 23.

한국개발연구원, 『한반도통일시의 경제통합전략』, 학술회의 자료집, 1997.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 실무 길잡이』, KITA, 1997.

한국전산원, 『2000국가정보화백서』, 2000.

_____, 『북한의 정보화 동향분석』, 한국전산원, 1997. 6.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교역 투자 가이드』, 21세기북스, 2000. 7.

황동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통신", 『통일경제』 통권 제32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7. 8.

_____,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3 : 통신", 『통일경제』 통권 32호, 97. 8.

월간조선, 1997년 11월호.

월간조선, 2000년 5월호.

뉴스메이커, 2000. 2. 24.

민주평통, 2000. 7. 15.

서울경제, 2000. 7. 11.

연합뉴스, 1999. 8. 31.

중앙일보, 2000. 5. 2.

중앙일보, 2000. 6. 19.

중앙일보, 2000. 7. 6.

한겨레신문, 2000. 6. 5.

한국일보, 2000. 8. 12.

한국일보, 2000. 8. 19.

통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으로써,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 (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ence Organization: KUSCO) 의 구상

고려대학교 법학과
3학년 정 인 국

〈목 차〉

【요약문】
Ⅰ. 들어가며
Ⅱ. KUSCO 설립의 필요성
Ⅲ. KUSCO가 담당할 역할
Ⅳ. KUSCO의 실제 설립과정
Ⅴ. KUSCO 가상 헌장
Ⅵ. 끝내며

【 요 약 문 】

지난 6월 15일의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뒤이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발표 등에서 나타나듯이 남북간 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 바, 그러한 준비 중에서도 통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4강대국(미 · 일 · 중 · 러)과 통일에 대해 협의하고 그들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자는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독자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주변 4국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들의 영향력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먼저 그들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접근방법이라고 본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주변 4국들과의 협조 내지 지원의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 · 군사 문제 등 주변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ence Organization: KUSCO)'의 창설을 구상하고, 이 기구의 필요성과 그 역할, 성격, 실제 설립과정 등을 살펴보겠다.

KUSCO라는 가상기구의 설립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관련국간의 개별협상에 의할 경우 남북한 일방당사자가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관련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합의내용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관련국간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다자간 논의의 장으로써 이 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이를 전담하는 국제기구가 설립된다면 목적의 달성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논의과정에서 관련국간에 신뢰가 형성된다면 이 기구가 향후 유럽의 EU와 같은 다자간 지역협력체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KUSCO가 실제로 담당할 역할은 외교적 측면, 경제적 측면, 안보・군사적 측면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외교적 측면으로, 남북관계 악화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호 이행사항의 합의에 있어 관련국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 바 KUSCO라는 국제기구 차원의 이행 촉구는 당사국들간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한반도 통일시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의 주변국간 분담을 논의할 수 있고, 대북 투자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을 KUSCO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안보・군사적 측면으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 기술 등을 비롯한 남북한 군사력 감축문제를 협의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주변국간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하므로 주한미군 주둔협의와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해서도 KUSCO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이러한 사항들이 주변국 모두가 참가한 국제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문제로서 관련국간에 개별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관련 당사국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포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다자간 기구를 통한 해결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

기구의 실제 설립과정은 남북간의 통일논의 과정에 상응하여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단계는 '상징적 의미의 공동선언단계'로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

북간 통일협상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맞추어 동북아 6개국간에 한반도 통일지지와 협력에 대한 공동선언을 이끌어낸다. 이른바 '동북아 6개국 선언'의 대략적인 내용은 본문에 제시하였다.

제2단계는 'KUSCO의 실제 설립단계'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 됨에 따라 KUSCO의 실제 설립작업에 들어간다. 기구의 기본적인 구조는 본문 중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제3단계는 'KUSCO정상회의(가칭 2+4회의)와 6개국 협정의 조인단계'이다. 남북간에 1국가 1체제 이전의 과도기 단계로써 '남북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진입하는 시기에, '남북한 및 미·일·중·러 6개국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6개국간에 자국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이에 대해 '6개국 협정'을 이끌어낸다. '6개국 협정'의 자세한 내용 역시 본문 중에 언급하였다.

제4단계는 '다자간 안보·경제 협력기구로의 발전단계'이다. 남북한간에 1국가로의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통일문제 협의라는 KUSCO의 주된 임무는 어느 정도 다한 것으로 본다. 이에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 문제 논의과정에서 주변국간에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유럽연합'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같이 동북아에서도 견고한 다자간 협력기구의 설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본문의 맨 마지막에서는 KUSCO의 자세한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도록 설립헌장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이 글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가상국제기구의 창설이라는 점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동북아 6개국간의 통일과 관련된 제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구가 향후 동북아시아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노둣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ence Organization: KUSCO)'의 구상은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Ⅰ. 들어가며

지난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뒤이은 실무진간의 회담,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사업 발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한반도 화해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면서, 통일이 단지 희망이나 가능성으로서만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금의 남북 대화가 너무 급속도로 진전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아니하다. 그리고 남북간 대화가 원론적인 단계를 벗어나 구체적인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이르게 되면 남북대화의 속도도 늦추어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답보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전망을 달리하더라도, 통일이 장래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결론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단지 통일에 대해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준비중에서도 통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4 강대국 (미국·일본·중국·러시아)과 통일에 대해 협의하고 그들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국의 도움은 통일에 있어서 성공의 전제조건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혹자는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단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정세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주변 4국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통일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먼저 그들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

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보다 현명한 접근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주변 4국들과의 협조 내지 지원의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설립 문제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반도 통일시 일본 등 주변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1)

한반도 통일시 막대한 통일 비용문제,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대북 투자 유치문제, 군사 안보적 사안으로서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 여부, 남북한 군의 감축,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 화학 무기 · 핵개발 시설처리 문제 등은 주변국들간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향후 통일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간의 논의가 필연적이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 안보 등 주변4국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창설이 논의될 수 있는 바, 이 글에서는 이 기구를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ence Organization: KUSCO)'로 명명하여 그러한 기구의 필요성과 그 역할, 성격, 실제 설립과정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KUSCO 설립의 필요성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주변4국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응 시인하더라도, 그러한 논의가 반드시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

---

1) 중앙일보, 1997년 4월 22일자

된 협의가 관련국간의 개별적인 회담을 통해서나 혹은 기존 국제기구를 통해서가 아닌,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KUSCO 설립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남북한 일방당사자의 배제 가능성 문제

관련국간의 개별 협상에 의할 경우에는 남북한 일방 당사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1994년 당시 북한 핵사찰 문제에서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협상전술에 의해 남한 정부가 배제된 채 협상이 미국과 북한간에 단독으로 이루어져, 우리 쪽의 입장이 제대로 표명되지 못한 바 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는 미・북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이와 병행하여 다자 외교의 틀 안에서 IAEA-북한간에 체결된 안전조치협정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향후 통일 논의과정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 문제 등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미・북간에서만 협상이 이루어지고 남한 정부가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다자간 기구를 통한 협상이 더 유리할 것이라 판단된다.

2. 관련국간 전체적인 의견조율의 문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제 문제에 있어 남북한과 관련국인 미・일・중・러 간에는 많은 부분 이해관계가 서로 상치된다.3) 따라서 논의에 있어서

---

2) 박기갑, 국제기구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및 KEDO 사업', 67쪽

개별적인 협상에 의할 경우 관련국간 전체적인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주한 미군 주둔 문제나 핵 개발 등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서 관련국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남북한간 통일 논의 역시 진전될 수 없으며, 반면에 무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려다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예컨대 미국과의 합의내용과 중국과의 합의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자간 기구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서로 모순되는 합의결과의 발생 등 관련국간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 본다. 미국의 대북 정책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에서도 한・미・일 간의 정책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바, 다자간 기구를 통한 협상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대북 정책과도 상응한다고 보여진다.[4]

3.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문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이를 전담하는 국제기구가 설립된다면 목적의 달성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볼 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들이 참여한 국제기구에 의한 정책과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

3) 최근 주변 4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외교」 제 48호(서울: 한국외교협회, 1999.1) 27쪽~66쪽 참조.

4)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미국 대북정책 조정관 (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은 98.11월 이래 진행되어 온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99.9월 완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동 보고서는 페리 조정관이 한국 및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성안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의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대북 포괄적 접근방식은 북한과 한・미・일간의 상호위협 감소 및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공존 체제의 수립을 추진함을 목표로 한다.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대북 투자사업 등이 국제 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한 나라 한 나라 개별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투자의 규모나 참여 기업의 수 등에 있어 훨씬 큰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MF나 IBRD 등의 국제적 금융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도, 여러 국가가 참여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요청은, 남북한이라는 개별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므로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4. 향후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가능성

이는 부수적인 목적으로서 한반도 통일 논의가 향후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는 유럽에서처럼 전통적인 영토적·민족적·인종적 분쟁을 희석·봉쇄할 만한 다자간 협력기구가 없다. 그 동안 이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관련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양자관계의 전통이 강하며 역사적인 피해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강한 점 등이 다자간 협력기구 구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5)]

그러나 한반도 통일논의 과정에서 관련국들 서로간에 불신과 적대감이 해소되고 신뢰가 형성된다면, 유럽의 EU 등과 같은 견고한 다자간 지역협력체제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협력기구 설립이 한반도 문제의 논의에서 시작된다면, 자연스레 한반도가 협력기구의 중심지로서 각광받을 수 있다.[6)]

---

5) 이해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요인과 다자안보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쪽

6) 현재 EU 본부 및 의회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다. 1944년 런던에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화란의 망명정부간에 결성된 BENELUX경제동맹은 EEC 창립의

Ⅲ. KUSCO가 담당할 역할

KUSCO가 실제로 담당할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1. 외교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 관계 악화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현재 남북간 대화는 화해무드 속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단언하긴 어렵다. 현재 남북대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원론적인 단계의 논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 실무적인 문제에 이르게 되면 남북간 입장 차가 드러나 봉착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분야도 이산가족 상봉이나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인도적 차원과 대북 경협 등 경제적 차원의 비교적 마찰이 적은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아직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의 남북간의 대화 과정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상호 마찰이 발생할 경우, KUSCO를 통해 주변국들의 도움을 얻는다면 문제의 해결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7)

1970년 동・서독간의 정상회담은 부푼 기대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회담자체만으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벨기에는 1957년 Roma 조약 체결을 통한 EEC와 구주원자력공동체(EURATOM) 창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벨기에는 소국가로서의 대외정책상 유럽공동체의 기능강화와 유럽통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EU 본부 및 의회를 브뤼셀에 유치할 수 있었다. 오늘날 브뤼셀은 명실공히 EU수도의 위상을 강화해오고 있다.~http://www.mofat.go.kr/belgium

7) '주변국 도움이 통일의 지름길', 중앙일보 2000년 6월 1일자 8면

동독의 입장이 강경해 회담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략을 바꾸었다. 동독과의 회담을 잠시 중단하고 대신 동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소련을 우군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었다. 때마침 소련 수뇌부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호의를 갖고 있던 참이었다.

브란트는 70년 8월 모스크바를 방문 브레즈네프 서기장을 만나 동·서독 관계개선을 위해 동독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소련과의 경제적 협력을 약속하고 소련의 관심사였던 동독 ·폴란드 국경선문제에서 파격적으로 양보했다.

당시 동서독간의 현안은 서베를린의 지위에 관한 문제였다. 서독은 협정을 통해 서베를린에 대한 기득권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받고자 했지만 동독의 입장은 워낙 완강했다. 이때 브레즈네프는 동독이 아닌 서독의 손을 들어주었다. 완강한 울브리히트 대신 호네커를 제1서기에 앉힌 뒤 서독의 입장을 받아들여 71년 베를린 협정에 서명했다.

주변국을 자기편을 끌어들이는 독일의 외교력은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성사시키는 단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 동독을 점령,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던 소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통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헬무트 콜 당시 총리는 고르바초프와의 담판을 통해 소련이 중립화 통일방안을 철회토록 했다. 아울러 소련은 통일 독일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잔류에 동의했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향후 남북간의 대화가 봉착상태에 빠지거나,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대화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남북간 직접적인 협상보다 주변국의 협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 회담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외교를 통해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중동 평화회담을 타결하였듯이, 한반도 문제에서도 미국에 그러한 중재역할을 맡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생각할 때, 북한이나 중국 등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남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재역할을 맡을 것으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협상전술에 의해 남한 정부가 배제된 채 협상이 미국과 북한간에 단독으로 이루어져, 우리 쪽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주변 4국 모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중립성이 요구되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기 어렵다고 본다. 이럴 경우 KUSCO를 통한 중재와 협의라면 어느 한 국가에 중재역할을 맡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중립성의 문제' 또는 '남북한 일방 당사자가 배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국내외적인 반발과 비난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구축이다. 협상을 통해 합의된 사항일지라도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서로간에 신뢰를 주기 어려워, 논의는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예컨대 남북한 상호간의 군축문제, 군사 훈련 · 신무기 개발 및 실험의 중단 문제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실제로 그 이행을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남북한만이 아니라 주변 4국 역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미루거나 이를 회피하려 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개별국가가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자칫 대상국가에 대한 간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그 대상국가가 상대방 국가의 선이행을 요구하며 자신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아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정 자체가 무

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가 아니라 KUSCO라는 국제기구의 차원에서 대상국가에 이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거부의 구실을 없애고 국제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협정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즉 KUSCO가 협정 당사국들간의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1) 주변국간 통일비용[8])의 분담 협의

한반도 통일에 들어갈 비용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리고 그 비용 역시 여러 연구들간에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9]) 그러나 어느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일 비용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어떤 형태로든 주변국이나 국제기구들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결론이다. 독일이 통일에 들인 비용과 남북한 및 동서독간의 경제력을 비교하면 이 같은 사실은 더욱 자명하다.

독일은 지난 10여 년 간 동독에 1조 500억 마르크라는 거액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독에 제공된 정부 예산의 공적자금만도 1조 마

---

8) 통일 비용은 지출되는 목적 및 시기에 따라 위기 관리 비용, 체제 전환 비용, 그리고 경제적 투자 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기 관리 비용은 단기적 비용으로서 통합 직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며, 체제 전환 비용은 중기적 비용으로서 북한의 사회·정치·경제체제를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또 경제적 투자 비용은 장기적 비용으로서 남북한 경제 격차 해소 및 북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다. -김욱·황동언,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현대경제연구원, 1999

9) 독일의 경제주간 Wirtschaft지 97년 4월 30일자는 한반도 통일 후 25년간 총 2조 4천억달러의 외국자본과 1조 2천억달러의 한국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급진적 흡수 통일시 5614억 달러, 점진적 통일시 732억 달러가 들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최근의 조사 연구 결과인 2000년 6월 21일 미국투자은행 골드만삭스사의 연구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 후 10년 간 투입될 통일 비용은 7700억 달러(약 855조)-3조 5500억 달러(약 39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르크에 달한다. 이것은 1998년 서독예산의 약 17%, GNP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로써 동독인의 생활수준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생산성과 임금수준을 서독인에 비해 1991년의 31%에서 1998년 60%내외로 배가시키는데 성공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낮은 경제성장(연 1% 내외)과 높은 실업률(서독 10%, 동독 20%)을 가져왔다.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을 '먹여살리는' 부담을 가져 힘들어하고, 동독인들은 열등한 시민으로 취급되는 점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갖고 있다.[10)]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남북한과 통일전 동서독의 상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서 독	동 독	서독/동독	남 한	북 한	남한/북한
인구	6200만명	1634만명	3.79	4680만명	2200만명	2.13
GNP	1조3천억달러	1580억달러	8.23	3168억달러	126억달러	25.1
1인당GNP	1만8530달러	1만2500달러	1.48	6823달러	573달러	11.9

※ 동서독은 1988년 통일당시, 남북한은 가장 최근의 비교인 1998년 기준[11)]

우리가 통일된다면 서독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남한이 동독보다 훨씬 낙후된 북한을 재건시키는 일이 힘겨울 것은 당연하다. 동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남북한이 통일 비용을 모두 떠맡을 경우 한국경제를 궤멸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비용은 주변국들이 일부 분담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협의에 따른 실제적인 지원절차를 담당하는 역할을 KUSCO가 맡아야 한다.[12)]

---

10) 한승주, 통독 10년의 교훈, 조선일보 1999년 11월 18일자

11) 국가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is.go.kr/w0/libTemplate.sp_exeTemplate2?vc_menu_id=M03000000

12) 이러한 논의가 일본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일본 자민당의 외교정책기구인 외교조사회(회장 나카야마 타로 전 외상) 는 97년 4월, 한반도 통일 때 일본 등 주변국이 국제 컨소시엄을 결성해 한국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지침을 마련했다.
외교조사회가 94년 7월부터 3년에 가까운 연구조사, 토론 작업을 거쳐 완성한 '자민

2) 대북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의 담당[13)]

통일이 이루어진 뒤에 남북간의 실질적 통합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지역 스스로의 자생력을 기르는 것에 많은 부분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북한 지역 자체의 독자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남북간에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지역 주민의 대규모 남한지역 이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 지역주민들이 남한의 대도시에 하층민으로 유입되어 대도시에 슬럼가 형성, 빈곤으로 인한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과 이로 인한 남한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 등 남북간의 실질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 지역 주민들이 기존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지역은 외국자본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북한지역의 경우 국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투자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투자의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또한 대북 투자시 이에 필요한 교통·통신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북한의 대금 결제 능력 역시 의심스러워 투자의 위험 역시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북한정부의 여러 투자 장려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이처럼 대북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들은 통일이

당 외교정책지침'에 따르면 일본은 남북경제교류와 북일 국교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함으로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며 특히 "한반도 통일이 갑자기 실현될 경우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통일 비용을 한국이 단독으로 부담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국제적인 컨소시엄 결성이 불가피하며, 일본은 좋든 싫든 컨소시엄의 중심적 역할을 맡도록 기대받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중앙일보 1997년 4월 22일자 1면

13) 외국자본의 대북 투자유치와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비용 분담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비용분담은 단지 경제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 통일에 따른 총체적인 비용문제를 다루지만, 대북 투자유치는 경제적인 측면의 투자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응 구분된다.

되더라도 사실상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외국 민간 기업들이 단독으로 대형투자에 선뜻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적다고 본다. 우선은 정부간 협상을 통해 정부 차원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본다. 민간기업들은 이에 참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북한의 투자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외국기업들이 대북 경협 경험이 풍부한 국내기업들과 협조해 동반 진출-정보교환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미국 업체 등 외국 기업의 북한 진출과 대북 경협사업의 국제적 협력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 및 기업 관계자로 구성하는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14] 정부도 향후 본격화될 대북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국내 업계와 외국기업들이 공동 참여하는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15]

---

14) 주한(駐韓) 미국 기업들이 남북한 및 외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대북 경협관련 기구 창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31일 미국 업체 등 외국 기업의 북한 진출과 대북 경협사업의 국제적 협력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 및 기업 관계자로 구성하는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MCHAM은 이를 위해 이달 초 산하 북한위원회를 열어 경협공동위 참여방안을 확정한 뒤 남북한 정부에 미국 기업의 경협위 참여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에는 경협위 공동 구성을 직접 요청하는 한편, 북한측에는 한국 정부를 통해 참여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제프리 존스 AMCHAM 회장 겸 북한위원회 위원장은 "외국 기업의 북한 진출 및 투자를 논의하는 공식 창구가 없는 데다 대북 경협에는 남북한 공동의 의견이 수렴돼야 하는 만큼 대북 투자와 관련한 남북한 및 외국 기업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 미 상의가 남북 경협공동위에 참여하면 외국 기업의 북한 진출이 훨씬 용이해지고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가 필요한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경협공동위는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직교역과 투자보장, 분쟁조정, 이중과세 방지 등 남북한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가 추진하는 공식 협상창구이다.
이에 앞서 AMCHAM은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북한 진출 및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AMCHAM은 하반기 중 5~6개 미국 기업 대표로 구성한 북한 투자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이러한 컨소시엄이 상설기구의 형태로 발전된다면 그 개발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KUSCO는 그러한 정부간 경제개발 협력을 논의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투자가 활성화되게 되면 이 경우 KUSCO는 외국기업들의 북한 투자를 위한 안내 상담 및 대북 교역의 상담 창구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16)

3. 안보 · 군사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한 군사력 감축문제 협의

1999년 기준 남북한은 각각 69만명과 117만명의 정규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병력의 대부분이 휴전선 부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감축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그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남북한 군사력 현황〕17)

구 분	남 한			북 한	
병 력	지상군	56만명	69만명	100만명	117만명
	해군	6.7만명		6만명	
	공군	6.3만명		11만명	

15)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24일 낮 12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 연합회 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대북 SOC사업은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구제금융도 얻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현재 여러 국가들이 사업참여 의향을 보내왔다." 고 밝혔다. -2000년 4월 24일자 조선일보

16)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유엔개발계획(UNDP) 는 평양사무소에 25명의 상주직원들을 두고 현재 농업 · 공업 · 자원 개발 등 수십 개 분야의 북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나 주한 외국 공관은 이 기구를 통해 북한지역 투자에 대해 문의 · 상담하고 있다.

17)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mind_fileup/04/01/zz/112012-36.html

구 분				남 한	북 한
주요전력	지상군	부대	군 단	11개	20개
			사 단	50개	63개
			여 단	18개	113개
		장비	전 차	2,250여대	3,800여대
			장갑차	2,300여대	2,300여대
			야 포	5,200여문	12,000여문
			헬 기	580여대	-
	해군	수상전투함		170여척	430여척
		지원함		20여척	47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90여척
	공군	항공기		60여대	-
		전투기		520여대	850여대
		특수기		40여대	
		지원기		220여대	840여대
예 비 전 력 (병력)				304만여명	745만여명

통일시 이러한 군 병력과 이에 상응한 군사장비 시설을 모두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한반도 통일국가의 군사력 규모가 통일전 남북한 군사력의 총합보다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반도 통일국가가 통일전의 군사력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 이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장거리 미사일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기술을 통일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북한이 현재 개발중인 대포동 2호 등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영토의 일부도 공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국들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18)]

---

18) 윌리엄 페리,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검토결과 및 건의-(페리 보고서)', 외교통상부

미국은 세계국가로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대북 정책의 초점을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관련 활동을 종식시키는데 맞추고 있다.

한국 역시 분단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미북간 및 남북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고, 통일 이후에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과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대체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일본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개발에 대한 우려는 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 영토위로 발사한 이래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일본 의회가 제네바 합의에 따라 KEDO가 건설중인 경수로 분담금안을 통과시키고 일 정부 역시 제네바 합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국내적으로 제네바 합의에 대한 정치적 지지획득과 안보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안보정책에 관하여 한국 및 미국과 종종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클린턴·장쩌민 정상회담 등 미·중 양 자 간의 광범위한 대화를 통해 중국 역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활동이 역내 및 세계안보를 해친다는 미국 측 우려의 많은 부분에 동조하고 있다.

통일을 전후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처리 문제가 주변국들간에 논의될 것인 바, 우리는 이러한 무기 처리 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군축비용의 주변국 분담을 비롯하여,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군비 축소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한 미군의 주둔 문제 협의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주둔한 주한 미군은 남북 간 전쟁 발발을 억제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했다. 이에 더 나아가 냉전기에 소련

비공식 번역

및 중국 봉쇄의 지역적 안보기능도 사실상 수행하고 있었다고 본다.[19]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안보차원에서, 일본은 지역부담의 감축차원에서 용인해 왔다. 그러나 남북대화에 따른 한반도 화해무드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과연 중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미·일간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과연 일본이 한반도 통일국가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지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통일 후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가 중요하다.

2000년 4월 12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결정은 고무적이지만 미군은 장기간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 밝혔다.[20] 반면 한국 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주한 미군의 주둔이유를 북한의 남침억지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통일 이후에는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21]

그러나 미군의 한국 주둔은 단순히 북한의 남침억지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세력균형 및 중국과 일본간의 대립 가능성을 막기 위한 이른바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통일 후에도 그 주둔 필요성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본다.[22]

만일 미국이 한반도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한다면 필

---

19) 김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외교안보연구원, 1999, 11쪽

20) 동아일보, 2000년 4월 13일자 1면

21) 지난 6월 중앙일보의 대북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북한 관계가 평화적으로 전개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감축' (68.8%)하라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전면 철수' 도 10.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수준을 유지' (18.8%)해야 한다는 입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앙일보 2000년 6월 16일자 8면

22)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독일 일간지 디 벨트와의 26일자 회견에서 김위원장과 통일 이후에도 정치적 역학관계와 세력 균형을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0년 8월 26일자

연적으로 힘의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 공백은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 메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1894년 청 · 일전쟁이라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에 의한 희생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입장이다. 만약 한반도 통일국가가 더 이상 안보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동맹국이 없이 동북아의 경쟁구도 속에 내던져진다면 자신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게 되면 일본 역시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동북아는 핵보유국들이 상호경쟁하는 '공포의 균형'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23)]

다만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 통일이후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 전쟁억지에서 동북아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지역안보의 차원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 · 일 · 중 · 러 간에 안보협력에 대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KUSCO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4. 소결 : 다자간 기구를 통한 협의의 효율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는 주변국들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있다. 물론 이런 사항을 각기 별개로 보아 개별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관련 당사자국간에 그 이해관계가 전혀 상반되기도 한다.

예컨대 통일비용의 지원 문제와 남북한 군축문제는 서로 별개의 사안처럼

---

23) 김성한, 앞의 글, 11쪽

보이나, 일본의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통일 비용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개발, 독도의 영유권 분쟁 문제 등에 있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한반도 통일국가에서의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여부에 대해서도 서로간에 상이한 입장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의 통일된 기구를 통해 논의한다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보다 능률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얻을 수 있다.

Ⅳ. KUSCO의 실제 설립과정

KUSCO의 실제 설립은 남북한간의 통일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냐에 따라 그 과정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남북한간의 통일이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에 따라 그 세부적인 모습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다만 남북간의 통일에 있어서 급진적인 흡수 통일은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현 국민의 정부도 흡수통일을 지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남북 통일의 보다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점진적 통일 방식에 상응하여 기구에 설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4]

1. 상징적 의미의 공동 선언 단계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통일 협상의 가시적 성과 도출 단계

지난 6월15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공동선언 발표, 그에 뒤이은 남북간 대화협력에 대해 주변 4개국을 비롯한 G8국가들은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25]

---

24)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유석렬,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및 변화전망, 외교안보연구원, 1999.1' 참조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한 및 미·일·중·러 6개국 수뇌의 공동 선언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국내외적 여러 상황으로 인해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26)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산가족 상봉 및 경의선 복원 등 남북 대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지금이 바로 주변국들과 한반도 통일 지지와 협력에 대한 공동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이러한 선언의 모델로 1975년 전유럽 국가들과 미국 및 캐나다를 포함한 35개국이 참여한 헬싱키 선언을 참고할 수 있다. 헬싱키 선언은 CSCE(현 OSCE)의 성립을 이끌어낸 선언으로 오늘날 독일통일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27)

김대중 대통령의 6개국 선언 구상과 헬싱키 선언28)을 살펴볼 때 '2+4 선언' 내지 '6개국 선언'이라 일컬을 본 선언의 대략적인 모습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동북아 6개국 선언〉

남북한과 주변국의 수뇌들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선언한 후, 주변 4국이 측면에서 유·무형의 지원을 하는 가운데,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양측간의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동질성을 축적하여

---

25) 주요 8개국(G8)정상은 21일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에 관한 특별성명' 을 채택, 남북 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회담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회담이 가져온 긍정적인 진전을 지지하고 남북대화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성명은 또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영속적인 평화 확립을 위한 남북한의 모든 노력과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아울러 표명한다" 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의 건설적인 자세를 환영하고, 긍정적인 첫 걸음으로 미사일 발사 동결의 재확인을 주목한다" 며 안전보장과 대량살상 무기의 비확산, 인권·인도적 문제에 대한 북한의 건설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중앙일보, 2000년 7월 22일자 1면

26) 6개국 선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대우, 김대중 정부의 첫 외교-6개국 선언 제의, 정세와 정책 98-02호, 1998

27) 이영기,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CSCE 모델의 유용성, 평화연구 제3호, 73-79쪽 참조

28) 이해준, 앞의 글, 34쪽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전문으로 담는다.

선언에서 천명할 제1원칙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제 문제를 규정한다. 신뢰구축조치와 안보 및 군축과 관련하여, 당사자국들간 주요 군사훈련과 신무기 개발 실험의 사전 통보, 화학무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감축 등 군축의 지향 및 군사분야에서의 상호통보 등을 규정한다.

제2원칙으로써는, 경제 · 과학 · 기술 및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한다. 그 상세는 한반도 통일시 통일 비용의 지원과 대북 투자에의 투자지원 참여 약속 등을 위시하여 6개국간의 상업 · 산업협력 · 과학과 기술 · 환경 · 운송 등 개별적인 협력분야를 항목화한다.

제3원칙은, 인도주의와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써 기아구호, 질병퇴치 등 의료사업 및 교육과 문화 활성화 등을 규정한다.

또한 이에 덧붙여 6개국 공동선언 이후 이러한 합의사항의 이행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상설기구의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향후 기구의 설립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2. KUSCO 설립의 현실화 단계

- 남북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단계

남북간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될 무렵, 6개국 선언에 기초하여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ence Organization: KUSCO)'의 설립을 위한 실무진간의 작업이 시작된다. 실무진간의 협의를 토대로 구체화될 KUSCO의 개략적인 모습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다만 한반도의 실제적인 통일 과정에 있어서 여러 상황의 변화로 그 모습은 상당부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기구의 기본적인 구조〉

- 상임이사회 : 대사 차원으로 구성되는 상설자문기구 및 결정기구이다.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KUSCO의 중요한 행정업무 수행, 회의를 주도하고 의장은 KUSCO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 KUSCO 총회 : 1년에 한 번씩 회원국 수도에서 번갈아 열리는 연례회의이다. 각 국마다 대사, 외무 장·차관을 비롯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회의 : 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정상회의는 상호간의 협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내외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실무 당사자들 만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 외무장관 회담 :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KUSCO 최고 정례 자문기구 및 결정기구이다.
- 고위공무원 이사회 : 고위공무원들이 최소한 1년에 두 번씩 회동하고, 각료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회동하며 원칙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 KUSCO 안보포럼 : 향후 지역 군비 감시를 위한 방안 수립, 군축분야의 의무이행여부 감시, 동북아에서의 지역안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 KUSCO 경제포럼 : 연 1회 회동하며 통일 이전 및 통일후 한반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통일 비용의 주변국간 분담 액수 및 그 출자 방법 등을 결정한다.
- KUSCO 투자기금 : 경제포럼의 산하기구로서 포럼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대북 투자재원을 확보 관리한다. 북한지역에 대한 각종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며 한편으로는 민간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위한 교류 안내창구의 역할도 담당한다.

- KUSCO 사무국 : KUSCO 결정기구에 대한 지원, 회의 준비, 행정관리, 각종 협력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 인권 보호위원회 : 인도적인 입장에서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기아구호와 의료사업, 직업교육 등을 담당하며, 남북간의 갈등에 따른 충돌이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 감시한다.
- KUSCO 조정 및 중재재판소 : 관련국간 분쟁 발생시 의무적으로 그 조정을 거치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임을 원칙. 향후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재판도 가능하다.

3. KUSCO 정상회의(가칭 2+4 회의)와 6개국 협정의 조인

- 1국가 1체제 이전의 과도기 단계로서 '남북 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의 진입

남북간에 1국가로의 완전한 통일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경제나 문화· 스포츠 등 많은 분야에서는 상당부분 남북간 통합이 이루어질 무렵, 동북아 6개국간에도 자국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의 협의와 이에 따른 공동 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한·미·일·중·러 6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현 남한의 '남북 연합제' 방안이나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 모두 1 국가로의 완전한 통일 이전의 과도적 단계를 전제하고 있다.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냐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 이러한 과도적 상태의 기간이 달라지겠으나, 상당한 기간 이러한 과도기적 상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주변 4개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직결되어 있는 한반도 통일 국가의 안보 군사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에 대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어야 통일비용 지원 등에 관해 주변국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한반도 통일국가가 보유하게 될 수도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화학무기·핵 개발

기술 등의 처리와 군 병력 감축문제, 주한 미군의 주둔조건과 기간 그리고 철수 문제가 주변국들간 회담의 핵심이며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이슈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주요 의제들의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1국가로의 완전한 통일 이전의 과도기적 기간이 상당기간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협상을 통해 타결되면 이른바 '2+4조약' 내지 '6개국 협정'의 형식으로 조인된다.[29] 독일 통일시 동서독과 미국·영국·프랑스·구 소련간에 체결된 2+4조약을 참고하여 6개국 협정에 담게 될 핵심 내용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6개국 협정〉

전문 ① 남한·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개국은 UN헌장과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제 민족의 동등한 자결원칙을 존중하고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② 6개국은 군비 관리, 군축, 한반도 통일국가 지원, 신뢰조성을 위한 효과적 조치로 KUSCO를 강화할 용의가 있으며 신뢰,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작업을 추진한다.

③ 한반도 통일국가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④ 6개국은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한반도 통일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 문제를 반드시 KUSCO를 통해 상호 협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한반도 통일 국가는 남한과 북한 전역으로 구성된다.

제2조 통일 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추구할 것을 선언한다.

29) 통독을 위한 동서독 협상과 2+4 회담에 대해서는 Peterludiow, The German negotiations and the "Two-plus-four" talks in German unification in European perspective/Ed. by Wolfgang Heisenberg,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Brussels- London 1991,pp. 15-27쪽 참조

제3조 ① 화학무기 및 핵무기 · 장거리 미사일 개발자료를 ....년까지 처리한다.
② 남북한 간 군대의 병력 감축 및 통합 작업은 ....년까지 완료한다.

제4조 ① 주한 미군의 주둔조건, 기간 그리고 철수를 한 · 미간 별도로 협정 · 체결한다.
②......

제5조 ① 한반도 통일비용 분담금은 각 당사국이 협정에 따라 ....년까지 KUSCO에 납입한다.
②......

제6조 한반도 통일국가의 동맹문제와 여기에서 발생하는 권리 · 의무는 이 협정에 저촉 받지 않는다.

제7조 ① 이 협정은 비준 혹은 국내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한다.
② 남북한 측의 비준은 통일 후에 받도록 하며 한반도 통일국가에서 유효하다.

제8조 이 협정은 협정 당사국 중 마지막으로 비준을 하거나 국내승인을 받는 바로 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정본은 한반도 통일 정부에 예치된다.

4. 다자간 안보 · 경제 협력기구로의 발전 단계

- 남북한의 1국가로의 정치적 통일 이후 단계

남북한간에 정치적으로 1국가로의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KUSCO의 역할은 상당부분 그 임무를 다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일 후에 있어서도 군축 등 상호 합의사항의 지속적 이행과 관련한 역할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통일 비용의 주변국 지원이나 대북 투자유치는 통일 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KUSCO의 역할

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구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관련국들의 협상 및 협의장으로서, 그리고 통일 후에는 향후 '동북아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유럽에서처럼 전통적인 영토적 · 인종적 · 민족적 분쟁을 희석 봉쇄할 수 있는 다변적 협력구조가 없다. 아시아에는 유럽연합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견줄 만한 것이 없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 가지 지역 협력기구 즉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 국가기구), ARF(Asian Regional Forum, 아시아 지역 포럼, ASEAN이 주도하는 정치-안보 협상기구), 그리고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은 모두 유럽을 묶어주는 다변적인 지역적 연대망에 훨씬 못 미친다.[30)]

이런 상황에서 KUSCO의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간 다자간 협력기구로의 발전 가능성은 아시아 국가간의 광범위한 지역 협력에 커다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남북통일 논의 과정에서 주변국들간에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남북한의 통일이 이러한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다만 이 글의 주요 논의방향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주변국들간의 지원 협의기구의 창설이므로, 다자간 협력기구로의 발전은 단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정도에서 그치기로 한다.

Ⅴ. KUSCO 가상 헌장

KUSCO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6개국 국가수반 및 정부

---

30) Z.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2000, 삼인, 201~202쪽

수반회의에서 KUSCO 설립헌장을 결정한다. 국제연합(UN)헌장 등 여러 국제기구의 설립헌장과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협정을 참조한 KUSCO 가상헌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

제1조 KUSCO의 목적
제2조 행동원칙
제3조 회원국의 지위
제4조 기구의 구성
제5조 상임이사회
제6조 총회
제7조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 회의
제8조 외무장관 회담
제9조 고위공무원 이사회
제10조 상임이사회
제11조 KUSCO 안보포럼
제12조 KUSCO 경제포럼
제13조 KUSCO 투자기금
제14조 사무국
제15조 인권 보호 위원회
제16조 KUSCO 중재재판소
제17조 잡칙
제18조 개정
제19조 비준 및 서명

〈전문〉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분단과 대립은 상호 교류를 단절하여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질감을 점차 심

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립 상황을 고착시키고 막대한 군사비용의 지출을 야기하여 한반도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세계의 평화 안전에 커다란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이제 단순히 한국인들의 염원을 풀어주는 수단으로써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새 천년대의 당위적인 목표가 된 것이다.

이에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문제에 있어서의 주요 이해 당사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제 통일의 시기가 임박해 있음을 상호 인정하는 단계까지 발전시켰다.

우리는 이 헌장을 통해 이제 가상적인 논의로서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해결하여 어떠한 군사적, 경제적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6개국을 원 회원국으로 한 지원 협력 기구를 창설하려고 한다. 이 기구의 명칭은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ence Organization: KUSCO)'가 될 것이며 주로 통일을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안보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존재 의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제1조 목적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KUSCO는 남북한 통일에 관련하여 남북한 양국뿐만 아니라 그 외 이해 당사국의 입장을 최대한 표명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조하여 해결한다.
2. 남북한 통일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불안정 사태의 발생과 주민들의 소요 등 한반도 내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

하여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통일에 의한 동북아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되,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 박애, 평등을 바탕으로 하고 또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존중한다.

3. 통일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남북한의 경제적 문제들을 양국의 국내문제로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가와 관련이 있는 국제적 문제로 파악하여 서로 이해·협력하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여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4. KUSCO는 위와 같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2조 행동원칙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 1조에 명시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가 향유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이 기구의 목적과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구와 사전에 협의하여 본 기구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떤 무력적 행사를 삼가고 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각 국의 독자적 활동, 즉 기구의 일원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주권국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본 기구의 이념과 상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5.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 공조에 필요한 한, KUSCO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6.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남북한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

항에 간섭할 권한을 본 기구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남북한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7. 본 기구는 현재 가장 보편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연합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여 상호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회원국의 지위

1. 본 기구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동북아 6개국 선언에 참여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을 원 회원국으로 한다.
2. 회원국의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 밖의 이해 당사국에 확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그러한 국가의 본 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승인은 외무장관 회담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외무장관 회담은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키도록 총회에 권고할 수 있고 총회는 이에 따라 그 당부를 결정한다. 정지된 권리와 특권 행사의 원상회복도 동일한 과정을 통한다. 다만 원 회원국 6개의 국가는 해당 국가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한 그의 권리 행사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5. 6개 원 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은 본 헌장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외무장관 회담의 권고와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시킬 수 있다.

제4조 기관의 구성

1. KUSCO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회의, 외무장관 회담, 고위 공무원 이사회, 상임이사회, 안보포럼, 경제포럼, 투자기금, 사무국, 인권보호위원회, 중재재판소를 설치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위원회는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3. 이하에 규정된 기관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세칙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해진다.

제5조 상임이사회

1.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은 상임이사회에 있다.
2. 상임이사회는 각 원 회원국의 1명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3.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대표들 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4.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상임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또는 상임이사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5. 상임이사회의 결정은 모든 원 회원국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6. 상임이사회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규칙과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7. 상임이사회는 기구의 기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1. 총회는 이 기구 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각 국은 고위 공무원 이사회, 상임이사회, 안보포럼, 경제포럼을 대표하여 각각 1인의 대표를 참가시켜야 한다.
2. 총회는 남북한 통일문제와 관련된 본 기구의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3. 총회의 임시회는 상임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개최된다.
4. 총회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制7조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 회의

1. 국가수반 및 정상수반 회의는 각 회원국의 국가 수반 또는 정부수반으로 구성된다.
2. 본 회의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
3. 이 회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상임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

制8조 외무장관 회담

1. 외무 장관 회담은 KUSCO 최고 정례 자문 회의로서 각국 외무 장관으로 구성된다.
2. 이 회담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열린다.
3. 본 회담에서는 이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기구의 목적과 활동 범위에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 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

制9조 고위 공무원 이사회

1. 고위 공무원 이사회는 각 국의 실무담당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3인 이내의 대표를 참가시킬 수 있다.
2. 본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2회 열리며, 그 중 한 번은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열리며, 정책방향의 일반원칙을 설정한다.

制10조 KUSCO 안보포럼

1. 안보포럼은 각국 국방부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2. 본 포럼은 연 1회 회합한다.
3. 향후 한반도의 군사적 동향 파악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군사력 축소와 군비 부담 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 협의하며, 주한 미군 및 주일 미군의 주둔 여부 및 그 기간을 논의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서

를 제출한다.

4. 그 외 군사 관련 문제라고 포럼이 스스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논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KUSCO 경제포럼

1. 경제포럼은 각 국 행정장관급 관리와 2인씩의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다.
2. 본 포럼은 연 1회 회합한다.
3. 한반도 통일 이전 및 통일 이후의 지원 방안으로써 재원의 조달 및 관련국간 분담 여부 등을 결정한다
4. 그 외 경제관련 문제라고 포럼이 스스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논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KUSCO 투자기금

1. 투자기금은 경제포럼의 산하기관이며 각 국 행정차관급 관리로 구성된다.
2. 경제포럼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대북 투자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한 각종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며 민간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유도, 지원한다.

제13조 사무국

1. 사무국은 각 회원국의 국민을 직원으로 채용하되 그 지위는 국제연합의 직원에 준한다.
2. 사무총장은 각 국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회의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3분의2 다수결에 의해 선출한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4. 사무국은 KUSCO 결정 기구에 대한 지원, 회의 준비, 행정 업무 담당 및 각종 사무에 대해 협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인권 보호 위원회

1. 인권 보호 위원회는 총회 내의 필요적 소위원회로서 필요한 경우 어느 한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2. 본 위원회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기아구호와 의료 사업, 직업 교육 등을 담당하고 남북간의 갈등에 따른 충돌이나 인권침해 여부 등을 감시한다.

제15조 KUSCO 중재재판소

1. 본 기구의 목적,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분쟁관련 회원국이 당사자로 하여 중재재판소에 분쟁 해결을 위탁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2인씩의 법률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임명하여 그 명단을 사무국에 기탁한다. 중재인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재판소는 분쟁 해결이 위탁된 경우마다 각 국 중재인 1명(분쟁 당사국의 중재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을 열어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린다.
4.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국은 외무장관 회담을 거쳐 상임이사회에 새로운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총회는 4분의 3 다수결로 당부를 결정한다.
5. 본 재판소의 중재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각 당사국은 협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6조 雜則

1. 이 헌장이 발효한 후 KUSCO가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KUSCO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KUSCO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4. 기구와 KUSCO이 대표 및 기구의 직원은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5. 상임이사회는 4항의 적용세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KUSCO회원국에게 협약을 제안할 수 있다.
6. 이 헌장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총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第17조 개정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되고, 모든 회원국의 3분의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단, 6개 원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비준하지 않았을 때는 본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발효하지 아니한다.

第18조 비준 및 서명

1. 이 헌장은 서명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된다.
2. 이 헌장은 남한, 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때 발효한다.
3. 이 헌장이 발효한 후에 이를 비준하는 이 헌장의 서명국은 각자의 비준서 기탁일에 KUSCO회원국이 된다.

Ⅵ. 끝내며

이 글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가상국제기구의 창설이라는 점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참고하였고 OSCE(구 CSCE) 등 유럽의 다자간 협력기구를 모델로 하였다. 따라서 유럽과는 상황이 매우 다른 동북아 정세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실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간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하나의 통일된 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각 따로 나누어 논의되어질 수 있으며, 그 형태도 다자간 공동회담이 아니라 당사국간의 일대일 협상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 등을 생각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 내부의 문제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주변의 어느 한 국가만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의 전체의 정세와 밀접히 관련되어 남북한 미·일·중·러 동북아 6개국 모두와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6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형태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각 국간의 개별적인 협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논의과정에서 6개국이 서로 신뢰를 쌓게 된다면 이를 통해 보다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동북아 6개국 간의 통일과 관련된 제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구가 향후 동북아시아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노둣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nce Organization : KUSCO)'의 구상은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오기평, 현대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1997

외교통상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외교통상부, 1998

유병화, 국제법, 진성사, 1996

이기택, 현대국제정치이론, 박영사, 1997

박기갑, 국제기구법, 고려대학교, 2000

Z.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삼인, 2000

(2) 논문 및 정기간행물

이해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요인과 다자안보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송영선·엄태암, 아·태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상과 가능성 분석, 국방논집 제19호, 1992

이서항,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협력의 모색과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5권 제3호, 1993

이대우, 김대중 정부의 첫 외교-6개국 선언 제의, 정세와 정책 98-02호, 1998

홍기준, OSCE와 ARF 사례연구를 통해서 본 동북아지역 안보협력의 방향, 국방논집 제40호, 1998

이영기,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CSCE 모델의 유용성, 평화연구 제3호

김욱·황동언,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1999

윌리엄 페리,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검토결과 및 건의-(페리보고서), 외교통상부 비공식 번역

김성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외교안보연구원, 1999

유석렬,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및 변화전망, 외교안보연구원,.1999

「외교」 제48호, 서울 : 한국외교협회, 1999

(3) 외국 문헌

Peterludiow, The German negotiations and the "Two-plus-four talks in German unification in European perspective/ Ed. by Wolfgang Heisenberg,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Brussels- London 1991

(4) Internet 자료

http://www.nis.go.kr-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hri.co.kr-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5) 기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물리적 공간/사이버 공간의 공진화 매개로서 놀이성(性)을 통한 사회문화 통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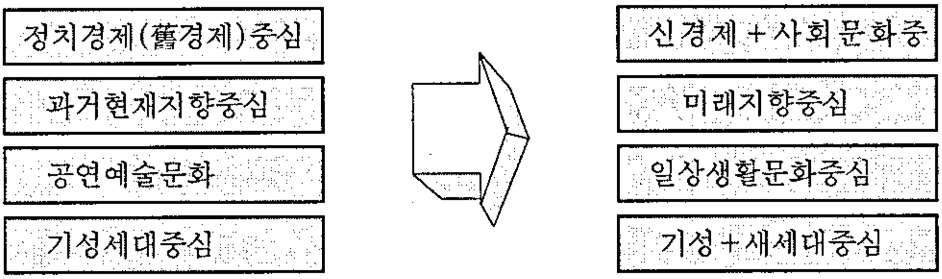
중앙대학교 국 문 과
2학년 정 미 진

〈목 차〉

【요약문】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놀이성의 개념과 사회 문화 통합적 기능
Ⅳ. 놀이성의 현대적 의미와 물리-사이버의 공진화
Ⅴ. 북한 사회, 문화의 특성과 놀이성의 방법적 가능성
Ⅵ. 남북한 놀이성의 단계별 공통성(共通性)
Ⅶ. 남북한 공통 놀이성을 통한 융화적 3단계 사회, 문화통합방안
Ⅷ. 결 론

【 요 약 문 】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속도감을 잃었던 통일 논의가 다시 속도감을 얻고 있다. 통일 논의에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문화적 통합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정치경제 특히, 관광개발, 공단개발, 대북사업이라는 경제적 측면의 논의만 활발하다. 그런데 사회문화통합 논의라 하더라도 대부분 과거의 공통성의 회복만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현재수준에서 통합하려 한다. 이것은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사회문화 통합을 하기에는 사회문화가 이질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질화된 부분과 공통적인 요소를 잘 구분하여 새로운 사회,문화 창출을 통해 통일의 사회문화를 일구어 내야한다.



〈기존논의〉 〈본 논의〉

또한 정치, 경제적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협력 통합 논의 기성 세대중심이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포함하는 사회문화통합이되 미래 지향적인 통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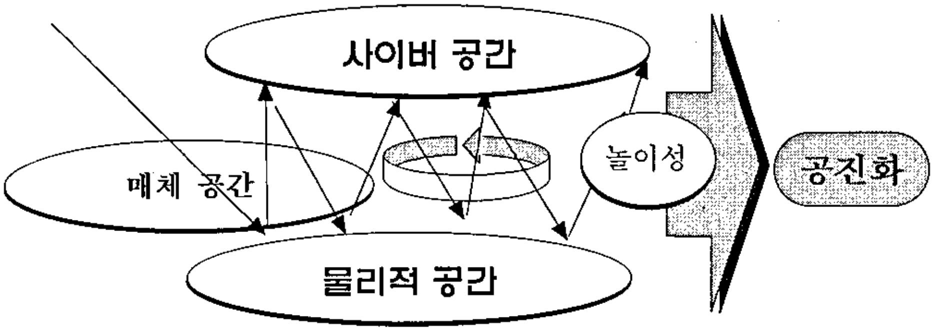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화의 방법론적으로 어떠한 수단을 취하는가가 문제이다. 현재 세계는 지식정보경제를 향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식정보경제의 대표적인 사회문화 현

상은 사이버 공간형성과 진화이다.

미래인류문명과 문화가 존재하는 이상 놀이성은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창출할 것이다. 한반도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도 놀이성이 존재한다.

이제 인류문화는 물리적 공간의 과거에서 미래의 사이버 문화로 공진화(Co-evolution) 해가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현재 그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놀이성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공진화 되어간다고 한다면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리라 보여진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이런 놀이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 통합방안은 통일한국의 주도적인 사회구성원인 젊은 세대들에게 더 유효하리라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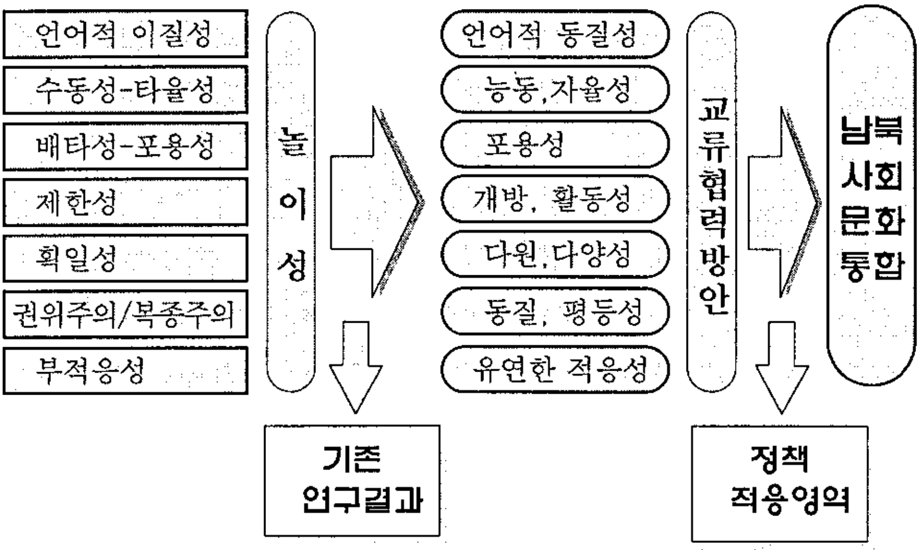


〈그림1〉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공진화(Co-Evolution)

놀이성의 사회, 문화통합적 기능성

먼저 놀이는 사회성 발달에 촉매 작용을 한다. 자기 중심성을 줄이고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기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

놀이 수행과정에서 의사 소통을 이루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로써 관용성, 협동성, 동질성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림2〉 사회,문화통합적 기능과 정책

즉, 사회성을 획득하게 된다. 한편 놀이는 억압되어 있던 정서를 해소한다. 놀이의 오락성은 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불안과 발달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또한 지적활동을 조직화하고 활성화한다. 따라서 창조성과 문제해결력이 증가된다.

남북한 놀이성의 단계별 공통성(共通性)

남북한 놀이성의 공통성에는 물리적 공간의 놀이성, 매체 놀이-매스미디어 놀이성, 사이버 공간의 놀이성이 있다.

물리적 공간의 놀이성(물리적 공간에만 존재)에는 전통민속, 세시놀

이, 아동 놀이성 등의 공통점이 있다. 매체 놀이-매스미디어 놀이성은 일방향적 놀이(半사이버 공간놀이)성으로 대중매체문화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뒤져있지만 사이버 공간의 놀이성은 쌍방향적 놀이성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자 게임이 대표적이다.

남북한 공통 놀이성을 통한 융화적 3단계 사회, 문화통합방안

여기에는 일반적인 방안, 물리적 놀이 측면, 매체 놀이적 측면, 사이버 공간측면 방안이 있다. 융화적 3단계를 통한 교류 통합에는 사상 이데올로기가 배제된 놀이성의 교류와 정치성과 경제성이 배제된 학생교류를 포함하는 물리적 공간의 놀이 교류, 대중 매체놀이성의 교류 등이 있다. 이것들은 서로 단계 별로 이루어지거나 서로 융합하는 형태를 이룬다.

사이버 공간 놀이성 통합 방안에는 4단계별 추진사항에 이어 단계 전반에서 고려할 점들이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재정적, 학제적 문제가 포함된다.

Ⅰ. 서　　론

1. 문제제기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속도감을 잃었던 통일 논의가 다시 속도감을 얻고 있다. 통일 논의에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문화적 통합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정치경제 특히, 관광개발, 공단개발, 대북사업 이라는 경제적 측면의 논의만 활발하다. 경제적 협력과 통합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만나는 계약자적인 상호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민족의 동질성 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 위해 동업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관계에서는 이해관계가 끝나면 미련 없이 끝난다. 이 때문에 진정으로 한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사회문화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문화통합 논의라 하더라도 대부분 과거의 공통성의 회복만을 논의하거나 아니면 현재수준에서 통합하려 한다. 이것은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사회문화통합을 하기에는 사회문화가 이질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민속놀이는 현재 남한이나 북한이나 과거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민속놀이문화는 없다. 남한에서 보면 북한은 사회주의식 민속놀이문화이고 북한에서 보면 남한의 민속놀이문화는 자본주의 민속놀이다. 이런 시각이라면 사회, 문화적 통합은 어렵다. 이질화의 골만 너무 깊다는 인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려는 측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사회문화의 형성적 통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미래지향적이라 할 때 그것은 통일 한반도의 사회문화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질화된 부분과 공통적인 요소를 잘 구분하여 새로운 사회,문화 창출을 통해 통일의 사회문화를 일구어 내야한다.

또한 정치, 경제적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협력 통합 논의가

기성 세대중심이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포함하는 사회문화통합이되 미래 지향적인 통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화의 통합이 방법론적으로 어떠한 수단을 취하는가가 문제이다. 현재 세계는 지식정보경제를 향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지식정보경제의 대표적인 사회문화 현상은 사이버 공간형성과 진화이다. 북한에서는 이 지식정보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컴퓨터 분야에 많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한에서는 국가전체의 기조를 여기에 두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 이미 많이 녹아 들어와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문화는 지식정보체제의 사이버 문화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방법론적으로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매개점을 통해 사회문화 통합수단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향

북한 교예단 공연을 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흥분하고 열광의 도가니로 빠져들어 갔는가

호이징하(J.Huizinga)는[1] '문화 이전에 놀이가 존재했다.' '인류의 모든 것이 문화다.'라고 말한다. 이를 따른다면 놀이성은 인류 모든 문화에 존재해왔다. 마르쿠제(Herbert Marcuse)는 '에로스'가 문명을 만들어왔다[2]고 했지만 호이징하는 놀이성이 문화를 만들어 왔다고 한다. 오히려 그의 범주대로라면 심지어 에로스도 놀이성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놀이성을 빼놓고는 분명 인류의 사회문화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인류문명과 문화가 존재하는 이상 놀이성은 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창출할 것이다. 한반도의 과거 그리

1) J. Huizinga, Homo Ludens놀이하는 인간, 권영빈 譯. 서울: 홍성사 1983 p7
2) Herbert Marcuse, Eros & Civilization 박경일 譯, 서울: 시사영어사 1993

고 현재 그리고 미래도 놀이성이 존재한다. 비록 한반도에 분단선이 그어져 있을지라도 놀이성은 존재하고 끊임없이 역동성을 지니며 공진화한다. 이제 인류문화는 물리적 공간의 과거에서 미래의 사이버 문화로 공진화(Co-evolution) 해가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도 마찬가지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현재 그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는 당연히 교예단과 같은 '놀이성'이 존재한다.

사이버 문화가 지배할 21세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이버 문화의 핵심에 있는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는 인포테인먼트(Information+Entertainment=Infortainment)를 이야기한다. 궁극적으로 '놀이성'이 정보와 결합할 만큼 21세기에도 놀이성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사실상 현재도 인터넷 비지니스에서 '놀이성'을 빼면 수익 구조가 없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문화산업이라 불리는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서도 놀이성은 핵심인식이 되어가고 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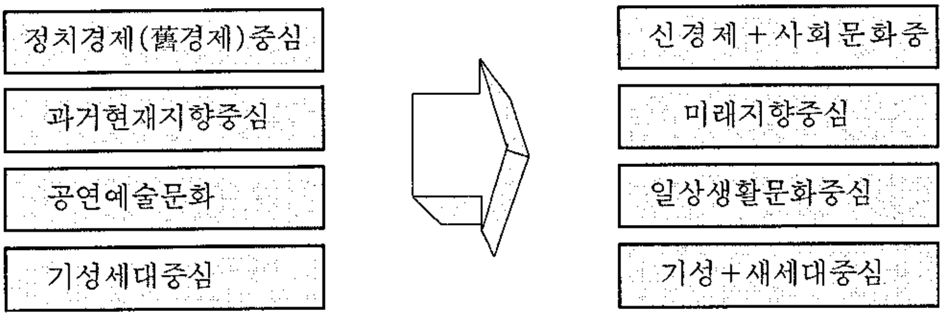
그러나 일부 주장처럼 사이버 공간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가 물리적 공간과는 상관없이 사이버 공간만이 우리가 살 사회문화 공간인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아니라면 놀이성의 그 특성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공진화 되어간다고 한다면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하리라 보여진다.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이런 놀이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 통합방안은 통일한국의 주도적인 사회 구성원인 젊은 세대들에게 더 유효하리라 보여진다. 놀이성은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는 공진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대표적인 게임산업은 엄청난 부가가치 산업이다. 남북의 역량을 이 부분에 집중하면 지식정보경제에 시너즈 효과를 마련할 것이다

3) 장승권 외, 인터넷 지식벤처의 성공조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0

일상 생활 속에서의 놀이성을 통한 사회,문화적 통합방안을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강구해보고자 한다.

3. 논지전개

놀이성의 일반적인 개념과 이론 그릭 함께 기존에 이루어졌던 놀이성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놀이성을 통해 사회문화 통합방안을 도출해본다.



〈기존논의〉 〈본 논의〉

Ⅱ. 이론적 배경

1. 놀이의 사회, 문화적 역할과 가치

1) 사회성(社會性)의 개념

사회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사회성은 사회적 행동 즉, 타인 혹은 집단 공공의 사물, 사건법률 관계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동이 사회화된 정도를 말한다. 두 번째, 사회성은 집단의 참가 정도를 의미한

다. 세 번째는 인격의 특성을 말한다. 종합하면 사회성이란 타인과 공동으로 사회생활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사회성의 발달이란 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 사회와 집단의 기대에 알맞게 행동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을 말한다.4) 즉, 사회화란 개인을 그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다.5)

2) 놀이성의 사회성(社會性) 형성 기능

놀이의 사회적 기능은 최우선적인 기능이자 가치이다. 놀이는 사회성 발달에 직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래집단과의 놀이를 통하여 가족이외의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넓혀가게 되는 것이다. 동료들과의 놀이를 통해 양보와 겸양의 미덕을 배울 수 있고 선의의 경쟁과 승패의 희비를 경험하게 되며 책임과 의무, 굴종과 좌절, 상호 의존과 신의를 비롯하여 자기절제, 규칙의 준수, 상대의 설득과 화해 등의 사회적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자기중심적인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자기중심적인 행동에서 협동적 행동으로 비사회적 자아를 사회적인 인격형성으로 확대·심화하게된다.6) 이런 의미에서 Frobel은 놀이가 인간 발달의 표현이라고 하였다.7)

Buhler는 놀이의 유형에 기능놀이(Functional play), 모방놀이(Imaginative play), 구성놀이(Constructional play)가 있다고 했다.8) 특히 모방놀이는 사회적 발달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 생활의 일부와 역할을 모방함으로 인해서 사회성의 기초가 형성된

---

4) 구대회, 유아의 놀이와 사회성 발달에 관한 고찰, 재활과학연구 제 8권 1호 1988 p38

5) 김재은, 김태연, 사회화의 작용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30 1977 pp24-42

6) 최영하, 정신박약아의 발달과 놀이, 특수아동교육, 제 11권 8호 1984 p142

7) F. Frobel, Chief Writing on Education, (Trans by Fretcher, &Welton, London, Arnold, 1912) pp50-51

8) C. I. Standistrom, The Psychology of Childhood of and Adolescence, (Penguin Books Ltd, 1966), p175

다고 보고있다. 놀이는 혼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럿이 모여서 남의 행동을 보고 배우며 이로써 협동하는 생활을 학습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동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남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얻게 된다.

hurlock[9]은 놀이의 높은 사회 교육적인 가치를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먼저 놀이는 사회성 발달에 촉매 작용을 한다. 자기 중심성을 줄이고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기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 놀이 수행과정에서 의사 소통을 이루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로써 관용성, 협동성, 동질성,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즉, 사회성을 획득하게 된다. 한편 놀이는 억압되어 있던 정서를 해소한다. 놀이의 오락성은 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불안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또한 지적활동을 조직화하고 활성화한다. 따라서 창조성과 문제 해결력이 증가된다.

3) 세계관과 가치체계 형성

Frank와 Theresa Caplan[10]은 놀이의 기능과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놀이는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그것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며 활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활동의 자유를 제공한다. 극복해야하는 상상의 세계를 제공한다. 또한 언어 학습의 기초를 제공한다. 놀이 과정에서 대인 관계를 돈독(敦篤)히 하는 독특한 힘이 있다. 또한 신체적 완성감의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적이다 보니 실제 세계를 활발히 탐색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기심과 주의 집중력을 촉진한다. 때에 따라서는 역할 배우기의 방법이 된다. 학습이

9)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ow, 1978

10) Frank and Theresa Caplan. The Power of Play. quoted in Verna Hildebrand,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6

역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판단력도 기르게 해준다. 이로써 지적체계가 구성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생활에 생기를 불러일으켜 준다. 결국 전인적 인간 생존의 본질이다.

E.H.Erikson에 의하면 놀이는 자율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솔선성(率先性) 학습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놀이를 통해서 문제상황을 설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풀어 가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다.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자발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놀이를 통해 정서적인 발달을 더 촉진하고 자아를 수용하게 되기 때문이다.[11]놀이는 이렇듯 인성과 감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인성과 지적체계를 구조화하여 새로운 가치체계와 세계관을 형성시켜준다.

2. 공진화(Co-Evolution)이론 : 사이버-물리적 공간의 공진화

에리히 얀치(Jantsch, Erich)[12]는 정신과 객관 또는 물질 사이의 관계를 공진화(Co-evolution)의 관계로 보았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정신이 해당된다. 그에 따르면 정신적인 특히, 신경적인 구조들의 자기갱신력과 진화로부터 다양하고 다원적인 인간의 창의력이 나온다. 정신은 물질 세계를 끊임없이 자기반영하고 이를 통해

11) E.H.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ion, 1950, pp194-901

12) Jantsch, Erich, Design For Evolution: Self-organization and Planning in the Life of Human system. New York: Braziller 1957
Jantsch, Erich, Evolving image of man:dynamic guidance for the mankind process, in: Jantsch and waddington, eds 1976
Jantsch, Erich and waddington, Conrad., eds Evolution and Consciousness: Human Systems in Transition. Reading, Mass., London and Amsterdam: Addison-Wesly 1976
Jantsch, Erich, The Origin of Consciousness in the Breakdown of The Bicameral Mind, Boston: Houghton-Miffin 1976

새롭게 구성해낸다. 이 구성은 환경의 변화이다. 환경은 다시 인간의 정신을 변화시킨다. 서로 공진화 시켜 가는 것이다.

한편으로 인간은 정신이 만들어내는 기술을 동원하고 평형구조들을 만들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과 사회제도와 사회조직들을 만들어 낸다. 아울러 과학과 위대한 종교들과 이데올로기까지 동원하여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형태의 자기갱신적 진화적 체계들을 창출한다. 자기반사적이고 해방된 정신이 물질적인 생산과 분배 과정들을 뛰어넘어 인류의 현실적인 사회문화구조들에 독자적인 자기조직을 도입한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진화했으며 물질적 세계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물질적인 과정만으로는 역사를 해석할 수 없다.[13] 결국 인간의 정신과 물리적 세계는 공진화 해 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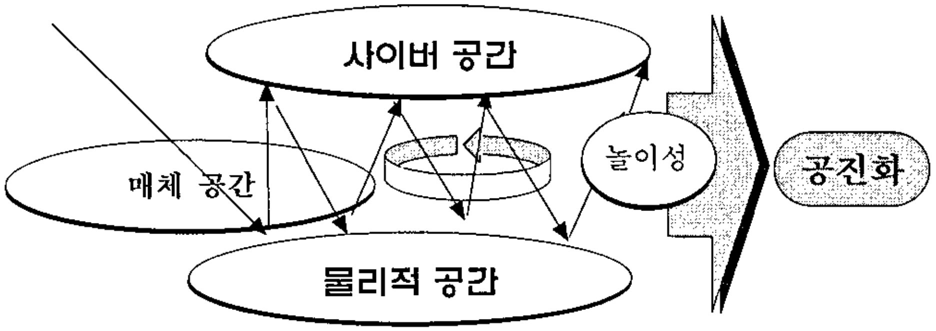
사이버 공간은 이러한 인간의 정신이 기술을 통해 새로운 정신의 세계를 구축해 놓은 것이다. 인간의 또 다른 정신 세계가 문화이다. 사이버 세계는 계속 확장되어가고 있고 현실 세계도 계속 함께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 새로운 정신의 세계는 혼자 형성되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홀로 진화 발전해 나가는 것도 아니다. 이 세계는 물리적 공간과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 함께 하며 함께 진화해 나간다.

이런 사이버 공간과 물리 공간의 공진화적 측면에서 볼 때 놀이성은 사이버 문화와 물리적 공간사이에서 공진화한다.

이런 놀이성은 물리적 공간의 놀이성(민속 놀이 :물리적 공간만 존재), 대중매체 놀이성(매스미디어 놀이성: 일방향적 놀이), 사이버 공간의 놀이성(전자 게임:쌍방향적 놀이성 발생-사이버 공간 등장)으로 나누어 공진화 한다고 볼 수 있다.

---

13) 에리히 얀치, 자기 조직하는 우주, 홍동선 譯 서울: 범양사, 1989 pp221-254



〈그림1〉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공진화(Co-Evolution)

Ⅲ. 놀이성의 개념과 사회 문화 통합적 기능

1. 놀이성의 개념

E.B.Hurlock에 의하면 놀이란 외부의 압력이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여 단순히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놀이는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놀이는 스스로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얻는 것이며 소극적인 놀이는 타인과의 놀이를 방관하거나 TV시청 또는 독서 등을 통해 정적인 활동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다.[14)]

E.H.Erikson에 의하면 놀이는 자율성과 솔선성 학습의 수단이 되는 것으로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학습하고 정서적인 발달을 더 촉진하고 자아를 수용하게 된다. 이것은 놀이를 통해서 문제상황을 설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풀어가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다.[15)]

14) E. H. Hurlock, Child Development, Tokyo: Mcgrow-Hill Inc., 1972 p287

Freud는 놀이를 정화활동(Cathartic activity)으로 보았다. 역할을 실연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말의 의미가 통하는 능력인 통어력(通語力)을 얻게 된다. 억압된 불쾌감이나 고통스러운 욕구들을 놀이를 통해 발산한다.[16]

Lange의 자아확충(ego-expending Theory)이론에 따르면 놀이는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자연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Lange와 의견을 같이 하는 Claparede에 따르면 놀이는 자아 또는 성격의 발달을 위한 표현적 활동이며 인지능력을 발달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다.[17]

2. 놀이성 이론

1) 놀이에 대한 고전이론

(1) 잉여에너지이론-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이외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하여 놀이를 한다는 이론이다.[18]

(2) 에너지충족이론-일정기간 반응을 유보함에 따른 자신의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놀이를 한다는 입장이다. 놀이가 소멸된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19]

(3) 본능이론-학습하지 않고도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유전된다. 즉, 놀이 행위를 야기하는 요인은 유전된다.

(4) 준비이론-앞으로 실제 생활을 준비하기 위하여 놀이를 통하여 준비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놀이는 새로운 방식을 하려는

---

15) E.H.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ion, 1950, pp194-901

16) S.Millar, The psychology of play, New York; Jason Aronson Inc. 1974 pp23-30

17) 김인수, 자유선택놀이 학습이 과학적 추리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논문집 p199

18) H. Spencer, Principles of Psychology, (London: n. p, 1855) p693

19) M. Lazarus, About the attraction of play, (Berlin: F. Dunmeler, 1883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하려는 행위이다.[20]

(5) 반복이론-인간의 진화과정에서 습득된 행위들이 유전적으로 전해져서 놀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는 사냥행위의 일종이라는 것이다.[21]

(6) 휴식이론-일을 한 후에 휴식을 갖으려는 개인의 욕구 때문에 놀이가 이루어진다. 놀이가 긴장을 해소하거나 이완시키는 데 이용된다고 보고 있다.[22]

2) 놀이의 근대이론

(1) 일반화 이론-어떤 자극에 의하여 받은 놀이의 경험은 다른 유사한 반응에 대해서 비슷한 놀이의 활동으로 나타내게 된다.

(2) 보상이론-놀이는 작업에 따른 불만이나 자신의 무기력에 대한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어난다.

(3) 정신분석: 정화이론-부분적으로 불만스러운 감정을 사회적으로 인정된 활동에 전이시킴으로써 불안한 상태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있다.[23]

(4) 발달이론-놀이는 지적성장과 함께 일어난다. 아동이 현실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적성장을 위하여 동화와 조절과정이 필요하다. 놀이는 지적수준과 관계된다. 놀이결과로서 지적발달이 복합적으로 증가한다.[24]

(5) 학습이론-학습을 일으키는 정상적인 과정에 의한다. 놀이는 학습과정을 일으키는 과정이다.[25]

---

20) K.Groos, The play of Man, New York :Appleton 1901
21) G. S, Hall, Youth, New York: Appleton, 1909
22) 이성대, 아동교육, 서울: 학문사 1983 p89
23) 이순자, 놀이의 심리 서울: 형성출판사 1984 p24
24) 김광웅, 아동생활지도, 서울: 학문사 1982 p17
25) 서봉연, 이순형, 발달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1983 p285

3) 놀이의 현대이론[26)]

(1) 흥미추구로써의 놀이

사람은 환경과 자신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있다. 사람은 적절한 흥미추구의 욕구가 있다. 이런 흥미 추구에서 변화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흥미를 유발시키는 요소에는 새로움, 복잡성, 불협화음적 모순, 새로운 정보 등이다. 사람은 이렇듯 다양하게 변화하는 흥미를 유발하는 자극에 관심을 갖게 된다. 놀이와 작업은 동등하며 분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 능력/성취감으로써의 놀이

환경 속에서 결과를 재생산 하고자하는 요구가 있다. 이런 욕구는 갖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며 성취하고자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능력의 과시는 성취감과 통한다. 성취하는 것은 즐거움이다. 어떠한 완벽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불확실성이나 새로운 정보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속성이 되므로 결국 능력/성취이론은 일종의 흥미추구라고 할 수 있다.

3. 놀이의 분류 기준

1) 사회성에 따른 분류

Millar[27)]와 Weiniger[28)]는 놀이를 고립놀이(Solitary), 방관놀이

---

26) M.J.Ellis, Why people pla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McCarthy, Melodie A. Fundamental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Massachusetts: Winthrop Publishers, Inc., 1980

27) S. Millar, The psychology of play New York : Jason Aronson., 1974 p10

28) O. Weiniger, Play and Education, (Spring Field, Illinois: Charles C.

(onlooker), 병행놀이 연합놀이(associative), 협동놀이(cooperative)의 단계로 나누었다.

고립놀이(Solitary)는 자신의 충족을 위해서 혼자 자기중심적으로 놀이를 하는 것이다. 혼자 고립적으로 노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없다.

방관놀이(onlooker)는 고립놀이에서 상대방을 인식하는 놀이이다. 상대방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뿐 자기 자신을 그 속에 참여시키지는 않는다. 이 집단 저 집단을 옮겨다니면서 노는 모습을 보기만 할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놀이에 동참할 생각이 없는 경우이다.

병행놀이(parallel)는 2-3명의 사람과 놀기는 하지만 뚜렷하게 목적의식이 있다기 보다는 의식과 목적 없이 어울리고 헤어지는 놀이의 경우이다. 여기에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할 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관계를 맺은 것같이 보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

연합놀이(associative)에서는 다른 이들과 노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놀이성이 나타난다. 2-3명이 나란히 놀이를 수행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행동을 조율하면서 논다. 그러나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서로 조율할 뿐이다. 연합놀이는 협동놀이로 가는 짧은 단계이다.

협동놀이(cooperative)는 놀이를 사회적 특징에서 보는 최종단계로 진정으로 감정을 나누면서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소속감을 가지며 실질적으로 집단에 참여하는 놀이이다.

2) 놀이 수행력에 따른 분류

Similansky는 어떤 놀이를 수행해 내느냐에 따라 놀이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네 가지는 기능적 놀이(Sensorymentor play), 구조적

Thomas, 1979), pp43-56

놀이(Construction), 극놀이(상징놀이:Symbolic play), 규칙에 의한 놀이(Games with rules)이다. 기능적 놀이는 실제 몸을 움직이는 놀이이다. 감각운동적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도구를 가지고 신체를 움직이거나 상황을 정해서 몸으로 놀이를 하는 것이다. 구조적 놀이는 무엇을 만드는 놀이이다.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대상과 사물을 조작하고 변용하고 창작하는 작업과정을 놀이로 본 관점이다. 극놀이-상징놀이는 상상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가장하기, 흉내내기, 역할행동을 통해서 자신과 상황 등을 표현하는 놀이이다. 규칙에 의한 놀이는 일정한 놀이의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에 따라서 놀이를 진행하는 것이다.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놀이에서 제외된다. 즉, 규칙에 따라서 놀이의 존속이 좌우된다.[29]

3) 인지능력에 따른 분류

Piazet는 실천놀이(Practice play), 상징놀이(Symbolic play), 규칙있는 게임(games with rules)으로 놀이를 분류하였다. 이런 Piazet의 분류를 토대로 Smilansky는 기능놀이(Functional play), 구성놀이(Constructional play), 상징놀이(Symbolic play), 규칙있는 게임(games with rules)으로 나누었다. Sutton-smith는 탐색놀이, 자기검증놀이, 모방놀이, Fowler는 더욱 세분하여 탐색 조작 놀이(Exploratory-manipulatory), 도구 놀이(Instrumental play), 구성-창의 놀이(Constructive-creative play), 상징놀이(Symbolic play),언어놀이(Image play)로 나누었다. Riddick은 탐색놀이(Exploratory-manipulatory), 구성 및 인지놀이(Constructive & cognitive play), 사회놀이(Social play), 상상놀이(Imaginative), 큰 동작놀이(Gross motor play), 언어놀이(Image play)로 분류했다.[30]

---

29) Similansky, S., The effect of sociodramatic play in disadvantaged preschool children (N.Y.:John Wiley and sons), 1968

4) 분류 기준에 따른 물리적 사이버공간의 놀이

(1) 물리적 공간의 놀이-감각 운동적 놀이와 실천놀이를 중심으로 모방놀이, 사회놀이, 규칙 있는 게임, 언어놀이, 도구놀이 등이 이루어진다.

(2) 사이버 공간의 놀이-구성인지놀이를 중심으로, 탐색놀이, 상상놀이, 상징놀이, 사회놀이, 언어놀이, 모방놀이, 규칙 있는 게임, 구성놀이 등이 이루어진다.

Ⅳ. 놀이성의 현대적 의미와 물리-사이버의 공진화

1. 놀이성의 현대적 요소와 분류

1) 놀이의 요소

로제 카이와[31]는 놀이성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것은 첫 번째, 운명이나 운에 대한 자신의 행운 시험 둘째, 비밀을 감추고 변장(꾸밈)하는 즐거움. 세 번째, 놀라는 즐거움 또는 놀라게 하는 즐거움, 네 번째, 반복과 대칭(Symmetrie)을 추구하는 것 또는 반대로 해답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무한히 발전시키는 즐거움 다섯 번째, 비밀과 수수께끼를 푸는 즐거움 여섯 번째, 모든 조합기술을 통해 얻어지는 즐거움 일곱 번째, 힘, 기교, 스피드, 인내력, 평형감각, 재치 등의 경기에서 겨루고자하는 욕망 여덟 번째, 규칙과 법률의 수정, 그것들을 존중하는 의무 그것들을 교묘하게 피하고 싶은 욕망 마지막으로 도취와 명정(酩酊), 황홀에의 동경, 관능적인 쾌락을 자극하는 패닉에

---

30) 하홍규, 유아를 위한 놀이감 평가 기준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3

31) 로제 카이와, 놀이와 인간, 이상률 譯, 서울: 문예출판사, 1994 pp105-106

의 욕망이다.

즉, 운시험, 변장-꾸밈, 놀람의 즐거움, 해답의 즉시 추구및 발전, 수수께끼를 푸는 즐거움, 조합(Construction)의 즐거움, 경기로 겨루고자 하는 욕망, 규칙과 법률의 준수와 위반의 묘, 도취추구라고 할 수 있다.

〈표1〉 로제 카이와의 놀이 범주

	문화현상에 있는 놀이	사회제도 안에 있는 놀이	타 락
아곤-경쟁(agon)	생활스포츠	사업상 경쟁, 경쟁시험 콩쿠르, 대회	폭력, 술책, 권력남용, 학살
알레아-운(allea)	복권, 카지노, 경마장	주식투자	점성술, 운세,
미미크리-모방 (mimicry)	카니발-축제, 연극, 영화제작, 감상 스타숭배	제복착용, 의식복장(유행쫓기), 표현을 하는 직업인의 행동.	광기(소외), 이중인물
일링크스-도취 (ilingcs)	등산, 공중서커스, 어드벤처놀이기구	권력다툼, 승진	알콜중독, 마약

*밑줄친 놀이는 긍정적인 놀이성임

2) 놀이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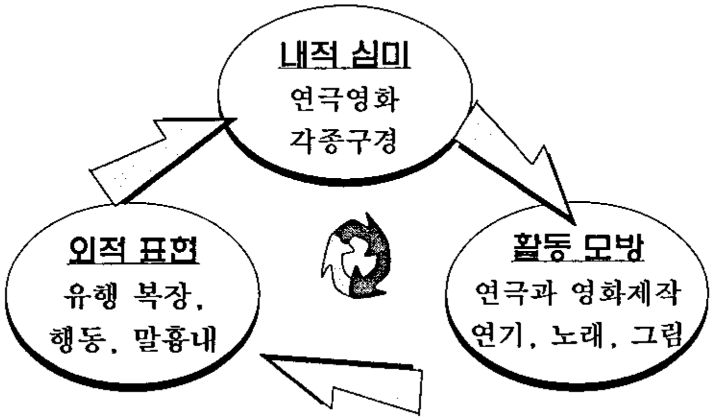
Callois[32]는 경쟁과 기회(우연성) 그리고 모방, 정화적 만족(아찔함)이라는 기준으로 어린이 성인 그리고 진보된 형태의 놀이를 나누었다. 경쟁은 그야말로 상대자와 경쟁을 하는 가운데 놀이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회(운)은 자신의 운을 시험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놀이유형을 말한다. 모방은 사람이나 상황을 모방함으로 인해서 얻는 놀이의 즐거움을 말한다. 정화적 만족이라는 것은 감동이나 도취에 속하는 유형의 놀이성을 말한다.

32) B. Collois, Man, Play and Games, New York: The Press, 1961

〈표2〉 Callois[33]의 놀이 분류

	경 쟁	기 회	모 방	도 취
아동	경주, 달리기	동전던지기 동전앞뒷면놀이 물고기잡기	역할놀이 환상 게임들 축제 전야의 복장	인도/차도의,가장자리걷기, 빙글빙글 돌기 공중회전, 덤블링,물구나무서기
성인	권투, 축구 보드(board) 게임들	사교적인 내기도박, 카드게임들	타민족복장하기 유행복장 격식 맞춘의상,	즐거운 드라이브 스키타기,행글라이딩,등산
진보된 형태들	대화나 직업적 스포츠,	경마도박과 같이 판돈 전부를 차지하는 게임들	연극 영화 각종 구경거리	요가 초월적 명상, 약물, 알콜

특히 모방에는 대중매체 문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로 나뉜다. 내적 심미 모방, 외적 표출 모방, 활동 모방 등 세 가지다. 내적 심미모방은 연극, 영화, 그리고 그 외 많은 구경거리를 보고 내적으로 즐기면서 만족을 느끼는 단계이다. 외적표현 단계는 다른 의상의 복장하기 또는 유행하는 의상과 장식 착용의 모습이 나타난다. 활동모방은 직접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사회적 역할 또는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모방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직접 소설과 만화를 쓰고 그리며 영화를 직접 만들고 또는 영화에 출연하거나 가수가 되어 노래를 부른다.



〈그림2〉 모방놀이의 3단계(순환구조)

33) B. Collois, Man, Play and Games, New York: The Press, 1961

2.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공진화

1) 일반적 양상

미국 월마트는 www.walmart.com을 설립해 탄탄한 유통망을 바탕으로 전자 상거래업에 뛰어들었다. 물리적 공간에 탄탄한 유통망이 없고는 사이버공간의 전자상거래는 무용지물이라는 논리대로 월마트는 월등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롯데그룹은 롯데 닷컴을 세워 실물유통망을 최대한 살리는 전자상거래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는 주도권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순수 인터넷업체에서 점차 물리공간의 유통망을 갖춘 유통업체로 넘어가고 있다.[34] 초기 전자상거래 개척자들은 웹사이트 디자인과 마케팅에만 신경을 썼다. 그러나 운송료가 수익을 위협하였고 기존의 물류센터가 전자상거래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 물류센터가 설계되어야 했다. 대형물류센터와 그에 따른 물리공간의 운송시스템이 들어서면서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대도시 근교의 부동산업체와 건설업체가 호황을 맞고있다. 건축경기 활성화와 함께 기자재 등의 생산이 촉진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간의 거래에 대하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물론 이 거래에 대한 네트워크 기술이 보편화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제도적 장치나 법률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35]

2) 사이버 공간의 놀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놀이는 앞에서 살펴 보았던 Callois의 견해와 로제 카이와의 분류를 변용해서 작성하였다. 모방놀이와 기회놀이, 경쟁놀이, 도취 놀이 등은 모두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컨텐츠와 관

---

34) 장승권외, 인터넷 벤처의 성공조건, 삼성경제연구소 2000 pp173-175

35) 이명준, e-비지니스@마케팅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디지털머니캡 2000 p82

련하여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놀이성의 특성상 여러 곳에 중복되는 것도 있다.

〈표3〉 사이버 공간의 놀이성

	아곤-경쟁	알레아-운	미미크리-모방	일링크스-도취
사이버 공간	전자오락, 각종게임,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지니스,싼물건	사이버 주식, 경품사이트, 채팅, 미팅	채팅, 영화, 뮤직비디오, 음악, 유머,사진,다중성격표현, 제작참여	웹서핑, 불건전정보탐색, 홈페이지제작
타락	전자오락중독, 해킹	직업투기꾼, 약취, 유인	욕설, 비난 남발	불건전정보중독, 웹중독, 해킹, 바이러스, 불건전 정보생산

특히, 로제 카이와의 분류에서는 타락이라는 분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적인 현상의 분류 기준을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이런 타락현상은 놀이성에서 배제되도록 해야한다. Callois의 견해는 놀이성을 인간의 내적인 면까지 확장해준다.

3) 놀이성의 물리적 공간/사이버 공간의 공진화

(1) 사이버 활동과 물리적 활동의 상관성

컴퓨터 통신을 하는 대학생들이 하지 않는 대학생들 보다 현실에서 적극적이라고 한다.[36] 또한 인터넷 설문 조사란에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7] 이것은 정상적인 경우 현실과 사이버공간이 밀접하게 상호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6) 김선업, 컴퓨터 매개 인간관계의 사회 심리, 정보화 동향 제 4권 3호, 1997 pp5-18

37) 이현우,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연구 한국언론학회-사회학회(엮음), 정보화 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서울: 세계사 1998

(2) 전자 게임과 실제 활동의 공진화

네티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게임과 오락이다. 세계 이용자의 56%가 오락과 게임을 하기 위해 접속하고 있다.[38]

전자게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게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친구가 적고 사이버 공간에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전자게임을 많이 하는 것이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 반대로 전자 게임을 하는 남학생들의 경우에 하나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정착되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게임을 즐기고 대화내용에서도 게임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의견, 감정교환을 한다. 그리고 서로 소유하고 있는 팩이나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관계를 두텁게 한다.[39] 이렇듯 전자오락은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과 '우리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40]

(3) 사이버 커뮤니티(Community)와 물리적 관계의 공진화

현재 어느 나라보다 남한의 사이버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www.daum.net)의 회원수가 세계 유례 없는 500만을 넘었는데 그 이유가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1] 현재 3만 5천 개의 동호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공동체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체 형성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고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 커뮤니티는 혼합형 공동체(Hybrid Community)이다. 즉,

---

38) 장승권외, 인터넷 벤처의 성공 조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0 pp138-139

39) 이춘재, 박혜원, 황상민, 전자 게임이용과 아동,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행동 성곡논총, 1995
권준모, 아동들의 전자 게임 사용실태와 태도,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Vol.12, July 1996 pp13-29

40) 전통놀이문화의 전자오락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p166

41) 매일경제, 1999년, 12월 7일자

온라인상의 공동체가 오프라인, 현실 공간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대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단지 아무런 진전 없이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유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발전적인 관계를 맺게되는 것이다. 이것을 넷연(net緣), 통연(通緣)이라 부르기도 한다.

(4) 쌍방향성과 물리세계의 변화

쌍방형을 통하여 시나리오, 촬영 과정에 네티즌과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영화의 지형이 바뀌고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영화의 주식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제작자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영화제작이라는 현실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 물리공간이 사이버 공간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최근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시나리오, 감독, 주연배우이다. 음반에서는 작곡, 작곡자, 매니저, 가수이다. 이들이 흥행의 90%이상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을 무시하고 단지 인터넷만을 통해 시나리오를 공모하고 배우를 섭외한다면 아마추어 수준의 작품만 나온다, 따라서 일단 물리 세계에서 흥행 요소를 갖춘 다음에 인터넷을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42)

V. 북한 사회, 문화의 특성과 놀이성의 방법적 가능성

1. 북한 사회, 문화의 특성과 인성

1) 언어적 이질성

남북한의 언어이질은 다원적인 사고와 일원적인 사고의 차이에서 비

42) 장승권외, 인터넷 지식벤처의 성공조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0

롯된다고 보여야한다.[43]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도구관의 입장이며 언어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언어를 통하여 인간의 사상의식을 개조시킨다고 보고 있다.[44] 이런 언어 이질의 대표적인 예는 통치자에 대한 존칭어의 과대사용어법에서 나타난다.[45]

서로 다르게 발음하거나 글자가 다른 명사가 2천 4백여 개에 이른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어휘, 맞춤법이 다르고 발음, 억양, 리듬의 음성학적 차이가 있다. 문법 용어에서 볼 때 '조선문화어문규' 1976년 판을 분석하면 문법용어 가운데 일치하는 것은 불과 42개에 불과하다고 한다.[46] 둘째로 남북한 어휘 차이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이것은 놀이성을 통한 사회문화통합에서 언어통합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한은 국어순화운동을 통하여 바꿈말을 제정하였고 북한은 어휘정리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단어 5만 단어를 제정하였다. 남한은 근대산업화와 개방화에 따라 많은 신조어가 생겼다. 한편 북한에는 체제와 이념에 따라 고의로 왜곡되기도 했다.[47]또 방언의 대량 문화어화, 말 다듬기 운동, 한자어에 독음 달기, 체제 및 제도의 차이에 의한 용어의 이질 등의 원인이 있다.[48]

2) 수동성-타율성(Heteronomy)

수동성과 타율성이라고 했을 때 주체사상과 수령-당의 지시에 의한 행

43) 장경모, '남북한 언어 변동에 관한 연구', "탈냉전시대에 부응하는 남북한 통합방향 모색 I·II ;남북한 실태분석의 모형 설정을 중심으로",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공안연구, 1992 pp221-222

44) 오기성, 남북한 문화통합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p232

45) 내외통신사편, 북한조감, 서울: 내외통신사, 1994 p148

46) 오기성, 남북한 문화통합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p233

47) 최호철, 남북한 언어비교: 분단 시대의 민족어 통일을 위하여, 서울 :녹진, 1989 pp282-289

48) 유동석, 북한의 언어생활,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북한사회의 이해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5 pp338-340

동만을 의미한다. 이런 사회문화적 요소는 북한 전반에 걸쳐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을 낳았다. 사회문화 전반에 이러한 성향이 내재화되어 주민 생활 속 깊이 근본적 요소로 강조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도 시민 사회에서처럼 개인의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계획과 동원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타율적이고 수동적으로 사회화되어 있다. 정치사상 교육의 반복성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이러한 수동성과 타율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에서 생산력의 저하를 가져온 경제침체의 원인이다. 이것은 사회문화 및 경제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49]생산력은 자발성과 능동성에 따른 개인들의 능력발휘와 그에 따른 창의적 요소를 얼마나 생산영역으로 활성화하는 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3) 배타성(Exclusivism)

북한은 배타성이 강한 사회문화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타주의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한 고통과 한국 전쟁당시의 미군에 의한 피해경험이다. 이것은 외부 사회 또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남았다. 이것이 주체사상과 결합되면서 배타주의가 매우 공고화된다. 이런 배타성에서는 주체사상이나 북한이외의 국가나 체제 그리고 가치관, 사상은 수용할 수 없게 된다. 자율성은 철저히 배제된다. 지배이념으로 교육받은 것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자기 집단 이외에는 배타적이고 적대적이다. 이러한 배타성을 바탕으로 북한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등을 철저히 위기 의식과 공포 분위기로 가두어 놓는다.[50]여기에는 다른 국가 사회

49)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주민의 인성연구, 1992 p87

의 사람에 대한 경계와 방어심리, 위기와 공포 의식이 존재하며 아울러 인민해방 내지 남조선 해방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한다.51)

4) 제한성:Restricted(사고, 활동의 제한성)

북한사회는 집단주의 원칙에 준거한 통제적 조직사회52)이다. 개인생활은 통제된다. 북한에서 직장생활은 개인 생활의 억제차원에서 통제된다. 이것이 북한 주민의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다. 북한에서는 직업 선택, 직장이탈의 자유가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여행이 헌법에는 자유롭게 규정되어 있지만(북한 헌법75조)실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53)

남한에서는 매스미디어의 개방성과 이에 따른 급속한 발전으로 외부 사회문화의 광범위한 유입이 빠르고 역동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폐쇄적인 체제의 특성상 외부의 광범위성이 제한된다. 문화 선택권에 있어서 남한이 자유 의사에 의해 특정문화를 선택하여 수용할 수 있는 반면 북한주민들의 선택권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54) 자율적인 사고와 자발성이 사회문화를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제한성이 사회문화를 유지하고 지탱한다. 북한은 폐쇄 사회(Iocked Society)이다.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하여 모든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로동당에 의해 독점55)되는 닫힌 사회(Closed Society)이다.

---

50) 박권식, 오늘의 북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신동아 7월호 1999 pp138-157

51) 이온죽, 주민통제에 이용되는 민족주의, 자유공론 11월호 1995 pp164-177

52) 이서행, '남북한 사회관 및 일상적 사회생활관련 가치관의 갈등양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통일후휴증 극복방안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235

53) 정석홍, 남북한 비교론, 서울: 사람과 사람, 1999 pp232-234

54) 차재호, 통일한국의 조화를 위하여 공성진외, 미리 가본 통일한국 서울: 동화 출판사 1994 pp129-131

55) 북한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1971 p569

5) 획일성(Conformity:다양성 저하)

북한사회체제는 이데올로기의 전위인 로동당에 의한 인위적인 획일화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는 집단주의적 이념에 근거하여 가치론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강요하고 있다.56) 그러므로 북한의 사회문화는 주체적 사실주의의 기초하에 종자론, 주체론 등에 입각하여 체제유지, 김일성 우상화 및 공산주의 인간개조를 위한 도구적 기능을 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북한의 사회,문화는 대부분 당규약이나 김정일의 교시에서 거의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획일성을 기초로 주체사상과 사회 정치적 생명론체 등의 개념으로 사회,문화적 목표를 수령과 로동당이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를 선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를 획일적으로 집행하여 왔다.57)

이런 상황에서 다원적이고 다양한 가치관과 사회,문화의 제 양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획일적인 문화만이 존재한다.

6) 권위주의-복종주의

표면적으로는 평등 지향적이지만 실상 안을 살펴보면 권위 지향적이고 복종 지향적이다. 북한은 자아를 버리고 당과 통치자에 복종하는 인간형이 사회문화의 기본이다. 수령과 당중앙 그리고 당의명령을 무조건 추종하는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해야한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해서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나타난다.58) 이는 권위에 대한 절대복종을 낳는다.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충성심

---

56) 권영민, '문화. 예술통합의 과제', 한민족공동체의 모색(I), 21세기위원회, 1991 11. p96

57) 오기성, '남북한 문화통합론-문화의 구조분석에 의한 통합과정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9 p232

58) 박완신, 新북한학, 서울: 서울프레스, 1997 pp328-329

을 보이지만 이것은 아랫사람에게는 복종주의의 강조를 낳는다.

이런 권위주의는 가부장적 문화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점과 수령-당-인민이라는 위계질서와 결합하여 존재한다.59) 북한의 이런 현상은 동조 과잉현상을 낳아 이것은 겉으로는 충성을 나타내지만 속으로는 충성심을 통한 자기방어기제를 형성한다.60) 북한에서는 이러한 권위주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상 인민들은 안으로 불만만 삭히고 복종한다.

버트란트 러셀은 사회의 권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 그 자체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개개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좋은 사회란 개인과 별개로 떨어져서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라고 말할 때 위험한 이유가 그 점에 있다고 한다.61)

따라서 북한의 당-수령-인민이라는 '국가 유기체설' 내지는 '생명체설'은 위험하다

7) 낮은 적응력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양한 가치 체계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 상황을 자신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헤쳐나갈 수 있는 비율이 높다. 이것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남북통일환경 내지 통합의 과정은 흡수 통일과정과 통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한이 북한의 사회문화에 적응하기보다는 북한이 남한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적응해야 하는 영역이 많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적응력은 남북교류협력과 통합 내지 통일과정에서 매우 중요

---

59)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주민의 인성연구 1992 pp72-73

60) 박완신, 新북한학, 서울: 서울프레스, 1997 p236

61) 버트란트 러셀, 권위와 개인, 이종익 譯, 전주대출판부, 1996 pp120-121

하다. 그런데 남한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촉하였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적응력이 높은 반면에 북한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62)이것은 탈북자들의 일련의 적응 과정에서 짐작하고도 남는다. 다양한 가치체계와 사회,문화적 배경지식과 경험이 적을수록 문화적 충격이 강하다. 문화적 충격이 강할수록 적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남북 사회,문화 통합에 따른 놀이성의 사회적 기능-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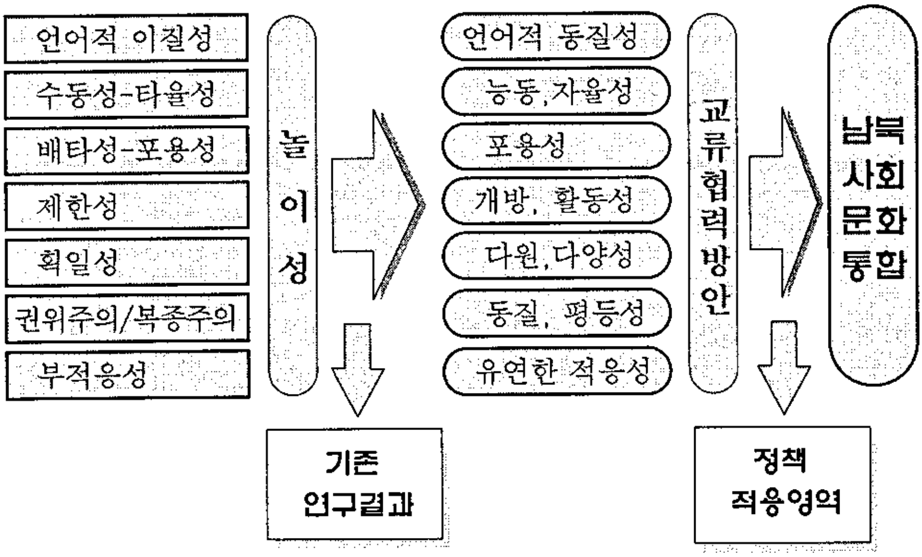
남북 사회,문화 통합과정에서 놀이성의 특성은 매우 긍정적이다. 사회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놀이성을 통한 통합성, 다양성, 지적체계발달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형성등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이것은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rank와 Theresa Caplan63)은 놀이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며 활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아의 성장을 돕는다고 한다. 놀이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던 활동이 활발하고 능동적인 행동으로 바뀌는데 역할을 한다. 놀이가 한 사람의 능동성과 활동성을 증가시켜주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수동성과 타율성의 요소를 경감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놀이성이 수동성과 타율성을 능동성과 활동성으로 촉매 작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H.Erikson에 의하면 놀이는 자율성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솔선성 학습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놀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자발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은

62) 차재호, '통일한국의 조화를 위하여 공성진외 미리 가 본 통일한국 서울: 동화출판사, 1994 pp129-131

63) Frank and Theresa Caplan, The Power of Play, quoted in Verna Hildebrand,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6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 놀이를 통해 정서적인 발달을 더 촉진하고 자아를 수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적활동을 조직화하고 활성화한다. 따라서 창조성과 문제 해결력이 증가된다. 북한 주민에게는 다양한 가치관과 사회,문화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는 놀이성이 획일성, 제한성을 다원성, 가치관의 다양성, 창조적 사고성으로 전환해 시켜주는 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64]



〈그림3〉 사회,문화통합적 기능과 정책

Hurlock[65]에 따르면 먼저 놀이는 사회성 발달에 촉매 작용을 한다. 자기 중심성을 줄이고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기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포용성 즉, 관용성, 협동성, 동질성, 그리고 함

64) E.H.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ion, 1950, pp194-901

65)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 1978

께 어울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즉, 폭넓은 사회성을 획득하게 된다. 배타성과 권위주의를 관용성, 동질성으로 바꾸어 주는데 놀이가 역할을 한다.

이 놀이 수행과정에서 의사 소통을 이루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의사 소통과정에서 서로 다른 말, 이질화 된 말이 공통화된 언어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된다. 그리고 이런 놀이성의 수행에서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에서 협동적 행동으로 비사회적 자아를 사회적인 인격형성으로 확대되며 심화하게 된다. 또한 이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놀이의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가치관과의 교류를 통해서 불안과 갈등의 요소를 제거한다. 불안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민과 사회문화의 낮은 적응력을 높은 적응력으로 전환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언어학적 이질성은 동질화로 이끌어 주며 수동성-타율성은 능동성-자율성으로 전환해주는데 긍정적일 것이다. 놀이성은 북한의 배타성을 지닌 인식과 생활 문화적 구조는 남(他人)과 다른 조직, 사회를 인정하는 포용성을 형성하고 배가시킨다. 제한성Restricted(사고, 활동의 제한성)은 사고의 개방성 제한된 활동 수준의 활동성을 보장해 주는데 일조할 것이다. 획일성Conformity(다양성 저하)으로 점철된 행태는 놀이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원, 다양성의 모습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사회전반에서 모순 표출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권위주의-복종주의는 동질, 평등성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놀이성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것은 북한 내에서도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 통일과정에서 발생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부적응성을 해소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Ⅵ. 남북한 놀이성의 단계별 공통성(共通性)

1. 물리적 공간의 놀이 - 전통,민속 놀이 : 물리적 공간에만 존재

1) 일반적인 민속놀이

북한에서는 가무놀이, 경기놀이, 겨루기 아동놀이라고 분류하고 있다.66) 다음은 남한공통 형태의 놀이를 북한의 놀이 기준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가무놀이에는 농악, 탈놀이, 옹헤야, 쾌지나칭칭나네, 강강수월래, 놋다리, 화전놀이, 마당놀이, 길쌈놀이, 다리밟기, 불꽃놀이, 등놀이, 꼭뚜각시 놀이 등이 있다.

경기(경쟁)놀이에는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활쏘기, 줄다리기, 돌팔매놀이, 쥐불놀이, 차전, 제기차기, 장치기 공치기, 격구 소싸움 등이 속한다. 겨루기 놀이에는 윷놀이, 장기, 바둑, 고누, 종정도 놀이 등이 있다.67)

〈표4〉 남북한 공통 민속놀이

가무(歌舞)놀이	농악, 탈놀이, 옹헤야, 쾌지나칭칭나네, 강강수월래, 놋다리밟기, 화전놀이, 마당놀이, 길쌈놀이, 다리밟기, 불꽃놀이, 등놀이, 꼭뚝각시
경기(경쟁)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활쏘기, 줄다리기, 돌팔매놀이, 쥐불놀이, 차전, 제기차기, 장치기, 공치기, 격구, 소싸움
겨루기 놀이	윷놀이, 장기, 바둑, 고누, 종정도 놀이

66)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서울: 대동 1994 p266

67) 김응길, 북한의 관혼상제와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국민윤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2.p69
김광언, 민속놀이-빛깔 있는 책들, 제 4권, 서울: 대원사, 1990.pp68-83

2) 세시(歲時)놀이[68]

세시놀이란 옛부터 해마다 되풀이되는 주기전승(週期傳承)적인 행사이다 이는 집단적 내지는 공통적으로 집집마다 촌락마다 민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월에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이 세배가 있다. 그리고 정초에 여러 가지 놀이를 한다. 지방마다 다른데 주로 널뛰기, 윷놀이 그리고 연날리기 자치기 등을 한다. 널뛰기는 여성들만이 하는데 주로 처녀들이 하고 주부들이 그 다음 순으로 참가한다. 이북지방은 정월이면 매우 춥기 때문에 윷놀이는 대부분 집안에서 하지만 간혹 밖에 멍석을 갈아 놓고 하기도 한다. 연날리기는 정초 세배가 끝나면서 만들어 날리기 시작하여 대보름날까지 많이 한다. 그러나 이른 지방에서는 십이월부터 시행하고 또 지방에 따라서는 삼월 경까지도 한다.(함북 회령지방)평양에서는 대동강변에서 많이 날리는데 정월 초하루 소년들이 많이 날리고 초이틀부터는 청장년층이 많이 날린다. 팽이치기와 얼음지치기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보름날에는 오곡밥을 해먹는다. 부럼을 깨먹기도 한다. 그리고 대보름날 저녁에는 달맞이를 한다. 황해도에서는 달을 맞으면서 횃불을 만들고 소원을 빈다. 깡통에 줄을 달고 구멍을 뚫은 후 불을 넣고서 들판에 나가서 돌린다. 강원도 지방에서 농악이 합세한 횃불싸움이 이루어진다. 2월 입춘에는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각 가정의 대문기둥, 대들보에 좋은 글귀를 쓰는데 이를 '춘축(春祝)' 또는 '춘방(春榜)'이라고 한다. 여기에 쓰이는 글귀에는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 가장 많이 쓰이고 '국태민안(國泰民安)'등도 쓰인다. 입춘날에 성찬을 차려먹고 집벽이나 문설주에 벽사진경(僻邪進慶) 부적그림을 붙이는 지방도 있다.(함남지방)

3월 '삼짇날'에는 진달래꽃을 따다가 화전(花煎)을 만들고 녹두가루로 화면(花麪)을 만들어 섞어먹는다. 4월에는 초파일 연등행사가 있었으나

---

68) 문화재관리국, 북한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97. 10. 25 pp109-125 참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초파일 해주시에서는 등대놀이를 한다. 8월이면 추석으로 성묘정도는 허용이 된다. 11월이 되면 동지가 온다. 동지에는 팥죽을 일부 쑤어먹고 있다.

〈표5〉 남북한 공통 세시놀이

월	세 시	세시 놀이	남 한	북 한
1	설 날	세배, 윷놀이, 널뛰기	전승	전승
	보 름	쥐불놀이,줄다리기,부럼깨기,오곡밥	전승	일부전승
2	입 춘	입춘 써붙이기	전승	일부전승
3	삼 진(3)	화전놀이	일부전승	일부전승
4	한 식	성묘	전승	전승
	석가탄신일	전등행사	전승	일부전승
5	단 오	창포머리감기, 씨름, 그네타기	전승	일부전승
7	백 종	농악놀이	일부전승	일부전승
8	추 석	성묘	전승	전승
11	동 지	팥죽	전승	일부전승

* 자료:동아출판사, 세계대백과사전,1985 pp335-336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북한의 민속,1991 p114
문화재관리국, 북한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97. 10. 25 pp109-125 참조

3) 아동놀이

남북한 아동들의 놀이가 서로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남북한 아동들은 매우 유사한 놀이들을 즐겨하고 있다.

남북한 아동들이 공통적으로 즐겨하는 하는 놀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69] 고무줄넘기, 공기받기, 구슬 맞히기, 굴렁쇠 놀이, 그네

69) 이효자, 남북한 어린이 민속놀이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6 pp12-25

뛰기, 까막잡기(봉사, 소경놀이), 꼬리잡기, 꽃싸움과 풀싸움, 다리세기(다리셈 놀이), 돌아잡기, 두꺼비 집짓기, 딱지치기, 땅따먹기(땅재먹기), 사방치기, 비석치기, 무릎닭싸움, 바람개비돌리기, 장치기, 제기차기, 진놀이, 칠교놀이(유객도), 팽이치기 등이다.

2. 매체 놀이-매스미디어 놀이성 : 일방향적 놀이(半사이버 공간놀이)

일방향적 놀이성으로서 사이버 놀이성이라고 할 수 없다. 물리 공간의 반영이다. 따라서 공진화 양상도 북한도 남한과 같이 가요(노래방), 영화, 만화영화, TV라는 매체문화를 향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 위주로 남북 대중매체 놀이성의 공통성을 살펴본다.

1) 인기배우 문화

연예인을 북한에서는 대중예술인이라고 부른다. 남한에서처럼 북한에서도 유명 대중예술인들은 젊은 세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70] 청소년들 사이에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있고 이들에 개한 흠모는 대단하다고 한다. 인민배우는 그 인기만큼 일반 노동자보다 서너 배인 300-50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민배우는 '꽃파는 처녀'의 홍영희다.[71] 그런데 북한에서 현재 오미란은 가장 인기 있는 영화배우로 젊은이들에게 그 인기정도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한다.[72]

2) 가요

북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룹으로 서태지와 아

70) 변진홍, 평양에 부는 바람, 사람과 사람: 서울. 1993. pp49-55.
71) 이병관, 어? 그래!-북한편, 서울:사람과 사람들, 1995 p76
72) 박성희, 북한 청소년의 생활, 공보처. 1995. p152.

이들에 비견할 만한 '보천보 전자악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3] 북한 성인들은 '화면 반주 음악실'이라는 노래방을 통해 컴퓨터의 위력을 실감하고있다.[74]북한에서도 북한청소년을 위한 전용 노래방이 있다. '화면반주 음악실'로 불리는데 평양에 이것이 250대규모로 설치된 것은 1990년대 초로 알려지고 있다. 영화가요는 인기가 많다.[75] 영화노래 중에는 주인공의 화면세계를 그대로 읊은 노래들이 있다. 젊은이들은 인위가 없는 노래, 부담이 없는 노래라며 골라 부르고 있다.[76]

3) 영화

북한에서 여가를 위해 가장 보편적인 것이 영화감상과 TV시청이다. 영화는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월 1-2회 의무상영, 영화관은 북한전역에 1천여 개에 이른다. 볼만한 영화관이 왔다는 소문이 돌면 영화관 앞에는 아수라장이 된다. 딱딱한 교양물과 뉴스보다는 외국영화 만화영화, 연속극 순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77]영화표는 40전에서 1원 사이 이며 영화 상영장에는 암표가 있다. 북한에서는 1년에 약 30-40편의 영화가 제작 상영된다. 북한 전역에는 1천여 개의 영화관이 있다. 북한은 1992년 한 해만 10여 개의 영화관을 세웠으며 1993년도에는 16개의 영화관계획을 세우는 등 이 부분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영화관에는 영화상영뿐만 아니라 가극, 연극, 교예(서커스)공연도 할 수 있는 복합문예시설이다. 고정된 영화관 대신 '이동하는 영사대'라는 영화관 것도 있다.[78] 영화관객의 70%가 청소년이라고 하며 이들

---

73) 경향신문, 1996년, 1월, 29일자

74) 전자신문, 1998년, 9월, 22일자

75) 이병관, 어? 그래-북한편, 서울: 사람과 사람들, 1995 pp105-106

76) 여만철외, 흰 것도 검다-귀순자 수기 모음집, 다나: 서울, 1996, p153.

7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민족의 동질성 회복',부산대학교 출판부:부산,1998.p203.

78) 이병관, 어? 그래-북한편, 서울: 사람과 사람들, 1995 pp98 -103

은 월 2-3편의 영화를 본다고 한다.[79]덧붙여 남한에서는 1년 동안 1편 이상 영화를 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6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평균 관람수는 3.2%이다.[80]95%의 한국인은 1년에 한 편 이상의 비디오를 보며 1년에 13편의 비디오를 보고있다.[81]

4) 만화영화

예술영화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영화는 만화영화이다. 1960년 '금도끼와 쇠도끼'라는 최초의 만화영화를 제작한 이후 지금까지 300여 편이 넘는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왔고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등에 수출할 정도의 수준이다.[82]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산하에는 아동영화 창작단을 비롯하여 지형영화 제작단, 만화영화제작단 등이 있다. 아동영화는 대부분이 만화 영화인데 북한에서 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은 만화영화, 지형영화, 인형영화이다. 셀(Cell) 제작방식인 북한의대표적임 만화영화에는 연작시리즈인 '영리한 너구리', '소년장수'를 비롯하여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나비와 수탉' 등이 있다. '영리한 너구리'는 북한 만화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스키경기, 높이재기, 후보 선수, 불을 일으키는 얼음, 장애물 경기, 순회우승컵, 지름길, 잘못 안 사건, 부정선수, 결승전, 야구경기 등의 이야기들이 10-15분 형태로 나뉘어져 연결되어 있다. 인형영화는 스톱모션기법을 쓰는데 '용감한 아동단원', '손해본 너구리'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지형영화는 말 그대로 종이인형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다. 동작과 인형의 변형을 통해 촬영하는데 '버들그네', '꾀있는 개미'

---

79) 박성희, 북한 청소년의 생활, 공보처, 1995. p145.
80) 서울마케팅 리서치 1998.8
81) 서울마케팅 리서치 1998. 8
82) 박성희, 북한 청소년의 생활, 공보처, 1995. p147.

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꾀있는 개미'는 '영리한 너구리'와는 달리 인물 구성, 플롯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83]

우리 나라의 춘천에서 최근 만한 만화 영화 3편이 상영된 적이 있다. 2000년 7월에는 남한에서 북한의 SF물인 '불가사리'가 상영되었다.

5) 텔레비전(TV)

북한 전역에서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해진 것은 70년대 중반이라고 한다. 칼라텔레비전은 우리보다 7년 정도 앞선 1974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방송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10-11시까지이며 영화, 현지 방송, 방문기 등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보도프로그램이 15%, 교양좌담회와 드라마가 각각 1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아동방송, 음악, 체육 등의 순서로 구성된다. 중앙TV는 일요일 아침 10시에 청소년을 위한 에어로빅을 방영하고 있다. 북한의 코미디는 주로 만담형식의 코미디로 알려지고 있다. 단막극 드라마는 북한에서 매우 인기있는 프로그램인데 70년대 말부터 10여년 간 방영된 '우리 집 문제'라는 드라마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바 있다.[84] 남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은 TV 시청 시간비율이 낮은데 이 이유는 편성비중이 남한과 다를 뿐만 아니라 남한만큼 텔레비전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만사항으로 북한방송이 프로그램이 단조롭다고 말하고 있다.[85] 중요한 것은 그들도 텔레비전을 통해 매체문화 접촉하기를 즐겨하고 있다는 것이다.

---

83) 전영선, 북한 아동영화의 대가-김광성, 손종권, 北韓 1999 6월호 pp162-171
84) 이병관, 어? 그래-북한편, 서울: 사람과 사람들, 1995 pp107-108
85)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북한주민의 문화향수 실태 연구, 1996 p69

〈표6〉 북한 주민의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시간 비교 자료
: 북한주민의 문화 향수 실태 1996

텔레비전 시청시간(북한주민)	평 일	라디오청취시간-평일	남한	북한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	18.5	라디오를 듣지않는다	32.0	37.3
30분 미만	3.2	30분 미만	14.9	2.2
30분 -1시간	6.4	30분 -1시간	**17.9**	9.6
1시간-2시간	**43.9**	1시간-2시간	16.1	**43.6**
2시간-3시간	**18.8**	2시간-3시간	7.8	6.1
3시간-4시간	3.1	3시간-4시간	3.8	1.0
4시간-5시간	4.1	4시간-5시간	2.8	0.0
5시간-6시간	0.0	5시간-6시간	4.9	0.3
6시간이상	0.0	-	-	-
계(명)	100.0(134)	계	100.0	100.0

6) 라디오

1995년 현재 북한에는 4종류의 라디오 방송이외에 10여 개의 지역 방송국과 10여 개의 유성방송국 200여 개의 군,구역 방송국과 4,300여 개의 방송실이 있다. 북한의 라디오 방송체계는 주로 유선방송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양에서 각 도, 시, 군까지 연결되어 공장, 일반 기업소와 협동농장의 기업소, 협동농장의 유선방송을 통해 각 가정의 스피커로 중앙방송을 중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라디오 방송채널은 하나이다. 남한은 종교방송,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 교통 방송 등 다양한 라디오 방송과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청취시간을 보면 남한보다 북한이 오히려 많다. 북한 주민이 주로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음악, 가극을 포함하는 예술 프로그램이다. 이는 남한사람들이 클래식, 팝송, 가요 국악을 주로 듣는 것과 유사하다.86)

〈표7〉 주로 듣는 프로그램 순위-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3

	남한	북한
1	**음악 (클래식,팝송,가요,국악)**	**예술프로그램 (음악, 가극)**
2	뉴스	보도
3	생활정보	방송극
4	스포츠	정치교양
5	교양	문학
6	교통안내	교육

3. 사이버 공간의 놀이-전자 게임 : 쌍방향적 놀이성 발생(사이버 공간 등장)

북한의 정보화는 남한의 정보화 수준에서 매우 미달되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과 맹아론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이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이 분야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학생들은 전자게임을 통한 물리공간과 사이버공간의 공진화를 겪고 있다. 다만 북한에서는 네트워크(인터넷)를 허용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1) 북한의 정보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업종업대학, 평양전자계산기단과대학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1982년 이후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각급 대학의 전자공업부문의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하였다. 고등중학교에서는 전자공업기초에서 컴퓨터 이론이 교육되고 있다.[87] 최근 북한

86)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북한 주민의 문화향수 실태, 1996 pp69-71

87)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공저, '통일. 북한 핸드북', 평화문제연구소, 1997. p267.

에서는 소프트웨어분야에서 '파스칼'이나 '볼랜드 C++등 외국 프로그램들을 대체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선 그만큼 볼랜드나 파스칼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다.[88] 북한은 우리가 1996년에 개발한 '지문감식열쇠'를 지난 1994년에 개발했다. 당시 「22차 제네바 국제 발명 및 새기술 새제품 전시회」에 출품하여 금메달을 받았다. 그 제품은 당시 외국산제품의 성능을 능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장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사람의 얼굴을 컴퓨터 화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의학프로그램도 개발했다.[89]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90년 9월 한글편집과 인쇄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단군(96년 개발)', 다국어 문서편집프로그램 '평필', 출판물 편집프로그램 '청류', 건설 설계프로그램, '백두산' 피복설계프로그램 '산악', 등을 개발하여 왔으나 기술면에서 한국의 80년대 중반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평필'과 '청류'는 92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PC-Show에 출품되기도 하였다.[90]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컴퓨터 경진대회도 열리고 있다.[91]

2) 북한의 전자 게임

전자오락실은 1992년 6월 최초로 평양 학생궁전 안에 설치했다. 약 2백 30평으로 한꺼번에 4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오락실은 오락기구 1백대를 비롯해 기타 전자오락실 설비 수십 대가 있다.[92]평양체육관에는 600여개의 전자 오락 기기를 갖추어 하루 5000여명의 청소년이 즐기고

---

88) 北韓, 1999년 4월호 p227
89) 이재승, 북한의 민수분야 과학기술수준, 北韓, 1998 11월 pp56-60
90)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통일", 통권 199호,1998.4. p64.
91) 내외통신, 1998년 11월 25일자.
9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민족의 동질성 회복',부산대학교 출판부:부산.1998.p205.

있다.93)청개구리 같은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94)

3) 남한의 정보화 수준

인터넷 도메인 수와 벤처기업의 수는 2년 전과 비교하여 2000%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인터넷 하부구조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휴대폰의 보급율은 이미 2,500만대를 넘어 국민 두 명중 한 명이 보유하고 있다.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전국에 1만 5000개의 PC방이 생겼다. 이는 고속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을 의미한다. 남한은 주요 광케이블 생산국중의 하나이다 1995년부터 진행되어 온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실효를 거두어 각종 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저가로 제공되고있다. 1998년 하반기 부터 나온 두루넷의 케이블 모뎀방식의 고속서비스를 기점으로 1999년 하나로 통신과 한국통신이 ADSL방식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경쟁을 벌이면서 통신인프라는 좋아지고 있다 현재 8Mbps 급 이상의 초고속 통신서비스가 월 3만 원대의 가격에 제공되고있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특유의 아파트 문화에 힘입어 이러한 인프라는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95)

	1997년 말	1999년 말	증가율
인터넷 도메인 수	8,045	207,000	2,473%
이동전화 가입자수	683만	2,344만	242%
PC통신 가입자수	342만	1,000만	192%
PC보급대수	631만	1,000만	58%
벤처 기업 수	204만	4,934	2,418%

*자료: 조선일보, 2000년 2월 25일자 14면

93) 한용원, 북한학, 오름: 서울. 1998. p279.

94) 박성희, 북한 청소년의 생활, 공보처. 1995. p140.

95) 정보통신부, '통계로 본 정보통신 정책 2년', 2000년 2월 24일

4) 전자 게임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지난해 2조7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실적은 전년대비 무려 48.3%나 증가한 것으로 인터넷 PC방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출현해 단숨에 6000억원이라는 거대시장으로 발전해 전체 시장규모를 키운 데다가 온라인게임이 전년대비 200% 이상 성장하는 등 게임소프트웨어 시장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온라인게임 시장은 200억원 규모로 전년의 61억 원에 비해 무려 227%라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인터넷PC방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위성, 케이블TV망, 고속모뎀 등을 이용한 초고속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향후 국내 온라인시장 규모는 2000년 420억원(전년대비 110% 성장), 2001년 710억원(69%) 등을 거쳐 200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96]

5) 네트워크 놀이성의 다양화

다음(www.daum.net)의 회원수가 세계 유례 없는 500만을 넘었는데 그 이유가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97]이런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놀이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메일과 채팅은 이미 젊은 사람들에게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의미로 풀이되기보다는 놀이성으로 풀이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영화, 음악, 영상비디오, 만화, 애니메이션을 향수하고 있다.

---

96) 국내 게임 시장 규모 2조7000억 원, 전자신문 2000. 2. 9

97) 매일경제, 1999년, 12월 7일자

Ⅶ. 남북한 공통 놀이성을 통한 융화적 3단계 사회, 문화통합방안

1. 일반적인 방안

1) 물리적 놀이 측면

남북에서 공통적으로 행해지고 있거나 일부 존속해 오고 있는 민속놀이, 세시놀이아동놀이를 복원·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비단 물리적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체문화 그리고 사이버 공간 문화의 밑바탕이며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2) 매체 놀이적 측면

비정치성 방송 프로그램 교류에 주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속놀이, 세시놀이 아동놀이의 남북한 교류를 방송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교류의 현장은 방송으로 현장 중계하거나 녹화 방송하여 온 국민의 관심과 화합,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3) 사이버 공간측면

(1) 북한 정보화 지원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남한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프로그램개발 기술수준은 높은 편이다. 삼성이 프로그램 제작제휴를 북한에서 시작한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다. 향후 세계의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통일한반도의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하면 북한의 정보화를 지식정보화로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정

보화 인프라 구축 지원을 컨소시움 내지는 정부특별기금마련,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2) 물리적 공간 놀이의 프로그램화

전통 민속, 세시 놀이, 아동놀이 등 물리적 공간에서 남북 공통으로 행해지는 놀이를 프로그램화하여 이들 사이버 공간에서 즐기도록 하고 이것이 향후 실제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실제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도록 한다.

2. 융화적 3단계를 통한교류 통합

이 세 단계가 동시 다발적 내지는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한 분야부터 첫 단계를 밟아야 한다.

1) 물리적 공간의 놀이 교류

(1) 경기(겨루기)대회

경기(경쟁)놀이에 속하는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활쏘기, 줄다리기, 팔씨름 등과 겨루기 놀이에 속하는 윷놀이, 장기, 바둑, 고누 등의 민족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명칭은 '남북 한민족 그네뛰기 대회', '한반도, 한민족, 한나라 윷놀이 경연대회' 등의 명칭을 붙인다. 일상 서민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2) 세시놀이

남북의 사람들이 세시 때마다 오가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월 입춘에는 북한에서 보낸 글귀를 남한의 가정에 붙이도록 한다. 이것은

북한 전역에서 모여진 것이 남한의 각 가정에 전달되는 것이다. 또는 남한의 각 가정에서 쓰여진 것이 북한에 전달될 수도 있다. 다른 예를 들면 5월의 창포로 머리감기, 그네뛰기, 정월의 윷놀이를 행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대보름에는 쥐불 놓기를 한다. 그런데 이 쥐불놀이의 경우 남한의 경상도 사람이 북한 함경도에 가서 쥐불을 놔주고 함경도 사람이 경상도에 쥐불을 놓게 하는 등 서로 연계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은 생활 문화 속의 친근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리라 보여진다.

(3) 아동놀이의 교류

공기놀이, 각시놀이, 숨바꼭질, 줄넘기, 말타기 등 남북한 아동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즐기고 있는 놀이를 서로 교류하게 해서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감을 형성하고 통일한국의 사회 구성원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별 지역별 이런 놀이를 열어 보는 것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2) 대중 매체놀이성의 교류

(1) 사상 이데올로기가 배제된 놀이성의 교류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매체문화를 향수하고 있다. 다만 여건상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불만이 많은 실정이며 많이 보는 프로그램은 남한과 같이 드라마, 영화, 가요 등의 문화적 내용의 프로그램이다. 영화, 아동영화, 만화, 영화, 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의 교류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비정치적인 프로그램이 북한에서 상영되도록 힘써야한다.

(2) 정치성과 경제성이 배제된 학생교류

21세기 통일 한국의 주역인 학생들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기성세대의 논리가 아니라 그들의 논리이어야 한다. 단순한 기성문화나 고급예술의 흉내수준이 아닌 그들의 일상적인 내용을 담은 창작작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용, 음악, 영화 만들기, 그림 그리기, 연극하기, 만화 만들기 같이 공동 창작하는 교류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당장에 사람이 오가는 것이 힘들다면 제 3자를 통한 작품의 교환도 필요하다. 또 제 3국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3) 사이버 공간 놀이성 통합 방안

(1) 단계별 추진사항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단계 북한 수준에 맞는 전자 게임의 교류, 게임의 공동제작생산 또는 개발이 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한반도 게임경진대회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북한에서 개발된 청개구리 같은 게임으로 경진대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는 남북한 청소년들이 직접 게임 제작 운영의 교류 협력할 수 있어야 하다. 예를 들어 학교의 학급, 대학교의 동아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3단계는 네트워크를 통한 게임, 사이버 커뮤니티(Cyber Community) 형성 단계이다. 이 단계는 본격적인 네트워크를 염두 해두고 전개된다. 북한의 정보화 수준이 개방체계를 가지게 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4단계는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공진화 또는 통합 또는 통일 단계이다. 인터넷과 같이 북한이 외부에 대해 네트워크를 완전히 열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대화와 게임 등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것은 물리적/사이버의 공진화를 이룬다.

(2) 추진시 고려 사항

로제 카이와는 놀이의 타락 현상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앞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타락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모든 단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기 쉬운 놀이성의 타락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이 타락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놀이의 타락현상에 대한 대처는 전자 상거래의 물리적 물류망 그리고 정보관리의 암호/보안 문제만큼이나 중요하다. 순기능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3. 전반적인 고려사항

1) 전통놀이, 세시놀이, 아동놀이의 경연 대회 및 축제놀이를 컨텐츠 형태로 인터넷에 올려 통해 넷망(network)을 타도록 해야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우리 한민족 그리고 다른 민족과 국가들도 이런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동포, 후손들이 이것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2) 물리적 공간 그리고 매체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남북한의 주민 아동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비정치, 탈이데올로기 내용의 놀이성 프로그램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현재 프로그램제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프로그래머 등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심리학자, 아동학자, 문화 학자들도 이 참가 시켜야한다.[98)]
4) 전통놀이 게임 제작에 드는 비용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그리고 정보통신부가 나누어 조달해야한다. 또한 가능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해 컨소시움 형태도 구성토록 해야 한다.

---

9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전통놀이문화의 전자오락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994 8

Ⅷ. 결　　론

인류의 사회문화에는 놀이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재한다. 놀이성은 개인화되고 분절화된 사람을 화합하고 인간 관계 망을 두텁게 해주는데 활용되어온 것이 인류의 역사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현재에도 많은 놀이성들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기존의 관계를 돈독히 해주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의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현상이라는 사이버 공간에도 놀이성은 존재한다. 미래에도 놀이성은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도 사이버공간을 이끌어 가는 것은 이런 놀이성이다. 남북한 사회문화에도 공통적으로 놀이성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에도 존재한다.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낮지만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북한은 비록 산업시대에는 뒤졌지만 그만큼 정보화를 통해 지식정보화를 대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정보화의 핵심은 우수한 인력이라고 할 때 북한이 역시 긍정적이다. 이런 점들에서 북한의 정보화는 발전 가능성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에서도 이 과정에 맞춰 사이버 공간의 놀이성이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이미 낮은 단계이지만 이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21세기 통일한국의 사회문화중 대표적인 것은 사이버 공간 문화일 것이다. 이것은 21세기 통일한국의 경제체제가 지식정보가 경제적 이윤의 원천이라는 지식정보경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도 사이버 공간의 놀이성은 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사이버 공간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과 함께 공진화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이 물리적 공간을 진화시키고 물리적 공간이 사이버공간을 진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놀이성 또 물리적 공간과 함께 진화한다 즉, 현실의 사람들을 문화적인 유대로 이어주고 사회화와 인간 관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 놀이성의 진화는 사이버공간의 확장과 심화를 낳고 있다. 이것은 사이버 공간의 놀이성은 남북한의 물리적 공간을 진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진화시킨다는 것은 새로운 방향 즉, 화합과 통합의 진행을 유도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경제적인 이익과 타산보다는 남북한 주민의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놀이성을 살펴보았다. 무대나 고급 예술보다는 일상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 통합에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과거의 전통에 대한 향수를 바탕으로 한 복고 지향적 내지는 한쪽이 한쪽의 사회문화를 통합하려는 현재 지향적인 사회문화통합방안 대신 미래지향적인 사회문화형성을 주 관심 사항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민속, 세시놀이, 남북한 아동놀이의 계승 발전과 창작 작업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 눈높이에 맞는 방송과 정보화의 지원과 교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벌어질 수 있는 놀이의 타락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타고났다.99) 이성은 만능이 아니다. 사회와 문화는 이성과 합리성이 전적으로 움직이고 형성·진화시키지는 않는다. 호이징하는 놀이가 문화이전에 존재한다고 했으면 인류문화는 모든 것이 문화라고 한 바 있다. 합리성과 놀이성의 합치점이 인간(人+間)의 삶과 문화가 융합하는 곳이다.

---

99) H.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N.Y.:McMillan, 1976). pp. xxv-xxvi; J. March and H. Simon. Organizations(N.Y.: John Willey and Sons. 1958) pp139-141

【 참고문헌 】

김광언, 민속놀이-빛깔 있는 책들, 제 4권, 서울: 대원사 1990

김광웅, 아동생활지도, 서울: 학문사 1982

박완신, 新북한학, 서울: 서울프레스, 1997

변진홍, 평양에 부는 바람, 사람과 사람; 서울. 1993.

서봉연, 이순형, 발달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1983

여만철외, 흰 것도 검다-귀순자 수기 모음집, 다나; 서울. 1996.

오기성, 남북한 문화통합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9

이명준, e-비지니스@마케팅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 서울: 디지털머니캡. 2000

이병관, 어? 그래!-북한편, 서울: 사람과 사람들. 1995

이순자, 놀이의 심리 서울: 형성출판사 1984

장승권외, 인터넷 지식벤처의 성공조건,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0

정석홍, 남북한 비교론, 서울: 사람과 사람, 1999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서울: 대동 1994

한용원, 북한학, 오름; 서울. 1998.

J. Huizinga, 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 권영빈 譯, 서울: 홍성사 1983

Jantsch, Erich, 자기 조직하는 우주, 홍동선 譯 서울: 범양사, 1989

Herbert Marcuse, Eros & Civilization, 박경일 譯, 서울: 시사영어사 1993

로제 카이와, 놀이와 인간, 이상률 譯, 서울: 문예출판사, 1994

버트란트 러셀, 권위와 개인, 이종익 譯, 전주대출판부, 1996

구대회, 유아의 놀이와 사회성 발달에 관한 고찰, 재활과학연구 제 8권 1 호 1988

권영민, '문화. 예술통합의 과제', 한민족공동체의 모색(I), 21세기위원회 , 1991 11.

권준모, 아동들의 전자 게임 사용실태와 태도,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Vol.12, July 1996

김응길, 북한의 관혼상제와 세시풍속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국민윤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2

김선업, 컴퓨터 매개 인간관계의 사회 심리, 정보화 동향 제 4권 3호, 1997

김인수, 자유선택놀이 학습이 과학적 추리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논문집

김재은, 김태연, 사회화의 작용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30 1977

박권식, 오늘의 북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신동아 7월호, 1999

박성희, 북한 청소년의 생활, 공보처. 1995.

유동석, 북한의 언어생활,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북한사회의 이해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5

이서행, '남북한 사회관 및 일상적 사회생활관련 가치관의 갈등양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통일 후휴증 극복방안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이온죽, 주민통제에 이용되는 민족주의, 자유공론 11월호 1995

이재승, 북한의 민수분야 과학기술수준, 北韓, 1998 11월

이춘재, 박혜원, 황상민, 전자 게임이용과 아동,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행동 성곡논총. 1995

이현우, 인터넷 이용자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연구 한국언론학회-사회학회(엮음), 정보화 시대의 미디어와 문화, 서울: 세계사 1998

이효자, 남북한 어린이 민속놀이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7 6

장경모, '남북한 언어 변동에 관한 연구', "탈냉전시대에 부응하는 남북한 통합방향 모색 I II :남북한 실태분석의 모형 설정을 중심으로",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공안연구, 1992

전영선, 북한 아동영화의 대가-김광성, 손종권, 北韓 1999 6월호

차재호, 통일한국의 조화를 위하여 공성진외, 미리가 본 통일한국 서울: 동화 출판사 1994

최영하, 정신박약아의 발달과 놀이, 특수아동교육, 제 11권 8호 1984

최호철, 남북한 언어비교: 분단 시대의 민족어 통일을 위하여, 서울 :녹진, 1989

하홍규, 유아를 위한 놀이감 평가 기준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민족의 동질성 회복',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동아출판사, 세계대백과사전,1985 pp335-336

문화재관리국, 북한민속종합조사보고서, 1997. 10. 25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주민의 인성연구, 1992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북한의 민속,1991 p114

정보통신부, '통계로 본 정보통신 정책 2년', 2000년 2월 24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전통놀이문화의 전자오락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994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평화문제연구소 공저, '통일. 북한 핸드북', 평화문제연구소. 1997.

내외통신사편, 북한조감, 서울: 내외통신사, 1994

내외통신, 1998년 11월 25일자.

북한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1971

서울마케팅 리서치 1998 8

北韓, 1999년 4월호

경향신문, 1996년, 1월. 29일자

매일경제, 1999년, 12월, 7일자

전자신문, 1998년, 9월, 22일자

전자신문 2000년. 2월. 9일자

조선일보, 2000년 2월 25일자

C. I, Standistrom, The Psychology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Penguin Books Ltd, 1966)

B. Collois, Man, Play and Games, New York: The Press 1961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W.W. Nortion, 1950,

E. H, Hurlock, Child Development, Tokyo: Mcgrow-Hill Inc., 1972

F. Frobel, Chief Writing on Education, (Trans by Fretcher, &Welton, London, Arnold, 1912)

M.J.Ellis, Why people pla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McCarthy, Melodie A. Fundamental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Massachusetts: Winthrop Publishers, INC., 1980

H. Spencer, Principles of Psychology, (London: n. p, 1855)

M. Lazarus, About the attraction of play, (Berlin: F. Dunmeler, 1883

K.Groos, The play of Man, New York :Appleton 1901

G.S. Hall. Youth. New York: Appleton. 1909

O. Weiniger. Play and Education. (Spring 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1979). pp43-56

Jantsch. Erich. Design For Evolution: Self-organization and Planning in the Life of Human system. New York: Braziller 1957

Jantsch. Erich. Evolving image of man:dynamic guidance for the mankind process. in: Jantsch and waddington. eds 1976

Jantsch. Erich and waddington. Conrad. eds Evolution and Consciousness: Human Systems in Transition. Reading. Mass.. London and Amsterdam: Addison-Wesely 1976

Jantsch. Erich. The Origin of Consciousness in the Breakdown of The Bicameral Mind. Boston: Houghton-Miffin 1976

S. Millar. The psychology of play (New York : Jason Aronson.). 1974

Similansky. S.. The effect of sociodramatic play in disadvantaged preschool children (N.Y.:John Wiley and sons). 1968

Hurlock. E. B. Child Development. New York: Mcgraw. 1978

Frank and Theresa Caplan. The Power of Play. quoted in Verna Hildebrand.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76

S.Millar. The psychology of play. New York: Jason Aronson Inc.. 1974

H.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N. Y.:McMillan. 1976).

J. March and H. Simon. Organizations(N.Y.: John Willey and Sons. 1958)

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연구

- 무선이동통신 서비스의 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정 용 호

〈목 차〉

【요약문】
Ⅰ. 서 론
Ⅱ. 기본 전제
Ⅲ. 남북한 정보통신 동향
Ⅳ. 통일에 대비한 무선정보통신서비스의 시장 전망과 사업자 동향
Ⅴ.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방안
Ⅵ. 결 론

【 요 약 문 】

정보화 사회의 구축은 이미 필사적인 생존 전략적의 차원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은 정보화 사회와는 한참 거리를 두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요즈음 들어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놀랄만한 개방의 몸짓을 감안할 때 조만간 북한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남북한간의 20년후 통일을 전제로 무선이동통신에 초점을 맞춰 교류의 방향과 시장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환경만 조성된다면 북한에 대한 적극적 투자유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대북 투자비용이 구상무역 등을 통해 조달된다면 북한에 대한 무선이동통신 서비스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이런 바탕 위에서 북한의 무선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교류가 이루어 질 때 통일과정에서 통일시 발생할 수도 있을 혼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　　론

1. 문제 제기

남북이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우리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은 아직 요원한 듯하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던 독일에서 통일이 예상외로 급속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에게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최근 온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믿음에 결정적인 확신을 제공하였다. 특히 다른 어느 분야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경제 부문의 경우,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이미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이런 활발한 교류와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곳곳에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는 물론 손쉽게 처리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장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들이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정보통신 분야 역시 그러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됐던 냉전 체계가 붕괴되고 소위 'globalization'으로 상징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새로운 체제로 바뀌고 있다. 또한 오늘날 세계는 산업 사회에서 고도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세기적 전환 단계에 있고 21세기 고도의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해 선진 각국은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문[1]에

---

1) 정보통신산업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의의 정보통신산업은 정보기기산업, 정보처리산업, 최협의의 정보통신산업(정보제공업, 전기통신업)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와 함께 비전자계 정보통신산업(우편, 신문, 잡지, 출판, 인쇄, 광고, 영상, 교육, 연구 등)을 통틀어 광의의 정보통신산업이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보통신산업은 협의의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이윤식, 「행정정보체제론」, 법영사, 1999. pp.88-89.

서는 이미 제4세대 이동 통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2]. 이러한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선진 각국의 정책·기술적 노력으로 인한 급속한 변화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불어오는 통일의 훈풍 속에서 정보통신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상생(相生)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최근의 개방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정보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남북간 정보통신수준의 격차로 인해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 이전에 남북간 정보통신 수준의 격차를 좁히고 통일 후에 통합된 남북 정보화 정책을 세우는 일이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정보통신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한의 효율적인 통합을 이뤄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다른 어떠한 사회간접 자본보다도 통신 인프라의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는 사실은 한반도 통일에서 북한 지역의 신속한 통신망 구축과

---

2) ▪ **1st generation(1980-1988)**
  ° Analog cellular(basic voice service) - AMPS
 ▪ **2nd generation(1988-1996)**
  ° Digital cellular(enhanced voice service) - GMS and cdmaOne/TR45(IS-95, DCN)
  ° 2.5세대(1995-1998) - PCS(voice + data)
 ▪ **3nd generation(1999-2005)**
  ° IMT-2000(cdma2000, W-CDMA) (voice + data + image(384kbps), up to 24Mbps) - limited mobility and bandwidth
 ▪ **4th generation(beyond 2005)**
  ° Broadband multimedia applications and internet access(beyond 2Mbps)
  ° 수행중인 project
  -BAHAMA, MMI(USA), AWA(japan), SAMBA, WAND, MEDIAN(EU)
  -full mobility and bandwidth

장영민, "한국의 제4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 「제6회 이동통신기술 워크숍」, IEEE이동체공학회 한국지회, 2000. 1., pp. 178.

남한 통신망과의 효율적인 통합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간 통일을 전제로 남북한 특히 북한 지역의 정보통신[3] 동향을 살펴보고 남북한 정보통신의 교류 전망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20년을 전후하여 통일이 된다는 가정을 설정하고 제4세대 이동 통신의 본격적 연구 등 시대적 조류에 맞춰 20년 후의 정보통신 시장, 특히 통일에 대비한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북한 시장에 대한 사업성을 예측하고 그에 근거한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낙후된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남한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남북한 통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경우가 많다. 물론 최근 들어 남북 경제협력 등에 발맞춰 경제적 측면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통일의 당위론적 접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독일의 통합 과정을 사례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정보통신의 특성상 불과 몇 년 전의 연구 자료라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현 연구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이를 바탕

---

3) 본 연구에서는 주로 최협의의 정보통신산업분야를 다룬다. 이하 언급되는 정보통신부문은 최협의의 정보통신산업분야로 정보제공업(VAN, DB서비스, 쌍방향 CATV 등)과 전기통신업(유·무선전화, 전신, FAX, 텔리텍스, 영상회의 등)을 일컫는다.

으로, 정상회담 이후 활발히 전개되는 정보통신부문의 연구 및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전개할 연구에 대한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한다.

Ⅱ. 기본 전제

1. 남북한 통일 유형

남북한간의 통일 유형은 북한의 「북한의 리더십」과 「韓美의 대북정책」 등의 시나리오 작성 기본 축의 두 가지 형태, 즉 북한 리더십의 강·약과 한·미 정책의 강·온의 변동 조합에 따라 합의형, 유도형, 내부 붕괴형, 충돌형 등 4개의 통일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4].

〈표 1〉 남북한 통일 유형

북한 리더십 / 韓美 대북 정책	軟 性	强 性
支 援	유도형 통일	합의형 통일
封 鎖	내부붕괴형 통일	충돌형 통일

자료 : 박철순,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6. pp.30.

4) 박철순,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6. pp.30.

「합의형」(agreement)은 북한의 리더십이 강성이고, 韓·美가 북한을 지원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런 조건하에서 남북한 집권 세력이 국민의 뜻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 내는 형태이다.

「유도형」(inducement)은 북한의 리더십이 연성이고, 韓·美가 북한을 지원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경우 북한은 개혁 개방 정책에서 비롯된 사회적 변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정치 변동이 거듭되다가 결국은 남한 주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내부붕괴형」(self-destruction)은 북한의 리더십이 온건하여 약하고, 韓·美가 북한을 봉쇄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북한은 자체 모순과 갈등을 해결치 못해 스스로 붕괴되고 남한이 북한을 병합하는 형태의 통일이다.

「충돌형」(collision)은 북한의 리더십이 강경하고, 韓·美가 북한을 봉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북한이 중첩된 위기 요인을 해결치 못하고 스스로 전쟁을 도발하거나 미국의 선제 공격을 유발했다가 패전함으로써 통일되는 형태이다.

2. 통일에 대한 전망

통일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지 도출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급진적 성사, 이산가족상봉 등의 최근의 남북 관계에서도 드러나 듯 점진적이라기 보다는 다소 급진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통일이 시기가 다소 빨라지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일 기조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사의 개요

1. 조사 기간 : 2000년 7월 11일 - 7월 13일(3일간)

2. 조사 방법 및 대상

(1) 조사 대상 : 총 150부를 의뢰하였으나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최종 124부를 선정하였다.

- 설문 대상자의 성별 분포

1)남 66명(53.2%)	2)여 58명(46.8%)

- 설문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1)10대 8명(6.5%)	2)20대 40명(32.3%)
3)30대 32명(25.8%)	4)40대 24명(19.4%)
5)50대 14명(11.3%)	6)60대 6명(4.7%)

(2) 조사 방법 : 시내 중심가에서 표본을 연령별로 할당하고 편의적 표본추출에 의해 설문 의뢰

◎ 조사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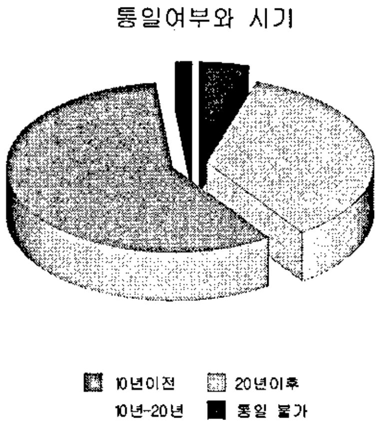
- 조사시간과 비용 관계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을 추출하지 못하고 특정지역을 정하여 연령별로 조사자 편의에 의해 진행되었음.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인식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오차 수준이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연구의 가정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통일의 근본적 해결과제 등 폭넓은 조사 항목을 설정하지 못함.

◎ 조사의 결과

1. 통일 여부와 통일 시기

〈설문1〉 귀하는 통일이 된다고 보십니까? 통일이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1)10년이전	6명(4.8%)
2)10년~20년	44명(35.5%)
3)20년이후	72명(58.1%)
4)통일이 안 된다	2명(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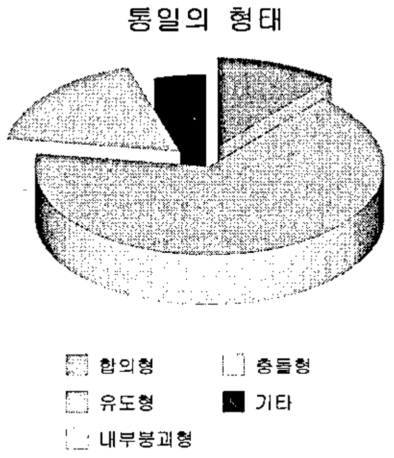
통일 여부와 통일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중 98.4%에 해당하는 122명이 "통일이 된다" 고 답변했다.

통일 시기를 물어 보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10년 이전이 4.8%(6명), 10년~20년이 35.5%(44명), 20년 이후가 54.5%(72명)로 조사되어 20년 이후 통일이 된다고 본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적어도 10년 이후에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통일의 시기를 10년 이후로 생각한 것은 독일의 통일이 첫 정상회담 이후 20년이 걸렸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듯하다. 또한 성급한 통일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 통일을 바라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통일의 형태

〈설문2〉 귀하는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합의형통일	14명(11.2%)
2)유도형통일	82명(66.2%)
3)내부붕괴형통일	22명(17.8%)
4)충돌형통일	0명(0%)
5)기타	6명(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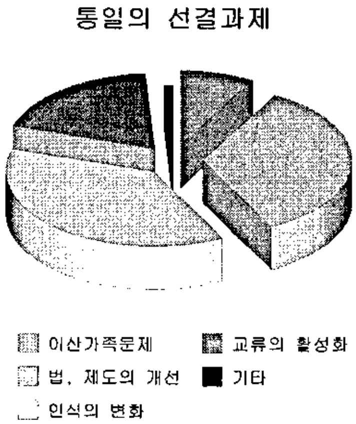
통일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100%가 평화적 통일을 원하였고, 무력에 의한 충돌형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응답자의 66%가 남한 주도의 유도형 통일을 원했고, 북한의 내부 붕괴에 의한 남한이 북한을 병합한다는 의견도 17.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체제를 남한 식으로 변화시키고 북한이 점진적이긴 하지만 개혁개방정책에서 비롯된 사회적 변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여 거듭되는 정치 변동에 의해 결국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받아 들이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통일 과정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설문3〉 귀하는 통일과정상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이산가족문제	10명(8%)
2)법·제도의 개선	42명(33.9%)
3)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46명(37.1%)
4)남북한간 교류의 활성화	24명(19%)
5)기타	2명(2%)

통일 과정상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제도적 개선을 꼽은 응답자가 70%를 넘었다. 남북한간 교류의 활성화가 24명(19.4%)으로 나타났으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답변은 예상보다 적은 10명만이 답하여 이산가족 문제가 이해 당사자인 실향민에게만 국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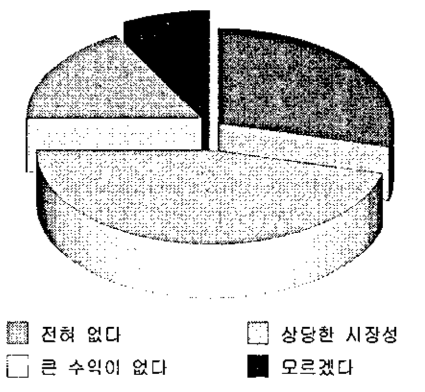
4. 북한의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성

〈설문4〉 귀하는 통일시 북한의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없다	36명(29%)
2)어느정도는 있지만 큰 수익은 얻지 못할 것이다	57명(46%)
3)상당한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21명(16.9%)
4)모르겠다	10명(8.1%)

북한의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성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29%의 응답자가 시장성이 전혀 없다고 답해 북한 시장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46%의 응답자는 부분적인 시장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망적인 성향을 보였고, 응답자의 16.9%는 상당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의 응답자가 아직은 북한에서의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분한 사업성 조사를 통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인식전환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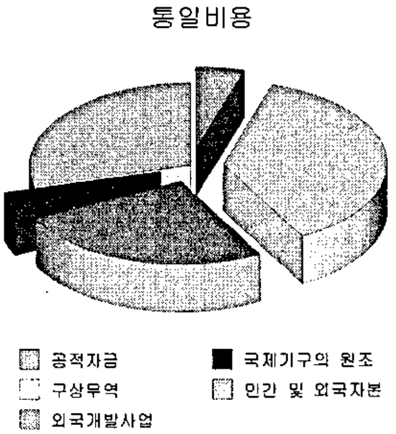


5. 북한 지원의 재정 마련에 대한 의견

〈설문5〉 귀하는 통일 과정이나 통일시 예상되는 통일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공적자금조성 6명(4.8%)
2)구상무역* 46명(37.1%)
3)연해주, 시베리아 등의 외국 개발 사업 참여 32명(25.8%)
4)국제 기구의 원조 4명(3.2%)
5)민간 및 외국자본 유치 36명(29.1%)

주 : ※ 구상무역



- 구상무역이란 금전의 수수 없이 이루어지는 물물교환을 말하는데, 무역 용어로는 '물자의 수출과 수입을 하나의 교환 방법으로 상호 결부시키는 무역 방식'을 가리킨다.
- 대표적인 방법은 백투백(back to back = 거래하는 양자가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한다) 에스크로우(escrow = 먼저 수입한 측이 그 대금을 외환은행에 적립하고, 후에 수입하는 측은 그 계정 금액으로 결제에 충당한다) 토머스, 역토머스(일방이 수입 신용장을 발부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은 일정기간내에 수입한다는 보증장을 발부한다)의 3방식이다.

통일 과정과 통일시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통일 비용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남북간 자체 조달을 원하는 성향을 보였다. 남북한간의 직접 무역을 통해 북한에 필요한 자본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WIN-WIN전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및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36명(29.1%)이나 되었고 연해주나 시베리아 개발 등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제공, 남북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25.8%를 나타냈다. 하지만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공적 자금 조성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국제 기구의 원조는 IMF의 원조를 받은 우리 정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으로 여겨진다.

◎ 결론 및 총평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삼성경제연구소가 평소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학자(교수), 전문가, 언론인, 전현직 관료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였다[5]. 통일 유형을 어느 한가지 형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 4가지 유형 중 어떤 한 형태로의 통일은 가능하리라 본다. 설문에 의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있어서 적어도 20년 전후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 유형으로는 남한 주도의 유도형 내지 내부 붕괴형의 통일을 꼽고 있다. 위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통일이 향후 20년 전후로 유도형 내지 내부붕괴형의 통일이 실현된다는 가정을 바

5) 삼성경제연구소가 관련자 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 유형으로 23명(41.8%)이 유도형을 들었고, 21명(38.2%)이 내부붕괴형, 8명(14.5%)이 합의형, 3명(5.5%)이 충돌형을 꼽았다. 그 중 통일 문제 전문가 20명만을 따로 뽑아 보면, 10명(50.0%)이 유도형을 가장 실현 가능한 통일 유형 들었고, 9명(45.0%)이 내부붕괴형, 1명(5.0%)이 합의형을 꼽았다. 그러나 충돌형을 가장 실현 가능이 있다고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박철순, 앞 논문, p32.

탕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점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법·제도의 문제와 북한의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인식 변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정보통신부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전개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사업에 있어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도 위 설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Ⅲ. 남북한 정보통신 동향

남북한 정보통신현황은 그 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분석 자료가 발표되어 왔다. 특히 북한의 경우, 북한에 대한 자료의 미비로 그 한계점이 있긴 하나 북한 관련 웹사이트, 북쪽 인사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많은 자료를 획득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보통신 분야는 그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현황을 중심으로 남북한 정보통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의 동향

남한의 경우, 정보통신부문 특히 정보통신기기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남한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추진협의회를 구성,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2005년까지 현재의 인터넷(33Kbps)보다 약 1000배(30Mbps)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액을 8조원 늘린 총 40조원(정부 1조 891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2단계의 사업 기간을 당초

2002년에서 올 해 안으로 앞당겨 매듭짓고 전국 114개 주요 지역에 대한 광케이블망 구축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표 2〉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 계획

◎ 1단계(1995.4 - 1998.4) :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기반 구축 622Mbps-2.5Gbps급의 전송망과 데이타교환망을 중심 12개노드 및 68개 접속점을 연결하여 1단계 목표망구축 시범이용기관에 45Mbps급이하의 서비스 제공 주요구간에 ATM교환기 시범 설치 및 운영 정보 공동활용 및 서비스 개발 기반 조성
◎ 2단계(1998.5 - 2001.4) :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확산 전송망을 수십 Gbps급으로 고속화 전국적인 ATM 교환망을 구축 전산망과 공중망과 연동 이용기관에 155Mbps급이하의 서비스 제공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시범 적용 및 정보의 공동활용 극대화
◎ 3단계(2001.5 - 2005) :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완성 기간망을 수십 Gbps - 수 Tbps급으로 고속화 및 고도화 추진 유선망, 무선망, CATV, 위성등과 종합적인 연동 추진 이용기관에 155Mbps급이상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확대보급 및 정부 제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자료 : http://www.nca.or.kr

이러한 계획에 의하면 2005년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완성되면 전국 누구나, 언제, 어디서 음성과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IMT-2000[6]사업의 정책 방안을 발표하여 사실상 차세대 이동 통신으로의 진입을 구체화하였고 내년 6월까지 부품 수입 유발 효과가 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단말기와 핵심 칩셋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장비를 완전 국산화하기로 하였다[7]. 최근 단행된 정보통신부의 이런 행보는 정보통신부문의 급진적 변화를 나타낸다.

2. 북한의 동향

북한은 통신 산업(체신)을 "통신(우편・전신・전화)을 접수하는 사업을 통해 사회적 생산 과정과 주민 생활에 복무하는 경제 부문"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체신의 본래 의미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주민 편익의 사회적 기능이나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공익성보다는 당과 국가기관의 지도, 경제 부문간의 생산 소비적 연계 및 주체사상의 선전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8]. 이러한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보통신업계의 대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북한의 통신 인프라 수준은 남한의 70년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일반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시설은 전무하다 할 정도로

---

6)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IMT- 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00)은 전세계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고 국제적인 통합표준을 마련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의 단말기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세계적인 로밍과 2 Mbps 까지의 고속 무선접속속도를 보장하여(유선망 품질수준의) 무선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7) CDMA 단말기의 국산화율은 71% 정도로 지난 99년 상반기 핵심 칩셋을 국내에서 개발해 상용화하고 2차 전지 등도 대량 생상규모를 갖추고 있다. ADSL의 전용부품 국산화율은 현재 49% 정도이나 ADSL 모뎀칩셋 등은 올 하반기 개발을 완료해 내년에는 국내에서 자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매일 2000. 7. 7.)

8) 이웅,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통일정책・환경(Ⅱ)」, 통일원, 1997. p. 230.

열악한 실정이다. 지난 98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통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110만 개의 회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화보급율은 인구 100명당 4.9회선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양의 경우 통신 시설이 비교적 잘 발달돼 있으며, 망형의 통신망이 형성돼 9개의 교환국이 설치돼 있다. 평양-함흥간, 평양-신의주간, 신의주-평안북도 내 16개 시-군 및 3개 노동자 지구에는 이미 광케이블화가 완료되었다. 국제 전화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유선·무선·위성망이 구성돼 있어 평양간에 170개 주요 도시권과 국제자동전화(IDD)가 가능하다. 공중전화는 평양에만 있으며, 최근 중앙텔레비젼이 버튼식 다이얼 공중전화기를 최신식으로 소개한 것으로 보아 공중전화가 기술적으로 수동에서 반자동·자동으로 발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9]. 데이터 통신(인터넷 포함)·이동전화·무선통신은 대부분 군부와 사회안전부 등 국방, 체제유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인의 이동전화, 무선호출 서비스는 나진·선봉지역[10]과 금강산 관광지구 등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데이터통신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미사일 유도장치 등 군사용 부문에서만 활용된다.

〈표 3〉 남북한 통신 인프라 현황

	항 목	단 위	북 한	한 국	비교(남/북)
전화시설	시설수	천회선	1,307.2	20223.1	15
	운용수	천회선	1,089.3	16,632.6	16
	운용율	%	83	82.2	-
	100인당 회선	회선	4.82	37.75	8
	대기자수	명	16,640	-	-

9) 중앙일보 2000. 6. 26.

10) 이 지역에서는 휴대전화사업은 태국 록스리그룹(70%)과 북한 대외건설총회사(30%)의 합작사가 맡아 500회선을 운용 중이다. 북한은 지난 97년 북한 허치슨사와 디지털 전자교환기 40만회선에 이동 통신 2만회선을 설치키로 하는 의양서를 교환,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 2000. 6. 16.)

	항 목	단 위	북 한	한 국	비교(남/북)
공중전화	시설수	대	2,720	285,130	105
	1,000명당 시설	대	0.13	6.47	50
국제전화 회선수		회선	120	12,051	100
TLX 가입자수		회선	1,862	13,500	9
교환기 디지털화율		%	4.6	58.5	13
종업원수		명	15,000	59,907	4
TV수신기		천대	2,500	11,981	-
통신수입		백만달러	0.58	6,898.3	-
통신투자		백만달러	3,0	11,981	-

자료 : 김상택·공영일, "남한의 정보통신 교류 협력," 「정보화 저널 제4권 제4 호」, 한국전산원, 1997. 12., pp.31
이웅,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통일정책·환경(Ⅱ)」, 통일원, 1997.12., pp236.
중앙일보 2000. 6. 26., 세계일보 2000. 6. 24.

1984년 故 김일성의 유럽 순방 이후 북한은 정보 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김일성은 각국의 정보기술 발전상을 보고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 순방 국가들과 각각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11]. 또한 북한은 권력을 이양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도 하에 통신시설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체적인 통신 발전 계획을 세워 놓았다[12]. 이러한 북한의 태도변화는 앞으로 남한의 對 북한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박찬모,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수준과 남북 협력 방안," 「월간 통일경제 통권 제55호」, 현대경제연구원, 1997. 7. pp. 66.

12) 최근 북한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컴퓨터와 전자 제품 조립,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기기 조립 생산 등 첨단 기술 부문에 투자를 요청하는가 하면,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중국의 실리콘 밸리인 중관촌을 방문하여 첨단 산업에 관심을 보여 주었다. (대한매일 2000. 6. 15.)

Ⅳ. 통일에 대비한 무선정보통신서비스의 시장전망과 사업자 동향

차세대 이동 통신 중의 대표적인 기술인 IMT-2000서비스는 제3세대 이동 통신 또는 3G라고 불리기도 한다. 2001년 일본이 상용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세계 각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얼마 전 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 발표하였다.

무선호출기사업은 이미 퇴출 위기를 맞았고[13] 향후 몇 년 안에 무선이동통신사업은 꿈의 이동 통신이라 불리는 IMT-2000서비스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시 북한 정보통신부문도 필연적으로 IMT-2000서비스가 정착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일 과정에서 미리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정착시켜 놓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통신 현황은 남한의 70년대 수준으로 남한과 약 30년 정도의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정보통신부문 협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런 격차는 상호 교류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리라 본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방식에 의해 어느 방향으로 끌어가느냐에 있다. 우리의 경우 독일이라는 선례가 있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준다는 건 다행스런 일이다. 독일의 경우 통독 이후 동독 통신망 개선 작업에

---

13) 나래이동통신의 경우 97년 한때 227만 4000명의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이동 전화에서 문자메세지 기능을 수행함에 다라 이용자가 계속 감소, 6월 말 현재 14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나래이동통신은 급속한 이용자의 감소로 삐삐주파수 변환시청서를 정부통신부에 공식 접수하였고 전북이동통신 역시 최근 정보통신부에 주파수 반환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무선호출기사업은 퇴출위기를 맞은 것이다. (매일경제 2000. 7. 4.)

3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었다[14]. 하지만 서독과의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 남한이 이런 막대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 통신망 개선 작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분산 투자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사회적 특수성 때문에 20년 후의 북한의 정보통신수준을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듯 싶으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지리적 특성상 대북사업 진출이나 관광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요 통신 수단으로 위성이동통신서비스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5]. 북한에 있어 무선이동통신의 사업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보면 차세대 이동 통신의 향후 사업성을 연구하는 것도 유비무환의 일환으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이런 연구를 통해 민간 및 외국 기업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사업에 동참시킴으로써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통일 비용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북한 시장 전망 : IMT-2000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의 경우 2002년 말까지 IMT-2000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2년 6월 월드컵 경기 중에는 그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IMT-2000서비스 시장의 수요는 얼마나 될 것이며, 시장의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

---

14) 문화일보 2000. 6. 16.

15) 온세통신의 관계자는 금강산지역 등의 자연보호를 고려하여 무선망을 구축할 계획이고 데이콤 역시 서울에서 기존이동전화를 이용할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일보 2000. 6. 27.)

내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 셀룰러와 PCS 등 기존의 이동전화 서비스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선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예측하고 사업 전략까지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IMT-2000 서비스와 기존 이동전화 시장과의 관계

IMT-2000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음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국제적인 로밍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이동전화서비스에 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측면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이동전화서비스는 음성 통화품질, 가입요금, 전국적 커버리지 등이 강조되었던 반면, 향후 IMT-2000서비스에서는 정보 내용물의 생산,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개발과 제공 등이 강조된다.

〈표 4〉 key feature of IMT-2000

○ high degree of commonality
○ compatibility of services within IMT-2000 and with the fixed networks
○ high quality ○ small terminal for worldwide use
○ worldwide roaming capability
○ capability for multimedia applications and a wide range of services and terminals

자료 : Chul-Huem Yon.SeungJoon Park, "Current Status & Standardization of IMT-2000", 「제6회 이동통신기술 워크숍」, IEEE 이동체공학회 한국지회, 2000.1. p. 2.

2) IMT-2000서비스의 북한 시장 전망

북한의 통신 인프라 수준이 남한의 70년대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IMT-2000서비스의 북한 시장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무선 이동 통신 분야는 사회의 어떤 다른 부문보다 급진적 변화 양상을 특징으로 한다. 남한의 경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던 무선 호출기 사업자가 이미 무선이동전화서비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퇴출을 당할 형편에 몰려 있다. 이로 볼 때 IMT-2000서비스가 짧은 시간 내에 무선이동전화서비스의 영역을 잠식할 것이라는 예측은 단순한 가정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명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이라고 이러한 변화를 겪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적절한 투자와 기술 지원만 이뤄진다면 남한보다 북한에서 더욱 심한 변화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기존 무선이동전화서비스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IMT-2000서비스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우선, IMT-2000서비스가 제공됐을 때 예상되는 북한의 수요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통신 서비스의 수요 예측을 위한 모형으로는 주로 장기수요예측곡선들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된 모형은 역시 Bass(1969)의 확산 모형(Diffusion Model)이다.

$$Q_{t+1} = \alpha(\bar{Q} - Q_T) + \beta(\bar{Q} - Q_T)(Q_T / \bar{Q})$$

Q_{t+1} : t+1 시점의 신규 가입자 예측치

$\bar{Q}$: 포화가입자 수

Q_T : T 시점의 누적 가입자 수

α: 혁신계수(innovation coefficient) ⇒ $\alpha \geq 0$

β: 모방계수(imitation coefficient) ⇒ $\beta \geq 0$

이러한 Bass 모형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모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모형이 가진 단점은 포화가입자의 수가 언제나 일정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 단일 서비스에 대한 모형으로 다른 서비스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의 가격과 같은 수요 측면의 요인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16))

북한의 경우 통일 시점을 향후 20년으로 잡았을 때 남북 이산가족과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17)이 많으며 포화 가입자 수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경제 인구를 중심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 Bass모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통일을 전후한 단기간의 수요자를 예측하는 모형으로서 Bass모형은 별 무리가 없다. (Bass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모형들은 통일 후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Bass모형을 적용할 때 통일 후 가입자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포화 가입자 수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므로 그것을 남한의 인구 현황과의 단순 비교에 의해 예측해 보고자 한다18).

---

16) 김진기, "PCS와의 대체관계를 고려한 셀룰러 확산 모형에 관한 연구," 「1998년도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下)」, 한국통신학회, 1998., p.1297.

17) 북한이 붕괴되면 경제특구, 관광특구, 대도시 등에 수요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이산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 수요 증대 및 남북한간 경제 교류 활성화에 따라 남북한간 정보통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붕괴 직후 대규모 난민 발생이 우려되는데 특히 남한 쪽 대도시에는 이로 인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박철순, 앞 논문, pp. 68-69.

18) 여기에서는 북한의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비교 고찰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표 5〉 남북한 인구현황 (단위 : 1000명)

	남한인구		북한인구	
	남	여	22,466	
	23,170	22,821	남(추정치)	여(추정치)
성비	101.5		11,401	11,065
경제활동인구(15~64세)			경제활동인구 단순 추정치	
남		여	남	여
16,649(71.9%)		16,168(70.8%)	8,197	7,834

주 : 북한의 남, 여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는 남한의 성비와 경제활동인구의 통계치를 근거로 단순 추정한 것임. 1997년 현재 자료를 재구성.
자료 : 한국 통계 월보, 통계청

이러한 단순 추정치에 따른 북한의 경제활동인구가 약 12,031천명인데 이 인구의 상당수가 이동 통신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포화가입가의 예측치는 상당한 수가 될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 전문가 설문을 통한 IMT-2000서비스의 포화가입자가 66.45%로 조사된 것[19]을 근거로 북한의 포화가입자를 예측하면 북한에서의 IMT-2000서비스 시장도 분명 가치가 있다. 물론 66.45%의 포화치가 북한에도 적용될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지만 북한의 무선이동통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 격상되었을 때 그 가능성은 현실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자 동향 및 전략

거듭되는 결론이지만 북한의 정보통신분야의 시장은 충분한 가능성을

19) 이명호 · 김은미 · 류희정, "Markov 전이모형을 적용한 IMT-2000서비스 시장 전망 및 사업자 전략,"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0권 2호」, SK telecom, 2000. 4., p. 303.

가지고 있다. 만일 예상보다 급속한 통일로 북한의 통신 인프라 구축이 극도로 미비할 때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유선망보다 IMT-2000, 무선 가입자망(WLL) 등의 신규 무선서비스 또는 위성휴대 통신(GMPCS) 등의 위성통신 서비스을 제공하는 게 급증하는 통신 수요를 흡수하는데 보다 적절하다 하겠다[20].

하나로통신은 내년 1월부터 북한 민족경제협력 연합회 산하 삼천리 총회사로부터 월 5만 가입자 분량의 신호분배기(스폴리터 5만개, 필터 10만개)를 공급받게 된다. 하나로통신은 45만 달러를 투자하고 삼천리 총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을 제공하는 조건이다. 아울러 하나로통신과 삼천리 총회사는 연말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발신자 표시전화기(CID : Caller ID) 임가공 계약을 위한 계약을 위한 합의서도 체결하고 9월말까지 본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21]. IT분야의 남북한 첫 협력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로통신의 발빠른 행보는 타 정보통신 관련 회사에게 많은 자극을 줄 것이다.

북한의 첨단 사업에 대한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고급 인력의 인건비는 매우 낮다. 북한이 배출하는 정보통신 인력은 매년 1만명, 이 가운데 10% 정도만 취직할 뿐 나머지는 실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정보통신업체 수는 250개 정도로 취업할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졸 일류급 프로그래머의 월급은 북한 돈 2,000원(한화 1만 4,000원) 정도[22]로 남한의 100분의 1

---

20) 연세대 이웅교수는 WTO기본통상협상에 따른 시장 개방 의무의 북한 시장 적용 문제가 국제간 특히 한-미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및 기업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시장 개방의 유예를 인정하게 된다면 통신망이 구축되고 사업자 선정에 이은 서비스 제공이 정상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지체없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웅, 앞 논문, p. 251.

21) 이번에 생산하게 되는 ADSL(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 신호배분기는 ADSL 선로에서 인터넷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구분해 내는 기능을 가진 ADSL 가입자의 필수 장비 가운데 하나이다. (내외경제 2000. 8. 3.),(국민일보 2000. 8. 4.)

22) 북한은 현재 공정 환율과 무역 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 1,000분의 1수준이다. 따라서 남북의 무선통신 서비스 교류에서 이러한 고급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귀순자를 중심으로 한 대북 컨설턴트(consultant)들은 대북 투자에 대한 투자 요인으로 뛰어나 기초과학, 값싸고 우수한 정보통신인력, 미사일 개발로 이룬 항공우주산업, 인체 실험으로 발전시킨 생명 공학, 노동당 차원에서 육성한 첨단 소프트웨어공학, 세계적인 수준의 애니메이션 등의 6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북한은 무한한 비즈니스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성공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전 중소기업청에서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응답 업체의 67%가 남북경협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제한적이나마 투자를 모색하는 단계에 도달한 남북 경제 교류의 현실은 향후 교류·협력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으며, 강력한 정보력을 갖춘 외국의 통신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북 투자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23]는 사실도 이러한 변화 추세에 고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6〉 중소기업 남북 경제 협력 전망

◎ 북한 진출 목적
◦ 저렴한 노동력 활용(57.0%) ◦ 내수 시장 확보(22.1%)
◦ 원·부자재 반입(9.3%)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상품 가격이나 금리처럼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무역 계획, 즉 외환 계획에 따라 당국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된다.

장원태, "북한 화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주간경제 374호」, 1996. 8. 8.

23)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제프리 존스 회장은 미국의 대북투자제재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 늦어도 하반기중 주한 美商議 투자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며, 북한 투자 환경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1,000여 회원사들이 대북 투자에 관심으로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 투자 사절단을 해마다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이미 商議內 북한위원회 등을 통해 상당한 대북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일보 2000. 6. 15.)

〈표 6〉 중소기업 남북 경제 협력 전망

◎ 진출 희망 분야	
◦ 사회간접자본(44.1)	◦ 제조업(33.1%)
◦ 생활 용품(15.3%)	◦ 정보통신(7.3%)
◎ 추진 방식	
◦ 설비제공형 임가공(39.7%)	◦ 직접투자(26.1%)
◦ 여유 시설 이전(16.2%)	
◎ 경협 활성화 시기	
◦ 3년이후(41.7%)	◦ 1년이후(32.4%)
◦ 5년이후(16.6%)	

자료 : 매일경제 2000. 5. 29.

V.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방안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통신 교류의 경험과는 달리 남북한간에는 이런 교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한의 통신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을 시작으로 한 남북 합작은 남북 통신 협력에 심상치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북한을 단순한 교역 상대국으로 바라보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남북간의 대립적 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무난한 방법이 경제를 통한 접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협력사업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긴장 완화이다. 북한과의 통일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회 심리적 측면이다. 남북한은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남한은 경제적 우월성을 내세워 북한의 민감한 부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호이해지향적인 의사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교류는 분명히 남북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정보통신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가 재개되는 14일을 기해 남북연락사무소간의 직통전화부터 광케이블을 사용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가설된 광케이블 24코어[24]는 전화 300회선, TV(45Mbps급 · 1시간반짜리 영화 1편을 30초만에 전송 완료할 수 있는 용량) 1회선, 데이터 통신(문서 음성 영상) 5회선 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의 통신 회선은 직접 연결 전화가 29회선, 제3국 경유 간접 연결 전화는 16회선 등 모두 45회선이다. 광통신의 용도는 다양하다. 당장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비롯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경의선 연결사업등의 남북경협과 다양한 사회 문화 교류 사업에 직 · 간접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의 단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이번 성과는 남북정보통신 교류의 초석을 마련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 긴장 완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인프라의 확장은 이산가족의 통신 수요의 충족을 위한 채널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정부 주도의 채널로 이용될 전망이지만 상황이 진전되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용회선

---

24) 꿈의 통신망으로 불리는 광케이블은 가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광섬유 가닥으로 이뤄지는데 한 가닥을 1코어라고 부른다. 이번에 설치된 광케이블은 24가닥에 불과하지만 용량은 구리선과 비교가 안 된다. 구리선은 한 가닥에 음성 전화 1회선만 물릴 수 있는 수 있는 반면, 광케이블 한 가닥으로는 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만회선까지 동시에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4코어 용량의 광케이블로는 이론적으로는 최대 24만 가입자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2000. 8. 12.)

〈표 7〉 남북간 직·간접연결 전화 현황('98. 12. 31. 현재)

직접연결 전화			
용도	구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	서울 - 평양	2	'71. 9. 2.
남북조정위원회	남북조정위원회 위원장간	1	'72. 7. 4.
남북회담 지원용	서울 - 평양	18	'72. 8. 26.
남북 경제회담용	서울 - 평양	1	'84. 12. 21.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남북 직통전화	남북적십자회담 연락 사무소간	2	'71. 9. 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92. 5. 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 - 평양관제소(판문점 경유)	2	'97. 11. 19.
	대구 - 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98. 2. 17.
합 계		29	
간접연결 전화			
용도	구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 지원용	한국 - 일본KDD - 인텔샛 - 평양 - 신포	8	'97. 8. 4.
금강산 관제통신망	한국 - 일본IDC - 인텔샛 - 평양 - 원산 - 온산 - 장전	6	'98. 11. 17.
합 계		14	

자료 : 대한매일 (2000. 8. 12. 4면) 재구성

형태의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회선의 증설을 추진하고 점차 이러한 회선을 회도화시켜 화상전화 등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경직된 남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남북경협을 통일 지향적 또는 통일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가간 경협 자체로 파악하게 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하고 남한은 통신 장비의 선점효과를 고려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의 심리적인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 통신 분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법 · 제도적 정비

앞으로 있을 통신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통신부문의 제도, 법규, 시설 등에 관한 기본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91년 남북기본서 합의서의 핵심 내용인 통행(通行), 통신(通信), 통상(通商) 등 3通 정책 가운데 그 동안 통신 분야 교류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 제정된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조차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위성을 비롯한 무선 ·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규정은 포함돼있지 않다. 그러므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법적 정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남한의 위치[25]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남한 기업이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를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하고 남북경협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법이 모호하다면 별도로 투자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분쟁조절방안, 청산결제[26] 제도 등도 체결해야 한다. 동시에 방북절차의 간소

25)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2조에서는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 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남한 기업이 외국인 투자가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동용승, "남북정상회담이 남긴 경협의 선결과제들," 「월간 북한 (통권 344호)」, 북한연구소, 2000. 8., pp.90.

26) 청산결제란 양국간 결제대금을 건별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통상 1년) 청산결제은행간 채권 및 채무를 기록해 두었다가 청산기간이 오면 차액만을 미리 합의한 통화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대북투자기업들은 현재 제3국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때 내는 1%의 환전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며, 전체 남북교역 금액의

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

제도적 측면에서 정보통신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 남북협력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업체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간부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데 그들에 의해 남북 당국간 통신협력 문제를 비롯해 통일에 대비한 장기 남북통신협력 프로젝트가 마련된다[27]. 이를 통해 북한과의 연계된 통신 협정과 정보통신 협력위원회의 운영도 이루어져야 한다. 통신 협정은 남북한 통신망의 연결과 상호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취지가 있다. 또한 협력위원회는 통신 협정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제기되는 제반 문제를 조정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28].

3. 재정조달방안

북한 지역에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의 관계자는 기본통신망 및 설비를 구축하는 데만 약 12조원이 필요하고 정보통신부문을 모두 포함하면 1백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29]. 이러한 엄청

70%가량을 국내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27) 이 위원회는 민간차원의 대북 경제 협력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남북 당사간 협력 문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대북 경협에 국가적 차원의 참여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업들이 대북 사업에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에 의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북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부의 역할이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자칫 정부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대북 사업을 탈피하여 민간 기업, 인도주의의 측면에서 종교·사회 단체의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28) 김상택·공영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 협력," 「정보화 저널 제 4권 제4호」, 한국전산원, 1997. 12. pp.35.

29) 97년 4월 30일 독일의 경제주간지 〈비르트샤프트 보헤〉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이후 25년간 2조4천억 달러의 외국자본이 통일 비용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쓰고 있다. (경향신문 1997. 5. 2.)

난 재원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출적 성격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재원을 모두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 외국 자본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 업체나 외국 기업들이 북한의 시장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당장에 이익이 없는 북한에서 단지 선점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고 통일이 달성된 뒤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 또는 통일시 발생하는 통일 비용이 반드시 손해는 아니다. 분단 비용의 해소에 따른 이익과 통일로 인해 새롭게 창출되는 통일 편익의 합으로 통일 이익을 산정하면 충분히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30]. 따라서 정부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재정조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통일 비용은 단순한 기회비용이 아니라 투자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는 사고의 전환도 아울러 요구된다 하겠다.

IMF구제금융을 받고 부실 기업을 위한 공적 자금의 투입 등으로 인해 통일 비용을 위해 공적 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많은 사회적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북일 교섭이라든지 국제 기구의 원조는 현 북한의 국가적 신임도로 보았을 때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설문 조사에서 재원조달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구상무역을 가장 선호

---

30) 통일의 순이익을 증대에 기여하는 남북경협은 남북한 산업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 원칙 아래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현단계에서 북한과의 협의 없이도 가능한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최수영, "통일의 순이익 확대와 남북경협," 「정보화저널 제4권 제4호」, 한국 전산원, 1997. 12. pp.50.

하였는데 이것은 남북경협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많다. 지난 10년간 남북한간의 교역은 단순물자교역과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교역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역 대금 결제 체제의 미비로 대부분의 교역이 간접교역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제교류의 핵심인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남북한간의 직교역 추진을 위해서는 대금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금결제 제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사회주의국가간의 무역결제수단으로 통용되어 왔으며, 통독전 동서독 교역의 대금결제수단으로도 사용되었고[31] 남북한이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한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현재 남북교역 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결제문제가 해결되어 남북교역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2].

아울러 남북한 교역이 청산결제방식에 의한 직교역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직교역전환 초기 단계에서 대금 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 형태의 교역에 대해서는 환결제방식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은 청산결제에 따른 교역추진시 대규모 교역 수지 불균형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인력[33], 북한의 우수한 소프트웨

---

31) 동서독간의 교역은 동서독 정부간에 준국제법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경제통합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동서독간의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한 대금은 독일연방은행과 동독국가은행에 상호 개설된 청산계정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졌다. 동서독은 청산계정을 통한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청산통화단위를 양국의 통화 대신 VE(Verrechnungs Einheit:청산단위)라는 제3의 결제통화단위를 사용하였다. 동서독은 교역균형 유지 불능시를 대비하여 일정 신용한도액 범위를 허용하는 청산계정 대월제도(Swing Facility)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32) http://www.koreaexim.go.kr

33) 북한 인력에 대한 북한측이 남한 임금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한이 남한 임금 수준의 기술력을 제공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듯

어를 남한에서 구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우수한 기술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프라를 일단 구축하고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BOT 방식 : the Board of Trade)도 강구해볼수 있다. 이용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고 후에 인프라를 북한에 이양하면 양 쪽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연해주, 시베리아 개발 사업등 외국 개발 사업에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을 공동 투입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남한의 혐오 시설에서 수용하는 쓰레기 등을 북한에 매립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재정적 능력을 키워 주는 방법도 북한의 재정 자립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대북 지원용 금융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통일 복권 발행 등의 형태도 강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 중 최선의 방법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재정 확보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동시 다발적이고 다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종국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남북정상회담 이후 요원하게만 느껴졌던 통일이 이젠 기정사실이 되어 가고 있다. 통일은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요 염원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감상에 의해선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한다. 거기엔 복잡다단한 정치적

하다. 기업에서 남한 보다 싼 임금 때문에 투자 메리트를 얻었다면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영향 관계뿐만 아니라 비정하다고 할만큼 냉정한 경제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 남북경협을 선발대로 하는 남북간의 경제 교류는 그래서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남과 북 간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기에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말해 주듯 재정조달 방안에서부터 서비스 제공형태까지 어느 것 하나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에도 몇 가지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해 놓을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들이 있다.

우선, 북한에 제공되는 무선이동통신 서비스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년 후 통일을 대비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지금 상용화돼 있는 PCS나 셀룰러 등의 서비스보다는 조만간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서비스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마련 문제 또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정부나 민간 어느 한 쪽이 도맡아서 결정해 나갈 성격의 것이 아니기에 더욱더 민·관의 협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민간 업체는 그들 나름대로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분명 북한에서의 무선이동통신 사업은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으리라 본다.

이상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적·제도적 장치들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정부나 민간 모두 적극적인 대북 지원과 교류를 할 수 없다. 외국 기업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공적 기구를 조성, 남북간의 매끄러운 소통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들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그 바탕에는 한 핏줄로서의 북한에 대한 뜨거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의 희생이 자리잡고 있어야 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 참고 문헌 】

● 단행본

이윤식, 「행정정보체제론」, 법영사, 1999.

● 논 문 및 정기간행물

김상택 · 공영일, "남한의 정보통신 교류 협력," 「정보화 저널 제4권 제4호」, 한국전산원, 1997. 12.

김상택, "남북한간 효율적 통신 통합을 위한 분석," 「통일경제(통권 47호)」, 현대경제연구원, 1998.

김진기, "PCS와의 대체관계를 고려한 셀룰러 확산 모형에 관한 연구," 「1998년도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下)」, 한국통신학회, 1998.

동용승, "남북정상회담이 남긴 경협의 선결과제들," 「월간 북한 (통권 344호)」, 북한연구소, 2000. 8.

박찬모,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수준과 남한 협력 방안," 「통일경제 (통권 55호)」, 현대경제연구원, 1999.

—, "북한의 정보화 동향," 「과학과 기술(통권 제356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1999.

—,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수준과 남북 협력 방안," 「월간 통일경제 (통권 제55호)」, 현대경제연구원, 1997. 7.

박철순,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6.

서향복,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전략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 환경 I)」, 통일부, 1998. 12.

Chul-Huem Yon · SeungJoon Park, "Current Status & Standardization of IMT-2000," 「제6회 이동통신기술 워크숍」, IEEE 이동체공학회 한국지회, 2000. 1.

이명호 · 김은미 · 류희정, "Markov 전이모형을 적용한 IMT-2000서비스 시장 전망 및 사업자 전략",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0권 2호」, SKtelecom, 2000. 4.
이 웅,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통일정책·환경(Ⅱ)」, 통일원, 1997.
장영민, "한국의 제4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 「제6회 이동통신기술 워크숍」, IEEE 이동체공학회 한국지회, 2000. 1.
장원태, "북한 화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주간경제 374호」, 1996. 8. 8.
최수영, "남북경협의 단계별 추진전략," 「정책연구(통권 125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7. 6.
—, "통일의 순이익 확대와 남북경협," 「정보화저널 제4권 제4호」, 한국 전산원, 1997. 12.
한국통계월보(제 41권 12호), 통계청, 1999. 12.

●신문 및 전자문서

경향신문 1997. 5. 2.
국민일보 2000. 6. 27
국민일보 2000. 8. 4.
내외경제 2000. 8. 3.
대한매일 2000. 6. 15
대한매일 2000. 7. 7
매일경제 2000. 5. 29.
매일경제 2000. 7. 4.
문화일보 2000. 6. 16.
세계일보 2000. 6. 24.
중앙일보 2000. 6. 26.
한국일보 2000. 6. 15.
한겨레신문 2000. 8. 12.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http://www.koreaexim.go.kr
한국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nca.or.kr

사이버 통일교육의 추진 방향 및 활성화 대책

- 중핵교육과정의 구상과 Simulation학습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4학년 김 평 원

〈목 차〉

【요약문】

Ⅰ. 서 론

Ⅱ. 통일교육과 사이버 교육의 현황

Ⅲ. 사이버 통일교육의 추진 방향

Ⅳ. 사이버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Ⅴ. 결 론

【 요 약 문 】

이제는 바야흐로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다.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다. 통일교육 역시 이제는 이전의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학습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교과, 특별활동, 그리고 학교 재량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전체 시간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교과시간을 제외하면 통일교육에서 활용가능한 시간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규교과가 아닌 통일교육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로서, 이러한 제약을 넘는 대안으로서 사이버 통일교육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인지적인 준비를 갖추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의적, 행동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 통일교육을 위한 현재의 여건은 새롭게 조성되는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와 통일여건의 성숙에 발맞추어 체계적으로 부응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아직도 이전의 방공교육의 시각에서 통일교육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과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통일교육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과 교사가 많으며, 심지어는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학생과 사람들까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통일교육의 방향에 문제가 있거나 실천방법상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의 철학적인 지향점 탐색'과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추진방향 및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제기한 문제점과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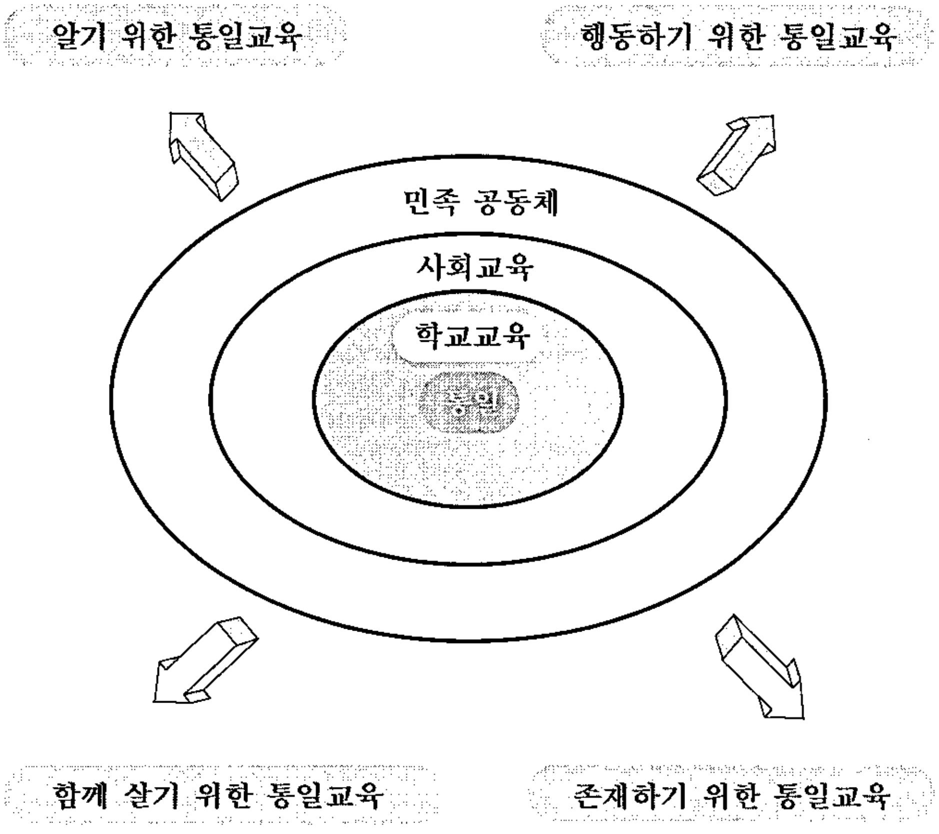
▶ 사이버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철학은 어떠한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시사점을 주는 교육철학을 탐색하는 것은 본 논문의 중요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방된 사고(思考)와 화합을 추구하는 통일교육을 논의하는데, 실천적 구속력을 갖는 이념과 철학을 논의한다는 것이 다소 회의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교육의 이념과 철학의 정립은 교육의 지향점을 밝히고 일관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넓게 확장된 사이버 통일교육의 철학적인 지향점을 실존주의 교육학자 마틴부버의 교육사상에서 찾고자 하였다. Martin Buber에 의하면 교육은 자기 결정적인 자아의 형성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적 상황은 '만남'의 상황이어야 한다. 만남의 상황이란 인격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순수한 대화의 상황이며, 동시에 '자아'의 발견을 위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 자아는 다른 자아와의 관계를 통하여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이라는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 통일교육이 지향해야할 점은 이와 같이 포용과 '만남'의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한국을 위한 자기 결정적인 인격체를 길러내는 것이다.

▶ 기성 세대를 위해 사이버 통일교육이 제공해야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본 논문의 두 번째 중요한 논의는 사이버 통일교육의 주체를 학교현장을 넘어서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일이다. 각종 여론 조사 결과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했고, 가치관의 혼란과 객관적인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의 영역을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통일을 중심으로 한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을 구상해 보았다. 이러한 중핵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네 가지 방향은 알기 위한 통일 교육 (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통일교육 (Learning to do), 함께 살기 위한 통일교육 (Learning to live together), 존재하기 위한 통일교육 (Learning to be)으로 정리될 수 있다.



▶ Simulation을 활용한 가상 체험이 피교육자를 흡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부분 역할극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통일교육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과거와 현재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Simulation학습을 제시하였다. Simulation이란 직접 실현이 어려운 사건이나 과정을 가상적으로 재창조해서 학습에 활용하는 형태로서 단순하게 주입되는 통일관련 지식이나 형식적인 강의방법 보다 학생들에게 더욱 호소력이 크다.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전달 매체가 곧 전달 내용(The medium is the message)'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이 말은 원래 전달 매체는 전달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그 전달매체가 또한 그 자체로서 전달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학교 통일교육과는 다른 매체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간접체험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MBC 드라마 '허준'을 도덕·윤리 Simulation으로서 상정하였다. 드라마 '허준'이 특히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겪는 비도덕적인 사회에 대한 대응 방식을 자신이 처한 상황과 동일시하는 간접 체험과 이를 통한 반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간접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 통일 이후의 상황을 역할극(role play)으로 꾸며 실연하는 방법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놀이는 준비와 제작 여건이 어려워

일회성의 행사로 그치기 쉬우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Simulation으로도 볼 수 도 없다. 실제로 Simulation은 역할극(role play)과 그 개념의 유사성으로 인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잘못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Simulation을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교수학습상의 문제점과 제작상의 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학습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활용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사이버 통일교육은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학교통일교육을 넘어서서 성인교육,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이제는 사이버 통일교육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Simulation으로 보는 확장된 시각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통일교육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통일을 교육한다'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통일을 중핵으로 하는 민족 공동체의 하나의 거대한 Simulation'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need) 발달단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결국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향점 탐색과 방법론적인 면을 중심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서 제시하면서 논문은 끝을 맺는다.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제는 바야흐로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다.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다. 통일교육 역시 이제는 이전의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학습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현재 시행중인 교육과정의 편재는 교과, 특별활동, 그리고 학교 재량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1] 이중에서 전체 시간의 90%이상을 차지하는 교과시간을 제외하면 통일교육에서 활용가능한 시간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규교과가 아닌 통일교육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로서, 이러한 제약을 넘는 대안으로서 사이버 통일교육은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제 통일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 중의 하나로 사이버 통일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인지적인 준비를 갖추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의적, 행동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 통일교육을 위한 현재의 제반 여건은 새롭게 조성되는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와 통일여건의 성숙에 발맞추어 체계적으로 부응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아직도 이전의 반공교육의 시각에서 통일교육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과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통일교육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학생과 교사가 많으며, 심지어는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학생과 사람들까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통일교육의 방향에 문제가 있거나 실천방법상

---

1) 교육부(1997). 제7차 교육과정 : 중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철학적인 방향 모색'이라는 거시적인 접근과 '현실적인 교수-학습상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미시적인 접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의 범위, 문제 및 내용

사이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철학적 지향점 탐색과 Simulation학습을 중심으로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논문의 구체적인 논의의 범위, 문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이버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철학은 어떠한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시사점을 주는 교육철학을 탐색하는 것은 이 연구의 중요한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방된 사고(思考)와 화합을 추구하는 통일교육을 논의하는데, 실천적 구속력을 갖는 이념과 철학을 논의한다는 것이 다소 회의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교육의 이념과 철학의 정립은 교육의 지향점을 밝히고 일관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Martin Buber의 '만남의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사이버 통일교육이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나. 기성 세대를 위해 사이버 통일교육이 제공해야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본 논문의 두 번째 중요한 연구 문제는 사이버 통일교육의 주체를 학교현장을 넘어서는 넓은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일이다. 각종 여론 조사 결과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했고 가치

관의 혼란과 객관적인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의 영역을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통일을 중심으로 한 네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을 구상해 보았다.

다. Simulation을 활용한 가상 체험이 피교육자를 흡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대부분 역할극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통일교육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과거와 현재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본질적인 의미의 Simulation 학습을 제안하였다. 이 문제는 두 가지 하위 문제로 구성된다. 하나는 가상 체험을 통한 정의적 측면 교육의 효과에 대한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역할극을 중심으로 한 통일체험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구안하는 일이다.

Ⅱ. 통일교육과 사이버 교육의 현황

1.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통일교육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민족적 통일은 결국 교육이 맡아야 할 장기적 형성과제이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게 하

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통일교육은 사전적 준비행위로서의 교육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생활을 완성시키는 사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통일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통일교육의 현실은 새롭게 조성되는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와 통일 여건의 성숙에 발맞추어 체계적으로 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 교육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목표와 방향성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종래의 반공교육 등은 통일교육으로서의 목표 상세화와 체계화가 미흡하였다. 갈등과 반목을 심화시키는, 체제 경쟁적인 교육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일논의가 광범위한 합의를 수렴하지 못하고 폐쇄되어 왔던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둘째, 단편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교육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의 교육 내용은 학년별, 계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편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오히려 통일을 위한 자세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있었다.

셋째, 암기식의 일방적인 교육방법을 지적할 수 있다. 갈등상황에서 대화하고 토의하는 방법과 시각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주어진 통일 정책과 안보를 중심으로 내용을 일방적으로 암기하고 주입시키는 형태의 교육방법은 통일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각 과목들간의 유기적인 통합·연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넷째, 통일교육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인습에 의한 관행은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낮게 하는 데 작용하여 다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돌게 하고 있다.[3]

---

2) 한준상 외 12인(1997), 신교육사회학, 서울 : 학지사, 391쪽.

3) 한국교육개발원(1999)의 통일 의식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의 57%가 '통일 후 삶의 질이 떨어질 것'라고 응답했으며, 조사 대상의 50%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통일 이후에 대한 준비 미흡을 지적할 수 있다. 통일을 앞당기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통일을 언젠가 발생하게 될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현재와 같은 아무런 대비 없는 상황에서 겪게될 혼란과 갈등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2. 사이버 교육의 현황

1) 사이버 교육의 개념

사이버 교육 혹은 가상교육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된 새로운 교육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일부계층의 지식과 정보의 독점력이 사라지고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게되고, 지식과 정보의 다양한 생산과 이에 따른 창의력의 발휘 기회가 많아졌으며, 지식과 정보의 표현 방법 역시 유연성과 복잡함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수요자, 즉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며 사이버 교육은 이러한 요구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사이버 교육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학습자 중심의 시공간을 초월한 교육 실시로 교육수혜자의 수를 전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보다 많은 인재를 육성하고, 일반인들 및 소외계층에게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테크놀러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간 또는 교수-학습자간 상호 작용을 극대화하여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현실감 넘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고품질 교육의 대중화를 이룩할 수 있다. 또한 용이한 교육자료의 재활용 또는 공유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경비 및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최성우(2000). 미래사회와 정보화 교육. 서울교육. 통권 159호.

나) 사이버 교육의 형태와 발전 추이

사이버 교육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크게 원격 자율학습, 실시간 원격강의, 주문형 원격강의의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원격자율학습이란 교수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자율학습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을 진행하되, 교수자 및 동료 학생들과 다양한 상호 작용을 진행 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이다. 실시간 원격강의는 교수자가 일정한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면 학생들이 동일시간에 원격지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하여 수강하게 되는 교육환경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주문형 원격강의는 교수가 직접 생생한 음성 혹은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여 저장해 놓고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그 강의를 호출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사이버 통일 교육 역시 이러한 세 가지 형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학습 효과 촉진을 위한 홉인 요소를 개발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대학으로 표현되는 대학 중심의 사이버 교육과 기업교육, 사교육기관의 사이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이버 교육의 장점은 교육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이버 교육은 자아실현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이나 학교에서 사이버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 정보기술과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교육의 패러다임을 살펴보는 일은 사이버 통일 교육을 시대적인 대세의 흐름 속에서 당위성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보기술의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

먼저, '자동화(Automating)'의 패러다임을 보면, 이것은 교사와 학생간

의 관계에서 교사가 교육환경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경우로서, 이때 매체는 교사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데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 패러다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컴퓨터를 통해 학습을 하는 컴퓨터 보조학습(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컴퓨터 보조훈련(Computer Based Training)이 있는데, 인터넷의 '하이퍼미디어'의 특성과 달리, 사용자의 선택권이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시스템을 말한다.

다음으로 제시되는 패러다임은 '상향 정보흐름(Informating up)'이다. 이 패러다임에서는 교사가 여전히 교육환경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매체를 통해 얻고자하는 경우이다.

그 다음은 '하향 정보흐름(Informating down)'의 패러다임으로 매체의 활용의 주도권이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양된 단계이다. 즉 학생들이 개개인으로서 혹은 동료학생들간의 그룹으로서 매체를 통해 전보나 지식을 직접 다루거나, 매체를 통해 중요한 안건 및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단편적인 사이버 교육은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한다.

〈표Ⅱ-1〉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전개 양상

	자동화 (Automating)	상향정보흐름 (Informating Up)	하향 정보흐름 (Informating Down)	조직변형화 (Transforming)
목적	수업내용전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피드백 고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주도적 역할	현 교육환경의 대안
종류	• CAI, CBT • Stand-alone student computer • 초기원격교육 (라디오, 오디오, TV)	• e-mail • 화상교육 시스템 • Key Response Pad	• Hypermedia • Internet • 동시적 컴퓨터 컨퍼런싱 • Simulation • Computer Network	• 가상대학 • 가상 학습공간 • 지식공동체 • 비동시적 컴퓨터 컨퍼런싱

5) 이철환(2000). 홀리스틱교육관점에서 바라본 가상교육의 방향. 홀리스틱교육연구, 제4집 제1호. 115-117쪽, 한국 홀리스틱 교육 실천 학회.

	자동화 (Automating)	상향정보흐름 (InformatingUp)	하향정보흐름 (InformatingDown)	조직변형화 (Transforming)
특징	• 수동적(reactive) • 교수중심 • 지식전달	• 상호작용적 (interactive) • 개별적 학습 • 지식전달	• 적극적(proactive) • 협동학습 • 지식구성 및 공유	• 적극적(proactive) • 사회구성원의 참여 • 지식구성 및 공유 • 평생학습체제
시대	• 산업시대	• 초기 정보시대	• 정보시대	• 지식기반사회

자료 : 한국 홀리스틱 교육 실천 학회(2000). 홀리스틱교육연구, 제4집 제1호. 116쪽.

마지막으로 '조직변형화(Transforming)'의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적극성(proactivity)라는 용어가 나타내듯이, 교육의 주체는 완전히 '학생' 에게 이양된 상태이며,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도, 매체의 역할, 내용, 기능 등이 사용자의 의도와 뜻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상태에 이른다. 이 패러다임에서의 매체의 역할은 이전 정보기술 패러다임에서 보여준 단지 정보제공이나 정보흐름의 방향조정 같은 역할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신 교육환경의 본질이나 형태, 나아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발전·확대되는 단계를 말한다. 사이버 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일도 결국은 이 조직변형화의 패러다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지식사회에서의 교수 .학습환경을 살펴보면 〔표Ⅱ-2〕과 같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목하면 사이버 통일 교육이 단순하게 학교 통일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한정하는 편견에 대해 재고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표Ⅱ-2〉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교수·학습 환경

선형적 단계적 획일적 학습	→	하이퍼미디어 학습
주입식 전달식 수업	→	참여와 구성의 학습
수동적 학습자	→	자율적 학습자
학교교육	→	평생학습
지겨운 학습	→	재미있는 학습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	→	촉진자로서의 교사

자료 : 한국 홀리스틱 교육 실천 학회(2000). 홀리스틱교육연구, 제4집 제1호. 117쪽.

이상과 같은 정보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화에 발 맞추어 사이버 통일교육이 지향해야할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Ⅱ-3〕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표Ⅱ-3〉 통일교육 접근 방식의 변화

이전의 통일교육	**사이버 통일교육의 지향점**
● 정치·이념적 접근	● 상호이해적인 접근
● 정부 주도의 교육	● 정부·민간의 협력
● 강의 중심	● 다양한 매체 활용
● 정치·제도 통합 추구	● 사회·문화적 통합
● 주입식 학습	● 참여와 체험의 학습
● 공급자 위주의 교육	● 수요자 위주의 교육

Ⅲ. 사이버 통일교육의 추진 방향

1. 사이버 통일교육의 이념과 철학

1) 통일교육의 이념, 철학의 정립

개방된 사고(思考)와 화합을 추구하는 통일교육을 논의하는데, 실천적 구속력을 갖는 이념과 철학을 논의한다는 것이 다소 회의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교육의 이념과 철학의 정립은 교육의 지향점을 밝히고 일관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을 탐구하는 교육철학자들도 '교육철학이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은 교육철학의 개념을 규정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 입장과 관점에 따라 교육철학의 의미나 성격은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의 이념과 철학 역시 좁게는 학자의 수만큼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극단적으로 보면 국민의 수만큼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 못지 않게 그 철학을 정립하는 일 역시 시급한 문제이다.

교육철학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6] 첫째는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소신과 견해를 의미하며, 이런 의미에서의 교육철학을 교육관으로서의 교육철학 또는 일상적 의미에서의 교육철학이라고 한다.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이거나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육이란 무엇인가","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와 소신을 갖는다. 통일교육의 역시 개념과 목적,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이러한 이와 같은 견해나 신념을 일컬어 '통일교육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

6) 이돈희 외 (1997). 교육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둘째는 객관적 학문으로서의 교육철학으로서, 일상적 의미의 교육철학과는 구분을 필요로 한다. 일상적 의미에서의 교육철학은 주관적, 구체적, 실제적, 특수적인 반면, 학문으로서의 교육철학은 객관적, 추상적, 이론적, 일반적인 특성을 갖는다. 보편적 교육이론의 형성을 추구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교육철학의 역사는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의 교육철학은 주로 위대한 사상가들의 철학을 교육에 적용하여 추출해낸 교육관을 지칭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철학과 이념의 모색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로 한 담론이 되어야 하겠다.

교육의 내재적인 목적은 학습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진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에 이르는 것이다. 통일교육 역시 그 목적 및 방향이 주로 교육의 외부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곤란하며,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어떻게 연관지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통일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가 생활 속에서 '화해와 협력', '타자와의 공존'의 문화를 체득하고 실천해 나가는 분위기를 체험케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2) Martin Buber의 '만남의 교육'과 사이버 통일교육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열린 세계와의 만남은 인간 관계를 보다 넓게 확장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익명성을 보장받은 개인은 현실과는 다른 세계에서 보다 사실적이고 솔직한 만남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은 우리를 희망찬 기대가 아닌 또 하나의 인간적 고립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립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도 오히려 인근의 이웃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점을 들 수 있다.[7] 이

7) 이러한 우려는 카네기 멜론대학교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 'American

러한 고립과 단절의 역설적인 문제는 화해·공존을 도모하는 통일교육의 기본 취지와 크게 상충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은 진정한 만남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는데, Martin Buber[8]의 사상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진정한 「만남」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Martin Buber에 의하면 교육은 자기 결정적인 자아의 형성을 위한 것이다. 한 개인의 자아 또는 인격은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유일한 것이며, 어떤 제약이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인격의 형성과 성장은 교육이 이루어야 할 과업이며, 그를 위한 교육적 상황은 '만남'의 상황이어야 한다. 만남의 상황이란 인격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순수한 대화의 상황이며, 동시에 '자아'의 발견을 위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 자아는 다른 자아와의 관계를 통하여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익명성과 변화하는 주체로 야기되는 고립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참된 만남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려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

Martin Buber의 사상이 사이버 통일교육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것도 다지고 보면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선을 지향하는 것이다. 둘째, 아동을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성을 지닌 실존으로 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통일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 지향해야할 사이버 통일교육은 학습자가

Psychology'에서 사실로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우울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한용훈·강선보(1998), 정보화사회의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집 28.

8) 만남의 철학자 M.Buber에 의하면 참된 만남을 말하는 '나-너'의 관계는 주체와 주체,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며 동시에 '나'와 '너'의 상호적 관계라 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대화는 각자의 정체성을 지닌 채 대화에 참여하며, 책임 있는 신념으로 응답하는 것이며 타자의 현존재를 인정하고 상호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강선보(1997), 마르틴 부버의 '만남'의 교육, 서울 : 양서원, 117-119쪽.

주체적으로 통일의 담론을 구성해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셋째, 진정한 인격적 만남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사이버 공간이 갖고 있는 개방과 고립의 이중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철학이 될 수 있고, 나아가 통일의 철학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넷째, 선과 악은 보좌적인 관계이며 악은 정복되며 이 과정에서 교육이 작용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흑백논리를 넘어 새로운 화합을 도모하고자하는 통일교육의 취지와 잘 맞아떨어지는 측면이다. 다섯째, 인간은 다른 인격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실존한다. 다른 인격과의 관계는 남과 북을 넘어서는 민족의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섯째, 인간 공동체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에게 인격적 책임을 일깨워 주는 것을 교육의 과업으로 본다. 이 역시 통일교육을 넘어 통일의 담론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철학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2. 성인교육과 사이버 통일교육

1) 일반인들의 통일관 혼란

지난 정상회담은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생각과 통일관(統一觀)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남한의 기성세대들은 지난 50여 년 동안 북한을 스탈린 식의 전체주의 국가로 보았고 김정일 위원장을 냉혹한 인간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을 대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재치 있고 여유 있는 모습은 일반인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각종 여론 조사 결과는 남북정상 회담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변했고, 가치관의 혼란과 객관적인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언론의 왜곡보도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나 통일관련 보도에 대한 비판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것은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

성의 부족, 보도의 다양성 결핍, 무책임한 오보 등의 문제 등이다. 그러나 매체수용층의 무비판적인 절충주의 또한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방송매체에 의존하는 기존의 통일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암묵적인 합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언론매체와 반공교육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매커니즘은 '침묵의 나선현상(Spiral of Silence)' 으로 설명할 수 있다.[9] 대중매체는 소수의 의견을 침묵으로 몰아감으로써 대중매체가 유포하는 정보와 의견을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여론으로 만들어 놓는 강력한 사회적 효과를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중매체가 통일과 관련된 특정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비교적 동일한 관점을 갖게 만들어줌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다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제한시키거나 박탈하게 된다. 그 결과 사람들은 대중매체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관점이나 해설의 틀에 맞추어 사실을 바라보고 또 자기의 의견을 세우게 된다.

2) 평생학습과 사이버 통일교육

일반인의 통일에 대한 가치관의 혼돈 현상은 통일교육을 교사·학생 위주의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를 요구한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 통일교육은 강의나 강연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

9) 노이만에 의하면, 사람들은 특정 태도나 의견을 자기혼자 고집하여 그로부터 생겨나는 고립이나 소외를 기본적으로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의견이나 여론이 지배적이며 강력한 것인가를 용의주도하게 관찰하며 만약, 자기의 의견이 그 사회에서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는 여론이나 의견과 상충되었을 경우, 스스로 고립된다는 두려움을 갖게된다. 결국, 그런 고립이 두려워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표현하기를 꺼리거나 거부하게 된다. 그런 침묵이 나선형처럼 계속 반복되면 그 결과 지배적인 의견이 사회적으로 더욱 더 타당한 것으로 부각되어 마침내 하나의 주도적인 여론으로 자리잡게 된다. 한준상 외 12인(1997), 신교육사회학, 서울 : 학지사.

이버 공간을 통해 교육의 공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통일교육기관들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합의의 공간이어야 하며,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통일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평생학습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을 뛰어넘는 확장된 사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변화의 속도에 가속이 붙고 세계화를 지향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평생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은 끊임없는 혼란의 와중에서 둘러싸인 복잡한 세상의 지도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길을 찾는데 쓸 나침반도 제공해야하는데, 날로 변화하고, 복잡해지며, 상호의존적이 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고, 지식·기술·태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평생동안 써먹어야 할 지식을 어려서부터 저장하도록 주입시키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으며, 앞으로는 평생학습이 요구된다.'고 평생교육의 취지와 당위성을 밝히고 있다.[10] 기성 세대들에게 있어 지난 세월 익숙해 왔던 반공교육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통일관은 화해와 진정한 통일을 실현하려는 시대에는 더 이상 나침반의 기능을 해줄 수 없다. 결국 앞으로 지향해야할 사이버 통일교육은 그러한 모든 구성원들을 껴안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3. 통일 중심의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 모색

학생이 아닌 사회인들의 경우는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란 그리 쉽지 않다. 현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은 그 규모가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향과, 내용, 방법 등에 있

10) 김용주 외 역(1997),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서울 : 오름,107-108쪽.

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교육기관에 따라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체계화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11]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교육인 만큼 균형감각을 가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또 그 내용도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사실성과 시사성, 현장성을 중시하는 내용을 위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은 생활중심의 교육을 강조할 때 논의되는 개념이다. 'Core'란 사물의 중심을 의미하며, 중핵교육과정이란 중심학습 개념이 있는 교육과정의 전체 계획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은 기존의 도덕·윤리 교과에서만 담당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평생학습과 열린 학습을 지향하는 사이버 통일교육은 더욱 넓은 개념의 교육과정을 구상해야할 필요가 있다.[12] 이를 위해 통일을 중핵(core)으로 하고 모든 교과의 지식이나 사회적 환경을 이에 종합하는 교육과정을 구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통일중심 중핵교육과정은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통합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확장된 논의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는 1950년대 '새 교육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중심 중핵교육과정을 구상하여 실행한 전례가 있다.[13] 하지만 이 운동은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

---

11) 사회통일교육 기관은 대체로 정부기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들 수 있는데, 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통일교육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 최근 통일교육이 통합적이고 범교과적인 것을 지향해야한다는 의견은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통합의 개념은 정규 학교교육의 교육과정에 한정된 개념으로 중핵교육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13) 1955년 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의 개혁 운동을 전통적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새로운 교육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새교육'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새교육 운동은 이론적 수준에서 논의되었을 뿐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만큼 '새교육'에 대한 교육인들의 이해는 성숙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John Dewey의 버지니아주 교육과정(1934)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교육과정의 실천이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실천되었지만,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운동은 교사들의 자질 부족, 아동의 지적능력 저하, 학부모의 이해 부족 등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다. 김종서 외 2

니라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운동을 우리 나라에 실험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통일을 중심으로 하는 중핵교육과정은 시대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며, 다양한 통일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는 유동적인 Core를 형성하므로 광범위한 교육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협동적인 계획을 촉진함으로 인해 사회적인 학습동기가 일어나며, 여러 분야에 걸친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통일을 중심으로 확장된 중핵교육과정을 떠받드는 네 개의 기둥은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14]가 제안한 교육의 네 가지 기둥에 대한 논의를 적용하였다.

A. 알기 위한 통일 교육 (Learning to know)

이는 지식(knowledge)의 습득을 위한 학습을 말한다. 알기 위한 학습은 항목화 되고 코드(Code)화된 정보만을 획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와 방법에 숙달하는 것이다. 통일에 관한 사회의 담론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일 자체의 즐거움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

B. 행동하기 위한 통일교육 (Learning to do)

이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창조적 대응능력의 획득에 대한 학습을 말한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배운 바를 실천하도록 가르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통일교육이 미리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생겨나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을 넘어 통

인(1994), 최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256-258쪽.

14)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1997), 『21세기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UNESCO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종합보고서』-(김용주외 3인역), 도서출판 오름.

일 후를 대비하는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관점이며 기존의 통일교육이 교육을 위한 교육의 한계에 머물렀던 점을 반성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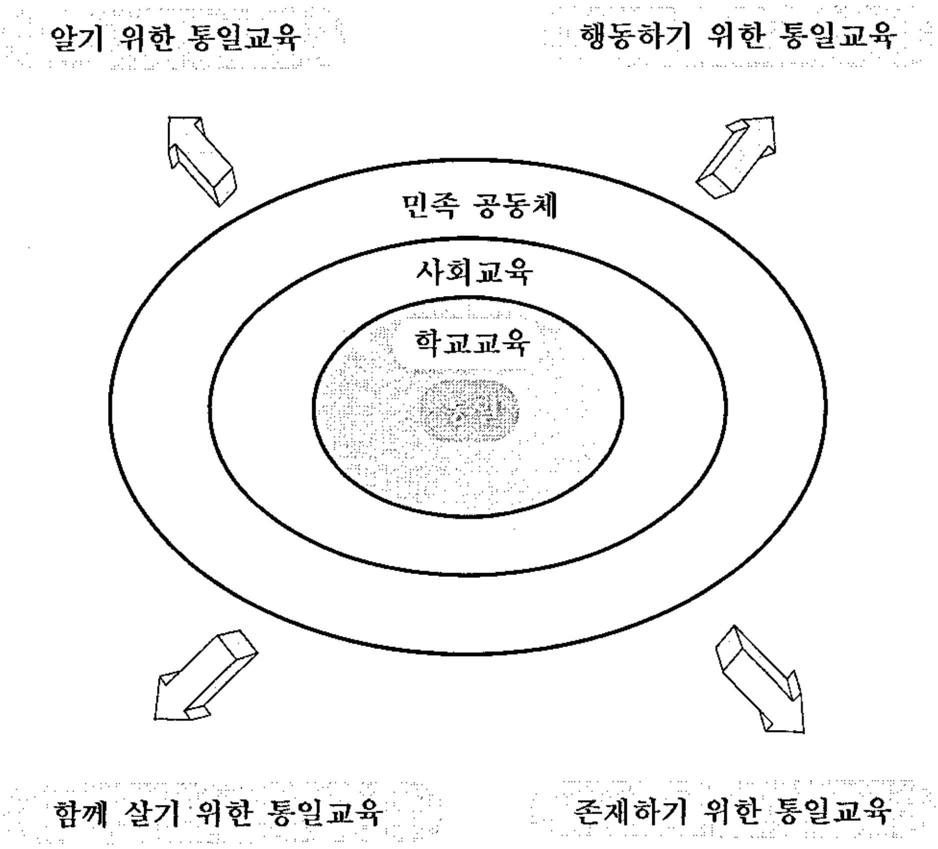
C. 함께 살기 위한 통일교육 (Learning to live together)

이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지역 사람과의 조화 있는 삶의 영위와 공존하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여 가는 것을 말한다. 함께 살기 위한 공존의 통일교육은 21세기를 여는 하나의 열쇠이다. 그것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삶과 직장생활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려는 교육적 대응이기도 하다.

D. 존재하기 위한 통일교육 (Learning to be)

통일교육은 공존을 위한 것으로써 결국은 존재하기 위한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서 앞의 세 가지 교육적 기능의 총체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공동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습자 스스로가 조화있게 살아가는 능력과 자세를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은 교육 발전의 목표를 인격의 완성에 둔다. 즉 교육은 학습자를 개인으로서, 가족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생산자로서, 또 창의적인 상상가로서 자신의 표현기술 및 다양한 임무를 모두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중핵교육과정 구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하여 세부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체화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통일 중심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의 개요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Ⅲ-1〉 통일중심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

Ⅳ. 사이버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 Simulation 학습을 이용한 사이버 통일교육

1) Simulation과 역할극

Simulation(모의상황학습)이란 공학자들에게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점차 인문 사회 과학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문 사회과학에서는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처럼 어떤 물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체제를 만든다는 점이 다르다.15) Simulation 학습의 장점은 먼저 학생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놀이'를 좋아한다. 아동들이 좋아하는 소꿉장난은 바로 Simulation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소꿉장난을 할 때, 정말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것처럼 행동하며 거기에서 가정생활의 기초를 배운다. 누구나 재미있는 일을 할 때에는 적극적이 된다. 학생들은 Simulation 학습에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가한다. Simulation 학습에서 학생들은 역사적 현상을 포함한 사회현상을 가상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반응(feedback)을 그 자리에서 받게된다. Simulation 학습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 학생들은 어떤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그 역할이 나타내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계층이나 타국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Simulation 학습과 비슷한 것에 역할극(role playing)이 있다. 대부분의 Simulation은 그 구성원 들에게 역할은 부여하고 있다. Simulation이 극히 단순할 경우 구성원들에게 부여되는 역할이 거의 없지만 보다 복잡해지고 정교해질수록 참가자들에게 복잡한 역할이 부여된다. 바꾸어 말하면 좋은 Simulation 프로그램일수록 역할도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가 같은 것은 꼭 아니다. 일반적으로 Simulation은 어떤 사회현상의 지적측면을 더 중요시하고 역할 학습은 정의적 측면을 더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Simulation 학습은 역할극에 비하여 규칙이 더 엄격하다.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양자는 달라야 한다. Simulation학습은

---

15) 서재천(1998). 사회과 시뮬레이션에 관한 일 고찰. 사회과교육. 통권 31호. 195쪽.

보다 지적인 면에 중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상황을 느껴보는 역할극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교함이 있어야 한다.

2) 역할극(Role play) 중심 통일교육의 문제점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체험이 불가능한 학습내용을 모의실험 형태로 체험하게 하는 수업이나 역할극이 민간단체의 통일교육에서 좋은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Simulation(모의상황학습)의 통일교육 적용은 막연하게 전달되는 주입식 수업과는 달리 학생의 흥미유발과 참여를 통해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능력과 태도를 배양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통일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왕래하고 접촉하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즉 언어문제, 가치관 문제, 주민간의 화합문제, 직장문제, 학교문제 등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은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깨닫게 된다. 다음은 통일교육 시범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할극의 대본이다.[16)]

가상 상황

통일이 되고 1년이 지난 지금, 김통일 선생은 고향 만리포를 떠나 나천 평양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총각의 몸으로 자취를 하는 김 선생은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그리워지면 가끔 집 근처에 있는 '아즈마이 칼국수'집에 들러 향수를 달래곤 했다. 그러던 중 최여인(칼국수집 주인)의 눈에 들고 그녀의 주선으로 민수림 선생과 맞선을 보게 된다.

16) 1999년 만리포 고등학교 국어과에서 가상체험 학습에 활용했던 역할극의 가상 시나리오이다.

민수림 : 고향을 떠나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김선생 : 그래도 통일 덕에 평양땅도 밟아보고 영광이지요. 수림씨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민수림 : 오마니는 가두녀성이고 아버지는 영화 책임연출을 하고 계십니다. 제 어머니는 한마디로 잔말쟁이라 저랑 다툼이 잦아요.

김선생 : (혼잣말로) 가두녀성, 책임연출, 잔말쟁이?…….

(방에서 엿듣던 최여인이 급히 나오며)

최여인 : 수림아, 통일도 되었는데 남한 말 좀 날래 배워야지 않겠니? 나야 이런 장사하다 보니 귀동냥으로 배웠지만서도.(김선생을 보며) 김선생, 가두녀성은 가정주부, 책임연출은 감독이란 뜻이고, 잔말쟁이란 잔소리꾼이란 뜻이에요.

김선생 : 아아, 그렇군요. 말이야 서서히 배우면 어떻습니까? 수림씨 취미가 뭡니까?

민수림 : 가무이야기도 보러가고 군중가요도 듣고 가담가담 동생이랑 명승지 유람도 하고 그래요.

김선생 : 군중가요는 대중가요를 말하는 것 같고 유람도 알겠는데 그 가무이야기는 뭐지요?

최여인 : 남한에서 말하는 무지컬인가 뮤지컬인가 인민배우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 말이죠.

김선생 : 아, 예예, 수림씨 그럼 우리 이번 토요일에 그 '가무이야기'나 보러 갈까요?

민수림 : 토요일? 문화일 말이지요?

김선생 : 그렇지.

민수림 : 그럼 토요일 낮 전에 제가 평양고등학교 차마당에서 김선생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선생 : 낮전에 차마당이요?

최여인 : 아이, 오전에 주차장에서 기다린다고 해야지! 이모가 큰 맘 먹고 우리 수림이 양복 적삼하고 잔주름치마 하나 사줘야 겠구나!

김선생 : 그럼 수림씨 토요일에 뵙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한 극화 학습은 학습자를 수업 속으로 흡인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은 물론, 지식이나 느낌을 상황을 통한 맥락으로 이해하므로 오래 기억하는데도 효과적이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극을 준비하고 실연하는 과정에서 상상을 통한 감정 이입이 가능하므로 가상상황을 경험하고 통일 준비태도를 함양하는데 매우 적합한 학습법이기도 하다. 역할극 중심의 통일교육은 소수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아이디어'이기보다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학생중심 교수 · 학습 방법을 통일교육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사회과에서는 Simulation, 역할놀이, 게임학습 등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수 · 학습 방법이 실행되고 있다. 최근 개정되어 실행에 들어간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Simulation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본래의 Simulation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델, 게임, 역할극, 놀이학습 등과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Simulation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역할학습과 비슷한 형태의 것을 모두 Simulation이라고 치부하는 형편이다.[17)]

다음에서는 역할극의 형태로 한정하여 Simulation을 좁게 파악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현실을 넘어서서 넓은 개념의 'Simulation 사이버 통일교육'을 논의하기 위해 학생층을 포함한 전국민의 폭발적인 호흥을 얻었던 드라마 '허준'을 하나의 도덕 · 윤리교육의 Simulation으로 규정하고 그 신드롬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2. 도덕 · 윤리교육 Simulation으로서의 드라마 '허준'

1) 드라마 '허준'의 흡인력

드라마의 흥행은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시청자의 대부분이 이미 그 줄

17) 1999년 12월에 실시된 사회과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Simulation'을 정답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대부분의 예비교사들도 'Simulation'을 '역할극'으로 착각하고 오답을 했음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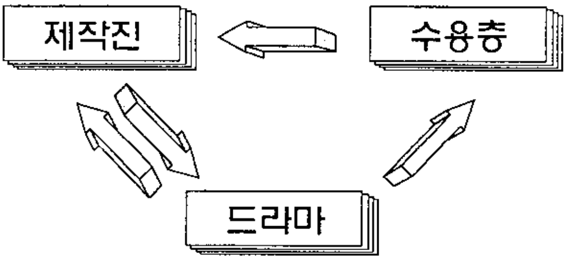
거리를 알고 있었으며, 이미 두 번이나 제작되었었던 드라마를 다시 제작했음에도 최근 MBC 드라마 '허준'은 60.6%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전국민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허준'은 매체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마 '허준'의 어떠한 요소가 '국민드라마'라고 불릴 만큼의 흥행을 가능케 했는지를 수용층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별한 매체에 의존하는 사이버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TV드라마는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전파를 타고 무조건 방영되고 있다.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극적 갈등을 극명하게 부각시켜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드라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흥미 위주의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 TV 드라마는 일단 완성된 상태에서 독자의 평가를 기다리는 출판 매체와는 달리 그 제작 과정이 매우 유동적이다. 소설의 경우 발표 당시에 독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한참 뒤에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TV 드라마는 일단 시청자의 외면을 받으면 조기 종영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다. 따라서 TV 드라마를 평가하는 틀은 소설과 같은 출판 매체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MBC 드라마 '허준'은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과 동일한 플롯으로 출발했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사건의 무게 중심이 소설에서 크게 일탈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허준이 신분의 제약을 스승의 가르침과 자신의 부단한 노력으로 극복하여 유명한 명의(名醫)가 되었다.'라는 핵심 줄거리에서 드라마 '허준'은 점차 '허준과 유도지의 대결', '잘못된 관행에 맞서는 허준', '의녀들의 애환' 등으로 『소설 동의보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벗어나갔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수용층의 요구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림Ⅳ-1〉 출판 매체와 같은 방식으로 파악하는 TV 드라마

드라마 '허준'은 〔그림Ⅳ-1〕과 같이 한 사람의 작가가 만들어낸 단방향의 의사소통의 결과가 아니라 수용층과 제작진의 끊임없는 대화로 이루어진 작용태(作用態)[18]로 존재하는 〔그림Ⅳ-2〕와 같은 양상이다. 또 그 매커니즘의 순환이 원활했기 때문에 수용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의 제작 회의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된 수용층의 반응[19]이며, 그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제작의 방향을 크게 수정해나간 드라마 '허준'은 누구도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동의 서사물인 셈이다.



〈그림Ⅳ-2〉 작용태(作用態)로서 존재하는 TV 드라마

18) 문학교육 학계에서 문학을 '文學現象'으로 파악하고 그 존재 양상을 역동적인 작용태(作用態)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1999 PP. 101-11

19) 드라마 '허준'은 시청자와 제작진과의 원활한 피드백을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방영 도중에 시청소감 공모 등을 추진하는 등의 열성을 보였다. 시청소감 공모의 경우 2000년 4월1일부터 15일까지 전국각지와 해외에서 1만 8천여 건의 응모작이 접수되었을 만큼 국민의 '허준' 열기는 폭발적이었다. MBC 홍보부(2000.5), 〈허준〉 시청자 소감 공모 결과, MBC매거진.

3) 사이버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드라마 '허준'을 보고 있으면 사극을 보고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는 드라마 '허준'이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사극을 지향한 제작진의 의도에 따라 권위적인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드라마가 반영하고 있는 시대정신이 16세기 조선사회의 모습보다는 오늘날의 현실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드라마 '허준'은 주인공의 인간성을 미화하고 개인적인 성취의 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도덕교과서에 적힌 대로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사회적 모순을 느리지만 차분하게 설득해나가고 있는 것이다.[20] 결국 의원 허준이 환자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 침술을 행했듯이 드라마 '허준'은 잘못된 관행이 팽배한 우리의 집단의식에 대해 정문일침(頂門一鍼)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지식으로 주입되는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도 윤리교육의 측면에서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매체를 통한 인간적 성숙'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학생층의 폭발적인 호응이 드라마 '허준'을 국민드라마의 경지에 올려놓았다

이렇게 본다면 드라마 '허준'은 일종의 도덕·윤리교육을 위한 Simulation으로 규정할 수 있다. Simulation 속에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주인공에게 자신을 투사(projection)과정을 통해 깊은 사고와 인간적 성숙의 기회를 갖는다. 사람들은 드라마의 주인공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드라마 속의 세속적인 삶을 비판하고 미워함으로써

---

20) 특히 37회 방영 분에서 부당한 처벌을 끝까지 수행함으로써 항거·개선하려는 허준의 모습은 '악법도 법이다'며 죽음을 택한 소크라테스보다도 한 차원 높은 적극적인 항거로 볼 수 있으며. 많은 시청자들의 감동을 자아내었다.

허준: (쓰러진 채 마음의 소리)스승님... 소인...국법을 어긴 벌을 받고 있으나 의원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습니다...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신의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이대로 쓰러지면...저들은 부당한 제도와 법을 앞세워 병자들을 소홀히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것입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힘을 주십시오...

- 드라마 '허준' 37회 방송 대본 -

죄책감을 완화시켜주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얻는다. 드라마 '허준'이 수용층을 흡인하는 힘은 계층, 연령층의 폭이 매우 넓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학교교육을 넘어서서 전국민차원의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사이버 통일교육의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수용층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며 또 실제의 상황을 가장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다.

3. Simulation으로서의 사이버 통일교육

1) 사이버 공간의 통일 열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최근 인터넷에 북한관련 사이트가 홍수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크게 남북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개설된 교육용 사이트와 북한 돕기 캠페인 등을 벌이는 인도주의적인 사이트가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현상을 다시 말하면 사이버 공간의 통일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단절된 벽을 허물고 그 간격을 좁혀보자는 취지에서 북한관련 사이트가 잇달아 개설되는 것은 오랫동안 경색되어왔던 그 동안의 관계를 생각하면 무척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통일 열기는 대부분 이벤트적인 성격이 짙다는데 문제가 있다. '북한 바로 알기' 퀴즈를 통해 북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거나(http://www.ntime.com), 북한 용어를 익히는 것(http://www3.joins.com/nk), 통일사이버대회(http://tongil.simin.org)등은 교육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일회성 행사로 끝나버리기 쉬우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효과는 미지수다.

2) 역할극(Role play)을 뛰어 넘는 Simulation학습

역할극을 통일교육에 적용한 사례들은 대부분이 통일을 받아들이는 가치판단과 태도 육성과 관계되는 것들이다. 언뜻 생각하면 고도의 가치판단력을 기르는 고차원적인 효과일 수 있지만 실제는 역할 학습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역할극 중심의 통일교육 역시 거시적이고 사실적인 차원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단발의 행사로 끝날 소지가 다분히 크다. 학생들이 이 교육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고 공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재미있게 역할 연기를 통해 얻은 결과가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식의 단순한 감동만으로 그친다면 교육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진정한 Simulation 학습을 위해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를 도모하는 체계성과 추후 과정을 두어 Simulation을 통해 파악한 의미를 음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예를 든 역할극 시나리오의 경우 통일 후에 만나는 남녀간의 언어의식이나 언어사용 양상의 이질적인 측면을 부각하는데 그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는 광복 이후 서로 다른 언어 정책과 문화의 차이에 의한 필연적인 것으로 단순히 이 것만을 부각시키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교육적인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북한이 고유어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 만든 말 중에는 우리의 말맛이 살아나고 남한의 언중에게도 친근감을 주는 말이 있다는 점도 있음을 소개하는 것과 통일 시대에 남북한 언어를 통일하는 문제와 관련된 더욱 발전된 Simulation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표Ⅳ-1〉 북한에서 새로 만든 말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한자어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찬단물	냉차	가갸표	기본음절표	성적증	성적표
올리굴리다	올려굴리다	겨울나이식량	월동식량	경위대원	경호원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한자어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녹아나다	녹다	새조롱	새장	재봉기	재봉틀
끓어번지다	끓어오르다	설인사	세배	건설장	건설현장
나들다	드나들다	탁구알	탁구공	숙제검열	숙제검사
손 젓다	손흔들다	창문보	커튼	직승기	헬리콥터
틀어쥐다	꼭쥐다				
내흔들다	내어흔들다				

자료 : 최현섭 외 (1999).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도서출판 영락.

〈표IV-1〉을 보면 '냉차'를 '찬단물', '속지'를 '속종이'라고 바꾸는 방식으로 만든 것은 북한이 말 다듬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견되는 예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통해 우리말 가꾸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언어의 이질화된 측면보다는 우리말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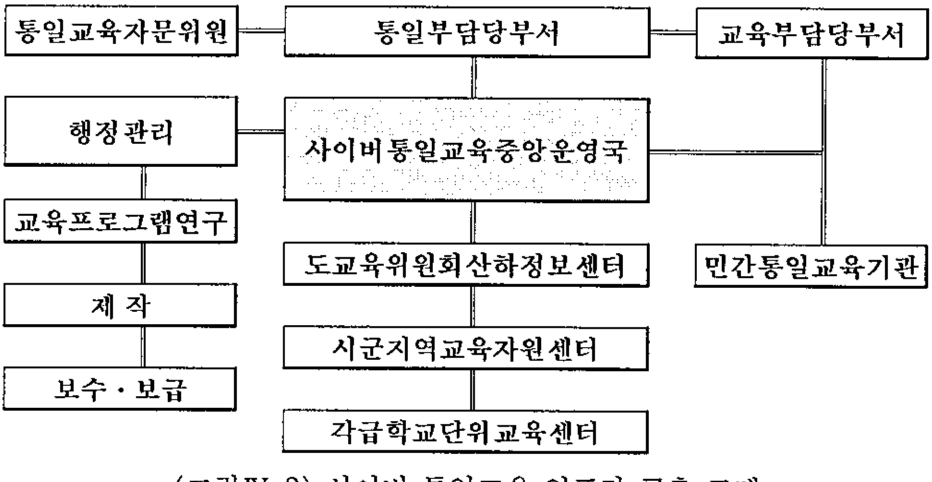
Simulation을 역할극의 개념으로 좁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생각이다. 이제는 사이버 통일교육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Simulation으로 보는 확장된 시각이 필요하다. 즉, 사이버 통일교육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통일을 교육한다'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통일을 중핵으로 하는 민족공동체의 하나의 거대한 Simulation'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Simulation은 드라마 '허준'이 도덕・윤리 Simulation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갱신을 하는 작용태(作用態)로 존재해야 한다.

3) Simulation 사이버 통일교육의 인프라 구축

Simulation 학습의 큰 단점은 크게 교수학습의 문제점과 제작상의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Simulation 학습은 준비 시간이 많이 걸

린다. 잘된 Simulation 프로그램이라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에도 여러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많은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일선 학교의 현실에서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그 다른 한가지는 일반적으로 Simulation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몇 시간에 걸쳐서 해야하는 큰 Simulation을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시간정도의 프로그램을 짜는 일도 만만치 않다. 특히 학교 현장교사의 입장에서는 정규교과 수업을 제쳐두고 어려운 Simulation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가 어려운 것도 현 실정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 두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그것을 공개하여 공동의 자산으로 공유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Simulation 자료와 수업 이후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된다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21] Simulation학습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통일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학교 단위, 지역단위, 국가 단위의 복합적인 연결망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델을 간단히 도시해보면 〔그림Ⅳ-3〕과 같다.



〈그림Ⅳ-3〉 사이버 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모델

21)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멀티미디어 본부(현재는 독립 기관으로 분리되었음)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교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이중에는 '주식 투자 놀이', '모의 재판'등 Simulation화를 시도한 것들이 있으나 아직은 미미하다.

V. 결 론

이상에서 본 논문은 '사이버 통일교육의 철학적인 지향점 탐색'과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추진방향 및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전자는 넓게 확장된 사이버 통일교육의 철학적인 지향점을 실존주의 교육학자 Martin Buber의 교육사상에서 찾을 수 있었다. Martin Buber에 의하면 교육은 자기 결정적인 자아의 형성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적 상황은 '만남'의 상황이어야 한다. 만남의 상황이란 인격의 만남을 가능케 하는 순수한 대화의 상황이며, 동시에 '자아'의 발견을 위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한 자아는 다른 자아와의 관계를 통하여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통일교육이 지향해야할 점은 이와 같이 포용과 '만남'의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한국을 위한 자기 결정적인 인격체를 길러내는 것이다.

한편,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을 사이버 통일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은 그 규모가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방향과, 내용, 방법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새로운 추진 방향이 요구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교육인 만큼 균형감각을 가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통일을 중심 핵으로 하는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은 거시적인 안목의 통일교육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사이버 통일교육의 확장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와 현재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Simulation 학습을 제시하였다. Simulation이란 직접 실현이 어려운 사건이나 과정을 가상적으로 재창조해서 학습에 활용하는 형태로서 단순하게 주입되는 통일관련 지식이나 형식적인 강의방법 보다 학생들에게 더욱 호소력이 크다.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전달 매체가 곧 전달 내용(The medium is the message)'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 이 말은 원래 전달 매체는 전달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그 전달 매체가 또한 그 자체로서 전달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는 매체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차이를 부각시켜 교육적 효과를 도모시키고자 그 성공적인 모델로서 MBC 드라마 '허준'을 도덕·윤리 Simulation으로서 상정하였다. 드라마 '허준'이 특히 학생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겪는 비도덕적인 사회에 대한 대응 방식을 자신이 처한 상황과 동일시하는 간접 체험과 이를 통한 반성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흥미 유발과 간접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 통일 이후의 상황을 역할극으로 꾸며 실연하는 방법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놀이는 준비와 제작 여건이 어려워 일회성의 행사로 그치기 쉬우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Simulation으로도 볼 수 도 없다. 실제로 Simulation은 역할극(role play)과 그 개념의 유사성으로 인해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잘못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Simulation을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데에는 교수학습상의 문제점과 제작상의 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학습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활용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사이버 통일교육은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학교통일교육을 넘어서서 성인교육,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통일교육을 기성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야 하며, 체계성과 공동의 자료공유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사이버 통

일교육으로 볼 수 있다.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교육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need) 발달단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은 결국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향점 탐색과 방법론적인 면을 중심으로 논의했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서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본 논문을 맺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선보(1997). 마르틴 부버의 「만남」의 교육. 서울 : 양서원.

고려대 교육대학원(1998). 교육논집. 통권 28호.

교육부(1997).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교육부(2000). 교육마당21. 7월호.

국어교육연구소연구총서(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권성호(1993). 교육공학원론. 서울 : 양서원.

김종서 외 2인(1994). 최신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김종서외 3인(1994).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 교육과학사.

김신일(1998). 교육사회학. 서울 : 교육과학사.

노명완 외 7인(1999). 국어교육학개론. 서울 : 삼지원.

박성익 외 2인(1998). 교육공학 연구의 최근 동향. 서울 : 교육과학사.

이홍우(1993). 교육과정탐구. 서울 : 박영사.

최현섭 외 2인(1999).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서울 : 도서출판 영락.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1998). 사회과 교육연구. 제31호.

한국홀리스틱교육실천학회(2000). 홀리스틱 교육 연구. 제4집 제1호.

한준상 외 12인(1997). 신교육사회학. 서울 : 학지사.

탈북주민의 난민지위획득에 관한 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하여

- 양면게임을 통한 전략적 접근 -

경상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 김 언 용

〈목 차〉

【요약문】
Ⅰ. 서 론
Ⅱ. 연구의 방법 : 양면게임의 전략 도입
Ⅲ. 탈북주민문제의 등장
Ⅳ. 탈북주민 문제의 전개
Ⅴ. 현 정부의 정책대안
Ⅵ. 새로운 시도 : 난민지위획득을 위한 양면게임 전략
Ⅶ. 결 론

【 요 약 문 】

심각한 식량난으로 탈북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유랑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을 한국정부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 본 논문은 정치·외교적 사안이면서 동시에 인도적 접근이 절실한 탈북주민문제를 양면게임의 논리로써 국제차원에서 개별국가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종단면적인 분석에서 국제차원과 국내차원을 종합한 횡단면적인 분석으로 접근하고 있다.

탈북주민은 1990년대 중반에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북한자체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공산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경제침체로 인한 식량난에 따른 것이다. 탈북주민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30만 정도로 추정하고 러시아는 약 12,000명 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언어상의 용이점과 국경지역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과 러시아의 고려인의 도움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결혼형태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혼의 결혼형태의 거주자가 많고 남성은 30~50%정도의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는 음식과 돈을 구걸하며 다니는 '꽃제비'들로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제법상 '난민'에 대한 정의는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르는 전통적인 정치적 피난민의 개념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정치적인 이유로 자국을 탈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난민의 개념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높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탈북주민을 난민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의 국내 인권관련 NGOs와 세계인권단체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탈북주민이 경제적인 이유로 탈북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헌법에 의해 국가의 반역자로 규정되어 정치적 박해를 당하게 되므로

전통적인 난민의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60년 초 북한과 체결한 '중국·북한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을 이유로 탈북주민을 불법월경자로 규정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과의 외교적관계와 동북아시아에대한 정치적 고려가 주된 이유이다. 또한 러시아는 1957년에 북한과 체결한 '민·형사문제에 있어서 호상법적효력에 관한 조약'을 이유로 탈북주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북한과의 외교적관계와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치적 고려이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조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한 체약당사국으로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인식되는 '난민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반행위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해 UNHCR은 난민보호업무의 경제적 어려움과 보호하는 난민의 수적 증가로 난민의 개념을 전통적인 정치적 피난민의 개념으로 축소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여론으로 탈북주민을 난민으로 보려는 추세에 있다.

한국정부는 1992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하여 UNHCR과 국제사회의 난민보호와 지원에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1993년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였다. 한국정부가 탈북문제에 대해 귀순을 희망하는 자는 전원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별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로써 햇볕정책을 경색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한국정부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게 탈북주민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탈북주민문제에 있어서 인도적 노력과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은 한국정부만이 할 수 있는 실정이기에 정부는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에 정부가 탈북주민문제를 양면게임의 논리로써 접근해 보면 북한

의 국내적 상황과 대외적 상황, 그리고 관련국의 국내적 상황과 대외적 상황을 관련지어 이해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협상대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탈불주민문제를 양면게임의 논리로써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으로 종합해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므로 탈북주민문제를 국내적 차원으로 접근해 보면 첫째, 한국정부와 국내 NGOs의 연계를 통해서 한국 사회내에서 여론을 공론화 하고 '재외동포지원법'과 같은 국내입법을 통해서 법적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NGOs와의 연계는 양면게임에 있어서 NGOs를 유용한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한국정부와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를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국내 여론을 탈북주민문제에 있어서 인도적이고 한국의 입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는 관련국내의 인권세력이나 또는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사회 등에 대한 경제적 협력이나 한국의 '재외동포지원법'과 같은 국내 입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국내 NGOs와 관련국의 국내세력과 연계하여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관련국 국내상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다.

다음은 국제적 차원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면 첫째, 지역적 다자간 인권협약체결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세계에 아시아 지역만이 지역적 다자간 인권조약이 없기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아시아인권협약'을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 인권위원회', '중앙아시아 인권위원회', '동남아시아 인권위원회', '서남아시아 인권위원회' 등으로 지역적 정서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지역별로 묶어서 아시아 지역 인권문제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협약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게 됨으로써 탈북주민문제를 중・북, 러・북간의 문제로써가 아닌 한・중, 한・러, 남・북한간의 인권문제로 자연스럽게 공론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아시아 지역 난민지원기금' 설립을 제안하며 이러한 한국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법상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및 협약'의 체약당사국으로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해법으로 가입을 유도할 수 있겠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범국가의 이미지에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변화를 꾀하려 하기에 인권협약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인권문제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회복과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지원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가입을 유인할 수 있다 하겠다.

그리고 탈북주민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인 UN을 살펴보면 1997년 8월 21일 제49차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관련 결의안'을 채택했고 1998년 8월 19일 제50차 인권소위원회에서는 1997년 결의안을 재확인하고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1995년 50차 UN총회와 1997년 52차 UN총회에서 한국 외무장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탈북난민에 대한 문제 제기는 메아리 효과에 의한 주요 관련국의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입장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양면게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해당 관련국의 윈셋(win-set)을 확대하여 우리의 외교협상력을 높이므로 탈북주민문제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2000년 6월 13일 역사적인 남북 두 정상간의 회담과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보게될 때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통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이 정치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경제적, 문화적, 정신적인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일문제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고, 이에 관해 넓게는 북한 전체의 인권문제와 좁게는 북한내 수용소의 인권문제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심각한 식량위기로 탈북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유랑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생각할 때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면서 2,000만 북한동포를 포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일게 된다.

이러한 탈북주민문제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실태가 공산진영의 붕괴로 식량구입이 어려워지고 1993년의 냉해, 1994년의 우박피해, 1995·6년의 수해 등으로 식량난이 가속화되면서부터였다. 식량난과 아울러 체제이완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요인들은 식량을 구하러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이유가 되었다.

의사소통의 용이함 때문에 조선족이 거주하는 중국의 동북 3성지역에 탈북주민들이 많으며 러시아, 동남아시아까지 탈북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탈북주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북한의 구조적인 경제정책의 실패로 등장한 식량난민으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여성의 경우 인신매매에 연루되거나, 남성의 경우 심각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갈 시 북한헌법에 의해 '국가반역자'로 규정되어 중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탈북주민을 난민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류국의 입장과 UNHCR의 입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도 한국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다르다. 재류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은 국제사회의 문제로서 탈북주민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그리고 UNHCR에서는 난민개념의 확대해석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는 외교적 비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민단체들은 탈북주민의 난민지위인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탈북주민의 지원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고조되고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논문들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 그리고 한국간의 외교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보다는 비교적 운신의 폭이 용이한 NGOs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정부가 남북관계의 평화구도가 경색되는 것을 막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비화를 우려하여 탈북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어 온 것을 이제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버트 D. 푸트남 교수의 양면게임의 논리를 통해 국내적 차원에서와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탈북주민문제의 정부의 접근방안에 대해서 본 논문이 취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는 기존 논문 및 문서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여 현재까지 다루어온 탈북주민문제의 방향과 논점을 이해하였고 다음으로는 종단면적인 분석에서 양면게임의 논리를 통한 횡단면적 분석으로 본 논문에서 목적하고 있는 바 한국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상의 한계로는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기초자료가 탈북주민의 재류국들의 외교적 입장차이로 공식적인 통계로서 불충분하다는 것과 한국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으로 실제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지원방법에 대한 방향성 모색은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의 밑그림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Ⅱ. 연구의 방법 : 양면게임의 전략 도입

1. 양면게임의 전략 도입

양면게임(Two-level game)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언제', '어떻게'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 에 주목하고 있는데 국제정치와 국내정치가 서로 얽혀있는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있어서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는 순차적인 관계설정이나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양분야를 포괄하는 일반적 이론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국제협상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다.[1] 이러한 양면게임은 양 분야가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기본 시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차원과 국제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내차원에서는 여러 국내집단들이 정부로 하여금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고 정치가들은 이러한 국내집단과 연합하여 권력을 유지 또는 획득하려 한다. 국제차원에서는 국가가 국제사회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불리한 결과를 극소화 하고자 하며 동시에 국내세력의 만족을 극대화하려 한다. 이처럼 외교 및 국내정책에 대한 정책결정자는 국제적 차원의 게임과 국내적 차원의 게임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 따라서 한 게임판에서의 수를 둘 때에도 다른 게임판에서 세력의 재편을 유도하여 양면게

1) Robert D. Putnam, "외교와 국내정치", 『외교와 정치: 세계화 시대의 국제협상논리와 전략』(오름, 1995. 8), p42

임이 아닌 상황에서는 불가능했던 목표가 달성되도록 고심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달성에 있어서 윈셋(win-set)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데 이는 협상에 있어서 내부구성원간의 국내적 비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을 의미한다.[2] 윈셋이 클수록 국내의 비준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윈셋이 협상당사자의 쌍방에 있어서 교차되는 부분이 많다면 합의의 도출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윈셋의 크기는 국내의 지지그룹들간의 세력분포, 선호 그리고 가능한 연합에 의하거나 그 나라의 비준에 관한 정치제도와 협상담당자가 전략적으로 조작하므로써 영향을 받는다.[3] 양면게임을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상담당자는 자국의 윈셋을 축소하거나 또는 확대하기도 하고 상대국가의 윈셋을 확대하거나 국내 이익집단의 초국가적 로비를 통해 원하는 바를 얻어 내려한다.

이러한 양면게임이론은 외교적 수단으로써 다양한 접근법을 시사함으로써 한국정부에게 복합적인 정치적 이해와 인도적 지원이라는 사안이 걸린 '탈북주민의 난민지위 획득'에 대해 효과적인 접근법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로버트 D. 푸트남 교수의 '양면게임의 논리'를 활용하여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에서 어떻게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탈북자 지원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를 국제차원에서 개별 국가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종단면적인 분석에서 국제차원과 국내차원을 종합한 횡단면적인 분석으로 접근해 보려 한다.

2. 탈북주민문제의 양면게임적 구조

1) 국내적 구조

탈북주민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은 탈북주민을 식량난에 따른 생존의

2) Robert D. Putnam, "외교와 국내정치", p48

3) 상게서, pp54-67

위협으로 탈출한 난민이 아니라 북한체제를 이탈한 '국가 반역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 헌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98 개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서 언급한 제63조의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한다.4) 이에 따라 탈북주민은 북한 형법 제47조에 의해 7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거나 사형 및 재산몰수형의 중형을 받게 된다.5) 이는 북한의 지배층인 핵심계층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통제를 목표로 제정한 것으로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지배층의 입장이며 다수의 피지배층인 동요, 복잡계층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북한 지배층에 대한 반체제성향의 운동이 조금씩 외부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는 북한 지배층의 지배력에 피지배층의 저항이 고조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6)

중국은 탈북주민문제를 국내적으로 소수민족정책의 연장선에서 조선족 사회와 탈북주민간의 연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탈북주민에 대해 국내 인권단체들의 요구와 우호적인 고려인들에 의해 몇몇 탈북주민에 대해서는 UNHCR과 협력하여 난민지위를 인정하였지만 공식적으로 탈북주민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고 국내 NGOs들은 탈북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2) 국제적 구조

'탈북주민문제의 해당관련국 및 국제사회가 탈북주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외교적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

4) 조서영,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40
5) 김명기, "재외 북한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위법성", 『월간북한』, 2000, 3, p154
6) 통일원, 『統一速報』,91-21, p5

해당국 / 개념	북한	중국	러시아	한 국	UNHCR
개 념	국가반역자	불법 월경자	불법 월경자	국 민	난 민

〈표 1〉 탈북주민문제관련 해당 관련국 입장

〈표 1〉에서 보다시피 북한은 탈북주민을 북한헌법을 근거로 '국가반역자'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과 1960년대 '중국 · 북한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을 체결하고 1957년에 러시아와 '민 · 형사문제에 있어서 호상법적효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주변국들에게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한과의 협정 및 조약에 의해 탈북자를 불법월경자로 규정하여 이는 중국과 북한 또는 러시아와 북한간의 현안이지 국제사회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법상 헌법 제2조에 북한주민을 한국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외교적 비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UNHCR은 탈북주민을 최근 난민으로 보려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탈북주민문제는 각국 간의 국내적 상황과 외교적 관계의 두 구조로 연계되어 있기에 양면게임의 논리로 접근하기가 적절하다고 본다.

Ⅲ. 탈북주민문제의 등장

1. 탈북주민문제의 등장 배경

탈북주민은 북한 내에서 심각한 식량난을 이기지 못해 국경을 넘게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식량난의 원인은 크게 북한자체의 문제와

북한의 외부적 환경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한자체의 구조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북한은 첫째, 주체농법에 의한 농업생산력의 격감과 집단 농장의 비효율적인 농업운영으로 생산력의 저하 현상이 야기되었고 둘째, 상습적으로 냉해가 존재하는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셋째, 황해도 일대의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평지보다 산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불리한 영농조건을 가지고 있다. 넷째, 영농장비와 기술의 낙후 등으로 인한 식량생산성의 정체 내지 감소경향이 수년간 지속되었고 마지막으로 지나친 농지개간사업으로 인한 산야의 황폐화가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이어지게 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1980년대까지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구소련과 중국 등의 동맹국으로부터 유료나 곡물을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는 '우대가격'이라는 조건으로 국제가격의 절반수준으로 식량구입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에서 보다시피 북한주위의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이후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곡물지원이 어려워졌고 특히 중국이 흉작으로 자체식량 공급 부족을 이유로 1994년 하반기 대북 식량수출을 중단하면서 식량난은 심화되기 시작했다.7)

또한 북한경제의 침체도 원인이 되는데 이것은 동구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을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던 북한이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게 되면서 198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심각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에너지위기는 북한의 전 산업을 마비시켰는데 한 부문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연관된 공장의 가동도 중단되는 연쇄현상으로 생필품의 부족사태와 비료, 비닐, 농약 등 농자재는 물론 농기계의 생산도 중단되었다. 이는 곧장 농업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식량생산문제를 심화시켰던 것이다.8)

---

7) 법륜, "북한식량난의 원인과 대북지원의 논리",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발표 원고임. (1997. 3)

이러한 식량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북한 주민을 2,200만으로 보고 북한 주민의 연간 식량소요량은 1인당 0.3톤을(1980년대 남한소요량인 1일 825그램 기준)기준으로 계산하면 6백 60만톤이 되고, 종자나 기타 가축의 사료 등으로 1백만 톤을 계산한다면 7백 60만톤이 된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이 1980년대의 5~6백만 톤 수준에서 1990년대 초반의 4~5백만 톤으로 낮아지고,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1994년 10월 황해남북도 지역의 우박피해, 1995년 7, 8월 두 번에 결친 홍수피해, 1996년 8월초의 홍수피해, 1997년 바다해일로 인한 약 10만 헥타아르의 농토 손실 등의 연속적인 피해로 인해 생산량이 3백만 톤 정도로 격감하여 식량난이 절정에 이르렀다. 1998년 3월 2일 북한의 '큰물피해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순수식량으로 필요한 양이 482만 톤이고, 1997년 생산량은 268만 톤이어서 최소한 2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고 하였다.[9] 이러한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곧 대량 아사자를 낳게 되었고 이에 따른 영양실조 및 질병만연과 식량절도와 강탈, 폭력과 살인 등 사회전반의 참혹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다.

1998년 12월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에서 발표된 『북한 식량난민 1694명 면담조사 결과 북한 식량난의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4%이상이 1994년도에 이미 식량배급이 끊어졌다고 증언함으로써 북한주민들간에 식량을 구하기 위한 이동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실제로 1993년 이후부터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의 북부지역에서 황해도 쪽으로 이동하는 '식량 구하러 다니기'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식량조달의 방법으로 생활필수품을 바꾸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빈곤층의 일부는 중국의 친척의 도움을 받고자 월경하는 사례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중국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돈을 받고 북

8) 김정남, "북한 식량난민의 분포 및 인권실태", 경상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학술세미나, 북한인권 및 탈북자인의 실태와 해결방안의 발표원고, (2000, 5, 18), p5

9) 강정구, "북한 식량난과 사회변화", 『1999 민족의 회망찾기』, p19

한으로 돌아오는 유형이 다수였다. 그러다 1994부터 1995년 사이에는 홍수피해의 영향으로 황해도 남북도 '식량 구하러 다니기'의 주민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일부의 협동농장과 텃밭생산의 잉여식량의 원천이 파괴되므로 이 시기에는 단기적 월경자의 성격에서 중국에 숨어살기 위한 월경자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1995년 11월부터 1996년 사이에는 중국으로의 난민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이후로는 급격하게 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10)]

이러한 탈북주민은 국경지역이 맞닿은 중국과 러시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언어상의 용이점과 국경지역과의 가깝다는 것, 중국의 조선족 또는 러시아의 고려인으로부터의 도움에 대한 기대심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북주민에 대한 실태연구는 탈북주민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다루려 한다. 이외에도 탈북주민들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혹은 중국을 경유하여 불법적으로 동남아시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 백명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대개 적절한 체류허가서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국제법상의 규정되어 있는 난민의 피보호권리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단속이나 체포조의 활동이 미미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UNHCR에 보호요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에서는 탈북주민에 대해 UNHCR의 활동을 보장하고 이에 협조하는 호의적인 분위기이며 북한당국의 강력한 외교적 반발이 없을 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탈북주민의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이러한 동남아시아국가들을 경유하여 UNHCR의 난민지위를 획득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가 상당하다.

---

10) 이영화, "재중 북한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원고 . (1999. 12), p86

2. 탈북주민의 실태

1) 중국거주 탈북주민의 실태[11)]

이들은 중국의 경우 연변을 중심으로 주로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다.그 인원은 많게는 30만에서 적게는 15만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UNHCR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재중 탈북주민들의 숫자가 약 1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12)] 이러한 재중 탈북주민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당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규제 때문에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환경이 극도로 제한되어있고 북한이나 북한의 주변국 정부의 공식기관의 통계가 발표된 바 없고 일부 국내 NGOs의 위험을 무릅쓴 조사활동으로 일부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더 많은 탈북주민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면에서 탈북주민실태의 심각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거주 탈북주민은 조선족 비율이 높은 마을일수록 거주하는 탈북주민이 많고 거주기간은 3개월 미만이 50.3%, 6개월 이상이 28.8%로 나타났다. 이것은 탈북주민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월경하여 단기간 머무르는 '식량난민'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장기체류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북한으로부터 먼 지역일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75.5%, 20~30대가 60.2%, 결혼하여 생활하는 사람이 51.9%에 달하는데 연변을 제외한 동북3성에서 거리가 먼 중국 내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90.9%, 20~30대가 66.5%, 결혼형태의 거주가 85.4%로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결혼을 통하여 정착하는

---

11) (사)좋은벗,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정토출판, 1999), p 23, 중국 동북부지역 2,479개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참조

12) 『동아일보』(서울), 2000. 8. 2, 탈북주민의 수는 7월 29일 UN을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프렌더가스트 유엔사무차장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 관계자의 면담을 통해 밝혀졌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본인의 의사와 반한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 결혼형태이거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혼의 경우가 대다수이다.

탈북주민의 69.6%가 결혼이나 친인척에 의탁하여 생활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노임은 받지 못하고 숙식만 해결되는 사람도 49.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탈북주민을 보호하거나 일을 시켰을 경우 적발시 3,000~10,000위안의 벌금을 내야하기에 중국주민이 도와주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또 최근 연변지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이기에 일자리가 많지 않은 형편이다. 여성의 경우 신분을 감추고 가정에서 주로 할 수 있는 보모, 간병인, 식당일 등을 하고 남성의 경우 농촌에서 농사를 하거나 남들이 꺼리는 일로 인분수레 끌기, 벌목공, 탄광일, 석탄보일러 때는 일 등을 주로 하고 이들은 중국인들이 받는 임금의 30~50%정도의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의 경우는 중국의 역전이나 시장을 떠돌면서 음식과 돈을 구걸하고 다니는 일명 '꽃제비'들로 생활하는 데 주로 10세이상의 남자아이들이 대부분이다. 한창 자랄 나이인데도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않아 15세 이상인 청소년들도 10~12세 정도의 키와 체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양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병을 앓고 있어서 집에서 먹고 살 수 없어 집을 뛰쳐나온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여러번 구걸하다 중국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또다시 월경하는 것은 아동의 경우 북한에서의 처벌이 경미한 것과 북한 내에서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월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겠다. 최근에는 범죄조직을 만들어 치안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1998년도 11월에서 12월의 한달 사이에 중국공안에 연행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주민은 연변지역에서 1,857명, 동북3성지역은 5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러시아거주 탈북주민의 실태[13)]

러시아에는 크게 세부류의 북한거주민 형태가 있다. 먼저는 외교관, 상사원 및 적법절차에 따라 송출된 노동자들로서 러시아거주 북한인의 대부분이다. 이들은 주로 모스코바에 거주하는 외교관과 상사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아무르지역 등 러시아 각 지역의 벌목장, 농장, 탄광 및 건설 사업장에 종사하고 그 수는 현재 약 12,000명 정도로 파악되는 북한의 노동자들이다. 다음으로 불법적으로 작업장과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나 북한으로의 귀환이 가능한 자들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상급자에게 일부의 외화를 상납하거나, 한국인과의 접촉이 없는 단순외화벌이였을 경우는 묵인되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되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된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탈출과 장기간의 탈출로 북한으로의 귀환이 불가능한 자이거나 한국행을 희망하는 자들이다. 또는 CIS, 몽골 등지로 유입되어 한국행을 희망하는 자들과 탈북주민으로 파악되는 부류이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였으나 통일연구원은 이들을 200~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14)] 이들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작업장을 탈출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여성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20~30대 또는 40대의 단신 남성들이 주류이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우수하고 고학력출신이 많은데 이는 러시아로의 파견이 북한 내에서의 근무조건보다 낫기에 비교적 우수한 인력들이 선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업장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출신성분이 낮은 지방출신들이 평양출신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들이 탈출하게 되면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은신처 확보를 위해 언어가 통하는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극동지역과 중앙아시아지역,

---

13) 윤여상, "재러시아 북한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원고, (1999, 12), p97

1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9", (서울:통일연구원, 1999) p138

모스코바 등지로 은신을 시도하는데 현지 고려인의 별장이나 자택, 또는 러시아인의 집, 교외의 농장, 공장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제공받고 있다. 러시아 경찰의 단속과 북한 체포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자주 옮기는 실정이며 겨울이 길고 추위가 심하기에 노숙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이 탈출할 때는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갖지 못한 상태로 현지어를 일정수준으로 구사하는 경우는 일자리를 얻는 것이 용이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최하의 급여를 받으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거나, 현지주민이나 한국인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게 된다. 이들이 북한으로 귀환을 포기하게 되면 한국 행과 러시아 현지체류, 제3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게 되며 이들 중 소수는 러시아 주재 UNHCR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으로 오기도 했다.

Ⅳ. 탈북주민 문제의 전개

1. 난민의 정의15)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A항 제2호에 따라 "난민"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써, 또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

15) UNHCR,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UNHCR, 1997) p69

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한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1967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는 197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정의에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시간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수용한 것이다. 이는 1951년이라는 기한설정이 협약이 체결될 당시 존재하는 난민상황에 대해서만, 또는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난민상황에 대해서만 제한하려 했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난민상황이 출현하여 1951년 협약규정을 새로운 난민에게 적용해야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1969년의 OAU(아프리카 단결기구)협약(OAU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 in Africa, September 10, 1969)의 제 1(2)조에서는 난민에 대한 정의로

'자신의 출신국 또는 자신이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 전체 또는 일부에 외부의 침략이나 점령, 외세의 지배 또는 공공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히는 사태로 인해 국가 외부의 다른 장소에 피신하기 위해 자신이 항상 거주하던 곳을 떠나도록 강요 당한자' 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의 주된 난민의 개념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최근 실향민이나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자국을 탈출한 경우로 인도차이나의 선상난민과 아이티와 쿠바에서 탈출해온 경제적 난민처럼 엄밀한 의미에서의 난민은 아니나 오늘날 현실을 고려할 때 자국을 탈출해온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난민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이에 편승하여 국제사회에서 UNHCR도 그 업무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국제관행으로 정착해 가는 추세이다.[16)]

난민의 정의와 관련해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상의 적용과정에서 살

펴볼 수 있는 '조국에 등을 돌린자'(Republikflucht)의 의미로 볼 때 공산국가에서 국외탈출자를 반역죄로 다스리는 것이 통례인데, 북한의 경우도 불법월경자를 정치범으로 규정하여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등 중형을 내리는 실정을 고려할 때 탈북주민의 정치적 난민의 성격 또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17]

2. 탈북주민을 난민으로 보는 경우

탈북주민의 다수가 극심한 식량난으로 월경하였기에 난민과 구별되는 '경제적 이주민'[18]으로 볼 수는 없다. 경제적 이주민은 협약상 난민정의에 포함된 것 이외의 경제적으로 좀더 나은 상황을 바라고 다른 국가에 거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떠나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단순한 식량난이 아니라 북한자체의 문제와 당국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체제상의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생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을 생명난민[19]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국내법상의 형법 47조의 자국을 탈출하는 행위의 정치적 반역자로 규정되기에 체포시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중형을 언도받는다. 그러므로 국제법상의 난민의 자격요건 중 '박해로 인한 공포의 충분한 근거를 가진자'에 해당하고[20] 탈북주민 스스로가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기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되어 난민

16) 지봉도,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법적지위와 이에 대한 지원 및 송환 대책방안', 『99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북한실태·인도지원(II)』, (통일부, 1999), p238

17) 최성철,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북한인권세미나 발표원고(1998, 12)

18) UNHCR,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p77

19) 지봉도,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법적지위와 이에대한 지원 및 송환방안", p253

20) 조서영,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p30

지위에 관한 의정서 상 난민자격의 요건을 충족시키게된다. 이러한 의견은 국내의 인권관련 NGOs 몇몇 단체(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등)와 세계 인권관련 단체(국제엠네스티, 국제적십자사 등)에서 강력하게 주장한다.

3. 주요 재류국의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입장

1) 중국의 입장

중국정부는 1960년대 초 북한과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북한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에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 1993년 11월 제 8기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 6차 회의에서 통과된 「길림성 변경관리 조례 선전 제강」, 1997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형법에 신설된「국경관리방해죄 」등에 의해 탈북주민을 불법체류자로 분류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1993년 11월 '길림성 변경관리조례'가 통과된 후 1994~1995년 동안 중국내 탈북주민들이 140명이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21] 이는 중국정부가 전통적 우호국인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관해 몇 가지 중국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첫째, 북한과의 전통적 외교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둘째, 탈북주민에 대한 난민지위를 인정해줄 시 동북 국경지역의 대량난민사태야기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셋째, 중국정부가 중요시하고 있는 소수민족정책과 반하여 탈북주민 문제와 동북3성의 조선족사회에서의 민족의식고취가 맞물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넷째, 탈북주민문제를 북한체제 붕괴의 적신호로 간주하고 이를 간접적으

---

21) 『동아일보』 (서울), 1996. 12. 26, '길림성 변경관리조례', 선전제강의 자료 참조

로 방지하려 한다. 다섯째,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탈북자문제를 국제공론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탈북주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인도주의적인 인권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만 다루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1982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체약당사국으로서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으로 인식되는 '난민의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33조의 강제송환금지 규정이 '강행규범'(jus cogens, cogent law)이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53조, 제 64조는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사이의 강제송환협정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 규정과 저촉되는 것이다. 또한 강행규범의 우선적 효력에 의해 강제송환협정이 무효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으로 탈북자를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위법행위인 것이 자명하다.22)

2) 러시아의 입장

1993년 12월 12일 확정된 러시아 헌법은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협정을 수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헌법에 인권담당 전권대표를 설치하여 인권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3년 2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하고 모스코바에 UNHCR 사무소가 설치되어있다. 그러나 공화국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경제적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인권은 법규정과 많은 차이가 있다.23) 러시아 정부는 탈북문제를

---

22) 김명기, "재외 북한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위법성", p146
23) 윤여상, "재러시아 북한난민의 실태와 보호방안", p104

1957년 12월 16일에 북한과 체결한 "민·형사문제에 있어서 호상법적 효력에 관한 조약"과 1995년에 갱신된 벌목작업장 관련 협약 제 14조에 의거하여 또 1996년 「러시아·북한간 영사협정」 개정에 의한 탈북자 체포 및 북한인도의무조항의 삭제 등에 관련한 협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1967년 3월에 체결된 임업협정에 의해 러시아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시베리아 벌목공중 작업장을 이탈한 벌목공 또는 북한을 탈출하여 러시아로 넘어온 탈북주민에 관해서 북한측에 엄격하게 단속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측 대표부와 공안요원들의 체포활동이 활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HCR을 통한 탈북자의 한국입국에 일부 협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존중하겠다는 기본방침을 따른 것으로 보이고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초반까지 한·러 관계가 우호적이었으며 벌목공의 인권유린에 관한 사회문제화가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UNHCR을 통한 러시아 당국의 협조가 모든 탈북자의 난민지위 획득과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뿐만아니라 극동지역의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러시아의 중앙정부와 다르게 기존의 북한당국과의 관행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측의 집중단속과 강제송환을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당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의 전통적인 외교적 우호관계 유지하려 한다. 둘째, 탈북주민문제는 국제기구나 한국정부와의 현안으로 볼 수 없는 국내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정부는 탈북주민문제를 간접적으로 묵인하나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상의 강제송환협정에 위반되며 북한당국과 체결한 '민·형사문제에 있어서 호상 법적 조력에 관한 조약'에 의한 범죄 구성요건에서 보면 탈북주민은 아사의 긴급한 위난을 피할 부득이한 상황으로 북한의 국경선을 넘어온 형법상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약상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므로 조약상 인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상기 조약에 근거한 의무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국제법상 중대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4. UNHCR의 입장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의 규정뿐만 아니라 UNHCR 규정 E(17)에 따라 UNHCR의 사무관이 제공하는 UN의 보호를 난민은 체약국에 거주하든 지에 상관없이 그 체약국이 협약난민으로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위임난민'으로 고등판무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24] 이처럼 난민자격은 신청자의 거류지 당사국의 재량에 의한 협약난민뿐 아니라 위임난민으로 보호가 가능한데 UNHCR의 경우, 구체적인 난민자격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난민의 범위를 1967년 난민 의정서의 규정상의 난민으로 축소 해석하려 한다. 이는 탈북주민에도 적용이 되는데 주된 이유는 많게는 30만 적게는 10만명 정도로 추산하는 탈북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현재 세계적으로 난민 5,000만명을 보호·지원하고 있는 UNHCR은 추가로 방글라데시 300만명 등을 포함하여 약 10억명을 더 보호하게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UNHCR은 난민지위신청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근거규정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한 확대된 난민개념 적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UNHCR은 일부 탈북주민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UNHCR이 탈북주민을 집단난민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

24) UNHCR, "난민 관련 국제조약집", p62

V. 현 정부의 정책대안

1. 관계부처(외교통상부, 통일부)의 정책 이해

우리 정부의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으로는 난민문제는 전세계가 함께 대응해야할 범세계적 과제이며 난민은 난민 접수국의 정치·경제·사회체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근지역과 국제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국제사회는 보다 긴밀한 지역 및 국제협력을 통하여 난민문제해결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여 난민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고 UNHCR 및 여타 인도적 구호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난민지위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1993.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난민관련 규정을 신설(94.7.1. 발효)하였고 1992. 12월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하여 난민인정을 받고자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상륙한 날 또는 입국한 날 혹은 난민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제출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동 내용을 조사 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필요할 경우 난민인정협의회를 통해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1994년부터 1998년 10월까지 난민인정신청자는 총 50명이며, 이 중 26명이 1998년 1월부터 10월간의 신청자로서 알제리 : 18명, 이란 : 9명,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 : 각 5명, 파키스탄, 라이베리아 : 각 3명, 이라크, 나이지리아 : 각 2명, 수단, 소말리아, 우간다 : 각 1명인 실정이다.[25)]

이처럼 우리 정부에서는 유엔의 난민개념 및 보호대상의 확대에 따라

---

25) http://www.mofat.go.kr/main/top.html문서, 외교통상부, 난민에 관한 우리의 입장

탈북자를 '광의의 난민'으로 간주, 보호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표명하며 법적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나, 인도적인 측면과 특히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의 박해 위험 등을 고려, 중국측에 대해 체류묵인 및 송환자제 등 특별배려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 탈북자를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에 따른 밀입국자 또는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고 탈북자 처리문제는 중국의 주권사항이며 중·북한간의 문제로서, 제3국정부나 국제기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며 "중·북한간 변경지역 관리의정서"(1986)에 따라 북한 주민의 불법월경 방지를 위해 북한과 협력하여 불법 월경자를 송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중·북한관계, 한·중관계 등의 외교적으로 복합된 문제로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것은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탈북자 자신들에게도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조용하면서도 내실있는' 대중국 외교(quiet diplomacy) 교섭을 지속 시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적으로 탈북자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중국 내 체류를 묵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고 UNHCR과 협의, 긴밀한 협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UNHCR 활동 범위내에서 탈북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과 인권 및 난민관련국제기구의 각급 회의시, 북한 인권문제와 함께 탈북자 문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거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26] 그리고 귀순을 희망하는 탈북주민 전원을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우리의 수용능력 및 관련국과의 관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이들의 국내이송이 어려울 경우 현지 정착 및 수용, 보호 등을 위해 관계국 및 UNHCR 등 국제기구와 협조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26) http//www.mofat.go.kr/main/top.html 문서, 외교통상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

법률"을 제정하여 1997년 7월 발효시켰고 1997년 중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장승길 주이집트 북한대사 등 고위층의 망명발생을 관련국과 협의하에 처리하기도 했다.27)

한국정부의 탈북주민에 대한 정책은 인도주의적인 접근보다는 국제관계와 외교역량의 한계, 그리고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 등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정책발표에도 반영되고 있는 바 정부는 탈북자의 국내 수용원칙과 관련하여 선별수용에서 전원수용으로 정책을 바꾸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별수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탈북주민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첫째,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반도의 탈냉전구도와 화해와 협력을 위한 햇볕정책을 경색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협력자로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셋째, 실질적으로 탈북주민을 전원 다 수용할만한 국내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한국정부는 탈북문제를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강력하게 제기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문제를 인도적인 측면에서나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상기 진술한 대로 북한은 탈북자를 '국가의 반역자'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인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들 문제를 다룰 직접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에 정부는 소극적이고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부 등에서는 재외탈북주민의 지원과 보호에 관한 정책보다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주민들에 대한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탈북주민의 국내 입국자는

---

27) 외교백서, 1997, p156

1994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149명을 기록하였다. 2000년 1월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주민은 총 1,105명이며, 현재 889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후 탈북주민의 탈북 양상을 살펴보면 외교관, 노동자, 벌목공 등으로 신분이 다양화되었고 가족동반 입국의 증가로 인해 여성·노소연령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차원에서 1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고 1998년 8월 각 자치단체의 "거주지보호담당관제" 시행으로 거주지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99년 7월에는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등의 실시를 통한 자립·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종합지원센터인 '하나원'을 건립하여 운영 중이다. 그리고 국내입국 탈북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1998년 12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초기 정착금을 기존의 2배로 상향조정하였고, 1999년 말에는 취업보호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취업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외에도 생계가 곤란한 일부에 대해서 매월 특별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8)

2. 최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과 검토

1999년 11월 11일 탈북자 7인이 러시아에서 국경감시팀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건을 살펴보면 이들은 체포된 다음날 러시아 국경관리국이 주선한 기자회견에서 굶주림과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탈북을 결심하였고 만약 북송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이들은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후 모스크바

---

28) http://www.unikore.go.kr/cgi-kr/body.cgi?31C31/C3128.htm 문서, 통일부, 대북정책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UNHCR에서 '난민'지위를 획득하였고 12월 30일 중국으로 송환되었다. 중국에서 1월 12일 북한으로 송환되었는데 『이들 탈북자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에서 밀입국했기 때문에 북한·중국 국경조약에 따라 이들을 북한에 송환했다』라고 우다웨이 중국대사가 중국의 입장을 밝혔다.[29]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러한 비판을 보면 첫째, 우리의 외교력의 부재 둘째,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성의, 셋째로 북한당국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0]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7명의 탈북자 중 어린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6명이 북한에서 수형 중에 있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수형소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으며 단지 생존만이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31]

Ⅵ. 새로운 시도: 난민지위획득을 위한 양면게임 전략

1. 국내적 차원의 게임

1) 한국정부와 국내 NGOs의 연계

(1) 탈북주민 문제에 대한 공론화

탈북주민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는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부문이며 통일 후 남북주

---

29) http://www.durihana.com/tb2000115.htm 문서, 한국외교 처참한 참패

30) http://www.durihana.com/tb20001182htm 문서, 통일외교위 탈북주민송환 맹공

31) 『한국경제신문』, 2000. 6. 22

민간의 민족공동체 의식에 지대한 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남북한간의 통일이라는 장기적인 구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정부와 몇몇 전문가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론화는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대안과 검토가 이루어지게 하고 정부와 국내세력, 특히 NGOs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높일 것이며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정부와 NGOs의 주도적인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론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대중매체인 TV나 신문을 활용하는 방안과 여론지도자들의 발표회를 통한 방안을 들 수 있겠다. 언론지도자나 학자들을 통한 다양한 학술 및 세미나들을 통해 여론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으로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을 통한 교육의 확대방안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 형성에 NGOs를 대거 참여시킴으로써 NGOs와의 상보적인 협력관계를 이루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공론화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입법과 외교정책의 변화, 국제사회의 인식고취 등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2) 정부의 국회에 대한 입법요구

탈북주민은 헌법 제2조에 의하여 남한의 국적을 가지게 되므로 국내법상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법상의 정의는 국제법상의 두 실체인 남한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엄연한 북한의 국적을 지닌 북한 국민이 되므로 이러한 난점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새로운 입법안은 탈북주민을 하나의 재외동포로 규정하여 동포로서 지원하는 법이 되어야 하는데 1999년 8월 12일 제정되어 발효 중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

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에 관한 정의에 있어 제 2조 1호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이라하고 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 건국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가운데 재중동포, 구소련지역 동포, 기타 일본과 미주지역으로 이주한 동포 가운데 현지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와 그 후손을 재외동포의 범주 밖으로 소외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전체 재외동포 약 554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제외시킨 것이다.[32] 이러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주민을 해외동포로 규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동 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외동포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해외동포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개정이 용이치 않다면 새로운 법률안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률안의 내용은 크게 경제적인 지원과 법률적인 지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제적인 지원으로써 '경제지원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고 현 국민의 정부의 '재외동포재단'의 활용으로 기금확보와 운용을 담당토록 하면 된다. 다음은 법률적 지원으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제 4조 정부의 책무를 보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외동포기본법이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권리와 대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안은 해외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법적지위와 지원에 관한

32) http://web.korea.ac.kr/~yoonin/koreans/재외동포법/이종훈2.htm 문서, 이종훈,"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안"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유도토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근거 위에 '긴급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현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을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국제차원에서의 국내 NGOs와 관련국 정부 및 NGOs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입의 개연성을 유연하게 하므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국 정부의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의지를 확인하게 하므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협상의 부문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여주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러한 국내의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내인권세력, 특히 NGOs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역으로 양면게임의 국제정치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한국사회에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국내의 법적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3) NGOs와 연계

정부의 국내·외적인 노력에 가장 큰 조력자로 NGOs의 활동이 필요한 데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적 노력이 당장 결실을 맺을 수는 없기에 긴급한 탈북주민들에 대한 인도적·경제적 지원은 NGOs의 활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속에서 NGOs들이 직·간접으로 활동하는 데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협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탈북주민을 돕는 NGOs들의 대부분은 주로 국내 NGOs들인데 이는 언어소통의 문제, 민족의식 등이 주된 이유가 되겠다. 이러한 NGOs에 대해서 대표적인 단체들로는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AI'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여론화 작업과 국제사회의 협력고취, 그리고 실태조사 및 경제적 기금전달 등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고 있다. 탈북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의 활동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탈북난민보호UN청원서명운동'에 서명자가 800만명이 넘었다는 최근보도[33]에서 NGOs가 국내의 여론화 작업과 국제사회의 협력고취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NGOs들을 살펴보면 종교 단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NGOs활동의 특성으로 인해 탈북주민들의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으로 실현되는데 제약이 있다는 점과 탈북주민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협력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들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NGOs와 협력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인데 먼저는 공신력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NGOs와 '합동 조사단'을 설립하여 중국과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에 있는 탈북주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34] NGOs와 외교통상부간의 '인권문제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특히 탈북주민문제에 대한 NGOs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해야한다. 이러한 지원의 내용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NGOs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적인 지원으로 다시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정부는 양면게임 수행에 가장 유용한 도구로써 NGOs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관련 상대국 외교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국내세력과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에서 다루기로 한다.

2) 한국정부와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

한국정부가 관련국의 국내세력과 연계하는 방법으로써 경제적 협력을 통한 방법을 들 수 있다. 특히 탈북주민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 내의 인권단체들이나 또는 탈북주민문제에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세

33) 『국민일보』 (서울), 2000. 8. 10

34) 지봉도,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법적지위와 이에 대한 지원 및 송환대책방안", p268

력을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내의 동북 3성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조선족들과 러시아 내의 고려인들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데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이들의 정치세력화에 간접적인 지원 및 친한세력의 확대를 통하여 중국이나 러시아내의 여론을 탈북문제에 있어 인도적이고 한국의 입장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선족이나 고려인에 대해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국 국내법상 '재외동포기본법'의 개정이나 '재외동포지원법'의 제정을 앞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조선족과 고려인의 협력하에서 관련국의 여론을 유도하고 이들이 정치 혹은 경제적 세력이라면 차기 정권 창출에서 한국정부가 경제적 교류와 지원 확대를 약속해 줌으로써 로버트 D. 푸트남 교수가 설명한 바 '상승적 연계'(synergistic linkage)[35] 라는 탈북자 문제에 새로운 협상대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 친한세력의 국내에서의 여론 고취와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취하는 외교상의 Win-set을 확대시킴으로써[36] 한국정부는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보다 용이할 것이다. 이는 여론을 통한 정치쟁점화가 오히려 협상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던 사람들까지 개입하게 되므로 지배적인 대안을 확인케하고 따라서 Win-set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것은 가장 큰 이해집단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을[37] 고려한 바 탈북주민문제에서 가장 큰 이해집단은 안보세력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한국정부가 탈북주민에 대한 경제적지원으로 관련국의 탈북주민의 난민인정 또는 보호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뒤에서 논의할 국제사회에서의 다자간 인권보장측면에서 북한의 붕괴에 대한

---

35) Robert D. Putnam, "외교와 국내정치", p61, 상승적 연계(synergistic linkage)는 국내비준세력에 있어 국내에서의 가능한 대안을 바꾸어 주는 국제차원의 사안연계를 말한다.

36) 상게서 p58, 한가지 대안을 가지는 것보다 다수의 대안을 가지는 것이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다.

37) 상게서, p59

동북아질서재편에 대한 우려 등을 줄여주는 것으로 협상의 여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3) 한국의 국내세력과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

한국의 NGOs들과 관련국 국내 NGOs들의 연계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탈북주민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 국내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관련국 정부에 대한 요구로 국내적으로 입법을 가능케 하거나 또는 정책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이끌어 내는 것에도 용이하며 비정치적인 활동으로 정부간 협상보다 탈북주민문제에 접근하기가 쉽다고 하겠다. 이처럼 탈북주민문제에 있어 중국 및 러시아의 국내 인권세력을 이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용이하다. 먼저는 외교적인 입장차이와는 무관하게 인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정부간 협상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반면 NGOs는 긴급한 탈북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지원과 관련해서 NGOs들 간의 연계는 더욱 유효한 데 현지 실정을 잘 아는 현지 NGOs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NGOs의 활동에 있어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가 한국의 NGOs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NGOs가 관련국 NGOs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여론형성 및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2. 국제적 차원의 게임

1) 지역적 다자간 인권조약의 체결 유도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지역만이 지역적 다자간 인권조약이 없다는 현

실에서 탈북주민의 문제를 남·북한 특수 관계로만 보았을 경우 운신의 폭이 더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시아 전체의 지역적 다자간 인권조약체결의 방향을 한국정부가 지원하며 주도하는 큰 구도 속에서 탈북자 인권문제를 다루었으면 한다. 이렇게 될 때 탈북주민의 인권문제와 지원이 남·북, 혹은 한·중, 한·러의 두 국가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지역의 보편적인 인권문제로서 내정간섭의 차원이 아닌 공동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차원의 인권보장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 존재하는 인권시스템은 크게 유럽, 미주, 아프리카로 나눌 수 있다.[38] 먼저 유럽의 인권시스템은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and Fundamental Freedoms'(유럽인권협약)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이는 1950년 참가국 사이에서 서명되었고 1953년부터 발효되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자행된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의 결과이며 침략국은 원칙적으로 국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과 전후 유럽세계에 있어서 호전적인 독일과 주위국들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럽 공동의 가치구현이라는 상호인식에 있었다. 유럽인권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로 The Council of Europe(유럽이사회)가 있는데 오랜 기간동안의 주된 활동이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광범위한 문제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상호협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 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Statute, Art.3에 명시되어 있는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주의하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이사회와 진실되게, 효과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의무는 유럽인권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입희망국가는 유럽이사회의 Committee of Ministers(각료회의)에

38) 박찬운, 『국제인권법』,(한울아카데미 306, 1999), p133이하

Art.3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총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임명하여 그 조사결과를 조회하게 된다.39) 이러한 유럽인권협약은 유럽이사회 외에도 The European Union(유럽연합)과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reration in Europe(국가안보협력기구, OSCE)를 통해 인권문제를 담당하고 있다.40)

다음으로 미주의 인권보장 시스템을 살펴보면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미주국가기구, 이하 OAS)의 Charter(1967년 및 1985년의 Protocal을 통해 개정된 내용)를 기본으로 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 and Duties of Man(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선언, 1948)과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미국인권협약, 약칭 American Convention, 1969년), Inter-American 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orture(미국 고문방지협약, 약칭 Torture Convention,1985년), 기타 Inter-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미국인권위원회) 및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미국인권재판소)의 설립 Statutes, Regulations 및 Rules 등을 통해 인권관련 규범을 두고 있다. 위의 American Convention은 Torture Convention과 마찬가지로 이에 가입한 나라들에 대하여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American Declaration은 모든 OAS 회원국가들에게 적용될 인권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 이는 American Convention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다.

---

39) 1994년 현장조사결과 러시아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들의 리포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신체의 자유, 개인의 안전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결함이 있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Rudolf Bernhart et al., Report on the Conformity of the Legal 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with Council of Europe Standards, reprinted in 15 Human Right Law Journal 249, 1994, p287

40) 박찬운, "국제인권법", p136이하

유럽 쪽에서는 재판전 구금의 기간이나 사생활과 같은 권리가 주로 제도 내에서 논의되어왔으나 긴급사태와 같은 사례는 거의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이것이 상식화된 사례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수한 고문, 행방불명 또는 처형 등이 일어났다. 따라서 미주의 인권기구가 유럽의 인권기구와 비교하여 다른 사건을 취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는 인권기구(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동 기구를 무시하거나 혹은 적대적으로 나오는 정부나 국내법 질서와 맞닥뜨린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남미의 독재정권은 인권기구와 정면대결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인권기구의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기도 하였다.

Inter-American Commission of Human Rights는 OAS Charter하에서 창설된 이 지역의 인권증진과 인권보호 그리고 인권문제에 관해 OAS를 자문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 Commission은 또한 American Convention과 Torture Convention에 가입한 국가들의 의무수행에 관한 문제를 관장하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Commission은 임기 4년의 7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선출권은 OAS의 총회가 가지고 있고 Commission의 본부는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국의 보좌를 받고 있다. Commission의 회의는 보통 워싱턴에서 열리나 가끔은 회원국에서 열리기도 하는데 회기 중에는 개인과 단체의 대표들로부터 청문을 실시한다.[41)]

그리고 아프리카의 인권장치는 1981년 6월 27일 Assemble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아프리카 국가기구 정부수반 총회)가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아프리카인권헌장, 약칭

---

41) 상게서, p149

African Charter)을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는 1986년 발효되었고 1995년 1월 현재, 49개 아프리카 국가가 가입해 있다. Charter는 다양한 human(인간)과 people(사람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로는 차별금지, 개인의 안전과 자유의 존중, 사상, 종교, 집회, 표현의 자유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서는 자결, 자연자원의 자유스런 활용, 개발, 및 환경권 등이 있다. 또한 Charter는 가족과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Charter는 감독기구로서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아프리카인권위원회, 약칭 African Commission)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Convention 체제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 Commission은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아프리카공동체)의 Assemble of Head State and Governments에서 선출되는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이 각국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인 이들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6년의 임기로 일을 한다. 동 Commission의 사무국은 현재 감비아의 반줄에 위치하고 있다.[42)]

이러한 지역적 인권보장시스템은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간의 '내정불간섭의 원칙'이라는 주권 불가침의 원칙을 고수하므로 인권문제에 회의적인 국가들에 의한 보편적인 인권문제의 희석을 막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보편 지향적으로 인권보장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UN에 의한 인권보장 시스템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아시아 세계에 공통적인 인권협약상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인권 협약'을 제안하여 아시아의 지역 인권보장 시스템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를 계기로 한·중, 한·러, 남·북간의 인권문제도 보다 자연스럽게 공론화 할 수

---

42) 상게서, p156

있고 해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인권협약의 모습은 '아시아인권협약'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 인권위원회', '동남아시아 인권위원회', '중앙아시아 인권위원회', '서남아시아 인권위원회' 등으로 지역적 정서와 인권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분위기가 비슷한 지역별로 묶어서 인권문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종교, 사회적 관습, 역사인식 등 사회제반의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며 또한 이러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아시아 인권협약'의 내용에는 이 지역에 '긴급한 피난민' 또는 '난민'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난민보호와 지원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난민의 보호와 지원이 구체성을 띠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 난민 지원 기금'설립을 제안한다. 기금의 설립 방법은 각 정부별 출자와 민간부분의 참여와 기금모집으로 나누어서 기금을 모금하고 이의 관리를 위해 '아시아 인권협약'의 감독기관과 실행기관이 이를 관리 운용토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시아지역 인권조약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난민발생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기금마련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 인권위원회에 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인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의 경우는 이러한 인권보장협약에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와 중국은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및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아시아 인권협약'을 통해 인권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정당한 해법으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송환사항이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것인 만큼 아시아지역 인권협약상에서 관계국 모두가 이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범국가로서 일본에서 국제사회

의 새로운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또한 막강한 경제력에 걸맞는 새로운 위상정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역별 인권협약에 대한 일본의 기여와 역할분담에 대해 유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겠다. 셋째, 북한의 경우는 북한체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탈북주민의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국제사회의 여론에 따라 서방세계의 대북한 경제봉쇄정책의 유도 원인이 되는 등 인권문제에 있어서 불모지처럼 여겨져 왔는데, 이에 대해 지역적 인권협약은 북한으로 하여금 주권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탈북주민의 지위를 다자간 인권보장으로 보장하게 한다. 또한 북한이 이러한 인권보장협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이 우려하는 바인 체제개방을 통한 북한의 붕괴를 국제사회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경제적인 지원획득과 관련하여 협상해 볼 수 있게 함으로 외교상에 실리가 많다고 하겠다.

2) 국제기구를 통한 접근

인권과 관련하여 UN을 살펴보면 UN총회와 ECOSOC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볼 수 있다. 특히 ECOSOC는 두 개의 하부기구를 두고 있는데 UN인권보장 기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Commission on Human Rights이며 다른 하나는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여성지위위원회)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하기 위한 하부기관으로 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사무국 소속의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인권고등판무관)과 그의 관할하에 있는 UN Center for Human Rights(UN 인권센터)가 있다.[43] 이러한 UN의 인권시스템은

43) 상게서, p70이하

genocide(집단살해), racial discrimination(인종차별), refugee(난민), 여성의 지위, 노예금지, 결혼, 아동, 청소년, 외국인, 망명, 장애자, 고문, 발전 및 사회적 진보 등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탈북주민문제와 관련하여 1997년 8월 21일 제49차 인권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는 UN인권기구에서 공식으로 채택한 최초의 북한인권관련결의안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고취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1998년 8월 19일 제50차 인권소위원회의에서는 제49차의 결의안을 재확인하고 북한정부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결의안이 다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95년 제50차 유엔총회와 1997년 제52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외무장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와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처럼 한국정부 및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탈북자 난민에 대한 문제제기는 '메아리 효과'에[44] 의한 탈북난민문제 자체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구조적인 입장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지역적 인권협약의 제안을 통하여 중국과 러시아 내의 국내비준세력을 인권협약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겠고 또한 국제법상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로 중국과 러시아에 메아리효과에 의한 기본적인 입장의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국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당국에 대한 문제제기를 권고토록 함으로써 문제제기의 수준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44) Robert D. Putnam, "외교와 국내정치", p70, 메아리효과에 의해서 국제적 압력이 국내정치에 뜻하지 않은 균형을 바꾸고 국제협상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극심한 경제적 생존의 위기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을 떠도는 탈북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등에 노출되어있고 북한으로 귀환도 어려운 현실에서 북한은 북한헌법상의 근거로 '국가반역자'로 규정하여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주민문제에 대해 중국은 북한과의 '중국・북한간의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해 러시아는 '민・형사문제에 있어서 호상법적 효력에 관한 조약'으로 탈북주민을 불법월경자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개입을 내정간섭화하며 인도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외교적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난민지위부여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UNHCR은 난민상의 확대된 개념의 적용을 기피하는 추세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남북한 평화구도의 경색화를 우려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정치적인 접근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탈북자 전원수용정책이 실제는 선별수용으로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외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내입국자들에 대한 지원에 중점되어 있다.

탈북주민문제가 국내 몇몇 NGOs들의 노력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해결이 어렵다는 점과 인도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외교적인 문제라는 점은 정부의 개입을 더욱 요구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국내적 차원으로 각 국의 국내집단간의 관계를 이해함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각 국간의 외교적 관계를 이해하며 활용한다는 양면게임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국내적 차원의 접근방법으로 첫째, 한국정부와 국내 NGOs와의 연계를 통해 탈북주민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의 여론화를 꾀한다는 것이

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관련국의 여론을 주도하며 탈북주민을 재외동포로서 지원할 수 있는 '재외동포지원법'을 제정하여 탈북주민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면게임 수행의 전략적 도구로써 NGOs를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정부가 경제적 협력의 방법으로 관련국의 국내세력과의 연계하여 관련국의 인권단체나 탈북주민문제에 우호적인 세력을 활용하므로 관련국의 외교정책상의 '상승적 연계'를 통한 새로운 협상대안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국내세력과 관련국 국내세력과의 연계하는 것인데 이는 시기적으로 긴급한 탈북주민을 NGOs 주도로 돕도록 하고 이에 관련국 국내세력의 협력하에 보다 실효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다.

다음으로 국제적 차원에서는 첫째, 탈북주민의 강제송환과 관련하여 해당 관련국의 국제법상의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정부 주도의 '아시아 지역별 인권보장협약'을 제안하고 추진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큰 구도 속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므로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보장을 가능케 해야 한다. 둘째, 탈북주민의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UN관련 인권기구 및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법상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여론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국에 대한 '메아리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방향은 한국의 외교협상력을 제고하고 관련국의 윈셋(win-set)의 범위를 확대함을 통해 탈북주민의 난민지위획득과 지원에 대한 합의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탈북주민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막고 실효성있는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단행본〉

(사)좋은벗,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정토출판, 1999.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306, 1999.

김태현, 유석진, 정진영, 외교와 정치, 오름출판, 1995.

〈논문 및 연속간행물〉

조서영,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김명기, 「재외 북한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의 위법성」, 월간북한, 2000, 3월호.

법 륜, 「북한식량난의 원인과 대북지원의 논리」,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공청회 발표논문, 1997, 3.

김정남, 「북한 식량난민의 분포 및 인권실태」, 경상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학술세미나 '북한인권 및 탈북자의 실태와 해결방안'의 발표논문, 2000, 5, 18.

강정구, 「북한 식량난과 사회변화」,민족의 희망찾기, 1999.

이영화, 「재중 북한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논문, 1999, 12.

윤여상, 「재러시아 북한난민의 실태 및 보호방안」,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논문, 1999, 12.

지봉도,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법적지위와 이에 대한 지원 및 송환대책방안」, 북한실태·인도지원(Ⅱ), 통일부, 1999.

최성철,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북한인권세미나 발표원고, 1998,12.

통일원, 「統一速報」, 91-2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9」 서울:통일연구원. 1999.

UNHCR. 「난민관련 국제조약집」 ,1997.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 1997.

〈신문〉

「동아일보」 (서울).2000.8.2.

----------------.1996.12.26.

「한국경제신문」 (서울).2000.6.22.

「국민일보」 (서울).2000.8.10.

〈웹사이트 문서〉

http://www.mofat.go.kr/main/top.html문서. 외교통상부. 난민에 관한 우리의 입장.

http//www.mofat.go.kr/main/top.html문서. 외교통상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입장.

http://www.unikorea.go.kr/cgi-kr/body.cgi?31C31/C3128.htm문서. 통일부.

http://www.durihana.com/tb2000115.htm문서. 한국외교 "처참한 참패" 중국.

http://www.durihana.com/tb20001182.htm문서. 통일외교위 탈북주민송환 맹공.

http://web.korea.ac.kr/~yoonin/koreans/재외동포법/이종훈2.htm문서.이종훈. 「재외 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의 문제점과 대안.

WBI을 활용한 초등학생 통일교육 추진 방안

- 초등아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

대 구 교 육 대 학 교

사회교육심화 1학년 박 웅 규

실과교육심화 3학년 김 동 현

〈목 차〉

【요약문】

Ⅰ. 서 론

Ⅱ WBI을 활용한 교육

Ⅲ. WBI을 활용한 통일교육 관련 현황

Ⅳ. 초등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추진 방안

Ⅴ. 결 론

【 요 약 문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웹을 활용한 교육의 효율성에서의 필요성

2) 웹을 통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3) 초등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에서의 필요성

현재 여러 단체나 기관들에 의하여 통일관련 웹 문서의 제작이 양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에 가장 중요한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즉, 웹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초등아동의 인지적 양식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3가지 필요성에 의하여,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웹기반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 연구하여 앞으로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WBI(웹기반 학습)을 활용한 교육과 초등교과과정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성과를 고찰하였다.

둘째,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인터넷 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셋째, 초등교사 및 아동의 통일교육 수업 관련 사이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넷째, 설문조사와 사이트 현황파악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추진방안을 제공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연구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WBI을 활용한 교육에 관한 연구성과를 분석·정리하였으며, 둘째, WBI을 활용한 통일교육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초등아동을 위한 통일교육의 고찰을 통하여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범위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사례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초등학교 방문(각주-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부산광역시 신금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현황 전반에 걸쳐서 담당인 안숙이 선생님과 3시간동안 토론하였다)을 실시하였다.

Ⅱ. WBI을 활용한 교육

1. WBI 활용의 당위성 : 구성주의적 이론에 근거한 자기 주도적 학습

웹 기반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은 능동적인 학습, 다양한 정보원(information resources)을 활용한 학습,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을 통한 학습, 실제적/맥락적 과제를 통한 학습, 교수자의 적절한 조언을 바탕으로 한 학습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임정훈,1999a, 웹 기반 문제해결학습 환경에서 소집단 협동학습전략이 온라인 토론의 참여도와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러한 학습활동들은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웹 기반 교육의 특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2. WBI의 교육에의 활용

교육에 있어서 인터넷 즉 웹을 이용할 경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

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안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지식의 구성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제 해결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내적인 동기 유발에 의한 자발성과 능동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관련된 학습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웹의 속성에 따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WBI를 활용한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상호작용적 교환(Interpersonal Exchanges)'으로써 주로, keypals(전자우편, 리스트서브, 뉴스그룹, BBS, 인터넷채팅), 공통관심거리에 의해 지역적으로 떨어진 지역간의 수업연결,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의 초빙, 전자공간상에서의 멘토링, 질문과 답변의 활동과 기능을 강조한다. 둘째는 '정보수집(Imformation Collection)'으로써 정보교환, 데이터베이스 개발, 전자출판, 데이터베이스 저장 등의 활동을 강조하는 경우이다. 세번째는 '문제해결 프로젝트(Problem-Solving Projects)' 유형으로서, 주어진 문제해결을 학교/수업과 연계를 통해 확장, 서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란에 개별적 작업결과의 공유,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학생간에, 학생과 교사들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동시적 컨퍼런싱, 시뮬레이션, 다른 지역과 연계한 기금모금과 같은 사회활동 프로젝트를 다루는 유형을 말한다.

Ⅲ. WBI을 활용한 통일교육 관련 현황

1. WBI을 활용한 통일교육 설문조사

일선 초등학교에서 WBI을 활용한 통일교육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140명[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항목의 구성은 객관식 13문항, 주관

1) 대구교육대학교 영어연수, 웹저작도구 연수를 받는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140명을 대상.

식 5문항으로 총18문항이며, 주관식 문항은 본 논문의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2. WBI을 활용한 통일교육 수업관련 Site 및 활용사례

사이트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사용자와 웹문서 형태의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즉,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이트, 교수학습용 웹문서와 참고자료형 웹문서를 구분하였다.

현황파악을 중심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참고자료용 웹문서에 있어 교사에게 적합한 자료는 비교적 풍부한데 비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자료는 많이 부족하다. 둘째, 교수학습용 웹문서는 개인(교사와 교육대학생 등)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제작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교실학습에 있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Ⅳ. 초등아동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추진 방안

1. 초등아동을 위한 통일교육의 고찰

WBI를 활용한 초등아동 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초등아동의 인지적 및 정서적 특성이다.

많은 교육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이나 태도, 습관, 가치관 등의 기본구조가 대부분 아동기에 형성되며 이 시기의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며 성장과 발달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교육적 배려가 요구된다. 결국 초등교육의 심리적인 관점은 아동이 발달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에서 아동이해의 틀을 갖게 하는 것과 발달의 과정에 적합한 교수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초등통일교육 내용

학교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현실, 통일의 과정, 통일 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도록 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도록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각주). 그 중에서 유아, 초등학교 교육에서의 목표는 첫째, 민주시민 의식과 민주적 태도와 심성의 함양 둘째, 통일의 당위성 인식, 통일을 위한 의지 고취로 설정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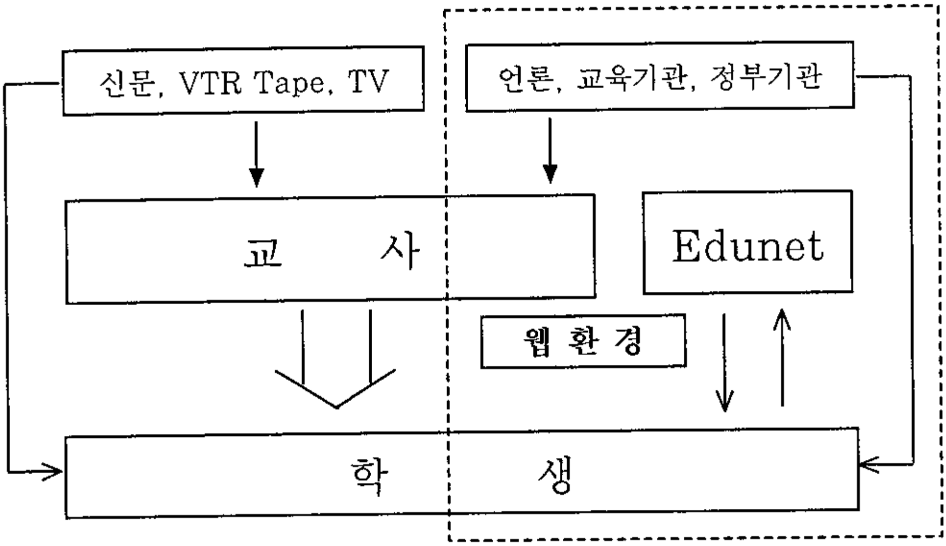
6차 교육과정까지의 통일교육은 그 동안 이념과 체제, 사상과 제도등과 같은 추상적, 포괄적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교육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이념과 구조에 관한 지식은 남북한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크게 부각시켰으며, 이런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무비판적인 수용은 일상생활과의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반향으로 7차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과 관련성이 있는 도덕과의 내용 체계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대북관 및 통일안보관이 현실을 바탕으로 균형감을 갖출 수 있도록 통일교육 내용요소를 보강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WBI을 활용한 초등학생 통일교육 추진 방안

1)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통일교육 관련 정보 흐름의 3단계 시스템

설문조사와 수업관련 사이트 및 활용사례에서 나타난 현황 및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현재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정보의 흐름을 정보의 생성, 정보의 재구성, 그리고 정보의 습득이라는 3단계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통일교육 관련 정보 흐름의 3단계 시스템

(1) 정보의 생성 단계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부재

설문지 1, 2번 문항의 응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아직까지 교사에게 있어서 통일관련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문, VTR Tape, TV를 통하여 주로 획득되어지는 현실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웹 활용 수업을 위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통일관련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초등아동들은 Off-line과 웹의 어느 곳에서부터도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설문조사와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일반인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관련 자료는 Off-line 상의 TV와 신문자료, 웹상의 정부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의 자료에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만, 통일교육에 대한 초등학생의 관심도에 비하여 이들 모든 매체의 자료들은 아동들의 이해도에 대한 적합성이 크게 떨어지는 현실인 것이다.

(2) 정보의 재구성 단계 : 교사와 초등아동에 의한 정보 재구성의 미비와 불가능.

설문지 3번 문항의 응답에 의하면 교사들이 통일관련 수업 준비를 위한 정보의 재구성이 인터넷 상의 정보보다 Off-line의 정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아동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현실이다. 정보의 재구성은 웹상의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을 통한 아동의 자료수집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아동에 의한 정보의 재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구성 과정을 통한 아동 주도적 학습 역시 불가능해진다. 많은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통일관련 정보를 웹을 통하여 재구성하여 아동에 대한 교실수업이 진행되어진다면 WBI활용의 장점이 어느정도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사의 많은 시간적 투입, 교실에서의 시설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한 아동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3) 정보의 습득 단계 : 초등아동의 수동적 습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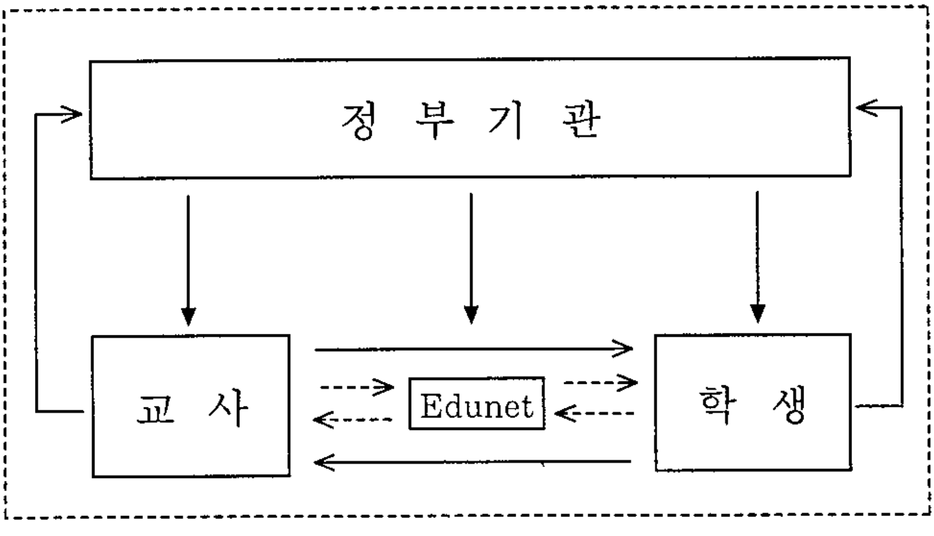
설문지 4번 항목의 응답을 분석하면 현재의 3단계 시스템 하의 통일교육에 있어 아동에게 적합한 정보에 대한 아동의 직접적 접근이 부족한 현실에서 수업의 효과는 오직 교사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아동들에게 수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대부분 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역시 웹을 기반으로하여 이루어지지 않음을 설문서 4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가 웹 활용 수업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아 웹활용 수업에 대한 지속적 노력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와 웹 상의 사이트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3단계 시스템을 단계별로 살펴 보았다. 즉, 아동 수준에 적합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한 아동 주도적인 정보 재구성과 능동적 정보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WBI를 활용한 통일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확대 해석하여 웹 상의 정보를 교사가 재구성하여 어느정도 WBI활용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겠지만 전체 교사가 투입해야 하는 노력과 현실적 어려움에 비교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생성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선 방안 : 통일교육 관련 정보 흐름의 2단계 시스템

통일교육의 3단계 시스템에서 나타난 현황 및 문제점들은 초등통일교육의 특성과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통일교육의 특성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의 생성, 정보의 재구성 및 습득의 2단계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추진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통일교육 관련 정보 흐름의 2단계 시스템

(1) 정보의 생성 단계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일교육관련 내용) 제공

첫째, 정부기관과 일선교사의 협동연구를 통한 아동수준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교사가 통일교육 관련 수업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홈페이지 또는 사이트는 교육기관 및 단체, 정부기관 및 단체 순이며, 이러한 순위는 교수활동의 주체인 교사의 입장이 많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사이트 현황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정부기관 및 단체, 언론기관, 교육기관 및 단체 순으로 통일과 민족관련 컨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국가적 중요성, 내용의 객관성, 경제적 문제 등을 더불어 고려하여 정부기관 주도의 정보생성이 요구되며, 이 때 초등교육의 전문가인 초등교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둘째, 아동의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초등아동의 높은 가소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관련 내용이나 지식의 배후에 감추어진 민족의 의지, 지혜, 노력, 성실, 협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단순한 현실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남북의 인내와 노력, 민족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Piaget의 인지 발달 4단계에서 초등아동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므로 아동은 지각과 구체적 경험에 의하여 통일과 민족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통일과 민족관련 내용이 지시하는 행동을 아동이 웹을 통하여 직접 실현해 볼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에서 남북 현실의 복잡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정보의 재구성 및 학습 단계 : 웹과 아동주도적 재구성을 통한 능동적 학습

첫째, 통일 및 민족관련 내용을 아동이 주도적으로 재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수준의 통일 및 민족 관련 내용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접한 아동이 자신의 인지 구조 속에 그 것을 수용하고 아동 주도적 재구성 과정을 통하여 현상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를 갖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이 바람직한 통일관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야한다.
-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각 관점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아동이 주체자가 되며, 교사는 아동들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자문 역할을 해야한다.

둘째, 웹을 활용한 능동적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WBI를 활용한 교육은 '상호작용적 교환(Interpersonal Exchanges)', '정보수집(Imformation Collection)', '문제해결 프로젝트(Problem- Solving Project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유형은 〈그림〉통일교육 관련 정보흐름의 2단계 시스템에서 정보, 학생, 교사의 각 구성요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학생, 학생-교사, 교사-정보의 모든 상호 관계 속에서 활용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의사소통-정보수집-문제해결 순의 낮은 단계에서 문제해결 유형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소통과 정보수집 유형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교실수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교수-학습 활동의 모든 부분이 웹 상에서 진행되기는 불가능하므로 아동수준의 웹자료가 구축되어 아동 스스로의 수업 및 학습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학습자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수업을 다차원적으로 차별화하여 제공하고 아동자신이 지닌 현재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게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개별 아동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내용 제시 방식을 결정하고, 학습 양식과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 활동을 설계하며, 그리고 학습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과제를 부과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의 학습 양식 유형은 학습자의 지각 양식 선호도에 따라 청각형, 시각형, 촉각-운동형으로 나누어진다. 청각형 학습자는 들으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며 대체로 분석적, 논리적, 계열적 사고에 뛰어난 반면, 시각형 학습자는 보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이해를 할 때 머리 속에 그림을 그려 이해하고자 한다. 촉각-운동형 학습자는 만지고 움직이면서 학습하기를 좋아하는 학습자들이다. 교사가 이러한 유형을 감안하여 교실수업을 진행한다면 WBI 활용 수업의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V. 결 론

WBI를 활용한 통일교육이 단순히 학습자에 의한 학습 과정의 관리라는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지식 구성 단계까지로 보고, 다양한 정보 중에서 아동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분류하여 활용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즉, 통일관련 수업에 대한 자료수집, 의사교환, 자료의 정리에 있어 아동 주도적이기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생성을 통하여 아동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교육 관련 정보의 흐름을 정보의 생성, 정보의 재구성, 그리고 정보의 습득이라는 3단계 시스템으로 파악한 후, 개선된 2단계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WBI을 활용한 초등학생 통일교육 추진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의 생성 단계

첫째, 정부기관과 일선교사의 협동연구를 통한 아동수준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정보의 재구성 및 학습 단계

첫째, 통일 및 민족관련 내용을 아동이 주도적으로 재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웹을 활용한 능동적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교실수업을 제공하여야 한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웹을 활용한 교육의 효율성에서의 필요성

학습은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사회적 경험이라는 전제 아래 면대면 수업은 그동안 가장 전형적이며 이상적인 수업 형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통신공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컴퓨터 기반의 웹 환경은 공간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습자, 교사, 전문가, 학습 자원들을 서로 연결시켜줌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교실'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웹 기반 학습과 같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은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면대면 수업 이상의 학습 효과를 창출한다는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웹 기반 학습이 앞으로의 교육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2) 웹을 통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통일 관련 자료 공급에 있어서 일방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사이버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네트워킹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북한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로 국내외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다양한 자료 은행과의 연결이 가능하며 자료 공급에 있어서 일방 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 점차 무관심 내지 냉소적 경향을 보이는 신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유도해 통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사이버 통일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신세대 청소년

들은 인터넷(internet)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 전자 우편, 전자 토론 등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들을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3) 초등교육의 중요성과 특수성에서의 필요성

많은 교육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이나 태도, 습관, 가치관 등의 기본구조가 대부분 아동기에 형성된다고 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며 성장과 발달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교육적 배려가 요구된다.

또한, 교육현장에 새로운 교수매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매체의 적합성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학습자들의 인지적 양식과 학습과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여러 단체나 기관들에 의하여 통일관련 웹 문서의 제작이 양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에 가장 중요한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즉, 웹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초등아동의 인지적 양식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3가지 필요성에 의하여, 일선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웹기반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하여 분석, 연구하여 앞으로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WBI(웹기반 학습)을 활용한 교육과 초등교과과정에서의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성과를 고찰하였다.

둘째,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위한 인터넷 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셋째, 초등교사 및 아동의 통일교육 수업 관련 사이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넷째, 설문조사와 사이트 현황파악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추진방안을 제공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연구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WBI을 활용한 교육에 관한 연구성과를 분석·정리하였으며, 둘째, WBI을 활용한 통일교육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초등아동을 위한 통일교육의 고찰을 통하여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세부적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WBI을 활용한 교육에 관한 연구성과를 분석·정리 하였다

교육을 위한 WBI 활용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주의적 이론에 근거한 자기 주도적 학습에 관하여 살펴 보았으며, WBI의 교육에의 활용 방식 및 사례를 살펴보았다.

2) WBI을 활용한 통일교육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 초등교사와 학생을 위한 웹사이트 분석 및 수업활용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초등아동을 위한 통일교육의 고찰을 통하여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근거한 초등통일교육의 특성과 초등교육에서 행

해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고찰을 통하여 설문조사와 수업관련 사이트 현황 파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현재 웹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정보의 흐름을 정보의 생성, 정보의 재구성 및 습득의 2단계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범위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사례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초등학교[2] 방문을 실시하였다.

Ⅱ. WBI을 활용한 교육

1. WBI 활용의 당위성 : 구성주의 이론에 근거한 자기주도적 학습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인터넷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인터넷에서 가능한 서비스 유형으로는 전자우편, 월드 와이드 웹(WWW : 기존에 제공되던 인터넷 서비스들이 World Wide Web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웹을 인터넷과 동일한 것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파일전송(FTP), 원격접속(Telnet), 인터넷 전화(Internet Phone), 전자게시판(BBS) 등이 있다.[3] 이러한 인터넷의 여러 서비스 중 웹을 주로 사용하는 WBI(Web Based Instruction : 웹 기반 교육)는 이러한 목적의 활용을 주도하고 있다.

---

2) 통일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부산광역시 「신금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현황 전반에 걸쳐서 담당인 안숙이 선생님과 3시간동안 토론.

3) 백영균 외, 「인터넷@교육」, 양서원, 1999, p.113.

WBI는 특정한 그리고 미리 계획된 방법으로써 학습자의 지식이나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학습내용과 상호작용을 웹을 통해 전달하는 활동이다. 웹 기반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은 능동적인 학습, 다양한 정보원(information resources)을 활용한 학습,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을 통한 학습, 실제적·맥락적 과제를 통한 학습, 교수자의 적절한 조언을 바탕으로 한 학습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4] 이러한 학습활동들은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웹 기반 교육의 특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1) 구성주의 교수-학습원리

사회와 교육은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해 가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산업사회에서는 학교에서 집단학습의 형태를 띤 교육이 이루어졌고, 정보화 시대라는 이름으로 규정되는 요즘의 사회에서는 기존의 교육환경, 목표, 철학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최근의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들은 학습자들이 세계 각 곳의 자원들, 전문가들, 동료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구함으로써 이미 종래의 매체들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교육적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가르치는 교사중심에서 배우는 학생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며, 그러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성주의 학습이론인 것이다.

구성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성주의와 대비되어 이전 산업시대의 세계관에 학문적 정당성을 부여하던 패러다임인

---

4) 임정훈, 「웹 기반 문제해결학습 환경에서 소집단 협동학습전략이 온라인 토론의 참여도와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a, p.2.

객관주의5)에 대한 간략한 규명과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이 현실을 살아가고 이해하는데 본인에게 의미 있고 적합하고 타당한 것이면 그것을 진리요 지식이라고 보며, 이런 지식과 진리를 구성해 나가는 것과 그 과정이 구성주의의 최종목표가 된다.

각 패러다임의 교수-학습원칙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객 관 주 의	구 성 주 의
· 추상적인 지식과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 · 가능한 한 현실을 단순화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시	· 항상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지식을 제공 · 현실의 복잡함을 그대로 여과 없이 제시하여 인지적 도전을 유도
· 모든 지식은 수업 이전에 미리 세밀한 계획에 따라 구조화, 순서화, 체계화하여 제시	· 모든 지식과 과제는 항상 실제로 사회에서 대면하게 될 성격과 특성을 지닌 것으로 제시
· 교사와 학생의 역할: 지식의 전달자와 지식의 습득자로서의 관계	· 교사와 학생의 역할: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는 조언자, 촉매자로서의 교사와 자율적이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습의 주체로서의 학생의 역할
· 개별적 학습환경: 개인과제, 개인활동, 개인의 성취의 중요성 강조 · 지식의 암기와 축적	· 협동학습환경: 다양한 견해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습득 · 문제해결력, 사고력, 인지적 전략(how to learn)의 습득, 지식의 전이성 강조

〈표1〉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교수-학습원칙6)

5) 객관주의(objectivism) : 일반적으로 객관주의는 심리학 이론인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17세기 이후 서방세계의 인식과 사고를 지배해 왔으며, 특히 산업시대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

6)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1997, p.18.

결국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교수-학습원칙은 근본적으로 각 패러다임의 지식과 현실에 대한 정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의 교수-학습원칙을 바탕으로 두 패러다임간의 수업설계 방식과 원칙의 차이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객 관 주 의	구 성 주 의
설계와 분석	누가	수업설계자/교사	학생 개개인 스스로
	언제	수업 전	수업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어느만큼	세분화, 순서화, 연계화	전체적 학습목표만 설정
수업 평가	누가	수업설계자/교사	학생 본인, 동료학생, 그리고 교사
	언제	학습목표 설정과 동시에 설계한 뒤 맨나중에 실시	수업하는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수행
	형태	객관식 평가	다양한 형태(객관식, 주관식, 관찰, 포트포리오, 프로젝트, 저널 등)

〈표 2〉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수업설계 방식과 원칙의 차이점[7)]

따라서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의 설계에 있어서는 학습 내용을 순차적으로 단순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처럼, 어느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또 복잡한 특성 그대로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 세계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경험이나 관점을 접하면서 사건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보게끔 한다. 따라서 학습의 목표를 학습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며, 학습자가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해 가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8)]

7) 강인애, Ibid., p.19.

2) 자기주도적 학습의 개념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학습에서의 유의미한 지식 구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학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학습 경험을 계획하고 필요를 진단하고 자원을 찾고 학습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과정"9)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그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서는 지식을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학습자의 자기주도성보다는 일련의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관리자로서의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의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학습 활동의 관리자로서만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부각시키는 경우는 오히려 자기주도적 학습을 매우 제한적인 의미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유의미한 지식의 구성'이라는 학습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 도외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식 구성과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에 관해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입각하여 논의하는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내재적 가치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과연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간주하 듯이 자기주도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구성주의자들은 학

---

8) 강숙희,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학습 환경으로서의 매체의 활용」, 교육공학연구, 제13권 제1호, 1997, p.120.

9) 백영균 외, 「에듀넷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모형 및 워크북 개발」, 연구보고 RR 97-4, KEDI, 1997, p.6.

습자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내재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사람들은 하나의 상황을 보는 데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고유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지식과 의미를 구성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은 백지 상태가 아니며, 심지어는 초등학교 1학년생조차도 자신의 실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타당한 방안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학습자가 가진 '자기주도성' 혹은 '학습자 주도권'은 지식의 구성이라는 학습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며, 또한 구성주의적인 학습 환경을 설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의 하나가 된다. 구성주의적 학습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성 혹은 자율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10)

> 오직 학습자들만이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 학습자들만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선수 지식을 안다. 학습자 자신만이 구성적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의 학습을 진단할 수 있다. 교사와 같은 외부인은 결코 학습자의 내부를 접할 수 없다. 오직 학습자 스스로 추구할 목표만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결코 강요할 수 없다. 반성 또한 학습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구성적인 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전제로 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자는 학습의 계획과 실행, 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학습 과정에서 일차적인 주도권을 가진다. 따라서 자기주도적 학습의 성패 여부는 학습자가 이러한 학습의 주도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행사하는 지에 우선적으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의 주도권을 갖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11)

---

10) 백영균 외, Ibid., pp.7-8.

11) 백영균,「열린수업에서의 멀티미디어 이론과 그 적용.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방법과 적용(워크숍 자료집)」, 연구자료 RM 97-3, 1997,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pp. 1-18.

- ㅇ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있어야 한다.
- ㅇ 학습의 참여 여부와 참여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해야 한다.
- ㅇ 자신의 학습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정의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 ㅇ 학습 내용 및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 ㅇ 학습자의 자율적인 자기 판단과 자기 평가가 외부의 객관적 평가나 교사 및 전문가에 의한 평가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중시되어야 한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학습자에게 단지 학습 활동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유의미한 지식 구성 활동에 능동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제 및 활동이 조성될 때 가능할 것이다.

2. WBI의 교육에의 활용

1) WBI 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웹을 이용해서 교수활동을 해 나갈 때에는 다른 교수매체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달되는 정보들의 역동성과 상호작용성이다. 즉 서적을 통해 불가능했던 동영상, 음성자료들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일반 비디오테이프를 통한 자료보다 훨씬 더 상호작용성이 강하며, CD-ROM과는 달리 전세계인들을 즉석에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웹을 이용해서 교수활동을 해 나갈 때에는 정보나 자료를 수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웹은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전달매개체의 기능을 띤다. 따라

서 웹을 통한 학습내용의 전달도 가능하다고 본다.

넷째, 웹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 제공자의 기능을 띤다. 웹을 이용하면서 교사와 교수설계자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세계로 학습자들을 이끌 수 있다.

다섯째, 웹은 독립된 특정 주제를 다루는 기능을 띤다. 따라서 관심 분야별로 구분하여 다루고자하는 주제와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만으로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다.12)

인터넷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인증된 과제를 선정하고, 실제와 동일한 학습 맥락을 제공하고,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고, 또 학습 결과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주의 교수 원리를 실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한다.13) 이러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설계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4)

- ㅇ 멀티미디어를 학습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다양한 환경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습자가 여러 학습 방법, 다양한 학습 자원들의 대안으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ㅇ 멀티미디어 활용이나 설계에 있어서 학습 계약에 의거하여 학습하는 주도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ㅇ 동료집단 조직을 활용하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 ㅇ 교사는 분위기 조성자로서 공동 학습자의 역할을 한다.
- ㅇ 정보원, 조사 대상으로서의 멀티미디어의 성격이 정립되어야 하고, 표현하는 활동의 도구로써 토의 등의 프로젝트 수행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

12) 백영균, 「웹 기반 수업의 구성과 그 논의 점들」, 교육과학사, 1998, pp.23-48.
13) 박인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구성주의 교수원리의 실현 매체로써 인터넷 고찰」, 교육공학연구, 제12권 제2호, 1996, pp. 81-103.
14) 백영균, Op.cit., pp.17-18.

따라서 인터넷 즉 WBI을 이용할 경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안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지식의 구성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과제 해결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내적인 동기 유발에 의한 자발성과 능동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관련된 학습 내용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교사는 지식의 일방적인 전수자가 아니라, 과제 해결을 위한 학습 활동의 궁극적인 책임은 학생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15)

2) WBI의 교육에의 활용 방식

이와 같은 웹의 속성에 따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WBI를 활용한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6) 첫째는 『상호작용적 교환(Interpersonal Exchanges)』로서 주로, keypals(전자우편, 리스트서브, 뉴스그룹, BBS, 인터넷채팅), 공통관심거리에 의해 지역적으로 떨어진 지역간의 수업연결,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의 초빙, 전자공간상에서의 멘토링, 질문과 답변의 활동과 기능을 강조한다. 둘째는 『정보수집(Imformation Collection)』으로써 정보교환, 데이터베이스 개발, 전자출판, 데이터베이스 저장등의 활동을 강조하는 경우이다. 세번째는 『문제해결 프로젝트(Problem-Solving Projects)』 유형으로서, 주어진 문제해결을 학교수업과 연계를 통해 확장, 서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개별적 작업결과의 공유,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학생간에, 학생과 교사들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동시적 컨퍼런싱, 시뮬레이

15) 백영균 외, Op.cit., pp.20-22.

16) Harris, J, Educational telecomputing project: Information collections, Learning and Leading with Technology, 1995, 22(7), pp.44-48.

션, 다른 지역과 연계한 기금모금과 같은 사회활동 프로젝트를 다루는 유형을 말한다.

① 상호작용적 교환(의사소통 유형)

의사소통 유형은 전자우편이나 토론방 및 게시물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들과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현장에서 전자우편을 활용하면 소속집단 내에서의 의사소통이나 자료교환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거리상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외국의 사람들과 사귈 수도 있으며 그 지역의 사건이나 언어, 문화, 기후 그리고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토의 활동이 가능하다.

② 정보수집(정보탐색)

정보탐색 유형은 과목의 특성상 교재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활용하는 기초적인 정보검색과 정리에서부터 어떤 주어진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문제해결수업과 탐구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는 탐구학습을 포함한다.[17] 즉, 인터넷을 통한 정보탐색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보다 깊이 있는 탐색활동과 배운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문제해결 프로젝트(Problem-Solving Projects) 유형

프로젝트학습은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개념과 절차 그리고 배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젝트 학습은 개인이나 집단학습의 형태로 구성되며 새로운 지식과 결과물을 산출하는 장기간의 심도

17) 김영환, 「인터넷 활용수업의 방법」,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 중간 연구 보고 자료집 1-17, 한국교원대학교, 1996, pp.1-17.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프로젝트학습은 교사가 주제를 결정하거나 산출물을 미리 정해두고 행해지는 단기간의 프로젝트와는 구별된다. 인터넷은 프로젝트학습이나 협동학습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Ⅲ. WBI을 활용한 통일교육 관련 현황

1. WBI을 활용한 통일교육 관련 설문조사

일선 초등학교에서 WBI을 활용한 통일교육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140명[18]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방법은 직접면접을 겸한 질문지법을 택했고 조사기간은 2000년 8월 11, 14일 2일간이며, 설문지는 140부를 배부하여 128부를 회수하였다. 설문항목의 구성은 객관식 13문항, 주관식 5문항으로 총 18문항(설문 작성자에 대한 기본적 질문은 제외)이며, 주관식 문항은 본 논문의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각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분석은 4장의 추진방안에서 하였다.

1. 통일교육 관련 교수-학습에서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응답항목	인터넷	TV	신문	CD-ROM	VTR Tape	기타
빈도(N)	11	18	68	1	25	5
비율(%)	8.6	14	53.1	0.8	19.5	3.9

18) 대구교육대학교와 정보교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영어연수 과정과 웹저작도구개발 과정에 참여 중인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교수-학습에서 아동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고 있든지,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매체는?

응답항목	인터넷	TV	신문	CD-ROM	VTR Tape	기타
빈도(N)	79	16	11	15	7	0
비율(%)	61.7	12.5	8.6	11.7	5.5	0

3. 통일교육 관련 수업 준비에서 인터넷 상의 자료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항목	항상 이용한다	이용한다	그저그렇다	이용하지 않는다	항상 이용하지 않는다
빈도(N)	0	20	25	70	13
비율(%)	0	15.6	19.5	54.7	10.2

3-1-1. 도움이 되었습니까?

응답항목	많이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빈도(N)	3	23	18	0	1
비율(%)	6.7	51.1	40	0	2.2

3-1-2. 통일교육 관련 수업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홈페이지 또는 사이트는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정부기관 · 단체	교육기관 · 단체	언론기관	개인
빈도(N)	17	20	18	0
비율(%)	37.8	44.4	40	0

3-2.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자료가 부족하여	자료가 너무 흩어져 있어서	관련 교과목의 관련 단원에 적합한 자료가 없어서
빈도(N)	9	24	50
비율(%)	10.8	28.9	60.2

4. 통일교육 관련 교수-학습에서 웹(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계십니까?

응답항목	항상 한다	한다	그저그렇다	하지 않는다	항상 하지 않는다
빈도(N)	1	10	23	81	13
비율(%)	0.78	7.8	18	63.3	10.2

4-1-1. 학습의 전체적 측면에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많이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빈도(N)	1	25	8	0	0
비율(%)	2.9	73.5	23.5	0	0

4-1-2. 아동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많이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빈도(N)	1	13	17	3	0
비율(%)	2.9	38.2	50	8.8	0

4-1-3. 통일교육 교수-학습에서 웹 기반 학습을 활용 할 때, 다음 유형 중 현재 어떤 것을 활용하며, 도움이 되는지 우선순위로 나열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교사들이 《의사소통(정보교환)유형→정보검색 및 수집→ 문제해결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로 응답했다.

4-1-4. 교실수업 대비 웹을 활용한 통일교육 수업의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항목	많이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그저 그렇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빈도(N)	0	21	13	0	0
비율(%)	0	61.8	38.2	0	0

4-2. 활용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항목	통일교육과 관련된 웹 상의 자료 부족	통일교육과 관련된 웹 자료의 초등학생에 대한 적합성이 떨어짐	기타
빈도(N)	17	56	21
비율(%)	20.2	66.7	25

5. 통일교육 관련 웹 자료를 제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응답항목	자주 제작한다	제작한다	그저 그렇다	제작하지 않는다	전혀 제작 하지 않는다
빈도(N)	0	0	4	55	69
비율(%)	0	0	3.1	43	53.9

2. 웹상의 통일교육 관련 사이트 현황 및 문제점

사이트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 사용자와 웹문서 형태의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즉, 교사와 학생의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이트, 교수학습용 웹문서와 참고자료형 웹문서를 구분하였다.

1)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사이트 검색 결과 통일교육과 관련된 참고자료용 웹문서는 정부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의 순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특히 에듀넷의 교사채널 중 "통일정보 자료방"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웹문서들이 여러 가지 소주제로 분류 및 링크되어 있어 교사가 수업에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듀넷에는 교수학습용의 웹문서도 단원과 차시별로 링크되어 있으나 웹문서의 제작은 참고자료용에 비하여 개인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통일업무의 주관 부서로서 남북관계현안, 알기 쉬운 북한(북한의 정치, 군사, 대외관계, 변화 가능성, 경제, 주민생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언어, 참고자료), 통일갤러리(북한의 산하, 북한 주민의 생활, 한민족의 삶, 한민족의 애창가요), 북한자료센터, 남북회담자료, 통일 대화방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일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로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북, 통일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 http://www.nis.go.kr/intro.html

북한 정보라는 코너를 통해 북한의 지리정보에서부터 정치・경제・사회・외교・군사・과학,기술 등 북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동영상으로 북한의 실제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며, 상당한 대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된 것이 특징이다

〈에듀넷〉 http://www.edunet4u.net/teacher/index.html

"통일교육정보"라는 코너는 새소식모음, 북한 이야기, 묻고답하기, 학교숙제SOS, 교사게시판, 자유게시판, 5분통일교육, 3분통일운동, 북한말알기, 남북 비교문, 통일 표어, 북한 유머, 북한 정치경제, 북한 사회제도, 북한 교육산업, 북한 생활문화, 교육우수사례, 북한지리여행, 북한경치사진, 북한이탈주민 글, 통일한마디, 북한자료실, 통일자료실, 일반자료실, 멀티자료실, 통일이야기, 통일교육방 등과 같은 세부적 주제로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종 통일관련 정보와 관련 사이트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 수집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교과지도용 참고 사이트 검색 코너"에는 교과 단원과 차시별로 아동의 수준에 맞는 내용을 제공하는 교육용 웹 문서를 링크하여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교수학습형, 참고자료형, 혼합형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교수학습형 웹문서의 대부분은 현직교사와 교육대학생에 의하여 제작되어 웹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 아동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점이 돋보인다.

〈중앙일보 북한네트〉 http://nk.joins.co.kr/info.html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중앙일보 뉴미디어와 함께 구축한 북한정보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최신 뉴스와 통일문화연구소가 축적해온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기능과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특히, 프런트면 주요 기사, 포토 갤러리(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입수된 북한 현장 사진), 현대사 코너(한국현대사 관련 기획기사, 정보 및 자료), 교사용 Q&A(초등·중등·고등학교의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의 선도자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쌍방향 서비스. 북한에도 애국가가 있는가, 북한의 나라꽃은 무엇인가 등 교육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통일문화연구소의 전문기자들이 직접 답변), 북한 관련 사이트 등이 제공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북한백과〉 http://www3.joins.com/nk/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개발한 CD-ROM Title "멀티미디어 북한백과"의 내용과 미디어 자료를 중심으로 북한의 이모저모, 영상자료(동영상), 지리정보, 발자취, 인물, 용어풀이 등을 통해 북한의 모든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다.

〈코리아스코프〉 http://www.koreascope.org/index.htm

오늘의 한국, 북한실상, 통일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로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관한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

〈유홍준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
http://www.joins.com/special/n_korea/index.htm

중앙일보에 유홍준씨가 연재한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 수록(사진 자료 포함)한 사이트이다.

〈교육 전문 사이트 "디그"〉

http://www2.dig.co.kr/teacher/index.asp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여러 교사들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칼럼이 소개되어있다.

그밖에 교수, 교사, 대학생의 개인 홈페이지에 도덕, 사회 교과의 통일교육 부분에 해당되는 사이트를 어느정도 링크시켜 놓아서 일선 교사들이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다.

http://myhome.netsgo.com/a33230482

http://myhome.netsgo.com/PSYMLOVE

http://myhome.hananet/~leebibi/menu.html

2)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사이트 검색 결과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고자료용 웹문서는 많지 않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이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통합문화관〉 http://www.mct.go.kr/arirang

남북통합문화관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문화공동체의식 제고와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문화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표적인 문화재자료를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다양하게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한 사이버 공간이다. 남북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가상 입체 박물관이 인상적이다.

〈국정원 어린이마당〉

http://www.nis.go.kr/menu/m13000000/index_m13.html

어린이가 흥미를 가지고 북한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미지와 게임, 퀴즈 등을 제공한다.

〈시민사회 인터넷〉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

http://www.ifp.or.kr/hi-friend/index.html

http://www.okedongmu.or.kr/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따로 또는 함께 서로 친구로서 협력을 실천하는 기회들을 통하여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

* 그림누리 - 내 얼굴 그린 그림, 북녘 친구들의 그림의 두 코너로 북한 어린이 그림 소개
* 함께뛰놀세상 - 통일책방: 남북한 어린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동화와 북녘 친구들이 읽는 동화, 다른 말 한뜻: 퀴즈로 알아보는 북한말, 깨동이의 통일문답: 북녘 친구들의 생활상
* 벽허물기 - 통일이후를 생각하며: 어깨동무 기아문제연구회의 연구자료와 기타 기아문제 관련논문, 다름과의 소통: 통일과 평화에 대한 자유로운 글들

〈청주교육대학교 김동호 교수〉

http://203.237.254.17/~dhkim/교육용/웹문서.htm

청주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제작한 초등학교 교수학습용 웹 문서 사이트로 초등학교 학년별, 과목별, 단원별 학습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상의 현황파악을 중심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첫째, 참고자료용 웹문서에 있어 교사에게 적합한 자료는 비교적 풍부한데 비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자료는 많이 부족하다. 둘째, 교수학습용 웹문서는 개인(교사와 교육대학생 등)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제작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교실학습에 있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Ⅳ. 초등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추진 방안

1. 초등아동을 위한 통일교육 고찰

WBI를 활용한 초등아동 통일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초등아동의 인지적 및 정서적 특성이다. 따라서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근거한 초등통일교육의 특성과 초등교육에서 행해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초등통일교육의 특성

초등교육의 성격은 교육의 원리와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첫째, 생활의 경험을 중시하는 아동 중심의 진보적 교육의 원리와 둘째, 교사 중심의 지식의 도야를 중시하는 지식 교육의 원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19], 또한 초등교육은 그 교육대상이 다르므로 유아교육, 중등교육과 구별되는 초등교육의 특성이 있다.[20]

초등교육은 본질상 기초교육, 보통교육, 공통교육, 전인교육, 국민교육, 가소성이 높은 교육 등을 그 특성으로 한다.[21] 특히 그 중에서도 본 연구 주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 이학주, 「초등교육 이념의 탐색」, 인천교대논문집 25(1), 1991, pp.249-264.

20) 이병진, 「초등교육학개론」, 문음사, 1999, ; 이학주, 「초등교육 이념의 탐색」, 인천교대논문집 25(1), 1991, pp.249-264.

21) 정찬익 외, 「초등교육학의 이해」, 문음사, 1999, pp.38-45.

① 기초교육으로써 초등교육

초등교육은 학제상이나 학습 계열상으로 보아 후속되는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선행한 준비교육 내지 전단계 교육의 의미도 있으나 그보다도 초등교육은 인간으로서 인격적 기초, 학문탐구로써 지성적 기초, 자기존재를 인식케하는 실존적 기초, 건강한 삶으로써 신체·기능적 기초, 창의적 인간으로서 사변적 기초, 통합적 조화인으로서 전인적 기초, 사회적 존재로서 협동적 기초, 국가·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국민적 기초를 다지고 방향설정을 탐색케 하는 기초교육(Basic Education)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초등교육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문과 인간의 제 영역에서 기초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폭넓은 삶의 경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초적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전인교육으로써 초등교육

전인교육이란 전통적 표현으로 知·德·體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는 교육이며, 모든 분야 모든 사람과도 잘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는 교육(well-rounded education)이고, 전인(全人, whole person)을 지향하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어떤 사람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원만한 성격형성의 교육(all-rounded education)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초등학령아동들은 모든 발달영역에 걸쳐 왕성한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므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적 자질의 형성은 초등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국민교육으로써 초등교육

바로 국민성의 함양과 국민의 동질성을 기하는 기초교육기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초등교육은 국민화의 교육, 국민으로서의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갖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공동

체의 일원으로 그 국가, 민족의 文化正體性을 갖도록 교육해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④ 가소성이 높은 초등교육

초등교육의 대상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성장과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그러면서도 아직 확고한 자기주관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생활의 제반지도가 필요한 것이 초등교육의 대상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만치 환경적 영향의 가치와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22]

可塑性(plasticity)이란 외부의 자극에 의한 그 반응이 거의 불변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는 플라스틱의 성질과 같음을 말한다. 아동은 성장과 발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면서도 확고한 자기주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교육에서만큼 각별한 지도와 보호 및 세심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소성은 지적 영역보다는 태도, 습관, 사고, 가치관 등 정서적이고 정의적 영역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 많은 교육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이나 태도, 습관, 가치관 등의 기본구조가 대부분 아동기에 형성되며 이 시기의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며 성장과 발달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교육적 배려가 요구된다. 결국 초등교육의 심리적인 관점은 아동이 발달의 과정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에서 아동이해의 틀을 갖게 하는 것과 발달의 과정에 적합한 교수의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23]

22) 김봉수, 「교사와 초등교육」, 형설출판사, 1998, pp.298-299.

23) 서명석, 「초등교육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1993, pp.23-25.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은 주로 교육자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초등아동의 관심이나 발달 수준에 대해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도하는 통일교육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초등아동의 흥미와 관심, 발달 수준, 인지 양식, 다양한 지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단 하나의 수업방법은 있을 수 없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즉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극대화하는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수업, 적응수업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최근에는 네트워킹 환경의 발전과 통일 관련 자료 공급에 있어서 일방 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통일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초등통일교육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의사소통(정보교환)" 유형
: 통일관련 주제에 대한 전자우편, 리스트서브, 뉴스그룹, BBS, 채팅 등

② "정보검색 및 수집"유형

③ "문제해결 프로젝트"유형
: 학교 내의 다른 학생 또는 서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협력하여 통일관련 주제에 대하여 학생간에, 학생과 교사들간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동시적으로 해결

또한 북한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로 국내외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다양한 자료은행과의 연결이 가능하며 자료 공급에 있어서 일방 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특

히 초등아동은 인터넷(internet)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 전자 우편, 전자 토론 등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24] 따라서 초등아동들이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즉 웹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2) 초등통일교육 내용

학교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현실, 통일의 과정, 통일 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도록 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도록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 유아, 초등학교 교육에서의 목표는 첫째, 민주시민 의식과 민주적 태도와 심성의 함양 둘째, 통일의 당위성 인식, 통일을 위한 의지 고취로 설정되어있다.[25]

현재까지의 통일교육 전개 과정은 통일의 의미에 상응하여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내용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6]

제1차 교육 과정기에는(1955-1963) 반공교육이 제도화되면서, 반공교육과 도덕교육이 일원화되고, '도의생활요강'에 반공, 항일을 강조하는 항목이 구체화 되었다.

제2차 교육 과정기에는(1963-1973) 교육과정 상에서 반공·도덕생활이 신설되어 반공·도덕 생활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6.25전쟁, 공산당 경계, 북한 주민, 전략전, 정신무장, 공산당 독재 등이 교육내용이 되었다.

24) 중앙일보, 2000. 7. 4. 29면.

25) 학교통일교육지침, 교육부.

26) 지순애, 「초등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비판적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31-34.

제3차 교육 과정기에는(1973-1981) 반공·도덕생활 영역으로 지도하던 것을 교과활동에 포함시켜 '도덕과'라는 독립된 교과를 설치하였다. 이 시기에는 반공교육이 도덕, 국민윤리 교과의 하나의 생활영역으로 구분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공산당의 만행에 대한 적개심, 북한의 참상, 공산 침략의 경계, 분쇄, 공산권 분열과 자유 우방의 결속, 반공 통일의 신념 확립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4차 교육 과정기에는(1981-1987) 3학년-주민의 생활상, 무력 도발, 자유의 긍지, 4학년-억압과 통제, 전쟁준비, 분단의 손실, 5학년-독재 정치, 공산당의 만행, 북한 동포, 6학년-공산주의 비판, 문화 말살 책동, 평화 통일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민주적 평화통일의 신념을 굳게 하는 데 있었다.

제5차 교육 과정기에는(1987-1992)에는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칭하고, 반공생활 영역의 내용에 공산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민주시민정신 고취 등의 내용을 보강하였다. 특히 북한을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인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인 대상임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학년-민족 공동체, 남북한 어린이, 6.25전쟁, 4학년-북한 주민의 생활, 국토 수호, 통일을 해야 하는 까닭, 5학년-민족의 이질화, 국가 안보, 평화 통일, 6학년-상호 체제의 비교, 자주 국방, 우리의 자세.

제6차 교육 과정(1992-1997)에서는 통일환경의 변화와 국내외의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제6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통일·안보교육을 '통일교육'으로 수정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후의 민족 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학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3학년-분단 현실의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4학

년-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 5학년-평화 통일의 방법, 6학년-통일을 위한 노력.2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차 교육과정까지의 통일교육은 그 동안 이념과 체제, 사상, 제도등과 같은 추상적, 포괄적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이념과 구조에 관한 지식은 남북한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크게 부각시켰으며28), 그런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무비판적인 수용은 일상생활과의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29)

이에 대한 반향으로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과 관련성이 있는 도덕과의 내용 체계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음을 〈표 3〉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주요지도 요소	7차 교육과정 '국가·민족 생활' 학년별 목표 및 내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목표	·나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라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오는 어려움과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우리 민족 문화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잘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실천의지를 지닌다. ·국가 안보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국가와 개인간의 상호의존과 보완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실천 의지를 지닌다.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적절한 방법을 이해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지닌다.	·통일조국의 미래 모습을 알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생활자세를 지닌다. ·해외 동포들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 서로 협력하는 태도와 의지를 지닌다.

27) 지순애, Ibid., p.35.

28) 한만길, 「변화하는 시대의 열린 통일교육」, 교육월보(174), 교육부, 1996. p. 36.

29) 이병영,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북한관 분석과 통일교육의 방향」, 진주교육대학교 학위논문, 1999, p.51.

주요지도 요소	7차 교육과정 '국가 · 민족 생활' 학년별 목표 및 내용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국가애 민족애 안보의식 평화통일 인류애	나라 사랑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민족 문화 유산 애호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국가 발전에의 협력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해외 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표 3〉 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과 관련성이 있는 도덕과의 내용 체계

그리고, 정부에서는 6 · 15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통일교육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평화와 화해 · 협력을 위한 통일교육 발전방안"[30]을 내놓았다. 따라서 정부의 통일교육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일교육 환경 변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남북간 평화공존과 화해 · 협력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방적 이미지와 북측의 태도변화 등이 우리국민의 기존 대북인식 및 통일안보관에 변화요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우리국민의 대북관 및 통일안보관이 현실을 바탕으로 균형감을 갖출 수 있도록 통일교육 내용요소를 보강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필요.

30)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보도자료, 2000. 7. 22.

②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안보관 확립, 남북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북한실상의 객관적 이해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틀을 유지할 것이며,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31]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실천정도에 맞추어 장기과제로 검토.

북한에 대한 인식은 남북간 평화정착이 제도화되기까지는 안보와 화해협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현실적 당위성을 전제로 북한체제 비판중심에서 서로의 이질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회문화적 측면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북한 바로알기교육을 보강하고 토론교육, 체험교육 등을 강화하여 남북관계 변화상황과 통일환경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③ 통일교육 내용 보완의 중점

남북화해협력시대 실상의 분야별 이해를 증진하고, 북한체제와 사회의 운영원리에 대한 다면적·심층적 해석능력을 배양하며,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보강.

④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교육 강화

제7차 교육과정에는 「통일의 당위성 인식」, 「민족동질성의 회복」,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화해·협력·평화의지 고양」, 「통일국가의 전망과 대비」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포함.

향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추진 이후의 남북관계변화를 교과개편단계에 맞추어 범교과적으로 반영토록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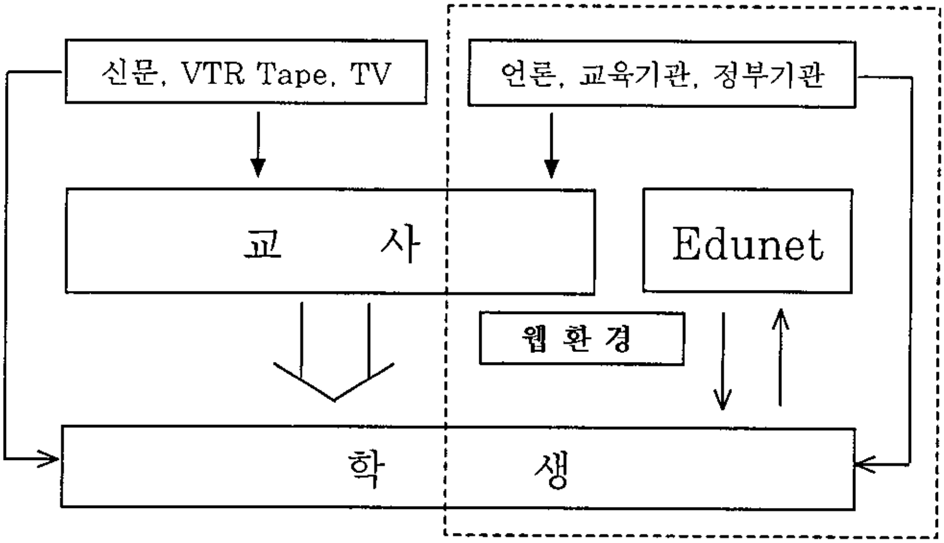
---

31) 통일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 안보교육 → 통일안보교육 → 통일교육으로 변화하여 남북간 평화공존에 대비.

2. WBI을 활용한 초등학생 통일교육 추진 방안

1)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통일교육 관련 정보 흐름의 3단계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설문조사와 수업관련 사이트 및 활용사례에서 나타난 현황 및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현재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정보의 흐름을 정보의 생성, 정보의 재구성 그리고 정보의 습득이라는 3단계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통일교육 관련 정보 흐름의 3단계 시스템

(1) 정보의 생성 단계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부재

Off-line 상에서의 대표적인 매체로는 TV, 신문, CD - ROM, VTR Tape 등이 있으며, On-line 즉, 웹상에서의 대표적인 사이트 또는 홈페이지로는 정부기관·단체 (통일부, 교육부, 국가정보원, 통일정보원

등), 교육기관·단체 (에듀넷, 대·중·초등학교, 각종 학회 등), 언론기관 (TV, 신문 등), 개인 (교수, 교사 등) 등이 있다. 설문지 1, 2번 문항에 대한 응답에 의하면 통일교육 관련 교수-학습에서 아동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고 있든지,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인터넷이라는 응답이 61.7%으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 관련 교수-학습에서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신문이 53.1%, VTR Tape이 19.5%, TV가 14% 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즉, 아직까지 교사에게 있어서 통일관련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문, VTR Tape, TV를 통하여 주로 획득되어지는 현실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웹 활용 수업을 위한 제반 여건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통일관련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초등아동들은 Off-line과 웹의 어느 곳에서부터도 가치 있는 정보[32]를 얻을 수 없다. 설문조사와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일반인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관련 자료는 Off-line 상의 TV와 신문자료, 웹상의 정부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의 자료에서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만, 통일교육에 대한 초등학생의 높은 관심도[33]에 비하여 이들 모든 매체의 자료들은 아동들의 이해도에 대한 적합성이 크게 떨어지는 현실인 것이다.

---

32) 안문석, 「정보체계론」, 학현사, 1995, p.190.
Roman R. Andrus에 의하면 정보가 가치를 가질 조건으로 형식조건, 시간조건, 공간 조건, 소유조건이 있으며, 형식조건이란 정보의 형식이 이용자가 원하는 형식에 가까울수록 가치를 갖는다.

33) 한겨레 신문, 2000. 8. 10. 2면
'통일교육에 관심있다'는 응답비율은 초등학생이 56.8% 로 중고등학생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다.

(2) 정보의 재구성 단계 - 교사와 초등아동에 의한 정보 재구성의 미비와 불가능

설문지 3번 문항에서 교사가 통일교육 관련 수업준비에서 인터넷 상의 자료를 이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사용한다는 응답이 15.6%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응답의 64.9% 보다 크게 적었다. 이용한 교사 중에 57.8%의 교사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업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홈페이지 및 사이트는 교육기관, 언론기관, 정부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교과목의 관련 단원에 적합한 자료가 없어서가 60.2%, 자료가 너무 흩어져 있어서가 28.9%, 자료가 부족하여가 10.8%로 파악되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사의 교육관련 환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초등교사의 업무과중과 그로 인한 시간의 부족, 웹 활용을 위한 시설의 미비[34], WBI 활용의 역량부족을 들 수 있다.

즉, 교사들이 통일관련 수업 준비를 위한 정보의 재구성이 인터넷 상의 정보 보다 Off-line의 정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하여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는 아동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정보의 재구성은 웹상의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으며,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Off-line은 물론 웹을 통한 아동의 자료수집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아동에 의한 정보의 재구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구성 과정을 통한 아동 주도적 학습 역시 불가능해진다. 많은 현실적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통일관련 정보를 웹을 통하여 재구성하여 아동에 대한 교실수업이 진행되어진다면 WBI활용의 장점이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사의 많은 시간적 투입, 교실에서의 시설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한 아동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34) 매일경제신문, 2000. 5. 13. 13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에 와서 종합교육정보망인 에듀넷을 통하여 웹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환경이 조금씩 구축되고 있지만 에듀넷에 대한 현황파악에서처럼 현재의 에듀넷은 자기주도적 학습의 지원 환경으로써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정보의 습득 단계 - 초등아동의 수동적 습득

설문지 4번 문항을 보면 통일교육 관련 교수-학습에서 웹(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 응답이 8.6%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73.5%에 비하여 훨씬 적었다. 웹을 활용한 수업을 하는 교사들 중 76.4%가 학습의 전체적 측면에서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41.1%가 아동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실수업 대비 웹을 활용한 통일교육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1.8%,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 응답이 38.2%,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웹 활용 유형으로는 의사소통-정보수집-문제해결의 순으로 낮은 단계의 활용상태임을 알 수 있다. 웹을 활용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웹 자료가 초등학생에 대한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66.7%, 웹상의 자료 부족이라는 응답이 20.2%, 기타 의견으로 웹 활용을 위한 시설 미비가 25%[35]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문지 5번 문항의 통일교육 관련 웹 자료를 제작하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6.9% 으로 나타났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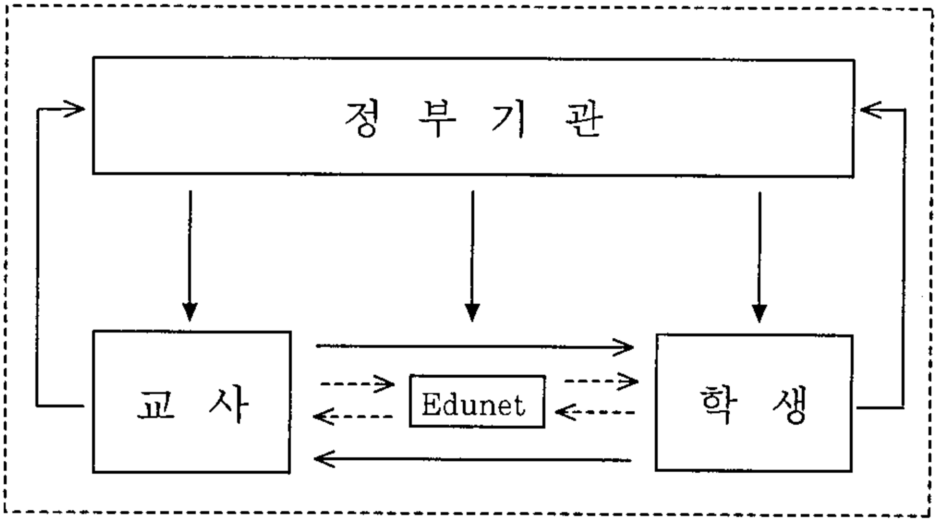
35) 웹을 활용한 교육에 있어서 관련 Net-work 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를 배제함으로써 웹 상의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현재의 3단계 시스템 하의 통일교육에 있어 아동에게 적합한 정보에 대한 아동의 직접적 접근이 부족한 현실에서 수업의 효과는 오직 교사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아동들에게 수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대부분 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역시 웹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지 않음을 설문서 4번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가 웹 활용 수업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아 웹 활용 수업에 대한 지속적 노력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문조사와 웹 상의 사이트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의 3단계 시스템을 단계별로 살펴 보았다. 즉, 아동 수준에 적합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한 아동 주도적인 정보 재구성과 능동적 정보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WBI를 활용한 통일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확대 해석하여 웹 상의 정보를 교사가 재구성하여 어느정도 WBI활용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겠지만 전체 교사가 투입해야 하는 노력과 현실적 어려움에 비교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생성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선 방안 : 통일교육 관련 정보 흐름의 2단계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통일교육의 3단계 시스템에서 나타난 현황 및 문제점들은 초등통일교육의 특성과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통일교육의 특성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의 생성, 정보의 재구성 및 습득의 2 단계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추진방안을 도출하면 〈그림 2〉 와 같다.



〈그림 2〉 통일교육 관련 정보 흐름의 2단계 시스템

(1) 정보의 생성 단계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일교육관련 내용) 제공

첫째, 정부기관과 일선교사의 협동연구를 통한 아동수준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교사가 통일교육 관련 수업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홈페이지 또는 사이트는 교육기관, 정부기관 및 단체 순이며, 이러한 순위는 교수활동의 주체인 교사의 입장이 많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사이트 현황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정부기관 및 단체, 언론기관, 교육기관 및 단체 순으로 통일과 민족관련 컨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국가적 중요성, 내용의 객관성, 경제적 문제 등을 더불어 고려하여 정부기관 주도의 정보생성이 요구되며[36], 이 때 초등교육의 전문가인 초등교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

36) 예를 들어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농업교실(http://152.99.166.2/child/)의 경우, 1999. 8. 17.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10만명정도의 방문자수 확보

둘째, 아동의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초등아동의 높은 가소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교육관련 내용이나 지식의 배후에 감추어진 민족의 의지, 지혜, 노력, 성실, 협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단순한 현실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남북의 인내와 노력, 민족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Piaget의 인지 발달 4단계에서 초등아동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므로 아동은 지각과 구체적 경험에 의하여 통일과 민족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은 통일과 민족관련 내용이 지시하는 행동을 아동이 웹을 통하여 직접 실현해 볼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에서 남북 현실의 복잡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정보의 재구성 및 학습 단계 -웹과 아동주도적 재구성을 통한 능동적 학습

첫째, 통일 및 민족관련 내용을 아동이 주도적으로 재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수준의 통일 및 민족 관련 내용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보를 접한 아동이 자신의 인지 구조 속에 그것을 수용하고 아동 주도적 재구성 과정을 통하여 현상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를 갖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아동이 바람직한 통일관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야한다.
-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각 관점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아동이 주체자가 되며, 교사는 아동들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자문 역할을 해야한다.

둘째, 웹을 활용한 능동적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WBI를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함에 있어 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학습주제가 웹이라는 매체를 통해 교수-학습되기에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통일관련 내용의 광범위성과 특수성, 그리고 교육과정에서의 다른 교과목과 비교한다면 그것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WBI를 활용한 교육은 '상호작용적 교환(Interpersonal Exchanges)', '정보수집(Imformation Collection)', '문제해결 프로젝트(Problem-Solving Project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유형은 〈그림 2〉 "통일교육 관련 정보흐름의 2단계 시스템"에서 정보, 학생, 교사의 각 구성요소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학생, 학생-교사, 교사-정보의 모든 상호 관계 속에서 활용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의사소통-정보수집-문제해결 순의 낮은 단계에서 문제해결 유형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소통과 정보수집 유형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Edunet에서 교수학습용 웹문서가 충분히 제작된다면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교실수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교수-학습 활동의 모든 부분이 웹 상에서 진행되기는 불가능하므로 아동수준의 웹자료가 구축되어 아동 스스로의 수업 및 학습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학습자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수업을 다차원적으로 차별화 하여 제공하고 아동자신이 지닌 현재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게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교과 내용을 적용시키는데 있어)개별 아동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내용 제시 방식을 결정하고, 학습 양식과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 활동을 설계하며 그리고 학습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과제를 부과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의 학습 양식 유형은 학습자의 지각 양식 선호도에 따라 청각형, 시각형, 촉각-운동형으로 나누어진다. 청각형 학습자는 들으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며 대체로 분석적, 논리적, 계열적 사고에 뛰어난 반면, 시각형 학습자는 보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이해를 할 때 머리 속에 그림을 그려 이해하고자 한다. 촉각-운동형 학습자는 만지고 움직이면서 학습하기를 좋아하는 학습자들이다. 교사가 이러한 유형을 감안하여 다양한 수업자료를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면, WBI 활용 수업의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V. 결　론

WBI를 활용한 통일교육이 단순히 학습자에 의한 학습 과정의 관리라는 측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지식 구성 단계까지로 보고, 다양한 정보 중에서 아동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분류하여 활용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즉, 통일관련 수업에 대한 자료수집, 의사교환, 자료의 정리에 있어 아동 주도적이기 위해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생성을 통하여 아동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교육 관련 정보의 흐름을 정보의 생성, 정보의 재구성 그리고 정보의 습득이라는 3단계 시스템으로 파악한 후, 개선된 2단계 시스템으로 분석하여 WBI을 활용한 초등학생 통일교육 추진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의 생성 단계

첫째, 정부기관과 일선교사의 협동연구를 통한 아동수준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의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정보의 재구성 및 학습 단계

첫째, 통일 및 민족관련 내용을 아동이 주도적으로 재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웹을 활용한 능동적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셋째,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교실수업을 제공하여야 한다.

【 참고 자료 】

강인애,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1997, pp.17-18.

백영균 외, 「인터넷@교육」, 양서원, 1999, p.113.

임정훈, 「웹 기반 문제해결학습 환경에서 소집단 협동학습전략이 온라인 토론의 참여도와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a, p.2.

강숙희, 「구성주의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학습 환경으로써의 매체의 활용」, 교육공학연구, 제13권 제1호, 1997, p.120.

백영균 외, 「에듀넷을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모형 및 워크북 개발」, 연구보고 RR 97-4, KEDI, 1997, p.6.

백영균, 「열린수업에서의 멀티미디어 이론과 그 적용.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방법과 적용(워크숍 자료집)」, 연구자료 RM 97-3, 1997,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pp. 1-18.

백영균, 「웹 기반 수업의 구성과 그 논의 점들」, 교육과학사, 1998, pp.23-48.

박인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구성주의 교수원리의 실현 매체로써 인터넷 고찰」, 교육공학연구, 제12권 제2호, 1996, pp. 81-103.

Harris, J, Educational telecomputing project: Information collections, Learning and Leading with Technology, 1995, 22(7), pp.44-48.

김영환, 「인터넷 활용수업의 방법」, 인터넷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 중간 연구보고 자료집 1-17, 한국교원대학교, 1996, pp.1-17.

이학주, 「초등교육 이념의 탐색」, 인천교대논문집 25(1), 1991, pp.249-264.

이병진, 「초등교육학개론」, 문음사, 1999, ; 이학주, 「초등교육 이념의 탐색」, 인천교대논문집 25(1), 1991, pp.249-264.

정찬익 외, 「초등교육학의 이해」, 문음사, 1999, pp.38-45

김봉수, 「교사와 초등교육」, 형설출판사, 1998, pp 298-299.

서명석, 「초등교육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초등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1993, pp.23-25.

중앙일보, 2000. 7. 4. 29면.

학교통일교육지침, 교육부.

지순애, 「초등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비판적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31-34.

한만길, 「변화하는 시대의 열린 통일교육」, 교육월보(174), 교육부, 1996. p. 36.

이병영,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북한관 분석과 통일교육의 방향」, 진주교육대학교 학위논문, 1999. p.51.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보도자료, 2000. 7. 22.

안문석, 「정보체계론」, 학현사, 1995. p.190.

한겨레 신문, 2000. 8. 10. 2면

매일경제신문, 2000. 5. 13. 13면

역대 수상작 목록

第1회(1982년度) 수상작

1. 최우수작

·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평화통일(부산대 정외과 4년, 김갑조)

2. 우수작

· 대소련 접근방안(서울대 대학원 국민윤리교육과, 신 진)
· '88올림픽을 전후한 남북한의 공동협력 방안(부산대 정외과 4년, 이강욱)

3. 가 작

·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에의 길(단국대 대학원 법학과)
· 민족통일에 기여하는 남북공존 가능성 모색(경북대 정외과 4년, 송석진)
· 남북한 통일홍보 정책 비교연구 (한국외대 홍보과 4년, 이상식)

第2회(1983년度) 수상작

1. 최우수작

·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분석(건국대 행정학과 4년, 이항동)

2. 우수작

·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분석(중앙대 정외과 3년, 정태용)
·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의 전망(전남대 정외과 4년, 서상우)

3. 가 작

·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분석과 실효성 검토(부산대 정외과 3년, 유영국)

·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분석(서울대 국민윤리과 3년, 김유찬)
·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와 한반도 통일전망(한국외대 불어과 3년, 이기호)

제3회(1984년도) 수상작

1. 최우수작

· 민족의 행복과 발전이 보장되는 통일(경북대 행정학과 4년, 배수호)

2. 우수작

· 민족의 행복과 발전이 보장되는 통일(연세대 정외과 4년, 오충석)
· 민족의 행복과 발전이 보장되는 통일(한국외대 불어과 4년, 최지순)

3. 가 작

· 북한 통일전략의 본질(전남대 대학원 정외과 1년, 서상우)
· 북한 통일전략의 본질(경북대 정외과 3년, 전재영)
· 북한 통일전략과 전술양태의 변천과정 분석(충북대 국민윤리과 4년, 이혁섭)

제4회(1985년도) 수상작

· 주변정세와 남북한 관계의 전망(경북대 정외과 4년, 전재영)
· 대학생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방향(광주교육대 국민윤리학과 4년, 김형남)
·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실현방안(목포대 영문과 3년, 정인규)
· 중공의 독자적 외교노선과 한반도(서울대 정외과 4년, 윤정원)
·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전망(전남대 국민윤리과 2년, 백양숙)

第5회(1986년도) 수상작

· 고르바쵸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선언과 한반도(전남대 독문과 4년, 김현옥)
· 북한의 문학예술에 대하여(경북대 국어교육과 3년, 서동국)
· 민족통일 이념으로서 한국 민족주의 역할(원광대 정외과 3년, 박현모)
·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안보(경북대 정외과 3년, 송철원)
· 통합이론과 남북한 통일문제(동아대 정외과 3년, 김원배)
· 한반도 주변환경의 추이와 남북한관계의 전망(서강대 정외과 4년, 박현봉)
· 원효 화정사상의 시각에서 본 민족화합 민족통일(경상대 사회학과 3년, 여태전)
· 소련의 반응적 동북아세아정책과 한반도의 안보(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허연숙)
· 남북한 교차승인과 4강관계(일본 긴끼대 법률학과, 김영훈)

第6회(1987년도) 수상작

1. 최우수작

· 인륜적 차원으로 본 통일이념의 방향(호남대 국민윤리과 2년, 박진철)

2. 우수작

· 인륜적 차원으로 본 통일이념의 방향(경상대 사학과 2년, 윤설희)
· 통일을 지향한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청주사범대 교육학과 3년, 장세근)
· 통일을 지향한 민족주의의 과제(전주대 경영학과 4년, 김진경)

3. 장려작

- 통일을 지향한 민족주의의 과제(경상대 사회교육학과 3년, 황상수)
- 인륜적 차원으로 본 통일이념의 방향(강릉대 법학과 3년, 고시면)
-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적 모색(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3년, 염정호)
- 통일을 지향한 민족주의의 과제(목포대 국민윤리과 4년, 김영인)
- 통일을 지향한 대학신문의 역할모색(서울교대 윤리과 4년, 조호제)

第7회(1988년도) 수상작

1. 최우수작

- 중·소 개방화 정책과 한반도(경상대 국민윤리과 3년, 전영구)

2. 우수작

- 중·소 개방화 정책과 한반도(방통대 경제학과 4년, 김영헌)
- 통일조국과 민족공동체의 이념에 관한 고찰(한국교원대 대학원 사회교육과, 최인화)
-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의 모색(한국외대 일본어과 1년, 신구현)

3. 가 작

- 중·소 개방화 정책과 한반도(부산대 국민윤리과 3년, 정인선)
- 중·소 개방화 정책과 한반도(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국민윤리과, 김창호)
- 통일조국과 민족공동체의 이념(한양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희택)
-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의 모색(한국외대 정외과 3년, 김태한)
- 통일조국과 민족공동체의 이념(서울대 정외과 4년, 이조영)
-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의 모색(전남대 정외과 4년, 송승석)

· 남북한 교류 · 협력 실천방안의 모색(경성대 국민윤리과 3년, 이국연)
· 통일조국과 민족공동체의 이념(강릉대 법학과 4년, 고시면)
· 통일조국과 민족공동체의 이념(광주교대 교육학과 3년, 조경자)
· 통일조국과 민족공동체의 이념(중앙대 대학원 정치학과, 김찬석)

제8회(1989년도) 수상작

1. 최우수작

·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이념적인 토대(한국교원대 대학원 교육학과, 장세근)

2. 우수작

· 남북한 경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방안(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문주한)
· 동서독관계의 교훈을 통해서 본 적극적 한반도 통일정책의 모색(한국외대 대학원 행정학과, 최창수)

3. 가 작

· 북방정책과 통일환경의 조성(한국교원대 대학원 교육사회학과, 안승렬)
· 한반도 통일모형으로서의 단계적 국가통합방안 연구(전북대 정외과 4년, 정영선)
· 통일로 향한 남북교류의 추진(경상대 회계학과 3년, 이혜진)
·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의 모색(서울대 경제학과 4년, 조현준)
· 한국의 북방정책과 남북한관계(전남대 사학과 4년, 손순애)

제9회(1990년) 수상작

1. 최우수작

· 남북한 체제접근을 통한 신뢰조성방안의 모색(경상대 대학원 교육학과, 마병식)

2. 우수작

· 남북한 평화정착과 민족통일을 위한 군비통제방안 연구(충북대 정외과 4학년, 이광희)

· 대학인의 통일의식과 통일문제 인식의 새 방향(건국대 정외과 3학년, 김용승)

3. 가 작

· 북한의 대외정책 개방화에 따른 경제교류 증대방안(경원대 행정학과 4학년, 오금석)

· 북한의 경제개방정책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실질적 방안(국민대 행정학과 4년, 김영진)

· 한민족공동체 형성에 따른 법적 문제와 방안(한국외대 법학과 4학년, 김성수)

·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한민족공동체 형성방안 모색(충북대 정외과 3학년, 서창배)

· 민족공동체 형성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고찰(울산대 행정학과 3학년, 김택수)

第10회(1991년) 수상작

1. 최우수작

· 남북한 경제교류가 북한의 개방에 미칠 영향 -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 (건국대 행정학과 3학년, 이수길)

2. 우수작

· 전환기의 통일의식과 통일문제 인식의 새 방향에 관한 연구 - '외세극복논리'의 자주적 해석을 중심으로 - (충북대 정외과 3년, 이광성)

· 북한 개방 유도방안 모색(한국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윤양배)

3. 가 작

· 통일을 대비한 남북경제 동질화 방안(연세대 경제학과 4학년, 홍상원)

· 전환기의 통일의식과 통일문제 인식의 새 방향(조선대 행정학과 4년, 임병춘)

· 전환기의 통일의식과 통일문제 인식의 새 방향 - 한반도 실질적 군비통제 방안 모색 - (전남대 정외과 4학년, 김재기)

· 북한 경제 개방정책에 대한 연구(한남대 정외과 4학년, 이백희)

· 북한 사회의 변화가능성과 개방화를 위한 실천방안(조선대 정외과 3학년, 고삼석)

第11회(1992년) 수상작

1. 최우수작

· 남북한 갈등구조의 발전적 해소방안 - 북한 핵개발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 (경북대, 정외과 3학년, 정병주)

2. 우수작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청주대 행정학과 1학년, 양태영)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후의 남북관계 발전방향(강릉대 법학과 3학년, 승미라)

3. 가 작

·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발전방안(충남대 사학과 2학년, 김경란)
·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발전적 방향(조선대 정외과 4학년, 김효자)
· 남북기본합의서 실현을 위한 남북한 통일여건 조성 연구(전북대 정외과 3학년, 김세훈)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후의 남북관계 발전방안 -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 (동국대 무역학과 4학년, 조향근)
·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이념과 방안모색 - 민족근본의 사상인 홍익사상을 중심으로 - (충북대 정외과 3학년, 정정환)

第12회(1993년) 수상작

1. 최우수작

· 기본합의서 채택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방안 -부속합의서 실천방안의 심층분석 - (충북대 정외과 3학년, 장아림)

2. 우수작

·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의 전망(서울대 외교학과 4학년, 박철순)
·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의 전망 -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외

대 행정학과 4학년, 송정식)

3. 가 작

·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의 전망 -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전남대 정외과 4학년, 오승용)
· 남북한 사회문화 동질성 회복방안 -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를 통한 동질성 회복의 모색과 그에 따른 장애요인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충북대 정외과 3학년, 정해영)
·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후의 남북관계 발전방향 - 한민족 공동체 형성방안을 중심으로 -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3학년, 김남준)
·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전망 - 최적 통일을 위한 발상의 전환 - (부산대 정외과 4학년, 조삼상)
· 통일을 대비한 국민정신교육의 방향(연세대 신학과 4학년, 김위만)

第13회(1994년) 수상작

1. 최우수작

·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적 여건 조성방안 - 민족적·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 (연세대 정외과 3학년, 권순철)

2. 우수작

·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달성방안(충남대 행정학과 4학년, 배진우)
· 통일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서울교대 윤리교육과 4학년, 정인경

3. 가 작

·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충남대 생화학과 4학년, 권혜숙)

·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충북대 정외과 3학년, 이창숙)
·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동국대 행정학과 3학년, 정승래)
·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달성방안(인하대 정외과 4학년, 김한조)
·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 공감대적 가치질서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 (숭실대 행정학과 4학년, 최우식)

제14회(1995년) 수상작

1. 최우수작

· 범국민적 통일교육 방안 모색 - 제도적·방법적 차원을 중심으로 -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4년, 이상우)

2. 우수작

·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단계별 증진방안경기대 환경공학과 4년, 위승문)
· 남북교류·협력의 단계별 증대방안(충북대 정외과 4학년, 홍종국)

3. 가 작

· 세계화와 통일의 과제 - 통일한국의 세계화 전략을 중심으로 - (한성대 무역학과 3학년, 이정아)
· 세계화와 통일의 과제(인하대 정외과 1학년, 최낙표)
· 범국민적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통일교육과 통일교육의 유기적 결합 - (연세대 신방과 4학년, 장병희)
· 분단 50년과 민족 동질성 회복방안 - 남북한 정치·경제 분야의 통합을 중심으로 - (강원대 정외과 3년, 권오국)

· 분단 50년과 민족동질성 회복방안(배재대 국제자원개발과 4학년, 양재성)

第15회(1996년) 수상작

1. 최우수작

· 신국제질서하 분단체제의 재편전망 – 미·일의 중국봉쇄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서강대 대학원 사학과 1학기, 이재도)

2. 우수작

· 대학생이 인식한 사회적 통일역량과 통일지향적 성향과의 관계연구(한국교원대 대학원 교육사회 2학기, 김희천)

· 통일이념으로서의 한국민족주의(강원대 정외과 3학년, 곽근신)

· 북한의 인권실태(건국대 정외과 4학년, 강인석)

3. 가 작

· 세계화를 지향하는 통일교육방안 연구(서울교대 3학년, 김유승)

· 남북 대학간 교류를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충남대 정외과 4학년, 노길래)

· 남북통일후의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2학기, 이병석)

·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주변 4강에 대한 통일외교를 중심으로 – (육사 국제관계 2학년, 이승준)

· 평화통일과 한국교회(순신대 신학대학원 신학과 6학기, 이동규)

第16회(1997년) 수상작

1. 최우수작

-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원 홈페이지 개선방안(전북대 정외과 3학년, 조삼만)

2. 우수작

-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북한관 분석과 통일교육의 방향(인천교육대 사회교육학과 3학년, 안윤숙)
-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방안(명지대 북한학과 3학년, 전광원)
- 북한 경제난의 구조적 문제점가 향후 전망(명지대 경제학과 4학년, 이현구)

3. 가 작

- 통일시 예상되는 토지·주택부문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서울대 대학원 건축학전공, 정종대)
- 21세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서강대 대학원 경영학, 박용우)
- 통일정책에 대한 실증적 연구(숭실대 경영학과 4학년, 이승용)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태도와 대응방안(건국대 정외과 3학년, 황원준)
- 선진통일한국의 민족사적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내외적 발전전략 구상(경북대 행정학과 4학년, 이동우)

第17회(1998년) 수상작

1. 최우수작

· 남북통일환경에서의 북한주민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방안(한국기술대 산업디자인과 4학년, 한상복 · 송지연)

2. 우수작

· 세계화에 따른 통일논의의 개선과 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 홍기금)
· 통일을 위한 언론의 개혁과 역할(전북대 정외과 2학년, 김양근)

3. 가 작

· 정보화 세대의 특성과 통일교육 방향(중앙대 행정학과 3학년, 김현식)
· 통일한국의 국가능력 강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 및 바람직한 통일의 모색(서강대 정외과 4학년, 김선남)
· 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숙명여대 정외과 4학년)
· 사입 세대의 의식구조 특성과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충북대 정외과 3학년, 장은영)
· 재정위기하에서의 통일정책의 방향(서울대 행정대학원, 최은석)

第18회(1999년) 수상작

1. 최우수작

· 남북전자공간세대의 등장과 사회문하 통합지향의 시스템 인과지도(因果地圖) 분석(중앙대 행정학과 4학년, 이미경)

2. 우수작

· 대북포용정책하에서의 실천적인 남북체육교류협력 방안(경북대 정

치외교학과 4학년, 김용범)
· 정보화 시대의 남북한 교류 · 협력방안(한림대 경제학과 4학년, 전병길)

3. 가 작

· 현(現)시기 남북경제 교류협력의 발전적 증진을 위한 과제(중앙대 경영학과 3학년, 오세각)
· 대학생 통일의식 실태와 통일교육 제고방안(대구대 행정학과 4학년, 황인구)
· 북한 식량난과 남북농업 협력의 정책방향(명지대 북한학과 4학년, 김현주)
·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방송 개방의 효과적인 전략 모색(한양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김소연 · 유선혜)
· 남북한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3학년, 이태동)

第19회(2000년) 수상작

1. 최우수작

· 남북한 운송체계 구축방안 - 철도, 도로, 항만 중심으로 - (조선대 경제학과 4학년, 이대혁 · 김석제)

2. 우수작

· 북한 인터넷 구축과 남북한 사이버 공동체 건설(명지대 북한학과 3학년 김기영, 4학년 전호민)
· 통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안으로써,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지원협의기구의 구상(고려대 법학과 3학년, 정인국)

3. 가 작

- 물리적공간/사이버 공간 매개로써, 놀이성을 통한 남북사회 문화통합방안(중앙대 국어국문과 2학년, 정미진)
- 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연구 - 무선이동통신 서비스의 시장전망을 중심으로 - (숭실대 행정학과 4학년, 정용호)
- 사이버 통일교육의 추진방향 및 활성화 대책 - 중핵교육과정의 구상과 시뮬레이션 학습을 중심으로 - (고려대 국어교육과 4학년, 김평원)
- 탈북주민의 난민지위 획득에 관한 정부의 개입방향에 대하여 - 양면게임을 통한 전략적 접근 - (경상대 국제관계과 3학년, 김언용)
- WBI를 활용한 초등학생 통일교육 추진방향 - 초등아동 특성을 중심으로 - (대구교육대 사회교육과 1학년 박웅규, 3학년 김동현)

대 학 생 통 일 논 문 집

2000년 11월 27일 인쇄
2000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처 : 통일교육원
㊌ (142-715)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 02) 901-7020 FAX : 02) 901-7024

인쇄처 : 성 문 사
TEL : 02) 2278-4646

〈비매품〉